



**교과서연구**  
계간지  
2012년 겨울  
통권 제70호

# 목 차

<b>권두언</b>		
04	교과서의 수준을 높여야 할 사람들	김만곤
<b>특별기획 ·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b>		
[1부] 국내외 교과서 정책의 동향과 전망		
08	• 미국의 교과서 인정제 동향	김재춘
26	• 국가관리로부터 민간자율로의 전환,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 - 중국 · 몽골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구난희
40	•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 - 검정제도를 중심으로 -	이충호
55	• 교과서 심사, 선정, 개발에서의 교사의 자율성 :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의 교과서 정책 연구	강선주
73	[토론] • 교과서 정책의 안정성, 다양성, 진취성 -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플사 방문 보고	윤광원
78	• '국가 관리로부터 민간자율로의 전환(중국 · 몽골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오병목
81	• 교과서 발행사 입장에서 살펴본 일본의 교과서 제도	황홍규
84	• 교과서 자율화 정책과 디지털 교재 정책에 대한 소견	서지영
88	• 「교과서 정책의 동향과 전망」 발표문에 대한 토론	박종은
[2부] 주요국 인성교육 동향		
92	•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학교의 일상적 교육활동 방안에 대한 연구	홍후조
116	• 일본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이이자와 타카오
122	• 중국 중소학교 학교교정폭력행위 특징 및 그 규훈	정상봉
130	[토론] • 일본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토론	정제영
135	• 중국중소학교 교정 내 폭력행위 특징 및 규훈	이강숙
139	•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학교의 일상적 교육활동 방안에 대한 토론	박효정
143	[참관기] 진지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길……	김훈범
145	[참관기]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참관기	이영자
<b>현장교육</b>		
151	금융교과서 개발 및 금융 특화 프로그램의 성과	최기순
<b>연재</b>		
157	스웨덴의 교육제도(Ⅱ)	양혜원
<b>논단</b>		
165	국제 공통 교육과정 IBDP의 이해와 적용	박학식
<b>교과서 편집자의 변</b>		
172	감(憾)을 잃지 않는 편집자 되기	유은경
<b>제언</b>		
176	프랑스 시민교육의 내용과 교과서의 특징	김원태
<b>나와 교과서</b>		
187	나의 조부, 우리나라 초대 편수국장 외솔 최현배 선생의 교과서 사랑	최홍식
<b>탐방</b>		
190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 정규도(주)다락원 대표이사)	
<b>연수후기</b>		
194	교과서 개발 전문가 양성과정 연수 - 어느 뜨거웠던 여름의 추억	류준구
<b>교과서 사랑 수필 입선작 소개</b>		
195	교과서 수필 입선작 : 초등부 입선작 및 심사평	
<b>독자의 소리</b>		
203	[교과서연구]를 통해 소통하고 성장하는 교사가 되길 기원하며……	김나영
205	자료(교과용도서 구분고시 2012-17호)	
211	교과서 개발 연수 안내	
212	교과서 개발 구입 안내	
215	원고 모집	
216	'교과서 정보관' 이용 안내	

## 교과서의 수준을 높여야 할 사람들



김 만 곤

본지 편집기획위원장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에서 간단한 오류 몇 가지만 발견되어도 당장 야단이 납니다. 우선 언론에서 “오류투성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질타합니다.

교과서에 대한 이러한 정서는, 교육을 그만큼 중시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금과옥조(金科玉條)’ 혹은 무슨 ‘성전(聖典)’ 처럼 존중하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관(教育觀)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과서의 수준이나 가치는 교과서에 담긴 내용, 그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 그 내용을 보여주는 체제 속의 갖가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단순한 오류쯤은 괜찮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처구니없는 질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직접 그 교과서를 만든 입장에서는 그러한 비판이 오히려 좀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류의 경중을 따져 벌금을 매기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혹독한 비판을 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과서 내용 검열이 엄격하기로 우리보다 결코 덜하지는 않은 일본만 해도 출판사 책임이지 수십 명의 교과서 조사관이 근무하는 문부과학성의 잘못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관점을 가진 배경에는, ‘교과서’라고 하면 정부에서 만드는 특별한 책이라는 인식도 작용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검인정 교과서는 정부에서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해봐도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정부에서 하는 일이 겨우 이 수준이라니!”하고 개탄한다는 뜻입니다. 기껏해야 “아니, 그럼 교과서를 정부에서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어?” 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 교과서에 관한 일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교과서의 대부분을 민간이 만들도록 한 조치에 대해 아주 무책임한 조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검정 교과서를 대부분 인정으로 전환해버렸어!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


이런 시각이라면 교과서 제도를 바꿔봐야 별 수 없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세상에서 제일”이고, “그 다음이 검정교과서”, 그것도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인정교과서”라는 서열이 있는 게 분명하며, 그런 서열을 매겨놓고 바라보면 우리의 교과서 정책이 아주 혼란스럽게 보일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령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미국(과반수 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자유발행제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과 독일, 러시아 같은 몇몇 나라에서만 검정을 실시하며, 지금은 국정제를 주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해봐야 아예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도 이제 검정제를 한다”는 어느 나라를 보면 말로만 검정제지 실제로는 엄격한 국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쯤은 아무리 바뀌도 이상적인 인정제, 실제적인 자유발행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강력하게 관여하는 국정제 같은 인정제, 검정제 같은 인정제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교과서에 관한 한 현장교원들이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도 교과서를 만드는 쪽이 언제나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국정교과서라면 당연하다는 듯 정부에서 교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저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지침을 주게 됩니다. 교사들은 할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지침대로 가르치게 됩니다. 심지어 검정교과서나 인정교과서라 해도 다를 수 없습니다. 교사들은 언제나 수용해야 하는 쪽이지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만큼만 성실히 가르치면 —학생들에게 그 지식을 잘 전달해주면— 좋은 교사가 되므로 교사의 전문성, 자율성, 창의성이 어디에 필요한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쪽에서는 장차 우리도 특정 교과서가 없는 자유발행제, 자율채택제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지 너무나 걱정스럽고 암담한 상황이 그려져서 그런 생각은 아예 하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에 이어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방안에서 오늘까지 3년째 그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 교과서 제도 개선안은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 확대 및 검정방식 개선, 인정도서 확대, 교과서의 지속적 질 관리 및 외형체제 개선 등이 주요내용이었고, 2010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은 인정도서 확대, 검정제도 개선, 교과서 선정·채택제도 개선 등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인정도서 정책은 장차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자료나 시중의 일반서적도 인정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1.12)는 꿈을 부풀게 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7 개선안에 이어 계속적으로 자율화,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교사들의 자율성, 창의성을 요청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바라는 교과서의 개선, 변화,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현장의 수업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교과서만 바뀌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한두 번 바꿔본 것도 아닙니다. 수업은 종전대로 주입식, 지식전달식으로 하면서 교과서를 가령 토론식, 탐구식으로 바꾸자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며, 지식전달식 수업을 하려면 차라리 개념 설명식, 강의식 교과서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수업을 혁신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주장하는 상황이 전개되어야 우리 교과서의 선진화, 우리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구상은 우리 교육의 그러한 모습을 그려보고 발표한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깊지만, 디지털 교과서를 “종래의 서책형 교과서 내용에 ‘용어사전(학습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보충·심화 학습자료’ 등 풍부한 학습자료와 학습 지원 관리 기능이 부가되고, 교육용 콘텐츠 오픈마켓 등 외부 자료와의 연계가 가능한 학생용 교재”(2011.6.29. 보도자료)로 정의하고 싶다면 그 정의 또한 지식주입식 교육에는 전혀 해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과서 연구와 교과서 정책의 정점에 우선 교사들의 위치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 지난 10월 26일 오후, 우리 재단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으로 제2회 국제교과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올해의 심포지엄은 2부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주요국 교과서 정책 동향', 제2부에서는 '한·중·일 인성교육 동향'을 주제로 하였다.

● 제1부 '교과서 정책 동향'은,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조사 대상 지역을 정하고, 연구팀이 각 나라별로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을 전개하였다.


● 조사 대상 지역은 미국, 중국·몽골, 일본, 유럽 등 4개 지역으로 정하고, 전문 학자와 교과서 편집진, 교육과학기술부, 우리 재단 담당자들이 모여 3개 팀을 구성하였다. 유럽 지역 연구는 현장방문의 어려움 때문에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한 정책연구 형태로 이루어졌다.

●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각 팀의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교과서 편집진, 혹은 교과서 연구기관 전문가가 토론을 맡았다. 교과서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새롭고 재미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책무성과 연구 활동의 의의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 <제2부>의 한·중·일 인성교육 동향에 관한 발표와 토론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의 노력이 바로 '교육본질 회복'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 한·중·일 각 나라는 교육 상황은 다르지만 전통문화와 사회변화 간의 괴리현상에 의해 학교폭력이 국가·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므로 앞으로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학교폭력에 관하여 충격적인 점은, 중국은 아직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어서 한국이나 일본의 관점과 다른 점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정책의 힘이 작용함으로써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우리는 심포지엄을 참관한 학자·교원·교과서 편집 전문가들이 의례적인 보고가 아닌 생생한 자료를 보고 들을 수 있는 특징적이고 감명 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과서연구」특별호를 마련하여 이 심포지엄의 발표·토론 원고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행정기관에 제공하게 되었다.

● 이 심포지엄을 지원해주신 교육과학기술부 관계관,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역할과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심포지엄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 주요국 교과서 정책 및 인성교육 동향

Trends of Textbook policy and Character education

### [1부] 국내외 교과서 정책의 동향과 전망

- 미국의 교과서 인정제 동향
- 국가관리로부터 민간자율로의 전환,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  
중국·몽골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
- 교과서 심사, 선정, 개발에서의 교사의 자율성 :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의 교과서 정책 연구
- 토론
  - 교과서 정책의 안정성, 다양성, 진취성 -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플사 방문 보고
  - '국가 관리로부터 민간자율로의 전환(중국·몽골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 교과서 발행사 입장에서 살펴본 일본의 교과서 제도
  - 교과서 자율화 정책과 디지털 교재 정책에 대한 소견
  - 「교과서 정책의 동향과 전망」 발표문에 대한 토론

### [2부] 주요국 인성교육 동향

-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학교의 일상적 교육활동 방안에 대한 연구
- 일본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 중국 중소학교 학교교정폭력행위 특징 및 그 규훈
- 토론
  - 일본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토론
  - 중국중소학교 교정 내 폭력행위 특징 및 규훈
  -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학교의 일상적 교육활동 방안에 대한 토론

### [2012국제교과서 심포지엄 참가기]

- 진지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길.....
-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참가기

1부 주제발표 ①

# 미국의 교과서 인정제 동향<sup>1)</sup>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를 중심으로—



김 재 춘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1. 글을 시작하며

미국은 우리나라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근대 교육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광복 이후 미 군정청은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후에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수많은 학자들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이 미국의 영향을 여러 겹으로 많이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제도에 관한 한 미국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의 교과서 제도에 대해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못한 것 같다.

미국에서 교육은 연방 정부의 책무라기보다는 각 주의 책무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들은 저마다의 교육 제도를 지닌다. 따라서 미국의 주들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제도나 정책은 서로 다르다. 교과서 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50개의 주들을 상대로 교과서를 개발해야 하는 출판사들은 모든 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교과서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출판사들은 학생수가 많아 시장이 넓은 주들의 교과서 정책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개발한다.

미국의 인구 지도를 간단히 살펴보자. 미국에서 인구수가 1,000만이 넘는 주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오하이오 7개 주이다. 이 중에서 1위인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약 3,800만 명이며, 2위인 텍사스의 인구는 약 2,600만 명이다. 그리고 3위와 4위인 뉴욕과 플로리다는 2천만 명에 근접한다. 5~7위에 이르는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오하이오는 1,100~1,200만 명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이른바 빅4(big four)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의 인구 합은 1억이 넘는다. 즉 이들 4개 주가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3을 차지한다. 인구수가 1백만이 안 되는 주가 8개나 되며, 와이오밍, 노스다코다, 버몬트 주는 인구가 6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인구수 기준으로 중간 순위(25위)를 차지하는 켄터키 주의 인구는 약 437만 명이다.

1) 이 발표문에 제시된 내용을 인용 표시 없이 무단 활용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교과서 출판사들은 시장의 크기를 염두에 두고 교과서를 개발하기 때문에 각 주의 교과서 발행 정책은 인구수 즉 학생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교과서 시장은 이른바 빅4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수가 적은 주의 경우 주 차원에서 교과서에 대한 전담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발행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이런 제도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대체로 규모가 큰 주들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교과서 발행 제도를 지닌 반면에 규모가 작은 주들은 큰 주들을 위해 발행된 교과서 중에서 선택해 사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수(학생수)가 많아 교과서 시장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닌 캘리포니아 주와 약 680만 명의 인구를 가져 인구수 기준으로 13번째 크기에 해당하는 워싱턴 주의 교과서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는 인정제를 실시하는 ‘폐쇄형 주’로 알려져 있으며, 워싱턴 주는 자유발행제를 실시하는 ‘개방형 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하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캘리포니아 주의 교과서 심사 제도를 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워싱턴 주의 교과서 심사 제도를 자유 발행제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교과서 발행제에 대한 이런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의 교과서 심사 제도가 어떤 것인지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의 글은 지난 6개월 동안 발표자가 미국 교과서 제도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 읽고,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를 방문하여 해당 주 교육부 관계자와 관련 학자들을 면담하고 조사한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교과서 심사 제도

를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고, 둘째, 자유발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워싱턴 주의 교과서 심사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교과서 심사 제도가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II.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교과서 심사 제도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는 약 3,800만 명으로 인구 2위인 텍사스 주보다 1,200만 명 이상 더 많다. 면적 또한 텍사스 다음으로 넓다. 우리나라(남북한)의 2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경제 규모는 세계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주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그 크기로 보았을 때 하나의 주라기보다는 하나의 국가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교과서 심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K-8학년의 교과서 심사는 주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9-12학년의 교과서 심사는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한다. 이 장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과서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1. 교과서 인정 심사 주기

인정제<sup>2)</sup>는 교과서 ‘사용 승인’ 가부를 심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기 개발된 교과서를 필요할 때는 언제나 인정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정 심사를 살펴보면 각 교과별로 일정 주기로 인정심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인정 주기에 맞춰 인정 심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교육과정’(Curriculum Framework)의 개편 주기와 교과서의 인정 심사 주기가 일치한다. 달리 말하면, 주 교

2)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는 인정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의 교과서 심사 제도를 편의상 인정제로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육과정이 일정한 주기로 개편되고, 이런 주기에 맞춰 교과서 인정 심사 역시 이루어진다. 4개의 핵심 교과인 국어(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교과) 교육과정은 6년 단위로 개정되고, 미술, 외국어, 보건

등 나머지 교과의 교육과정은 8년 단위로 개정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우리나라처럼 동시에 모두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교과별로 연도를 달리하여 일정한 주기로 개정된다. 각

〈표 1〉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인정/채택 주기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6년 주기 인정	역사-사회	A				Fc		A				Fc		A
	과학		A				Fc		A				Fc	
	수학	Fc		A				Fc		A				Fc
	국어(영어)		Fc		A				Fc		A			
8년 주기 인정	미술		A						Fc		A			
	외국어					SFc		A						
	보건					S	Fc		A					
인정 없음	체육	S		F								F		

A: 교과서 인정/채택, F: 교육과정 개정, C: 심사 기준, S: 성취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의 개정 주기와 교과서 인정/채택 주기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심사 기준<sup>3)</sup>

이 개정되면 각 출판사들은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2년 후에 교과서 인정 심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 2. 교과서 인정 심사 절차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과서 인정 심사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첫째, 주 교육과정(Curriculum Framework), 둘째, 교과별 내용 기준(Content Standards), 셋째, 심사 기준(Evaluation Criteria). 교과서 심사 기준은 주 교육과정 문서 뒤쪽에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 심사 기준은 적어도 교과서 승인/채택(adoption) 30개월 전에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 교육부는 30개월 전까지 주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해야 한다. 출판사가 인정 심사를 위해 교과서 심사본을 제출한 시로부터 주 교육부가 최종 승인/채택을 발표하기

까지 약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 교육부가 출판사에게 교과서 개발 기간을 최소한 2년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과서 인정 심사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먼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시한 인정 절차 흐름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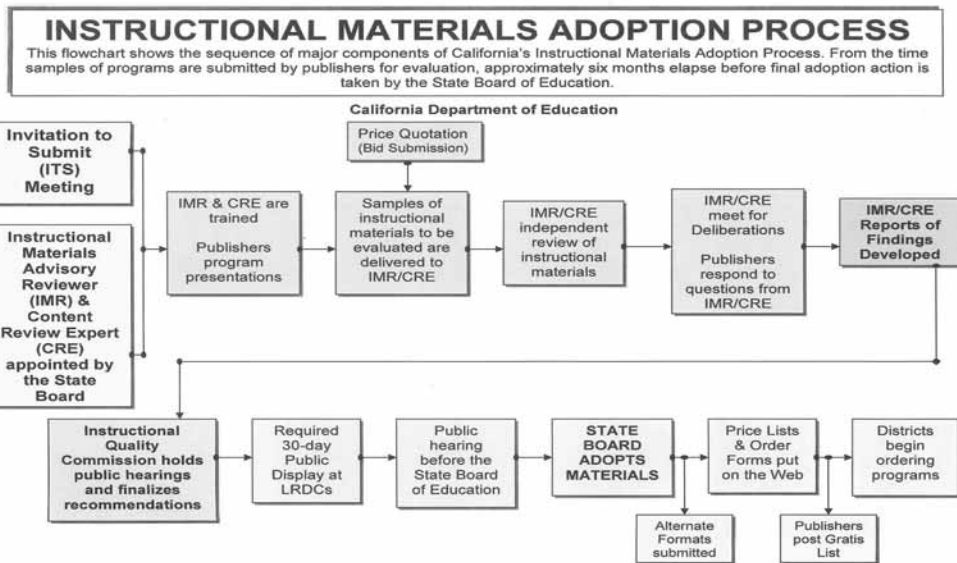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과서 인정 심사는 크게 네 단계를 거친다. 첫째, 출판사 대상 인정 출원 설명회 단계, 둘째,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단계, 셋째, 공청회, 전시 및 승인 단계, 넷째, 승인 후 단계. 각 단계별 인정 절차를 2007년에 이루어진 수학 교과서 인정심사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 출판사 대상 인정 심사 출원 설명회 단계

- 2007년 1월: 인정 심사 출원 설명회
- (2005년 11월: 출판사 대상 인정 심사 기준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3) 교과서 심사 기준은 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면 교과서 심사 기준도 함께 개정·고시된다.





## 2단계 :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단계

- (2006년 2-12월: 심사위원 선정 및 추천)
- 2007년 3월 26-29일: 심사위원 연수(출판사 발표가 이루어짐)
- 2007년 4월 12일: 심사위원과 전시관에 자료 제출(3개월간 재택 심사)
- 2007년 4월 13일: 교과서 가격 견적서 양식 출판사에 배부
- 2007년 6월 13일: 교과서 가격 견적서 제출 마감일
- 이 즈음 적당한 시기에 법 일치 여부 평가
- 2007년 7월 3일: 출판사 인정 자진 철회 마감일(집단 심의 시작 7일전까지 가능)
- 2007년 7월 9일: 법 일치 지적 사항을 각 출판사에 보냄
- 2007년 7월 16-19일: 1차 집단 심의(심의 과정이 대중에게 공개됨)
- 2007년 7월 30-8월 2일: 2차 집단 심의(심사 교과서가 많아 두 차례에 걸쳐 심의가 이루어짐: 출판사가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 심사 결과를 주 교육부에 추천 전에 각 출판사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함)

- 2007년 8월 6일: 법 일치 문제에 대한 출판사 반응 제출

(고치거나, 항소하거나, 자진 철회)

- 2007년 9월: 인정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3단계: 공청회, 전시 및 승인 단계

- 2007년 9월: 심사위원들의 보고를 받은 후, 주 교육부의 수업질관리위원회(IQC)가 공청회 열고, 최종 추천안 제시
- 2007년 10월: 30일간 의무 전시
- 2007년 11월: 주 교육부가 인정 교과서 공청회 개최 및 확정

## 4단계 : 승인 후 단계

- 2007년 12월: 인정 합격 출판사 대상 설명회
- 2008년 1월: 최종 인쇄본 제출(여러 형태의 변형 교과서(alternate formats) 제출, 웹에 가격표와 주문양식 게시, 출판사가 무료 제공 자료 목록 게시)
- 지역별로 주문 시작
- 채택된 교과서는 최소한 2년 동안 전시해야 함

### 3. 교과서 인정 심사의 주요 단계별 내용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캘리포니아 주의 교과서 인정 심사 절차 중에서 발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출판사 대상 인정 심사 출원 설명회, 둘째, 인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인정 심사, 셋째, 교과서 가격 결정 및 공급, 넷째, 인정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출판사 대상 인정 심사 출원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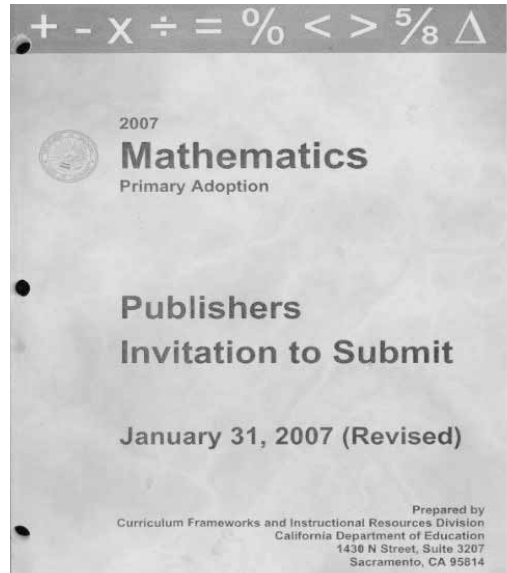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는 교과서 인정 심사와 관련하여 출판사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취한다. 인정 심사위원들의 연수 과정에서 각 출판사의 인정 출원 교과서를 발표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 집단 심의 때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주 교육부에서는 교과서 인정 심사 기준이 만들어지면(인정 30개월 전까지 확정 공개해야 함), 인정 출원에 관심있는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인정 심사 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마도 출판사로 하여금 교과서 인정 심사를 대비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제로 교과서 인정 심사는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인정 심사 출원 설명회’(Publishers Invitation to Submit Meeting)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 교육부는 ‘출판사 인정 출원 초대’(Publishers Invitation to Submit)라는 책자를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출판사 대상 인정 출원 설명회 자료는 두툼하다. 수학과와 경우 약 156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이다. 50쪽 정도가 인정 심사 출원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약 100쪽은 부록 자료이다. 인정 출원에 관심있는 출판사는 이 자료집만 가지고 있으면 인정 출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대부분 알 수 있다.

이 설명회 자료집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수학에서의 교과서 인정



2. 인정 심사 일정
3. 수학 인정 심사용 교과서를 제출할 출판사에 대한 지시 사항
4. 제출된 교과서에 대한 평가
5. 인정 합격 후 출판사의 책임
6. 교과서에 대한 추가 정보
7. 질문이 있을시 연락처
8. 부록
9. 주요 용어 설명

#### 나. 인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인정 심사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정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 시작 1년 전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심사위원을 발굴하거나 추천을 받는다. 인정 심사위원회는 ‘수업자료평가위원회’(Instructional Material Advisory Reviewer: IMR)와 ‘내용평가전문가위원회’(Content Review Expert: CRE)의 2개 조직으로 구성된다.

수업자료평가위원회(IMR)는 가급적 많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12종이 출원된 과학의 경우 43명으로 구성되었고, 16종이 출원된 사회의 경우 60명으로 구성되었다. 수업자료평가위원회(IMR) 위원

들은 대부분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의 경우 43명의 위원 중에서 3명만이 대학 소속이고, 나머지 40명은 현장 관계자들이다. 현장 관계자의 대부분이 현직 교사들이며, 일부는 교육청 소속의 장학사들이고 교육위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의 경우 60명의 위원 중 7명이 대학 소속이고(이 중 상당수가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한 사람들임), 나머지 53명이 현장 관계자들이다. 과학과 마찬가지로 심사위원 대부분이 현장 교사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수업자료평가위원회(IMR)는 출원된 교과서가 교수·학습자료로서 적합하기를 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현장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평가전문가위원회(CRE)는 수업자료평가위원회(IMR)에 비해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대학 소속 교수나 연구원들로 구성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과학의 경우 내용평가전문가위원회 위원은 총 22명이며, 이 중 11명이 현장 관계자들이다. 현장 관계자 중에서 3명만이 현직 교사(주로 과학교사)이며, 나머지는 교육청 관계자들이다. 사회의 경우 내용평가전문가위원회 위원은 총 12명이고, 이 중 1명만이 현장 관계자이다. 이 현장 관계자 1명도 현직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 소속의 장학사이다. 아마도 내용 심사는 내용의 정확성 등을 주로 검토하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보다는 주로 박사학위가 있는 대학 교수나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주 교육부는 6년마다 2번 이상의 인정 심사를 해야 한다. 주 교육과정과 심사 기준이 바뀌고 처음 실시하는 인정 심사를 '기본 인정 심사(primary adoption)'라고 한다. 기본 인정 심사에 합격하면 6년간 인정도서 목록에 기재된다. 그러나 그 중간에 '추가 인정 심사(a follow-up adoption)'를 실시한다. 기본 인정 심사 때 출원하지 못한 출판사가 새로 인정 심사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

2001년에 기본 인정 심사가 있었고, 2005년에 추가 인정 심사가 있었다. 2007년에 새로운 주 교육과정과 심사 기준에 따라 기본 인정 심사가 이루어졌고, 2010년에 추가 인정 심사가 이루어졌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과서 인정 심사는 세 종류의 평가를 거친다. 1) 내용 및 교수·학습자료 평가 2) 법 일치 평가 3) 대중 공개 평가(public review). 교과서가 인정 심사에 합격하려면 첫째, 주 교육과정(Framework), 둘째, 내용기준(Standards), 셋째, 심사기준(Evaluation Criteria)을 충족시켜야 한다. 교과서 인정 심사 기준은 주 교육과정(Framework)의 뒤쪽에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 인정 심사 기준은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1) 내용/기준과 일치, 2) 교과서 조직, 3) 평가, 4) 접근의 보편성, 5) 수업 계획과 지원. 인정 교과서 심사 기준을 간략히 요약한 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내용/기준과의 일치 : 캘리포니아 교과별 내용기준(Standards)에 구체화된 내용, 캘리포니아 주 교육과정(Framework)에 제시된 지침과의 일치
2. 교과서 조직 : 학생이 매년 학습해야 하는 내용에 구조를 부여하는 교과별 교과서의 연계성과 조직
3. 평가 : 학생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 교과서에 제시된 전략
4. 접근의 보편성 : 장애학생, 아주 우수하거나 아주 열등한 학생, 영어에 숙달하지 못한 학생을 포함한 특별한 학생들의 필요를 다루는 자원이나 전략
5. 수업계획과 지원 : 교사로 하여금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교사가 사용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특별판을 포함해서 수업 계획 지원 정보와 자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K-8 학년의 인정 교과서는 주 교육부에서 심사하고, 9-12학년의 고등학교 교과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인정 심사한다. K-8 학년의 인정 심사 대상은 교과별로 다르다. 수학의 경우 심사 대상은 세 종류의 교과서이다. 학년별 기본 교과서(K-8), 보충 교과서(Intervention: 4-7), 대수 준비용교과서(Algebra readiness: 8학년 이상; 8학년에 대수1을 들을 준비가 안 된 학생을 위한 교과서). 이들 교과서가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교과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이라든가 내용은 동일한데 외형(physical formats)이 다른 교과서들(일명 ‘변형 자료’ alternate formats)을 만들어서 주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 다. 교과서 가격 결정 및 공급

캘리포니아 주는 확보된 교과서 관련 예산을 학생 수에 따라 지역 교육청에 분배한다. 2011-2012 학년도 캘리포니아 주의 교과서 관련 예산(Instructional Materials Funding Realignment Program: IMFRP)은 약 3억 1800만 달러(\$318,179,878)이고, K-12 학년의 학생 수가 약 630만명(6,298,928명)이다. 그래서 학생 1인당 교과서 예산은 약 50달러이다(이 수치는 최근 미국 경기가 어려워 재정 압박에 시달리면서 2006년의 약 4억 달러, 학생 1인당 55달러에서 큰 폭으로 감축된 것이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주 법률 개정안 20(Proposition 20)에 따라 로토 판매 수익금(1997-8년 기준액을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교과서 구입 대금으로 교육청에 배정해 준다. 학생 1인당 배정액이 약 19달러이다(몇년 전의 학생당 약 28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교과서 구입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학생 1인당 연간 교과서 구입 예산은 약 69달러 정도 된다. 그런데 미국에서 학생용 교과서(student edition) 가격은 초등 저학년의 경우 권당 20달러 안팎이고, 초등 고학년의 경우 권당 30-40달러 안팎이며, 중학교의 경우 권당 50-60달러 안팎이다.

따라서 주 정부가 배정한 교과서 예산으로는 학생들에게 매년 새로운 교과서를 구입해 줄 수가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교과서를 한번 구입한 다음 여러 해 동안 활용하는 대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정 심사 과정에서 교과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들이 자율 결정한다. 다만 주 정부가 제공하는 교과서 예산(IMFRP)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인정 교과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과서 가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교과서 가격(배송료 포함)이 미국의 다른 주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싸서는 안된다.
- 미국의 다른 주에서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자동적으로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다른 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동일하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 다른 주에서 파는 교과서와 질이 동일해야 한다.
- 경쟁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
- 주문과 공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실과 창고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어야 한다.

인정 교과서 가격은 앞의 인정 절차에서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심사과정 중에 주 교육부가 각 출판사에 교과서 가격 견적서 양식을 송부한다. 그러면 각 출판사는 두 달 이내에 교과서 가격 견적서를 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주 교육부가 각 출판사에 보내는 교과서 가격 견적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위 양식에서 알 수 있듯이, 출판사는 교과서 권당 가격과 배송비, 그리고 이들을 합한 권당 총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주 교육부가 출판사가 제시한 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절차는 없다.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가격 견적서의 교과서 가격은 2년 동안 올릴 수 없다.



게 제공해야 한다. 출판사가 자연재해 등 피치 못할 환경으로 배달이 지연될 때에는 출판사 책임이 없다. 2)의 경우, 출판사는 학교가 사용하던 교과서를 다시 사들여야 한다. 가격은 발행 중단을 주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을 때 합의한 가격으로 사들여야 한다. 출판사는 2년 동안 주문이 없는 교과서는 교육청의 동의를 얻어 발행을 중단할 수 있다. 그리고 3)의 경우, 60일 이내에 인정도서로 대체하여 배달해야 한다.

출판사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새 판(new edition)의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새 판과 옛 판 교과서를 동시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내용 변화가 크지 않아야 한다. 좀더 엄격히 말하자면, 사실 새 판에서의 내용 변화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철자나 데이터의 오류를 잡아내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새 판본의 가격은 가격 조정 2년 주기 전까지는 이전 판과 가격이 동일하거나 더 낮아야 한다. 새 판본을 개발하여 주 교육부에 승인 신청하면 주 교육부가 검토 후 승인한다. 그러면 새 판본이 이전 인정도서를 대체한다. 주 교육부의 승인 없이 판본을 대체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럴 경우 인정이 취소된다.

#### 라. 인정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인정 심사가 마무리되면 주 교육부는 교과별(예컨대, 과학) ‘인정 심사 결과 보고서’(Science Primary Adoption Report)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정 심사를 출원한 각 출판사별 인정 심사 결과가 합격과 불합격으로 구분되어 그 이유가 간략히 제시된다.

‘인정 심사 결과 보고서’의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머리말
2. 감사의 글
3. 소개/서론
4. 인정 심사 과정
5. ○○과 인정 도서 합격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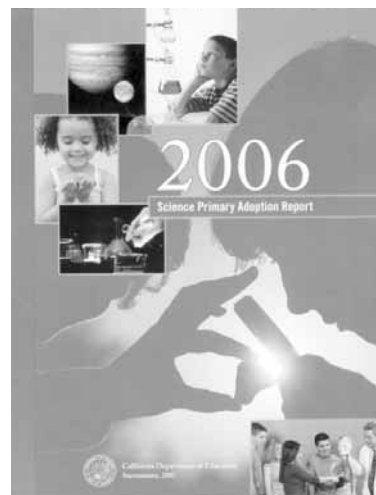
#### 6. 특별 언급

7. 인정 합격한 교과서(과학 11종; 역사사회 12종)

8. 인정 불합격한 교과서(과학 1종; 역사사회 4종)

#### 9. 부록

‘인정 심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인정 심사 합격본과 불합격본을 각 출판사별로 1쪽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요약본에서는 5가지 심사 기준/범주별로 합격과 불합격 사유를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먼저 ‘인정 심사 결과 보고서’의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발행사:

교과서 명칭:

학년:

1. 구성 자료
2. 요약
  - 내용/기준과의 일치
  - 교과서 조직
  - 평가
  - 접근의 보편성
  - 수업계획과 지원



2005년도에 이루어진 역사사회과 교과서 인정  
심사와 2006년도에 이루어진 과학과 교과서의 인

정 심사 결과 보고서에 제시된 합격/불합격 요약표  
를 스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Summary of Science Adoption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State Board of Education on November 9, 2006

These Programs Are Adopted		
<i>Publisher</i>	<i>Program Title</i>	<i>Grade Levels</i>
CPO Science	<i>Focus on Earth, Life, and Physical Science</i>	6–8
Delta Education	<i>Full Option Science System</i>	K–5
Glencoe/McGraw-Hill	<i>Glencoe Science Focus On Series</i>	6–8
Harcourt School Publishers	<i>California Science</i>	K–6
Holt, Rinehart and Winston	<i>Holt California Science: Earth, Life, and Physical Science ©2007</i>	6–8
Houghton Mifflin	<i>Houghton Mifflin California Science ©2007</i>	K–6
It's About Time	<i>Investigating Earth Systems, InterActions in Physical Science</i>	6, 8
Macmillan/McGraw-Hill	<i>Macmillan/McGraw-Hill California Science</i>	K–6
McDougal Littell	<i>McDougal Littell California Middle School Science Series</i>	6–8
Pearson Prentice Hall	<i>Prentice Hall California Science Explorer: Focus on Earth, Life, and Physical Science</i>	6–8
Pearson Scott Foresman	<i>Scott Foresman California Science</i>	K–6

This Program Is Not Adopted		
<i>Publisher</i>	<i>Program Title</i>	<i>Grade Levels</i>
TPS Publishing, Inc.	<i>California State Standards Aligned 2006 Science Program</i>	4, 5

## Summary of History–Social Science Adoption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State Board of Education on November 9, 2005

These Programs Are Adopted		
<i>Publisher</i>	<i>Program Title</i>	<i>Grade Levels</i>
Glencoe/McGraw-Hill	<i>Glencoe Discovering Our Past</i>	6–8
Harcourt School Publishers	<i>Reflections: California Series</i>	K–6
Holt, Rinehart and Winston	<i>Holt California Social Studies: World History, Ancient Civilizations</i>	6
	<i>Holt California Social Studies: World History, Medieval to Early Modern Times</i>	7
	<i>Holt California Social Studies: United States History, Independence to 1914</i>	8
Houghton Mifflin	<i>Houghton Mifflin History–Social Science</i>	K–6
Macmillan/McGraw-Hill	<i>California Vistas</i>	K–6
McDougal Littell	<i>McDougal Littell California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Series</i>	6–8
Oxford University Press	<i>Oxford History–Social Science Program for California</i>	5–8
Pearson Prentice Hall	<i>Prentice Hall Social Studies</i>	6–8
Pearson Scott Foresman	<i>Scott Foresman History–Social Science for California</i>	K–5
Teachers' Curriculum Institute	<i>History Alive! California Middle Schools Program</i>	6–8

These Programs Are Not Adopted		
<i>Publisher</i>	<i>Program Title</i>	<i>Grade Levels</i>
Ballard & Tighe	<i>Explore America</i>	5
	<i>Explore the Ancient World</i>	6
	<i>Explore World History</i>	7
Decision Development Corporation	<i>DDC Social Science Series</i>	4–6

‘인정 심사 결과 보고서’에 제시된 합격본에 대한 요약 자료와 불합격본에 대한 요약 자료를 사진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교과서는 인정되었음’ 교과서 합격본 사례

**Publisher:** Glencoe/McGraw-Hill

**Title of Program:** *Discovering Our Past*

**Grade Levels:** 6–8

### COMPONENTS

*Discovering Our Past* includes a student edition (SE), teacher edition (TE), chapter resource books (CH), assessments (AS), workbook (WK), intervention guide (IN), English learner handbook (EN), universal access guide (UA), study guide (SG), note-taking guide (NG), graphic novels (GR), school-to-home activities (SH), transparencies (TR), art prints (AT), music (MU), primary source collections (PR), and technology-based components including: Teacher Works (TW), testing materials, Internet-based review, VideoQuiz (VQ) and video clips on DVD(VI).

### SUMMARY

The SBE Adopted Glencoe/McGraw-Hill's *Discovering Our Past*, with minor edits and corrections, because it is aligned with the content standards and meets the evaluation criteria.

### Content/Alignment with Standards

This program meets all the evaluation criteria in this category. It is aligned to the History–Social Science Content Standards.

### Program Organization

This program meets the evaluation criteria in this category.

### Assessment

This program meets the evaluation criteria in this category by providing strategies and assessments that measure student progress towards standards mastery.

### Universal Access

This program meets the evaluation criteria in this category. The program provides explicit instruction for students at all levels of achievement, including English learners.

### Instructional Planning and Support

This program meets the evaluation criteria in this category. The program provides a variety of resources to support teachers in implementing the program.

‘이 교과서는 인정되지 않았음’ 교과서 불합격본 사례

Publisher: TPS Publishing, Inc.

Title of Program: *California State Standards Aligned 2006 Science Program*

Grade Level(s): 4, 5

#### COMPONENTS

TPS Publishing's *California State Standards Aligned 2006 Science Program* includes a Teacher's Edition Textbook (TT), Student Edition Textbook (ST), Student Workbook (SW), Teacher's Support Guide (TG), Parent Guide (PG), Pre-Program Test Pack (BA), Post-Program Test Pack (AA), Textbook Section Test Pack (AS), Assessment Test CD-ROM (AC), Focused Science Tutoring CD-ROM (FC), Transparency Pack by Standard Set – Physical, Life, Earth (TPP, TPL, TPE) and Reproducible Pack by Standard Set – Physical, Life, Earth (RPP, RPL, RPE).

#### SUMMARY

The SBE did not adopt TPS Publishing's *California State Standards Aligned 2006 Science Program* for adoption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criteria in Categories 1 and 4.

#### Science Content/Alignment with Standards

The program is not aligned to Category 1 to ensure that students master the Science Content Standards. Some of the content is scientifically inaccurate. Additionally, there is not extensive, grade-level appropriate practice in the use of mathematics.

#### Program Organization

The program is organized in sequence to enable teachers to convey the science content efficiently and effectively.

#### Assessment

This program presents strategies for measuring what students know and are able to do.

#### Universal Access

This program is not accessible to all students, because it provides minimal resources and strategies for advanced learners. It provides minimal specific help to meet the needs of students whose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are below grade level, and it provides minimal specific help to ensure that these students know, understand, and use appropriate academic language in science.

#### Instructional Planning and Support

The program does provide support for the teacher in implementing the instructional program.

26 | 2006 Science Primary Adoption Report

### III. 미국 워싱턴 주의 교과서 인정제

워싱턴 주의 인구는 약 680만 명으로 미국에서 인구수 기준으로 약 13번째 큰 주에 해당한다. 면적은 우리나라(남한)의 약 2배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295개 지역 교육청에 속한 2,300개의 학교에서 약 53,000명의 교사가 약 1백만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인구수나 학생수로 보았을 때 캘리

포니아 주의 1/6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워싱턴 주에서는 교과서를 어떻게 심사하는가? 워싱턴 주에서는 주 차원에서 교과서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선정 심사는 주 교육부가 아니라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한다. 이 장에서는 워싱턴 주에서는 교과서 선정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1. 주 차원에서 교과서 선정 지원 활동

워싱턴 주의 경우 주 차원에서 교과서 인정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인정 심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K-12 학생수가 약 1백만 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청이 295개나 되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당 평균 학생수는 약 3,400명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교육청은 교과서를 제대로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는 전문/전담 인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교육청에서는 전담 인력이 없어 현장 교사나 교장들이 교과서 인정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주 교육부에서는 특히 작은 규모의 지역 교육청을 염두에 두고 ‘주 수준의 교과서 선정 지침’(Washington State Guidance for Selection of Instructional Materials: To Meet District and State Standards)을 제시한다. 이 지침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따라야 할 지침과 다양한 유관 참조사항들을 제시하는 참고용이고, 각 지역 교육청은 주 교육부가 제시한 지침을 조정하여 활용 가능하다.

워싱턴 주는 법(교과서 관련 규정 RCW 28A.320.230)으로 지역 교육청이 학생용 교과서를 선정할 때 따라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과서 선정시 지역 교육청이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한 주 지침을 따를 것
- 전문가와 학부모를 포함한 ‘교과서선정심의회’를 구성할 것
- 선정 심사 과정에서 편견이나 공정함 등을 평가하여 지역교육청이 교과서를 선정할 것
- 지역 교육청의 교과서 선정/불선정은 지역 교육청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서 결정할 것

워싱턴 주의 각 지역 교육청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치’(alignment)라는 개념이다. 즉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치가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 교육부는 ‘일치’하는 교과서 선정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이런 일치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 교육부에

서는 ‘교과별 필수학습내용’(the Essential Academic Learning Requirements: EALRs)과 학년별 기대 수준(Grade Level Expectations: GLEs)을 개발하여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제공한다. 요컨대, 주 교육부는 지역 교육청이 주 교육부의 교육과정과 주 평가 기준 등에 일치한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 교육부는 지역 교육청에서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가 주 교육과정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분석한 자료 즉 ‘주 교육부의 교과서 평가 보고서’(Instructional Materials Review)를 지역 교육청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주 교육부는 참가를 희망하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각 출판사의 교과서가 워싱턴 주의 교육과정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대한 자기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출판사가 제출한 보고서가 주 교육과정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교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주 교육부의 교과서 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목록은 인정 도서의 목록도 아니고 교과서의 질적 순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출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기평가한 것을 주 교육부가 직접 확인하여 검증한 것으로 오로지 지역 교육청이 교과서를 선정할 때 활용하도록 제시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은 교과서 선정시 주 교육부가 제시한 ‘교과서 평가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사실 2007년에 주 교육부가 실시한 읽기 교과서 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출판사는 총 14개였다. 이중 2개 출판사가 나중에 평가를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12개 출판사의 교과서가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학생의 학습 효율성(student proficiency), 평가(assessment), 문화적 수용성(cultural responsiveness), 보편적 접근성(universal access) 4개 영역으로 나뉘 강하게 일치(strongly aligned), 적절하게 일치(adequately aligned), 부분적으로 일치(partially aligned), 불일치(not aligned) 단계로 이루어졌다. 강하게 일치와 적절하게 일치한 내용이 65% 이상인 교과서는 ‘대량 구매 가격 합의’(Master Price Agreement)가 가능

하고, 이 비율이 65% 미만인 교과서는 '대량 구매 가격 합의'가 불가능하다. 2007년 평가에서는 12개 출판사의 교과서 중에서 8개 교과서의 일치 비율이 65% 이상이었고, 4개 교과서의 일치 비율이 65% 미만이었다.

그렇다면 '대량 구매 가격 합의'란 어떤 제도인가? 워싱턴 주에서는 주 차원의 인정 심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별로 교과서를 심사하여 선정한다. 그래서 교과서 구입량도 적고, 가격도 비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 주 교육부는 출판사들과 '대량 구매 가격 합의'를 맺는다. '대량 구매 가격 합의'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주교육부의 교과서 평가에 자발적으로 응한 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용 일치율이 65% 이상이어야 한다. 워싱턴 주 교육부는 2006년에는 읽기 K-3 학년 교과서를, 2007년에는 읽기 4-10 학년 교과서를 평가하였고, 평가에 합격한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워싱턴 주의 모든 지역 교육청에 향후 6년 동안 현재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출판사와 합의하였다. 이런 가격 협정을 맺음으로써 워싱턴 주는 캘리포니아 주나 텍사스 주와 같은 거대 구매 주에서처럼 교과서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2.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의 교과서 선정 심사

워싱턴 주의 지역 교육청은 주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과정이나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맞는 교과서를 선정해야 한다. 규모가 작아 인력이나 재정적 여유가 없는 지역 교육청에서는 주 교육부의 교과서 평가 보고서를 참조하여 선정할 수 있다.

지역 교육청에서는 복수의 교과서를 선정할 다음 단위학교로 하여금 그 중 어느 하나를 선정하도록 하지 않고, 해당 지역 교육청에 속한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한 종의 교과서만을 선정한다. 지역 교육청별로 한 종의 교과서만을 선정하도록 주 교육부가 권장하고 지역 교육청이 그렇게 응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교과서 구입과 교사 연수 등 경제적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이다. 물론 이외에도 학교간 교사 협력의 용이성 제고, 전입학생의 교육 활동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교육청의 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마다 교과서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마다 한 종의 교과서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의 교과서 선정 과정을 인정 심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워싱턴 주의 교과서 심사 체계는 검정과 인정 제도를 주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과서 심사제도에 주는 시사점이 많지는 않다. 다만 몇 가지 특징들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워싱턴 주의 지역 교육청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 교육청에서는 교과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주 교육부의 지침은 지역 교육청의 교과서 심사 업무를 보조해 줄 사람인 '심사 진행자' (facilitator)를 교사 중에서 찾을 것을 권한다. 그리고 이 사람의 책임하에 '교과서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교과서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시키되,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고등학생도 심사위원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하고 있다.

주 교육부는 두 단계의 심사를 통해 교과서를 선정할 것을 권한다. 1단계에서는 출원된 모든 교과서를 일부 핵심 내용 중심으로 검토하여 심층 분석을 위한 2-3종을 우선 선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선정된 2-3종의 교과서를 심층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 하나를 선정한다. 주 교육부가 제시한 1단계 심사에서 주요 평가 기준/질문은 다음과 같다.

- 학생본, 교사본, 평가자료만을 중심으로 평가하라. 나머지 기타 자료는 일단 무시하라.
- 주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을 중심으로 평가하라.
- 교과서가(소수의 똑똑한 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교사에게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면서 평가된 적이 있는가?
- 최근 연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 교과서는 주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는가?

주 교육부는 지역 교육청이 교과서 심사 과정에서 교과서를 현장 적용(to pilot)해 볼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현장 적용 평가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장 적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주 교육부는 또한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선정심사위원회에 이들을 참여시킬 것을 권장한다. 다만 여러 이유로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저녁에 실시하는 학부모 모임에서 교과서를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거나 교육청의 여유 공간에 교과서를 전시하고 의견을 듣는 방법을 권장한다.

#### IV. 미국의 교과서 심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같은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의 교과서 심사 제도는 매우 다르다. 하나의 주라기보다는 하나의 국가에 해당하는 규모를 가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매우 엄격한 의미의 ‘인정’ 심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의 워싱턴 주에서는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한 종의 교과서를 선정하는 심사를 행한다. 이처럼 주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과서 심사 제도의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교과서 심사 제도는 우리나라 교과서 심사 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여기서는 미국이 교과서 심사 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검정제와 인정제를 넘어 교과서 ‘심사/승인제’로 나아가야

우리나라에는 교과서 발행과 관련하여 국정, 검

정, 인정제가 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살리기 위하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가 최근 들어 국·검정을 인정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변화는 검정과 인정이 서로 다른 정책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주가 교과서 심사 기준을 미리 제시하면 민간이 이 기준에 맞추어 교과서를 개발한 다음, 심사에 합격해야 교과서로 성립/발행하는 제도를 검정제라고 한다. 이에 반해 민간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먼저 만든 다음 심사를 통해 교과서의 사용을 허가받는 제도를 인정제라고 한다. 얼핏 보면 구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검정제와 인정제는 그 정의를 검토하면 할수록 그 의미가 불분명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제도를 검정 중심에서 인정 중심으로 바꾸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많은 교과서가 검정에서 인정으로 바뀌었지만, 인정 심사가 심사 기준이나 심사 절차에서 검정 심사를 준용함으로 인하여 검정과 인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심사 방식은 검정인가 인정인가?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가장 학생수가 많은 주이기 때문에 많은 출판사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정, 내용기준, 교과서 심사 기준에 맞춰 교과서를 새롭게 집필하여 심사에 출원한다는 점에서 인정보다는 검정에 가깝다. 교과서 심사 기준(최소한 심사 30개월 전 고시)이 새롭게 설정되면 주 교육부가 출판사들에게 심사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거나 심사 당해연도에 심사 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보다는 검정의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수가 많은 텍사스 주의 교과서 심사 제도를 ‘인정’이 아니라 ‘검정’이라고 소개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심재호외, 2011).

사실, 발표자가 교과서 관련 국제학회에서 활동하면서 계속 문제로 느꼈던 것이 바로검정과 인정의 구분 문제였다. 국제학회에서는 교과서 심사를 ‘승인’(approval)의 문제로 묘사하지 검정이나 인

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정도가 검정과 인정을 구분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고 최근 우리나라 인정제를 보아도 그렇고 검정과 인정의 경계는 생각만큼 명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인위적인 구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검정이나 인정이냐가 아니라 국가/교육청에서 교과서 심사 즉 승인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교과서 심사/승인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느슨하게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심사/승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살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심사/승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로 고민할 때 우리나라 교과서는 더욱 질 좋은 교과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불분명하고 무의미한 검정과 인정의 구분을 넘어 합리적인 심사/승인제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2. 주기적인 심사/승인제를 도입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검정 중심의 교과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서는 4년 주기의 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정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 역시 6년/8년 주기의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정과 인정을 혼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정과 인정 모두 주기적인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개의 핵심교과는 6년 주기로 교과서 승인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과서 승인 심사를 하기 2년 전에 주 교육과정과 교과서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 각 출판사는 개정된 교육과정과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한다. 앞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출판사와 교육관계자 모두가 어떤 교과가 언제 교육과정과 교과서 심사 기준이 바뀌고 교과서 승

인 심사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고, 이에 대비할 수 있다. 학교 관계자와 출판사 관계자 모두 미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기적인 교과서 심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한번 승인 받은 교과서를 어떤 때는 10년 가까이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3년 밖에 사용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번엔 승인 받은 교과서가 얼마나 사용하게 될 것인지, 언제 새로운 승인을 다시 받아야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주기적인 교과서 승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과서 정책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 심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 3. 교과서 심사 과정과 결과를 개방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캘리포니아 주의 교과서 심사 과정은 개방성과 투명성이 두드러진다. 교과서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출판사를 엄격하게 분리/격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캘리포니아 주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 과정에서 출판사를 참여시켜 적절하게 활용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심사위원 연수에도 각 출판사가 참여하여 출원 교과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며, 집단 심사에도 참여하여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응답한다. 더 나아가 교과서 집단 심사 과정에 일반인도 들어가 참관할 수 있다. 워싱턴 주에서는 교과서 평가시에 각 출판사로 하여금 주 교육과정과의 일치 정도에 대한 자기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출판사에게 해당 교과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곧바로 통보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동의할 수 없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더 나아가 심사를 마친 뒤에는 각 교과별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심사결과보고서에는 각 출판사별로 합격 사유와 불합격 사유를 제시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22개의 전시장(Learning Resources Display centers: LRDCs)에서 30일 동안 전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과서 심사는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매우 투명하게 진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검정 심사 과정을 일부 공개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 심사를 좀더 과감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4. 엄격한 심사 대상과 느슨한 심사 대상을 구분해야

캘리포니아 주의 교과서 심사는 심사 대상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점에서 인상적이다. 첫째, 교과서 심사가 7개 교과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둘째,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개 핵심 교과의 교과서는 6년 주기로 심사를 실시하고, 미술, 외국어, 보건의 8년 주기로 심사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셋째, 주 교육부에서는 K-8 학년의 교과서만 심사하고, 9-12 학년의 교과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교급과 교과에 따라 국정, 검정, 인정으로 구분고시하여 심사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 검정, 인정의 구분고시와 심사의 엄격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국정은 불합격이 없는 심의만이 이루어지고, 인정심사는 검정 심사를 준용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검정과 인정간의 심사의 엄격성은 그다지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발표자는 국어, 도덕, 역사 등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일부 교과는 다소 엄격한 승인 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승인 심사를 실시하며, 일정 규모 이하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예컨대, 전문교과나 소수 학생 선

택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교 단위의 약식 심사를 거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별로 심사의 엄격성을 달리하는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 5. 교과서 가격 심사 정책을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캘리포니아 주는 교과서 심사 과정에서 출판사들로부터 교과서 가격 견적서를 받는다. 그러나 주 교육부는 출판사가 제출한 교과서 견적 가격을 비싸다고 강제로 조정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통해 교과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시장 가격 형태로 자율 조정되도록 유도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출판사가 미국 내 다른 어떤 주보다도 더 비싼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교과서 가격을 2년 단위로만 인상하도록 규제하고, 무료 자료 목록을 세밀하게 제시하도록 요구하며, 다른 주에서 무료로 제시하는 모든 자료를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는 대량 구매 가격 협의를 통해서 워싱턴 주 내 모든 지역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교과서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주마다 학생 1인당 교과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에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교과서 가격 자율화로 인하여 교과서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교과서 가격을 심의하여 조정하는 이른바 손쉬운 통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질 좋은 교과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 시장 질서를 존중하기 위하여 교과서 가격 자율화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출판사가 제시한 교과서 가격을 직접 조정하는 형태를 취하기 보다는 교과서 가격 설정 환경의 합리적 조성을 통해 교과서의 시장 가격이 적절하게 형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부 주제발표 ②



구 난 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국가관리로부터 민간자율로의 전환,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 - 중국·몽골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 [요약]

중국과 몽골은 자본주의 체제 도입과 함께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교과서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교과서 정책은 사회주의적 전통의 근간이 되는 ‘국가관리’로부터 자본주의적 체제의 특징인 ‘민간 자율’로 전환하고 있지만 아직은 두 개의 특성이 병존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과도기적 변화 과정에 있는 양국의 교과서 제도 속에서 현행 한국 교과서 제도 운영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추론해 보았다.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관리 체제에 대한 보완 강화, 교과서 정책 당국과 교과서 개발자간의 의사소통 확대, 교과서 심사 및 채택 기간의 최대 확보 등의 시사점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한 교과서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공적 권위의 형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국가 관리(state management), 민간 자율(private self-control), 사전 관리 (pre-management), 의사소통(communication), 공적 권위(public authority)

## I. 들어가는 말

흔히 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3요소로 교사, 학생 그리고 교육 내용을 든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교육이 성립될 수는 없겠지만 그 핵심은 바로 교육 내용이 아닐까 한다. 교육 내용은 교육을 둘러싼 당대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된다. 교육에 대한 요구는 크게 국가사회적 요구, 학습자적 요구 그리고 학문적 요구로 대별된다. 공교육은 이러한 제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최근에 와서는 동서양이 두 가지 경향으로 수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첫째는 국가 수준의 공적 권력이 교육 내용을 명시한 교육과정이라는 외현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교육과정의 진술이 교육 내용(학습 요소)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교육 목표 중심으로 대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가 아시아적 전통을 서구가 수용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서구적 전통을 아시아가 따르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교육의 지형 변화 속에서 종전에는 교육 내용은 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놓이면서 교육의 내용과 목표만큼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을 어떤 학습 과정으로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결국 교육의 과정을 면밀하게 구성하고 안내하려면 공인된 표준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교과서는 바로 이러한 핵심적 부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제반 사항을 설계하고 그 과정을 구현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각국은 질 높은 교과서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는 그 자체가 교육 개혁의 실천 경험인 동시에 교육이론의 성과를 구현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최근에는 각 교과와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조합되면서 재료로 구현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서구보다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공교육이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동양 사회에 있어서 교과서는 어쩌면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실행효과와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더욱이 국가 중심의 관리 운영 체제로부터 민간 자율을 통한 변화를 모색해 나가는 시점에 있어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이러한 변화선상에 있는 중국과 몽골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과 몽골은 자본주의 체제 도입과 함께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질 높고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 개혁의 필요를 절감하고 있는 몽골은 제각각 그 사회가 당면한 현실과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의 구조가 다르지만 사회주의적 요소가 근간을 이루거나 잔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주의적 전통으로 인해 국가의 정책 방향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이 매우 어려웠으며, 특히 현지 정보 수집을 위해 방문했던 2012년 7월의 경우 현지의 여러 가지 사정은 더욱 어려웠다<sup>1)</sup> 궁극적으로는 다른 (혹은 그 전통이 남아 있는) 체제 속에서<sup>2)</sup> 뭔가를 도출해낸다는 사실 자체가 발표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 글은 그간에 공개된 관련 규정과 현지 조사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얻은 정보를 토대로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 특성을 추론하는 것에 한하고자 한다.

## II. 교육 개혁을 위한 양국의 노력

우선 교과서 제도 개혁의 기초적 배경으로 각국

1) 중국은 2012년 9월 신학기부터 수정된 과정표준에 의거하여 새로운 교과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최근 발해사 및 발해유적에 대한 중국 귀속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보도도 지속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 교육부 및 인민교육출판사는 면담이 사실상 거부되어 부득이 중국 교육과학출판사만 방문할 수 있었다. 한편 몽골은 7월 11일 독립기념일을 전후한 나담 축제 및 대입 추진시기로 업무과다로 인한 관계자의 면담이 불가하였다.

2) 최근 국내의 한 연구에서 한국 교과서 제도의 특징은 지식암송형 교과서, 저가 교과서, 국정-검정 중심의 발행, 교과서(전 학생) 지급제로 지적하고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모색을 강구한 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표에서 검토하려는 양국의 교과서 제도는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다. (김진영 외, 2010, 11쪽)

의 교육과정 현황을 간략히 개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 1. 중국

중국의 교육 개혁은 개혁·개방의 확대와 함께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되었는데 특히 교육과정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추진되었다. 1990년 3월 국가교육위원회는 『현행보통고등학교 교육계획조정에 관한 의견(關於現行普通高中教學計劃調整的意見)』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핵심은 교육 내용 감소와 선택과목 확대에 있었다. 이에 따른 중요한 변화는 지금까지 하나의 교육과정과 하나의 교과서로 운영되던 체제를 이른바 다강다본(多綱多本, 복수의 교육과정과 복수의 교과서) 체제로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교학대강으로부터 과정표준으로 이행하면서 더욱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sup>3)</sup>

2001년 국무원 『기초교육개혁과발전에관한 결정(關於基礎教育改革與發展的決定)』과 교육부 『기초교육과정개혁강요(시행)』가 발표되었고 이어 2001년 11월 교육부는 『의무교육과정설치실험방안』을 제정, 반포하였다.

이후 각 성(省, 또는 구(區))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절강성(浙江省)의 경우 의무교육과정은 2002년 가을학기부터 실험구에 적용하여 2004년까지 6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고시하고<sup>4)</sup> 호북성(湖北省)의 경우도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10%에서 35% 수준까지 실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sup>5)</sup> 이로 추정해 보면 전국의 각 성이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점차 실험 적용을 확

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보도자료에 따르면<sup>6)</sup> 기초교육 과정 중 초급중학교(중학교)까지는 2005년 9월부터 과정표준을 전국에 전면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급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는 2005년 9월부터 실험구에 적용하기 시작하여<sup>7)</sup> 의무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점차 확대해 나가 보통 고급중학교는 2008년부터 과정표준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와 동시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개혁은 크게는 E-learning 체제의 모색으로부터 작게는 E-text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와 매체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비록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그간 한국 교육계가 축적해 온 성과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확산력을 감안해 본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 2. 몽골

몽골은 1989년 민주동맹을 대표로 하는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1992년 신민주헌법을 채택하고 급속한 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는 1990년 3월 수교가 이루어져 활발한 교류가 전개되고 있다<sup>8)</sup>

몽골의 교육열은 한국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수량적으로만 보더라도 고등학생의 90%가 대학교 및 전문학교에 진학하고 있다<sup>9)</sup>.

초등학교에서는 몽골어, 수학, 사회학, 인간 및 자연생태학, 건강, 체육, 음악, 미술 등 8개과목이 필수로 운영되고 외국어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몽골어, 문학, 수학, 사회

3) 教學大綱이 소련식 교육과정으로 교육내용 중심의 일원화된 규정이었다면, 課程標準은 서구식 교육과정 표준으로 교육과정의 전체적 구조와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4) 浙江省教育廳關於實施教育部, 『基礎教育課程改革綱要(試行)』의意見 (<http://www.zjedu.gov.cn/gb/articles/2005-05-08/news20050508160219.html>)

5) 湖北省教育廳, 我省基礎教育課程改革實驗工作正式啓動 ([http://www.hbe.gov.cn/e21web/jyt/article\\_show.php?article\\_id=134](http://www.hbe.gov.cn/e21web/jyt/article_show.php?article_id=134)).

6) 『義務教育新課程全面推開』, 『中國教育報』, 2005년9월1일(<http://www.moe.edu.cn>)

7) 『普通高中新課程實驗省區聯席會召開』, 『中國教育報』, 2005년11월30일(<http://www.moe.edu.cn>) 이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고급중학교의 실험적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江蘇, 山東, 廣東, 海南, 福建, 遼寧이었다.



학, 화학, 지리학, 역사학, 생물학, 생태학, 영어의 11과목이 운영되고 선택과목으로 음악, 미술, 체육, 제2외국어(러시아, 중국어, 독어, 프랑스어, 서반어, 한국어, 일본어)가 개설된다<sup>10)</sup>

이런 가운데 2006-2015 교육마스터플랜을 통해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교육개혁 10개년 계획으로 현재의 교육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둘러싼 대내외적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교육환경이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다시 중단기 목표를 세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이슈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 인적 자원의 개발, ICT 등 교육제도의 접근성 확대,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등이다.

국민의 교육열에 기반하여 몽골 교육문화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 중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큰 변화는 종전의 10학년제를 확대하여 2011년부터 12학년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1)</sup> 이에

따라 초등과정 5년, 중학교 과정 4년, 고등학교 과정 3년의 학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중학교 9년 의무교육 과정이며 고등학교 3년은 유상교육이다. 몽골의 경우 초중고등학교가 각각의 학교급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학교 내에서 1학년에서 12학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2년 현재 전체 초중고등학교는 751개교이며 학생 수는 512,213명이다.

### III. 교과서 제도의 현황과 특징

#### 1. 중국

신중국 성립 이후 중소학<sup>12)</sup> 교과서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편찬하고 통일적으로 공급하는 국정제도를 실시하였다. 1950년 12월 교육부 직속으로 인민교육출판사가 성립되면서 교과서 출판업무를 전담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교학대강<sup>13)</sup>에 따른 하나의 교과서가 발행되는 이른바 一綱一本의 시대로 시작되었다.

- 8) 교육분야를 보면 1990년 수교 이후 몽골 외교부 산하 동양학연구소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이래 몽골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몽골 학생은 2000여명에 이르고 한몽 방문객 수도 이미 4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 9) 현황 분석에서 주목해 볼 흥미로운 통계는 여학생의 수학율이 남학생의 그것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초등의 경우에는 여학생 99.6%, 남학생 96.1%에 달하는 반면, 중등의 경우는 남학생 89.9% 여학생 96.9%에 미치고 있다. (Government of Mongolia(2006), pp. xiv - xv)
- 10) 외국어의 경우 러시아어 이어 일본어나 중국어를 선택했으나 최근에 들어 한국어 선택률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일본어나 중국어를 상회하고 있기도 하다.(2012년 5월 면담자료)
- 11) 종전에는 10학년제였으나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12학년제로 변화하고 있다. 과도기에 각 학년별 12학년제 적용 상황을 아래 표와 같다. 2012년 현재 12학년이 전면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수학생들은 과도적 조치로 시행되는 11학년제와 완전 12학년제를 적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몽골교육부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적용연도	학 년											
2007~2008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2008~2009	I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2009~2010	I	II					VII					
		II	III	IV	V		VII	VIII	IX	X	XI	
2010~2011	I	II	III				VII	VIII				
			III	IV	V			VIII	IX	X	XI	
2011~2012	I	II	III	IV			VII	VIII	IX			
				IV	V				IX	X	XI	
2012~2013	I	II	III	IV	V		VII	VIII	IX	X		
					V					X	XI	
2013~2014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	
2014~2015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 12) 중등학교와 소학교의 줄임말이다. 중등학교는 다시 초급중학교(한국의 중학교에 해당)와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로 나뉘므로 결국 이 말은 소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이른다.
- 13) 소련식 교육과정으로 용어나 구조 모두 소련의 것과 동일하다. 전반적으로 교육내용(내용요소)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 체제는 1985년 1월 발표된 「전국중소학교재편찬심정(編寫審定)위원회공작장정」에 의해 심정 제도로 변화하였다.<sup>14)</sup> 이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다강다본 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sup>15)</sup>

심정(審定)제도의 근본은 이른바 “통일적인 기본 요구 하에 다양화를 실행(統一基本要求的前提下實行多樣化)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용어에 내재된 ‘통일’과 ‘다양화’가 중국 교과서 제도의 기본 방향을 이루는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

다양화라는 용어는 매우 다의적이어서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다. 우선 교육과정(과정표준)과 교과서가 지역별로 다양화될 수 있다. 상해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북경과 전혀 다른 체제의 교육과정이 운용되고 있음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sup>16)</sup>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교육과정 체제하에서도 학제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다양성이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소학교 6년과 초등학교 3년의 9년제 의무교육과정, 소학교 5년과 초등학교 4년의 9년제 의무교육과정이 병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나 우수 학교에서는 9년제 의무교육과정 이상의 내용이 운용되기도 한다. 또한 산간지역이나 소외지역과 같이 교육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9년제 의무교육 과정의 기초적 내용으로 대별된다.<sup>17)</sup> 뿐만 아니라 발행 언어의 다양성도 포함된다. 한국어(朝鮮語), 티베트어(藏文), 몽고어의 경우 별도로 교과서가 제작된다<sup>18)</sup> 광대한 영토에 다양한 민족이 공존

하는 중국적 교육 현실에서는 필연적인 조치일지도 모르겠다.

교과서의 개발과 보급에 이르는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그림 1】과 같다.

1985년 1월 심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1986년 9월 전국중소학교재심정위원회가 성립되었고 그 아래 각 과목별 교재심사위원회와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전국중소학교재심정위원회는 전국의 각 과목 과정표준과 교재를 검정하고 과목별 심사위원회 업무를 지도하도록 규정하였다. 교과별 과정표준의 제정 및 교과서 편찬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국가교육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출판,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2001년에 공고된 교육부령인 중소학교재편찬심정관리규정(中小材定管理行法)에 의거하여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sup>19)</sup> 이하의 서술 내용은 이 문건에 근거한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화 정책 속에서 북경을 중심으로 한 체제와 상해 또는 홍콩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적잖은 차이가 있지만, 북경 중심의 체제에 한하여 논의한 것임을 밝혀 둔다.

## 1) 서류 심사

서류 심사 과정은 교재의 질 저하와 특징없는 중복을 막아 자원낭비를 줄이고 다양화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교재를 개발하려는 경우 국무원 또는 지방성 교육행정부문에 반드시 편찬계획을 신청하고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성의 교육

14) 심정제란 민간에서 교과서를 편집 출판하고 중앙이나 지방의 교육행정기관이 교육과정(2003년까지는 이전의 '교학대강'과 새로운 '과정표준'이 혼재)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이에 합격한 교과서를 각지에서 선택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굳이 따진다면 한국의 검정제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심정제와 동시에 민간에서 교과서를 편집, 출판, 발행하고 각 학교가 자유로이 선택 사용할 수 있는 자유발행제와 같은 자선(自選)제도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심정제도는 교과서에 대한 심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심정도 포괄하고 있다. 1991년 10월에는 상해와 절강성 교육과정(各科修學指導綱要)을 심정하였으며 이후 과정표준 시기에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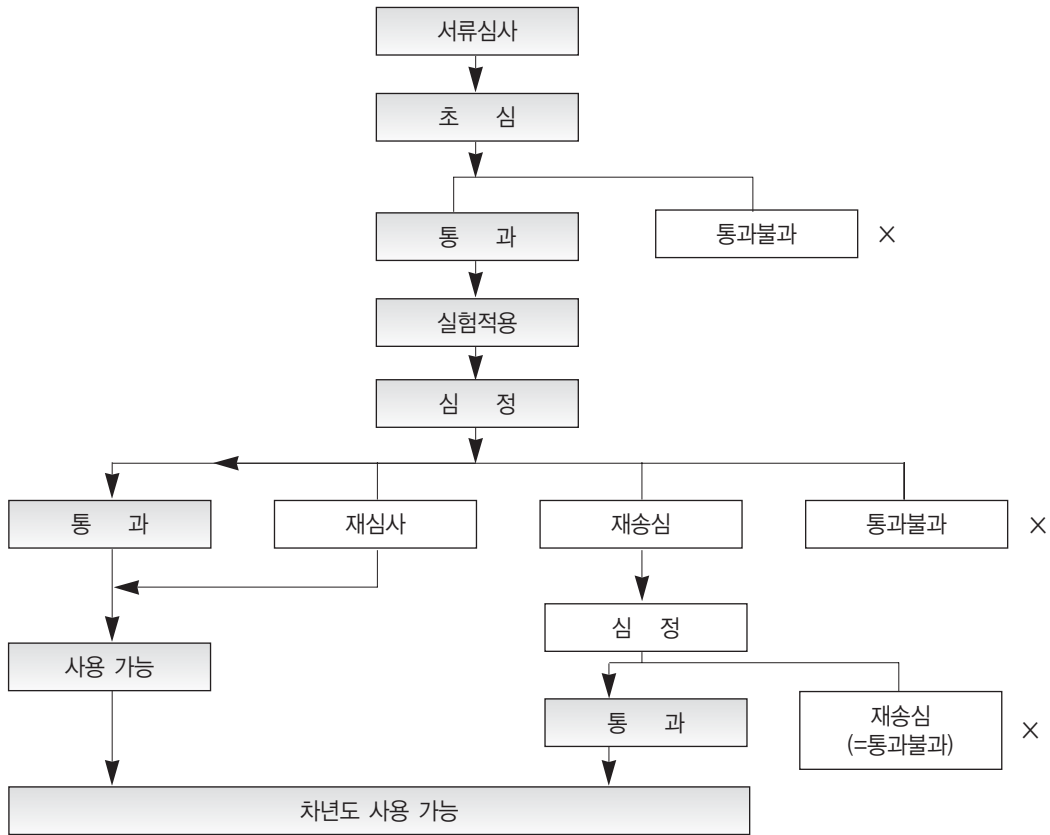
15) 중국의 교과서 제도의 개선과 변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유리, 「중국 교과서 제도의 현황과 특징」,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18,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고구려연구재단, 2006.)

16) 홍콩의 경우는 특별행정구역으로 그간에는 전혀 다른 교육과정, 그리고 이에 의거한 교과서를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이원체제로 운영되면서 홍콩 자치 교육과정과 대륙(북경 중심)의 교육과정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구난희(2012), 68-72쪽)

17) 江明, 關於大陸地區中小學教材的編審制度. (http://www.trd.org.tw/)

18)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2005)

19) 이 법은 국무위원에서 발표한 国务院办公厅转发体改办等部门关于降低中小学教材价格深化教材管理体制改革的意见的通知 ((国办发[2001] 34号)의 기본 정신에 의거하여 교육부에서 제정된 것이다.



[그림 1] 중국의 교과서 심정제도 과정

행정 부문이 담당하는 부문은 국무원이 위임한 영역이므로 중국의 심정제는 한국의 검정제와 인정제가 통합된 형태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심사과정에서 편찬단위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개

발을 사전에 통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sup>20)</sup> 신청해야 할 서류와 각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서류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

신청서류	구 성 항 목
기본현황	교재 편찬 신청의 단위, 단체, 개인의 기본정황
신청교재 현황	편찬신청 교재의 명칭, 적용범위, 편찬 목적과 지도 사상, 국내외 해당 교과서의 비교 국내 현행 사용 교과서의 분석, 편찬교재의 주요 특징
주요 집필진 현황	개인 경력(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sup>21)</sup> 첨부) 신청교재 관련 경력과 연구 성과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의견 소속 단위 또는 지구의 교육행정부문의 의견
신청교과서 관련 자료	신청도서의 구조와 체제, 지면 견본단원

20) 편찬위원의 자질로서 당의 교육방침 이해, 중소학 교육 및 교육개혁의 발전추세 이해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교재의 특색을 보장하기 위해 교재의 주변과 주요 편찬인원은 두 종의 교과서 편찬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국과 대동소이하다.

21) 본문에서는 附學歷證書、專業技術資格證書的复印件, 任職情況로 서술되고 있다.

견본 단원과 관련 교재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점이 이채롭다. 구체적인 출판 기획과 외현(레이아웃)의 상황, 그것과 함께 집필진의 전문성을 사전에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주목해 볼만하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내용심사와 자질심사의 두 단계를 거친다. 내용심사는 말 그대로 교과서 서술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질 심사는 신청자의 자질 및 관련서류에 대한 심사로 진행된다.

## 2) 교재의 편찬

신청심사에 합격하면 편찬이 이루어진다. 교재 편찬은 당연히 교육과정에 의거해야 한다.<sup>22)</sup> 그러나 현재 전환되고 있는 과정표준은 각 과목이 실현해야 할 과정목표와 학습해야 할 과정내용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찬과정에서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재조직하고 재창작하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이른바 지방단위 개발(省産纂制)이다. 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인민교육출판사 내지는 교육과학출판사의 교과서가 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그밖에도 이를 모본으로 하여 편찬되고 있다<sup>23)</sup>

대개 교재편찬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우선 교재편찬의 지도사상과 편찬원칙을 확인하고 교재의 특색, 전체 구조와 체계를 설계한다. 다음으로 전문가와 교사 의견을 구하여 수정 보완하고 2~3개의 견본 단원을 설계한다. 견본단원이 개발되면 이를 현장교사들에게 의뢰하여 수정·보완한 뒤 이를 근거로 전체 내용을 편찬한다. 수차에 걸친 토

론과 수정보완, 시험운영을 거쳐 교재가 완성되면 주편(대표저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

교과서의 초기 집필 과정에서 전문가와 교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후 평가 관리보다는 사전 점검 관리로 개발진과 현장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활용도를 최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만한 과정이 있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교재 편찬 지침서를 통해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내 대부분의 교재를 독점해 왔던 인민교육출판사의 예를 보면 2003년 『기초교육교재건설총서(基礎教育教材建設叢書:中小學教材的編寫出版)』를 발행하여 보급하였다<sup>24)</sup> 이 문건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역은 정치문제, 민족문제, 국제관계 문제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 반우파 투쟁,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일련의 정치사건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중국공산당 중앙의 관련 문건에 의거하여 서술해야 한다는 점, 중국 내 소수민족은 중화민족 대가정의 주요 성원이라는 점 등 현재 중국의 국가 유지에 있어 민감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sup>25)</sup>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교과서'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주목해 볼 만하다.

## 3) 교재의 심사(審定)

초중등 교과서의 심사기구는 교육부 기초교육교재심정판공실(基礎教育教材審定工作辦公室, 사무국에 해당)과 전국중소학교재심정위원회이다. 다시

22) 현재 전환되고 있는 과정표준 체제는 '과정방안' (총론에 해당)과 '과정표준' (각론에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2012년 7월 3일자 면담자료.

24) 이러한 조치가 출판단위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자기검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차원의 권고 또는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인민교육출판사가 그동안 중국 전역에서 활용되는 교과서를 개발해 왔음을 감안해 볼 때, 반관반민의 과도단계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5) 김유리(2006), 86-88쪽.

26) 심사위원은 전국중소학교재심정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인력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27) 중국의 공식용어는 실험(實驗)이나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험사용으로 칭하였음을 일러 둔다.

28) 교학용서목록에는 교과서 뿐만 아니라 교사용지도서도 포함된다.

하부에는 각 과목별 교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들은 해당 과목별로 교재의 초심과 심정을 담당하며 심정위원회에 심정보고를 제출한다. 심정위원회는 각 과목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육심리학 전문가, 중소학교육 연구인원과 우수교사로 구성된다. 심정 및 심사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각 지역의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구, 각 대학 및 저명 전문가의 추천에 따라 심사한 후 국무원 교육행정기관의 초빙을 받으며 임기는 4년이다. 위원으로 초빙된 기간에는 교재편찬을 담당할 수 없는데 이는 한국과 동일하다.

심사과정은 초심(初審)과 본심(審定)으로 이루어진다.

### ① 초심(初審)

초심은 교육부 기초교육교재심정공작관공실에서 담당한다. 판공실은 서류 심사 시 제출된 계획대로 교과서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심사시기를 사전에 통지한다. 교재 편찬단위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완성된 교재 및 1차 송심보고서를 제출한다. 송심보고서는 심사 과정 중 개발진과 심사진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소통 체계라 할 수 있다. 1차 송심보고서에는 교재 편찬의 지도 사상과 철학을 명확히 전달하고 교재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송심보고서는 심사위원에게 송부되고<sup>29)</sup> 심사위원은 이를 사전에 검토한 뒤 판공실이 주관하는 교재심사회의에 모여 해당 교재의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 ② 초심통과본의 시험사용

초심을 통과한 교재는 일정기간 실험구의 학교에서 시험(實驗) 사용한다<sup>27)</sup> 원칙적으로 시험 적용이란 400 학급 또는 2만 명 학생의 범위 내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도 시험 적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대

상 범위가 1~2개 실험반에 불과하였으므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험 적용은 예비시험이라 명명할 수 있을 만큼의 확대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민교육출판사본 교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28개 성, 시, 자치구의 3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33만명 이상의 학생이 해당 실험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우선 초심을 통과한 실험교과서는 「실험교과용서(實驗教學用書目錄)」에<sup>28)</sup> 포함되어 각 성에 배포되고 각 성 교육행정기관은 그것을 소속 실험구와 학교에 전달하여 채택하도록 안내한다.

과정표준 실험교과서는 2001년부터 시험 적용이 되었는데 2003년 가을에는 3,500만명의 학생이 실험교과서를 사용하였으며 2011년까지 시험적용은 계속되고 있으므로<sup>29)</sup>과정표준이후는 시험교과서(實驗教學用書)만이 존재하는 것 같다.

한편 2012년 9월 이후 과정표준에 의거하여 다시 새 교과서가 집필되고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 사용 교과서의 사용을 정지할 것을 공고하고 있다<sup>30)</sup>

현재의 접근 가능 자료만으로는 과정표준이라는 대대적인 교육과정 개편 이후 시험 교과서를 통해 교과서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본심(審定)

편찬단위는 시험 사용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재를 수정·보완하고 수정된 교재와 송심보고서를 다시 심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때 제출되는 제2차 송심보고서는 시험사용에 따른 의견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밖에도 시험지역의 학생수, 시험기간 및 효과, 시험지역의 교사·학생·학부모의 평가 등이 담긴 시험보고서

29) 教育部辦公廳(2011).

30) 教育部辦公廳(2011). 이 공고문에는 2012년 가을부터 사용이 정지될 교과서 목록도 첨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교과에 새 교과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역사(중국역사, 세계역사 등)의 경우는 사용정지 목록에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교과서가 발행보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종 심정의 결과는 통과, 재심사, 재송심, 통과 불가의 4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통과와 불가는 곧바로 사용, 재심사는 수정 후 사용이 가능하다. 재송심은 차기년도에 송심해야 하며 통과불가는 어떤 구제방편이 없다. 또한 중복 재송심을 받으면 통과불가로 간주된다.

심정을 '통과' 한 교재는 심정위원회의 심사의견에 따라 수정하여 기준을 받은 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재심사'는 출판단위가 심정의견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 내 교재를 수정한 뒤 재심사하는 것으로 재심사를 통과하면 통과도서와 같은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송심'은 교재가 비록 심정표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수정하여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뒤 다음 해에 다시 송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과불가'는 교재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송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4) 교재의 채택과 공급

교재의 채택과 공급 개선을 위해 2000년 초부터 교육부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신문출판연구원이<sup>31)</sup> 공동으로 초·중등 교재의 편찬 및 심사체제를 비롯하여 출판, 발행 등 교재개발 및 활용 전반에 걸친 조사를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한 기초 위에 국무원은 2001년 6월에 「교과서가격인하, 교재관리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關於降低中小學教材價格深化教材管理體制改革的意見)」을 공고하고 이와 관련된 11개 문건을 공포하였다.<sup>32)</sup> 현재는 이 문건의 토대 위에 발행, 채택,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발행할 때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표지에 '전국중소학교재심정위원회 심정'이라는 표시를 해야만 한다. 공무원 교육 행정부문의 기준을 받은 심정교과서는 「전국중소학교학용서목록」에 포함되어 각 성에 제공되고 각 성의 교육행정기관은 위의 목록과 해당 성의 상황을 근거하여 각 성별로 별도의 교학용서목록을 편제하여 해당 학교 및 출판사에 배포되고 학교현장에서 이를 참고로 교과서를 채택하여 활용한다.

발행의 다양화와 함께 채택제도도 변화하였다. 종전의 국정제 하에서 교과서 채택은 국가교육위원회에만 주어졌던 반면, 심정제도가 성립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심정교재의 심사에만 책임을 지고 교재의 채택은 지방의 교육행정기관에서 한다. 채택 단위는 현 단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몇 개의 현이 조합한 성시급(地市級)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sup>33)</sup> 다만 경제 특구나 우수 학교 내지는 산간 지역 등의 극히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단위로 채택하기도 한다.

채택이 완료되면 각 학교에 교과서가 배포된다. 채택 상황의 집계, 인쇄 의뢰, 배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신화서점(新華書店)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신화서점은 1937년 예안(延安)에서 출발하였으며 1948년 중국 정부는 전국 출판업무를 총괄하는 통일기관으로 신화서점을 정비하였다. 1950년 신화서점통일에관한결정이 발표되고 그 이후 신화서점은 출판, 인쇄, 발행의 3개 전문부서를 두고 출판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에 3,100개의 지점망을 두고 있으며 각각은 독립된 기업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sup>34)</sup> 이러한 조직망을 가진 신화서점은

31) 중국의 신문출판연구원은 중국 내 출판, 인쇄, 발행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정책 개선과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산하에 13개 연구부서를 두고 있다. (<http://cips.chinapublish.com.cn/>)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 동 연구원 소속의 첸주팡(沈菊芳) 부총편집장(차관급)의 안내로 교육과학출판사의 방문이 이루어졌다. 지면을 빌어 첸주팡 부총편집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32)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은 中小學教材編纂審定管理暫行辦法, 中小學教材價格管理辦法이며 이후 공고되는 문건은 각종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무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33) 1992년 반포된 「9년제 의무교육 소학·초급중학 교재 채택업무에 관한 의견(關於九年義務教育小學·初級中學教材選用工作的意見)」에 의하면 소학교의 교재는 현(縣) 수준의 교육행정기관에서 채택하고 초급중학교 교재는 성(省)이나 지방 시(市) 수준의 교육행정기관에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극히 일부이긴 하나 학교 자체적으로 교재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34) 신화서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xinhua1.com/>)

35) 이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구할 수 있다(<http://www.mecs.gov.mn/article-76-274.mw>).



한국의 교과서검정협회와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채택 후 필요부수를 신청하면 이를 총괄하여 각 출판사에 통보한 후 학교에 배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 하겠다. 즉 각 성은 채택을 통해 필요부수를 산정하고 그 현황을 신화서점에 신청한다. 신화서점은 신청현황을 수합하여 각 출판사에 전달하고 인쇄된 교과서를 신청 수에 맞게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 2. 몽골

몽골은 교과서가 국정 발행되므로 공립학교에서는 모두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 개발과 발행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교과서 개발을 위해 그 때마다 별도의 제작팀을 선정하고 그 팀에서 발행을 총괄하고 있다. 다만 몽골 내에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19%에 달하는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의 경우 국정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교과서를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교육문화과학부의 책임 하에 개발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극히 소량이라 개발과정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는 없었으므로 여기서는 국정 교과서의 개발 절차에 한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 1) 교과서 제작팀 구성

교과서 제작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하는 일은 교과서 제작을 위한 실무팀(Task Force)을 구성하는 일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국정 교과서 개발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제작팀에서는 교과서 개발뿐만 아니라 교과서 개발의 기초가 되는 기준안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준안에 명시된 내용의 당초 취지가 윤색되지 않고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만약 개발팀이 일부 성향

의 연구진으로 구성된다든가 연구진의 특정 학설이나 편향된 견해가 포함될 경우 그것을 균형 있는 관점에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 약점이라 하겠다.

교육학술연구원에서<sup>35)</sup> 실무팀을 추천하고 이를 교육문화과학부(초중고등 교육국)에서 임명하는데 이는 검정위원회의 선정과정과도 동일하다. 실무팀은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전공분야 연구자, 현장교사 등이 포함된다.

구성된 제작팀이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은 초중고등 교육교과서 기준안을 마련하는 일인데 2012년 사용 교과서의 경우 MNS 5418:2008(초중고등 교육 교과서 기준안)을 정하였으며 연구원은 제작팀에 교과서 내용과 총괄적인 지침을 하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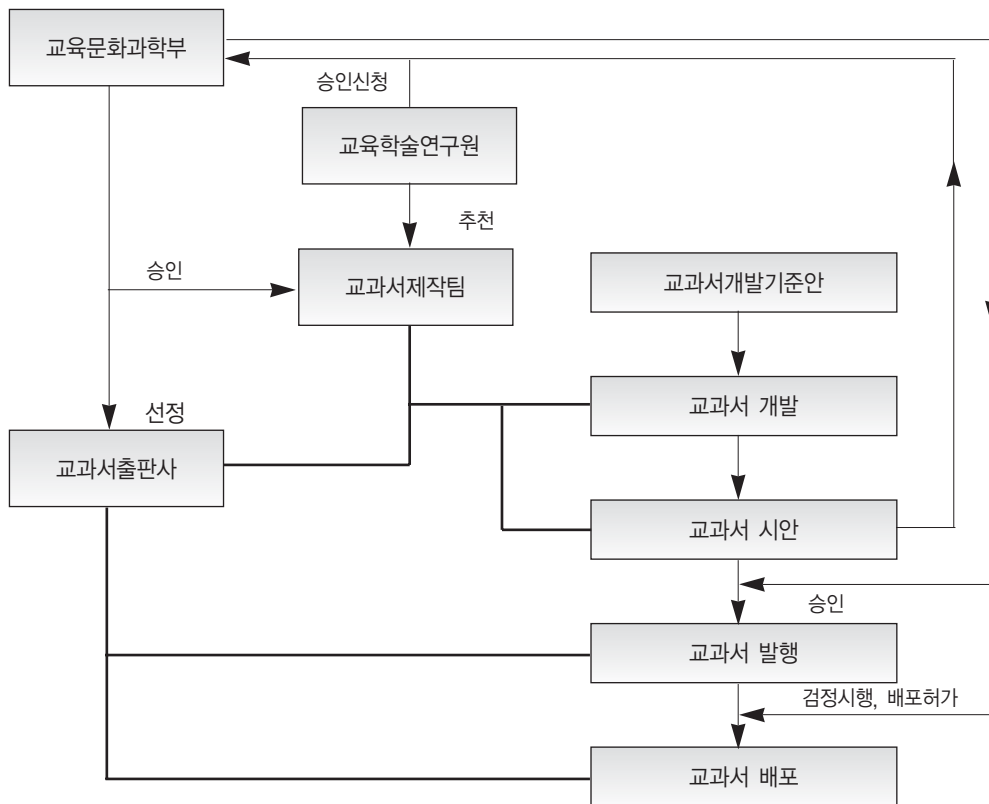
### 2) 발행 출판사 선정

기준안이 마련되면 교육문화과학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과서 발행 출판회사를 선정한다. 선정시 요건은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편집, 인쇄 능력과 그간의 경험 등이 포함될 것이다. 몽골의 출판사로는 몽골사(Ongot Khavel), 몽헌 우섹(Munkhiin useg), 아드몽(Admon), 과학기술대학교 교과서 출판 센터 등이 파악된다. 비록 발행 출판사의 선정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구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출판사가 과목이나 학년 간 특징적 구분없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국정 출판 선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교과서 시안 개발 및 검정

선정된 출판사는 제작팀과 협력하여 교과서 시안을 마련한다. 시안이 완성되면 판정의 전문성을 위해 다시 교육학술연구원은 교과서 시안이 국가 교육과정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별도의 실무단이 구성된다.

실무단은 교과별 전문가, 현장교사로 구성된다. 제작팀과 출판사는 실무단의 검정 결과에 따른 지



[그림 2] 몽골의 국정 교과서 발행 및 배포 과정

침을 받아 교과서 시안을 개정한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시안이 개정되면 이를 연구원이 교육문화과학부 해당부서에 제출한다. 교육문화과학부 내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초중고등교육국 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교육환경정책과이다. 이 부서는 초중고등학교 기준 교육 내용과, 국가 교육과정, 교과서 채택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에서는 개발된 교과서 시안이 국가의 기본방향과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가린 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개정시안에 최종 승인을 내린다.

#### 4) 교과서 발행 및 배포

초중고등교육국 내 담당부서가 교과서를 승인하

면 선정된 출판사는 교과서를 제작하여 일선학교에 배포한다. 이 과정에서도 교육문화과학부는 교과서 배포와 발행에 대한 검정을 실시한다. 검정을 위한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적정성을 판단한다. 조사팀의 평가에 결과에 따른 발행 승인이 수락되면 교육문화과학부는 배포지시문을 출판사에 송부한다.

출판사는 배포통지서를 수령한 후 교육문화과학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각급학교에 배포한다. 배포가 완료되면 해당 출판사는 배포보고서를 교육문화과학부 및 아이막<sup>36)</sup>, 도시, 문화국 및 교육과에 송부한다. 가격 사정은 신문출판총국과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한다<sup>37)</sup>

36) 몽골의 지방행정 단위로 우리식의 '도', '특별시', '광역시' 개념이다. 알란바타르, 다르항, 고비쥬머는 특별 아이막을 포함하여 모두 18개 아이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37) 國家發展改革委新聞出版總署(2012).

몽골의 교과서 개발, 발행, 배포의 전체 과정을 보면 그 결정 권한은 교육문화과학부에 있다. 이러한 제도가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체제 변화와 인구 규모 등 몽골 사회의 국가사회적 특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정부와 학계간의 협조와 역할 분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현행 교과서 제도의 보완점을 구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지도 모른다.

#### IV. 맺음말

중국의 교과서 제도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자율과 경쟁' 그리고 '통제와 관리'라는 서로 상반된 두 개의 기본 축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운영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적 체제 유지라는 현실적 고민 속에서 강구된 중국사회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교과서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몽골 또한 자본주의적 체제를 도입하면서 12학년제 도입으로 교육 연한을 확대하고 대대적인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모두 사회주의적 체제 즉 국가관리로부터 민간 자율로의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제도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교과서 제도상에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양국 제도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제도상의 차이점에 한하여 정리한 것임을 전제해 둔다.

첫째, 교과서 개발 참여자에 대한 전문 역량 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짐으로써 교과서 개발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고자 한다. 몽골의 경우 국정 교과서제도이므로 논외로 하고 중국의 경우를 보면 서류 심사시 편찬단위의 세부 사항을 항목별로 일일이 심사할 뿐만 아니라 견본 단원이나 해당 분야의 연구논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자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

적으로는 누구나 교재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재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민간의 교과서 편찬 능력과 자질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사전 심사가 신진 세력의 참여 제한으로 교과서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교과서 집필 지식의 전수라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검정출원이 확대되면서 검정심사가 원래의 기능보다 기초적 사실 오류 발견 및 표현 표기 수정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우리의 교과서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관리와 자율의 보완적 제도 보완의 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초심제, 몽골의 교과서 제작팀 선정 운영 등의 과정은 집필자와 제도 운영 당국과의 수시 의견 교환 및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만하다.

중국의 경우는 중국 당국의 기본 입장을 천명하고 중국 정부의 기본 방침을 (통제) 관리하고 있다. 물론 이 조직에서 제시한 내용과 유형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는 바가 아니지만 '교과서'라는 공공생산물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만하다. 심정제의 실질적 운영은 심정 또는 심사위원회가 담당하되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국무원의 소관이다. 복수 교육과정과 복수 교과서(多綱多本)이라는 가히 혁명적 변화 속에서도 교과서의 위상과 품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간에 모든 부분을 이양한다 할지라도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무한책임은 정부에게 되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교과서' 현실이라면 국가차원의 관리 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과서 개발 과정의 상당부분을 민간 자율에 넘겼다가

막상 교과서가 개발되고 활용된 연후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통째로 국가에 책임을 되묻고 엄청난 힘과 예산을 들여 뒷수습하는 사례를 몇 차례 경험한 바 있다.

역사 등 일부 과목에 있어서는 집필기준안 등과 같은 정책적 조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건이 실제 집필 과정에서 작동하는 과정은 매우 불균등하고 가변적이다. 때로는 과다 해석으로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가로 막기도 하고 때로는 과소 해석으로 인해 교과서 활용 이후 사회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또한 문건의 개발과 해석상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셋째, 초심 이후 비교적 긴 실험적용의 단계를 거치면서 교과서에 대한 실질적인 장기 평가 기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만하다. 시험 적용의 점진적 확대와 그 결과의 피드백 과정을 서류 심사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교과서 개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교과서가 완벽하게 다듬어지면 새 교과서를 개발한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교과서는 수년간의 현장 활용을 거친 연후에 비로소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김정 심사에 통과한 교과서가 현장에 수년간 사용된 이후 교과서 기술에 따른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자 수정을 지시하고 다시 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됐던 경험조차 있다. 비록 이 문제는 교과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가 얹힌 사안이지만 단기간의 심사로 집필 내용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조율이 불가능하고 단기간의 채택으로 교과서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재발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중국과 동일한 시험 적용은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어 교과서의 판단을 유예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양국 교과서 제도의 검토가 던지는 화두는 자율과 관리의 양 기제를 어떻게 균형감 있게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라 하겠다. 짧은 기간의 불충한 검토와 발표자의 능력 한계로 참신한 대안을 제안할 수는 없으나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통제) 최소화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해 보고 싶다.

하지만 사전 관리를 어떤 잣대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국정에서 검정으로, 검정에서 다시 인정을 확대해 나가는 제도적 취지로 볼 때 중국과 몽골과 같이 ‘국가’라는 권력이 이 기준을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관리’의 기제이되, ‘통제’의 기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관리이며 어디서부터가 통제인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공적권위가 형성되고 이것이 교과서 담론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라 함은 특정한 해계모니나 당파성을 초월한 영역 즉 관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利害기반을 넘어서는 사회적 해결을 가능하게 이끌 수 있는 제3의 권력을 말한다.<sup>38)</sup> 아울러 공(公)적이란 의미는 단순히 다수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한다는 ‘공지성(告知性)’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담론을 ‘정의(正義)적’ 관점에서 아우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sup>39)</sup>

또한 공적 권위는 특정 세력이나 논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담론과 함께 ‘형성’되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해 두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개발로부터 검정, 채택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히 되돌아보고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의사 소통의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머리말에서도 전제했다시피 중국과 몽골이라는 사회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과서 담론

38) 일찍이 하버머스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논하는 가운데 경제적 활동이나 통치행위가 아닌 자유로운 사회성원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곳으로 공적영역(public sphere)을 정의한 바 있다(Habermas, 1991). 비록 이러한 그의 주장이 시민사회라는 권력 관계에서 논의되었지만 그가 지적하고 있는 공공성이란 해계모니와 당파성을 넘어서는 영역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차용하고자 한다.

39) 이와 관련하여 김상준은 독일어 공공성의 ‘öffentlichkeit’에는 정의의 함의가 있으므로 단순히 영어적 의미의 ‘publicness’만이 아니라 ‘justice’의 문제와 함께 놓고 볼 때 제대로 조망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상준, 2003).

과 의사 소통 구조의 세부적인 내용과 시사점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른 국가 사례에 넘기면서 부족한 발표를 맺기로 한다. 

## 참고 문헌

- 구난희(2008), 자율과 통제의 양날로 헤쳐 나가는 중국의 교과서 제도 개혁, 교과서연구 58, 48-54.
- 구난희(2011), 외국의 역사 교과서 서술 사례 분석 I - 교과체계와 내용조직을 중심으로 -, 역사교육연구 15, 51-99.
- 김상준 (2003), 미래와의 소통 -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길을 묻다. 이매진.
- 김유리(2006), 중국 교과서제도의 현황과 특징 -역사교과서를 사례로-,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18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67-115.
- 김진영 외(2010),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준거 및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검정교과서 연구보고서.
- 国家发展改革委新闻出版总署(2012), 关于中小学循环使用教材价格政策问题的通知 - 发改价格[2012.6.12] 1658号.
- 国务院办公厅(2001), 国务院办公厅转发体改办等部门关于降低中小学教材价格深化教材管理体制改革的意见的通知 -国办发[2001]34号.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05), 教育部关于对全国朝鲜文、藏文、蒙古文教材审查委员会换届请示的批复- 教民函[2005]1号  
([http://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750/201001/xxgk\\_77842.html](http://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750/201001/xxgk_77842.html)).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令(2001)·中小学教材编写审定管理暂行办法(2001),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令 第11号([http://www.gov.cn/gongbao/content/2002/content\\_61381.htm](http://www.gov.cn/gongbao/content/2002/content_61381.htm)).
- 教育部办公厅(2011), 2011年中小学教学用书目录 (变动部分) (<http://wenku.baidu.com/view/b513dc0cf12d2af90242e6f5.html>).
- 教育部办公厅(2012), 教育部办公厅关于2012年中小学教学用书有关事项的通知-教基二厅函 [2012]9号  
([http://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714/201205/xxgk\\_135195.html](http://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714/201205/xxgk_135195.html))
- 人民教育出版社(2003), 『基础教育教材建设丛书:中小学教材的编写出版』.
- Government of Mongolia(2006), *Master Plan to Develop Education of Mongolia in 2006-2015*. Ulaanbaatar.
- Habermas, J. (1991).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of bourgeois society*. Lanham: The MIT Press.
- 중국 교육과학출판사 면답자료(2012.7.2).
- 몽골 오온치택출판사 면답자료(2012.7.6).
- 몽골출신 유학생 면답자료(2012. 9월).
- 주몽골한국대사관 조사자료(2010).

1부 주제발표 ③

#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

## — 검정제도를 중심으로 —



**이 충 호**

전 주일한국대사관 교육관,  
충청북도교육청 과장

### [요약]

일본의 교과서 집필과정과 검정제도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일본은 1948년 검정제도 도입 이후 비교적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출판사가 제출한 검정 신청분을 충분한 검정 인원으로 구성된 교과서 조사관들이 교육과정에 맞게(문부와 학성의 의도에 따라) 수정·보완 작업을 철저히 하는 과정이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검정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교과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행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정부에서 선진 주요국 교과서 제도의 장점을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 [주제어] 검정제도

## 1. 서론

일본은 일찍부터 검정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모든 교과서를 국정보다 더 엄격하게 검정하여 교과서로 탄생하게 한다.<sup>1)</sup>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제도의 개요』<sup>2)</sup> 라는 팸플릿을 발행하여 교과서 발행에 관한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팸플릿을 근거로 일본의 교과서 편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도 현재까지는 교육의 3요소 중 하나로 교과서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1) 집필자의 증언 : 君島和彦, 「일본의 교과서 편찬과정」, (『교과서연구 제60호』, 2010.6.)

2) 『교과서 제도의 개요』 2012년 5월, 문부과학성 초·중·고등교육국 발간.

왔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와 교과서로 가르치는 교사로 나누어져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차이이다. 전자와 같은 교사들을 위해서는 교과서는 더욱 잘 만들어져야하는 당위성을 갖는다.

어느 국가든 국가 수준의 교육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각 출판사가 저자를 물색하여 교과용 도서를 집필, 국가의 검인정을 받은 책이 교과서의 자격을 얻어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과정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나 교사, 학생들에게 모두 바람직한 교과서란 어떤 교과서인가? 그런 교과서가 가장 좋은 교과서일 것이다. 즉, 국가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이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교사에게는 가르치기 좋은 책, 학생들은 배우기 좋은 책, 발행사는 고이윤 창출이 가능한 교과서가 바람직한 교과서일 것이다. 정부는 그런 교과서가 나오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투자와 교과서 행정 부서의 인력 배치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는 정부(교육과정), 출판사(고이윤 창출), 소비자(교과서의 질)와의 관계가 맞물려져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한 교과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2010년에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방안에는 검정제도의 개선 목적과 필요성도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sup>3)</sup> 일본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가 나오게 되는 것인가를 검정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교과서 제도의 개요

### 1. 교과서 제도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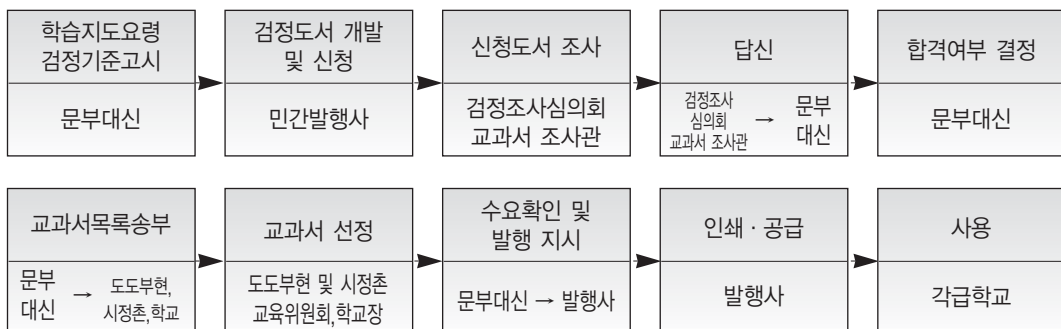
1945년 후의 학제개혁 이전에는 초등학교용 교과서에 대해서는 신고제나 검정제도의 시기도 있었지만, 1904년 이래 국정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며, 중등학교용 교과서에 대해서는 대체로 검정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그러다가 1948년에 제정된 학교교육법에 따라 초·중등 전체적으로 검정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교과서가 사용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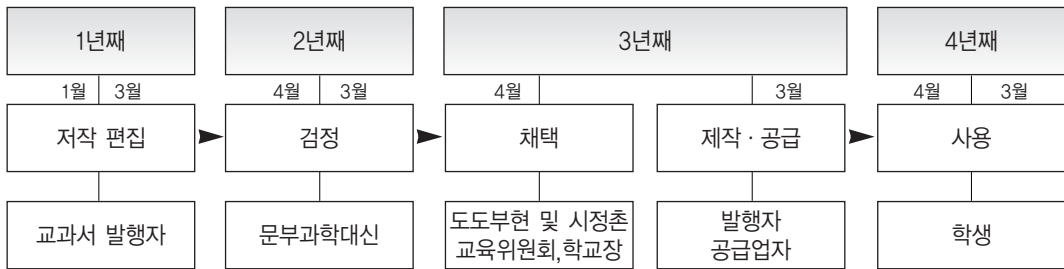
민간 교과서 발행자에 의해 편집된 도서가 검정, 채택 등의 절차를 거쳐 학생에게 사용될 때까지의 단계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표 1〉 교과서가 나오기까지의 단계



※ 다만, 학습지도요령 개정 시는 예외

3) 이화성(2010), 2010 교과서 선진화방안 개요 2쪽.



#### 가. 제작 · 편집 단계

각 발행자는 학습지도요령,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등을 바탕으로 도서를 제작하여(백표지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다.

2012년 교과서 발행자 수는 55개 회사이고, 이 중에서 21개 회사는 의무교육용(특별 지원 학교용 교과서 발행자는 제외)의 교과서를 발행했다. 의무교육용 교과서는 무상조치법에 의해 문부과학대신의 지정을 받은 발행자에 한해서 발행할 수 있다.

#### 나. 검정 단계

교과용도서는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통과해야 사용될 수 있다. 발행자로부터 검정신청된 신청도서(백표지본)는 교과서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문부과학대신 자문기관인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에서 자문되는 동시에,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심의회의 전문적 · 학술적인 심의를 거쳐 답신이 오면 문부과학대신은 이 답신을 근거로 검정한다. 교과서로서의 적절성

여부 심사는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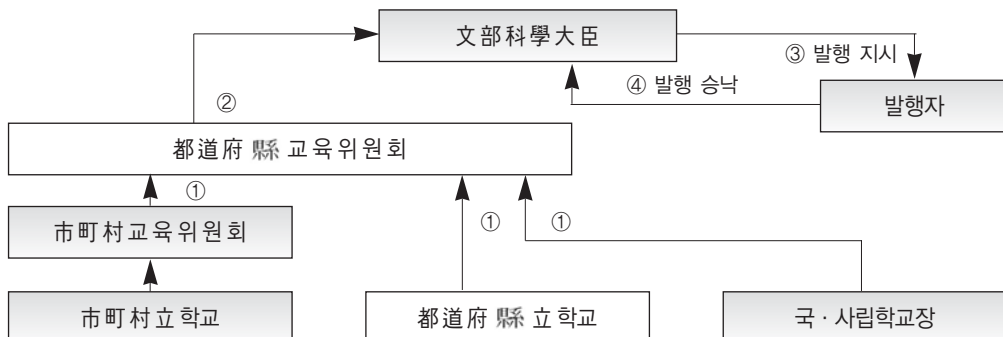
#### 다. 채택 단계

검정필 교과서는 통상, 1종목<sup>4)</sup>에 대해서 몇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학교에서 사용할 한 종류의 교과서를 결정(채택)해야 한다. 채택 권한은 공립학교에서는 관할 교육위원회, 국 · 사립학교에서는 교장에게 있다. 각급학교에서 채택된 교과서의 수요는 문부과학대신에게 보고된다.

#### 라. 발행(제조 · 공급) 및 사용 단계

문부과학대신은 보고된 교과서의 수요 집계 결과에 따라, 각 발행자에게 발행해야 할 교과서의 종류 및 부수를 지시한다. 이 지시를 승낙한 발행자는 교과서를 공급업자에게 의뢰하여 각 학교로 공급한다. 2012학년도 교과서의 수요는 초 · 중 · 고등학교 총 1억3천만 권이었다. 채택에서 발행까지의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교과서 수요 수량 파악 및 발행의 지시 · 승낙



4) 교과별로 분류된 교과서의 단위를 말한다. 예 : 초등학교 국어(1~6학년), 중학교 사회(지리 분야), 고등학교 수학 I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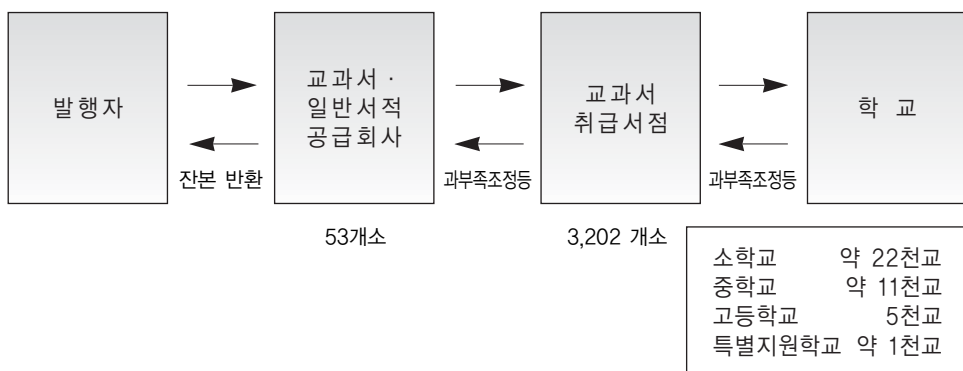


#### 마. 교과서의 무상급여

국·공·사립의 의무교육 학교(초·중학교, 중등교육학교의 전기 과정 및 특별지원 학교의 초·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가 무상으로 보급한다.

교과서나 평생학습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 각 도도부현의 주요 도시 등에 교과서를 비치하는 서점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인들이 교과서를 손쉽게 주문하고 배송하는 체제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교과서 공급 조직



※ 발송설비를 갖추지 못한 발행자는 일반서적을 취급하는 발송업자 등에 배송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바. 교과서 가격

교과서 가격의 결정은 문부과학성 고시로 결정하는 정가인가 기준으로 교과서의 종목별, 학년별

로 최고액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용 연도의 2~3월경에 문부과학대신이 인가하고 있다.

〈표 4〉 교과서 가격

《1권당 평균 가격》

2012년도용

구분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금액	373엔	518엔	752엔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의 추세》

(엔)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초등학교용	3,109	3,091	3,091	3,016	3,122	3,310	3,294
중학교용	4,504	4,477	4,477	4,499	4,521	4,499	4,773

### III. 교과서 검정제도

교과서 검정제도 하에서 검정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검정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보완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의 정책연구 중에서 검정에 관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sup>5)</sup>

일본의 교과용도서검정규칙(1989 문부성령 제 20호)은 수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2009

년 4월1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 이 규칙 제3조 교과용도서의 검정기준에서는 문부과학 대신이 별도로 공시한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교과서 제작·발행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취급되는 것이 바로 검정 과정이다. 검정의 과정 및 학교 급별 채택의 주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 5〉 초·중·고 교과서의 검정·채택 주기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학교 종별 등 구분	초등 학교	검정	◎				◎		
		채택		△				△	
		사용개시	○		○				○
	중학교	검정		◎				◎	
		채택	△		△				△
		사용개시		○		○			
	고등 학교	저 학년용	검정	◎	◎				◎
			채택		△	△			
			사용개시		○		○		
		중 학년용	검정	◎		◎			
			채택		△		△		
			사용개시			○		○	
		고 학년용	검정		◎		◎		
			채택			△		△	
			사용개시	○			○		○

(주)

- 1) ◎ 검정 연도△ 지난해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첫 채택이 이루어진 연도○ 사용시작 연도(초·중 학교는 원칙으로 4년마다, 고교는 매년 채택을 바꿈)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2008년 문부과학성 고 시)… 2011년도부터 전면 실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2008년 문부과학성 고 시)… 2012년도부터 전면 실시 예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2009년 문부과학성 고

5) 김재춘, 『교과서연구 제68호』제9권제1호, 「우리나라 교과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과정연구회, 2012.3. 교과서연구 현황분석 중 국검인정제도 10건(13.5%) 중 검정에 관한 연구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 2013년도부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실시

※ 수학 및 이과는 2012년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실시하고, 검정은 2010년도부터 실시

2) 중학교는 중등교육학교(특수학교)의 전기과정을, 고등학교는 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을 포함한다.

## 1. 검정의 취지

일본은 학교교육법(제3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대해서 교과서 검정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민간에서 저작·편집된 도서에 대하여 검정심사기준에 기초하여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 전문적·학술적인 심의를 거쳐 문부과학대신이 교과서로서 적절한가를 심사하여 이에 합격한 도서를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 2. 검정의 목적 및 위원구성

### 가. 검정의 목적

- 전국적인 교육수준의 유지·향상
-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 적절한 교육내용 유지
- 교육의 중립성 확보

### 나. 위원회 구성

#### 1) 교과용도서 검정조사 심의회

- 근거법령 : 학교교육법 제3, 4조, 동시행령 제41조, 문부과학성조직령 제85, 87조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
- 구성 : 대학교수나 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조직. 2012년4월1일 현재 회장은 成城대학교 교수 杉山武彦, 위원은 30명(정원), 임시위원은 105명(정원 없음), 전문위원은 109명(정원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회의 구성 : 제1부회(국어교과 담당)에서 10부회까지 구성되어 있고, 부회의 사무 및 분담 사항이 구별되어 있지 않는 등 모든 내용을 총괄하는 총괄부회로 구성되어 있다.

#### 2) 교과서 조사관 50명(2012.4. 현재)

이들은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에 소속되어 있는 상근 전문직원으로 검정신청을 한 교과용도서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문부과학성조직규칙 제22조, 교과용도서검정규칙 제11조). 현재 50명이 재직하고 있고, 주로 대학교수, 준교수나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선발된다(국어 5, 사회 15, 수학 3, 이과 8, 예술 3, 외국어 3, 보건체육 2, 전문교과 11명). 조사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조사관이란 이름은 없고, 이 업무를 교육과정평가원(역사의 경우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일임하여(심의위원과 연구위원) 수행하고 있다. 또, 우리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기획팀 직원은 모두가 13명으로 팀장과 연구관 1명, 연구사 6명, 사무관 및 주무관 5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교과서 검정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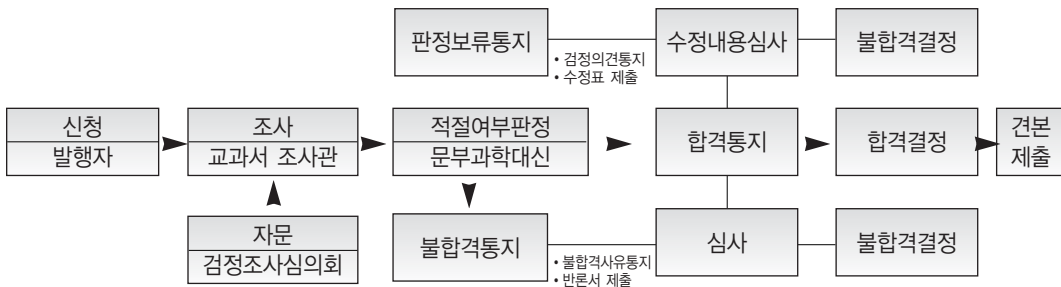
### ○ 검정의 방법

-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을 기초로 검정
-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의 답신에 기초하여 검정

### ○ 검정절차

- 검정 신청에서 합격의 단계
- 검정 완료 도서의 정정
- 검정 결과의 공개

### 〈표 6〉 교과서 검정의 절차



민간출판사가 신청한 도서에 대해서 교과별 교과서조사관 등이 검토 조사하여 오류 등에 대한 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를 근거로 심의회를 개최하고, 잘못에 대해 협의 심사한다. 그 결과로써 합격·불합격의 이유를 사전에 통지한다. 또한 합격여부가 미결인 것에 대해서는 유보하여 검정의견서를 통지한다. 그에 따라 출판사는 수정표를 제출하면 심의회에서는 수정된 내용에 대해 다시 심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검정 합격이 결정되면 견본을 심의회 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심의에서 유보된 도서는 문부성 조사관에 의해 수차례의

수정 절차를 거쳐 거의 모든 도서가 검정에 통과하고 있다(99%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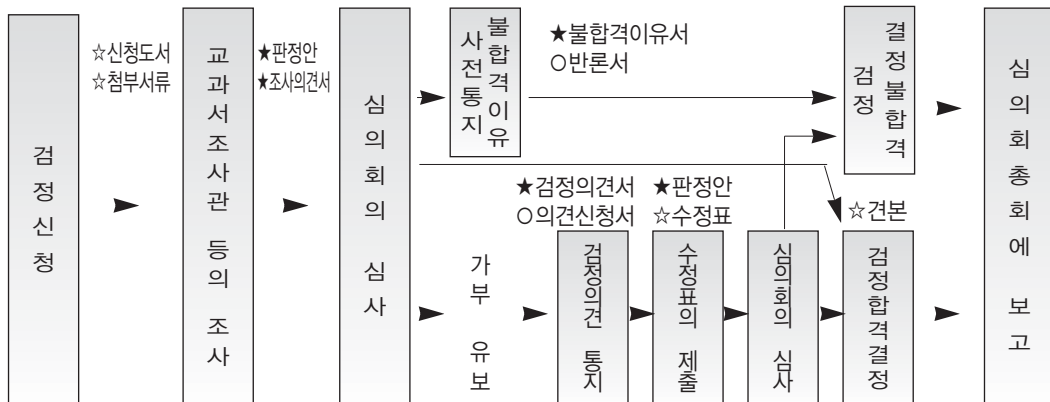
그러므로 일본의 교과용도서 검정의 목적은 신청 도서 일부를 불합격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많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학교에서의 선택권이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모든 교과서에 대해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하여 세부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 각 교과 공동 검정기준을 요약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7〉 검정 기준

구분	검정 기준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도서검정규칙 제3조</li> <li>- 의무교육제학교교과용도서검정기준</li> <li>- 고등학교교과용도서검정기준</li> </ul>
범위 및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사항을 부족함 없이 취급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다루지 않을 것.</li> <li>- 해당 학년 학생의 심신 발달단계에 맞게 되어 있을 것.</li> </ul>
선택 · 취급 및 조직 · 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 및 취급에서는 학습지도요령에 비추어 부적절한 곳이나 아동 ·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곳이 없을 것.</li> <li>- 정치, 종교의 취급은 공정해야 하며, 특정 정당, 종파 또는 주의, 신조에 편향되거나 비난한 것이 없을 것.</li> <li>- 도서의 내용은 엄선되어야 하며, 망라적 · 나열적인 것이 없을 것.</li> <li>- 전체의 분량 및 배분, 내용의 조직 및 상호 관련이 적절할 것.</li> </ul>
정확성 및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류나 부정확한 곳 상호 모순되는 곳이 없을 것.</li> <li>- 학생이 이해하기 곤란하거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없을 것.</li> <li>- 표기가 적절하고 통일성이 결여된 곳이 없을 것.</li> </ul>

〈표 8〉 교과서 검정의 흐름



#### 4. 교과서 검정 결과

최근 10년간의 검정결과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가. 2011년도 교과용 도서 검정결과의 개요(2012년 3월)

2011년도에는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의 검정을 실시했다. 공통교과에 있어서는 검정신청 219점 가운데 218점이 합격하고, 1점(과학과 인간생활)이 불합격되었다. 또, 전문교과는 검정신청 56점 모두가 합격되었다.

##### 나. 2010년도 교과용 도서 검정 결과의 개요(2011년 3월)

2010년도에는 2012년도부터 중학교용으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로 저학년용·중학년용으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의 검정을 실시했다.

1. 중학교용 교과용도서 : 검정신청 108점 중 105점이 합격되고, 3점(사회 지리적 분야·역사적 분야·공민적 분야 각 1점)이 불합격되었다.
2. 고등학교용 교과용도서 :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주로 저학년에서 사용될 도서 90점, 현행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주로 중학원에서 사용될 1점 등 91점이 신청되었다. 이 중 88점이 합격되고, 3점(과학과 인간생활이 2점, 생물기초 1점)이 불합격되었다.

##### 다. 2009년도 교과용도서 검정 결과의 개요(2010년 3월)

2009년도에는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 및 주로 고등학교 저학년용의 교과용도서 검정을 실시했다. 검정신청은 초등학교가 148점, 고등학교의 저학년용이 4점, 계 152점이며, 신청 도서 모두가 합격되었다.

##### 라. 2008년도 교과용도서 검정 결과의 개요(2009년 3월)

2008년도에는 2010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중학교 사회(역사적 분야) 1점 및 2007년도에 불합격된 고등학교 이과(생물Ⅱ) 1점에 대해서 검정을 실시했다. 이 중 생물Ⅱ에 대해서는 합격, 중학교 사회(역사적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 불합격이 되었지만, 그해에 재신청되어 합격되었다.

##### 마. 2007년도 교과용도서 검정 결과의 개요(2008년 3월)

2007년도에는 2009년도부터 고등학교 고학년

용으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의 검정을 실시했다. 검정신청은 48점이며, 이 중 47점이 합격, 1점(생물)이 불합격이 되었다.

**바. 2006년도 교과용도서 검정 결과의 개요 (2007년 3월)**

2006년도에는 2008년도부터 고등학교 중학년용으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의 검정을 실시했다. 검정신청은 224점이며, 이 중 222점이 합격, 2점(생물)이 불합격되었다.

**사. 2005년도 교과용도서 검정 결과의 개요 (2006년 3월)**

2005년도에는 2007년도부터 고등학교 저학년용으로 사용될 교과용도서의 검정을 실시했다. 검정신청은 306점이며, 모든 신청 도서가 합격했다.

**아. 2004년도 교과용도서 검정 결과의 개요 (2005년 3월)**

2004년도에는 2006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의 검정을 실시했다. 검정신청 103점이며, 이 중 102점이 합격, 1점(보건체육)이 불합격되었다. 불합격된 1점은 그 해에 재신청되어 합격되었다.

**자. 2003년도 교과용도서 검정 결과의 개요 (2004년 4월)**

2003년도에는 2005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 및 고등학교 고학년용 교과용도서의 검정을 실시했다. 검정신청은 초등학교용이 147점, 고등학교 고학년용이 111점, 계 258점이며, 신청 도서 모두 합격되었다.

**차. 2002년도 교과용도서 검정 결과의 개요 (2003년 4월)**

2002년도에는 2004년도부터 고등학교 중학년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의 검정을 실시했다. 검정신청 319점이며, 이 중 313점이 합격하고, 6점이 불합격되었다. 여전히 불합격된 신청도서는 검정 실시 다음 연도에 재신청할 수 있으며, 국어(고전) 1점, 이과(생물) 2점, 외국어(영어) 1점, 외국어(영어) 1점, 외국어(쓰기) 1점이 불합격되었다.

10년간의 검정결과를 살펴볼 때, 총 1,886건 중 1,870건이 합격하여 99.15%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면,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가 불합격이 목적이 아니고 문부과학성의 조사관이 누차 수정지시를 하여 최대한 그들의 의도에 맞게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일본의 교과서는 누가 만드는가?”를 묻는다면,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출판사도 저작자도 아닌 일본 문부과학성의 담당 교과 조사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9〉 교과서 검정결과의 최근 10년간 추이(2003.4.~2012.3.)

연도	검정대상 교과	신청	합격
2012.3.	고등학교	219(공통교과) 56(전문교과)	218 56
2011.3.	중학교 고등학교	108 91(저90, 고1)	105 88
2010.3.	초등학교 고등학교(저)	148 4	152
2009.3.	중학교 고등학교	1 1	1(재신청) 1(2008 불합격)
2008.3.	고등학교(고학년)	48	47

연도	검정대상 교과	신청	합격
2007.3.	고등학교(중학년)	224	222
2006.3.	고등학교(저학년)	306	306
2005.4.	중학교	103	103(1점은 재신청)
2004.4.	초등학교 고등학교(고학년)	147 111	147 111
2003.4.	고등학교(중학년)	319	313

※ 근거 :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 5. 검정완료 도서의 정정

교과서 발행자는 검정이 완료된 도서에 대해서 오기, 오식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검정 신청이 4년마다 있기 때문에 검정이 이루어진 도서의 정정은 수시로 할 수 있다. 또 문부과학대신은 기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발

행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정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또 검정이 완료되면 교과서 검정결과가 홈페이지 등에서 1년간 공개되어 검정에 대한 객관성을 밝히고 있다.

▶ 홈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kyoukasho/kentei/kekka.htm](http://www.mext.go.jp/a_menu/shotou/kyoukasho/kentei/kekka.htm)

htm

〈표 10〉 교과서 검정결과 공개 장소 및 기간

공개 장소		공개 기간
東京都	공익재단법인교과서연구센터	2011년 5월부터 1년간
東京都	문부과학성 정보 광장 라운지	2011년 5월 23일(월요일)~6월 3일(금요일)
岩手県	岩手県立 도서관	2011년 6월 14일(화요일)~ 23일(목요일)
千葉県	사와야가 치바현민프라자	2011년 6월 29일(수요일)~7월 9일(토요일)
富山県	富山県 교육기념관	2011년 6월 1일(수요일)~ 10일(금요일)
滋賀県	大津市 교육센터	2011년 7월 13일(수요일)~24일(일요일)
山口県	山口県 아동센터	2011년 6월 9일(목요일)~22일(수요일)
徳島県	문화의 森(總)合公園內 県立 도서관	2011년 7월 5일(화요일)~15일(금요일)
長崎県	長崎県 教育센터	2011년 7월 6일(수요일)~19일(화요일)

주)

1. 2010년도에 검정한 신청 도서와 합격한 교과서 견본을 병치한다.
2. 「조사 의견서」, 「검정 의견서」, 「수정표」 등을 열람 제공한다.
3. 방문자의 요구에 부응해서, 문부과학성 직원이 신청 도서에 첨부된 검정 의견의 취지를 설명한다.
4. 학습지도요령, 검정규칙, 검정기준, 교과서 목록 등 관계 자료를 열람 제공한다.
5. 주된 근거 법령 : 교과용 도서검정 규칙 18조

## 6. 한·일 검정제도 비교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일본은 1948년부터 4년 주기로 학교 급별로 연차적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시대의 변천에 맞도록 교과서의 내용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교과서 집필자들에게는 사전준비 과정부터 양질의 교과서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고된 기간에 충분히 준비

하여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매년 많을 때는 검정 책 수가 300여 권에서 적을 때는 100여 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검정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초등의 경우는 실과, 체육, 예술, 영어 교과만, 중·고등학교는 국어, 사회(역사/도덕 포함)만 검정대상 도서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의 검정제도가 얼마나 엄격하고 안정되게 정착되어 있는 제도인가를 알 수 있다.

〈표 11〉 한국과 일본의 검정 체제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법적 근거	대통령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 학교교육법 제34,49,62,70,82조 - 문부과학성설치법제4조제10호
검정주기	2007년까지(5년) 교육과정 개정에 의거 (2010년부터 검정주기 폐지)	4년(고정적으로 운영)-새 교육과정 초등부터 검정 실시(09년)
검정방법	연차별 검정 - 2012년 : 중학교 국어, 사회(역사/도덕) - 2013년 : 초등 3,4학년(실과, 체육, 영어), 고등학교 국어, 사회(역사, 도덕) - 2014년: 초등 5,6학년(실과, 체육, 예술, 영어) ※ 중·고등학교는 모든 학년 일괄 검정 실시	연차별 검정으로, 각 “교과서별”로 실시
검정대상	검정 8%(국정 9, 인정 83%) 초등 : 실과, 체육, 예술, 영어 중등 : 국어, 사회(도덕, 역사)( '12.8.29고시) ※ 나머지는 초등은 국정, 중등은 인정도서	초·중·고 거의 모든 교과서 (특별한 경우에만 국정과 인정도서 있음)
검정신청 자격자	발행사, 저작자, 발행사+저작자	발행사(55개사) 초·중 21, 고등학교 34개사(2012년)
검정신청자 자격	검정신청요건 : ① 발행사 요건(출원 교과 관련 편집인력 1~2명 이상, 출판실적 최근 3년간 1~2책 이상) ② 도서명이 동일한 경우 발행사 또는 저작자는 1종만 출원 가능 ③ 저작자 요건(검정 심의위원 제외, 검정 신청일 현재 검정기관 소속자 제외, 1인 단독 저자는 대한민국 국적 필요, 동일 학년군 동일 교과목의 검정대상이 복수인 경우 저작자는 동일해야 함 ④ 공공기관(발행사와 약정 필요)의 저작자 신청 가능	고등학교 : 자유 의무교육(초·중)은 발행자 지정제( '63이래) ① 자본액 1000만엔 이상 ② 편집자 5인 이상 ③ 출판 경험 있을 것 ④ 출판 불공정 행위 없을 것
검정절차	기초조사→1차 심사→2차 심사→검정결과 통지 ※ 기초조사 : 2~3명/권당	오기오식 심사→조사→심사→검정 결과 통지 ※ 기초조사 : 3명/권당



구 분	한국	일본
심사위원	심의위원(심의회별 5인 이상), 연구위원(도서마다 3인 이내)	조사관 : 도서마다 3인(매년 수백 명) 조사심의회 : 위원 30명, 임시위원 105, 전문 위원 109명
검정기간	기초심사 및 본 심사 80일 정도	1년간
검정결과	공개(2010 이후)	공개('91이후) : 신청도서, 합격도서의 견본 검정합격 의견서 붙임
합격률	2012년 경우, 중학교 국어, 사회, 도덕 78%, 역 사(국사편찬위원회) 100%	대부분 합격(99% 정도) 문부성 조사관의 요구대로 수정보완
교과서 공급절차	발행사 [(사)한국검 · 인정교과서] → 지역공급인 → 학교	출판사 → 특약공급소(53개) → 취급서점 (3,202개) → 학교
교과서 가격결정	가격 자율화 (2015년까지 발행되는 일부 과목에 한하여 교과 부 장관이 가격사정 : 조달청장이 고시한 인쇄 · 제조를 적용)	문부과학성의 고시로 결정 1963년 이래 교과서별 최고 가격제 (문부대신 인가 : 정가인가 기준)
출판사 이윤	시장경제 원리(판매량에 비례) (2010년 변경)	시장경제 원리 (판매량에 비례)

## 7. 교과서의 개선(새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

### ○ 2008년2월28일, 문부과학대신이 검정심의

- 회에 2가지 점에 대해서 심의 요청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서 개선 : 질 ·  
양 모두 충실하게 하기 위한 개선방안
- 습득, 활용, 탐구를 위한 교과서의 충실
  - 발전학습, 보충, 반복학습의 충실 등  
교과서 검정절차의 개선
  - 검정 절차 투명성의 향상
  - 전문적 견지에서 극히 세부적인 심의의 확보
  - 깨끗한 환경에 의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  
의의 확보

### ○ 교과서 개선의 기본적인 방향

-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목표에 근거한 교과서  
개선
- 지식 · 기능의 습득, 활용, 탐구를 위한 교과  
서의 질 · 양 양면에 충실

- 다면적 · 다각적인 고찰로 공정 · 중립에 균  
형 잡힌 교과서 기술
- 교과서 기술의 정확성 확보
- 학생들이 의욕적으로 학습에 임하도록 교과  
서 편집상의 배려 · 연구 촉진
- 교과서 검정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검정절차의 개선

### ○ 새 제도의 실시 시기

- 2009년3월에 의무교육제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 교과용도서검정규칙, 2009년9  
월에 고등학교교과용도서검정기준을 고  
시, 2009년도 이후의 교과서 검정(초등학  
교)부터 적용

### ○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등의 개선

- 교육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목표 등에 근거한  
교과서 개선
- 지식 · 기능의 습득, 활용, 탐구에 맞도록 교과  
서의 질 · 양의 충실

〈표 12〉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일정

연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초등학교		검정	채택	실시(사용)		
중학교			검정	채택	실시(사용)	
고등학교	저학년			검정	채택	실시(사용)
	중학년				검정	채택
	고학년					검정

- 다면적 · 다각적인 고찰로 공정, 중립성의 균형 잡힌 교과서 기술
- 교과서 기술의 정확성 확보

※ 의무교육제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기준(抄)(2009.3.4. 문부과학성고시제33호), 고등학교 교과용도서검정기준(抄)(2009.9.9. 문부과학성고시제166호) 참고

#### ○ 발행자에 의한 저작 · 편집의 방법 개선

학습지도요령「해설」의 활용, 정확한 기술을 위한 교정, 일러스트 · 만화 · 사진 등의 사용 배려 등

※ 「교과서의 개선에 대하여(통지)」(문부과학성 초·중·고등학교장통지 20문과초제8067호 22009년 3월 30일 각 교과서발행자 앞)

## IV. 교과서 편찬의 실제<sup>6)</sup>

앞에서 일본의 교과서 발행과정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았다. 검정신청 이전의 단계인 제작 · 편집 단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과서 발행에 실제로 참여한 교과서 저자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 1. 집필자를 선정한다.

개정 경우에도 전공(전문성)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인선을 할 경우도 있다. 출판사는 교과서 편집의 중심이 되는 연구자를 결정하고, 그 연구자와 상의하면서 필요한 인선을 한다. 과거에는(30년 전) 1명의 집필자가 교과서를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제도는 완전히 사라졌다. 연구의 분산화(일본사의 경우 시대별로), 연구자의 전문화가 추진되어 한 명이 집필하는 과거와는 달라졌다. 각 분야별 전문 연구자를 중심으로 학교 급별 현장교사들이 집필자, 편집위원 등으로 참여하게 된다, 고교 교과서는 대학의 교원과 고교의 교원으로 구성되어 10~15명 정도가 1권의 교과서를 집필한다.

### 2. 교과서 구성을 결정한다.

집필위원 인선 후, 학습지도요령이나 이전의 교과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 검토 등을 거쳐서, 편집위원이 중심이 되어 교과서의 특징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교과서의 편성이나 목차 안을 작성한다. 이 목차 안을 전원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목차를 만든다.

6) 기미지마(君島和彦, 전 도쿄학예대)교수의 증언(實教出版의 「고교 일본사」 저자, 君島和彦, 「일본의 교과서 편찬과정」, 『교과서연구 제60호』, 2010.6. 62~66쪽).

7) 이모토가즈아키(구마모토국제대학 이사장), 「교과서와 나」, 『교과서연구』 제65호, 2011.9. 92쪽.

8) 김만근, 월요논단(한국교육신문 2012.10.1.), 「교과서는 신이 아니다」.

교과서는 총 페이지 수에 제한이 있다. 허용된 페이지 수의 범위에서 역사 교과서의 경우는 전 시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한 시대, 시기에 편중되는 일이 없게 안배한다. 그러나 특색 있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이를 고려하면서 페이지의 할당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에는 통사에 해당하는 본문뿐만 아니라, 칼럼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 이 칼럼은 수업할 때에 참고가 되기도 하고, 학생이 혼자서 읽을 경우도 많아 교사의 설명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작성한다. 이 칼럼이 교과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구성이나 검토할 때에도 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여기에서도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이 영향을 끼친다. 학습지도요령에는 커다란 칼럼을 넣을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 방식은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할 때마다 변화가 있다. 그 지시에 따라 구성하지 않으면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칼럼을 만드는 방법은 교과서에 따라 아주 다른데 큰 테두리에서 보면 학습지도요령에 구속되지만, 그 내용은 교과서에 따라 다르게 된다. 페이지 수도 교과서마다 다르다.

### 3. 원고의 집필이다.

목차가 결정되면 담당자를 결정하여 원고를 집필한다. 원고는 각 교과서의 특징, 강조점 등을 근거로 하여 쓰게 되며, 집필자와 함께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몇 차례 수정작업을 거쳐서 최종 원고가 된다. 요즈음은 사진이나 그림, 도표 등이 중요하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검토도 실시한다. 이 경우, 사진이나 그림 등에 소유권이나 저작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 한 장의 그림을 싣는 것만으로 수십만 엔의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교과서 회사에서 변경이나 게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교과서 집필 팀이 편성된 후 교과서의 특징이나 구성을 생각하여 원고를 써서 검토가 종료될

때까지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후 인쇄소에 원고를 넘기고 몇 차례 교정을 거쳐 『검정신청본』(가칭 백표지본)이 완성된다. 이 작업에 반년간의 시간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은 2년 반에서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교과서에서는 원칙으로 오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작성 단계, 교정 단계에서 다른 일반 서적보다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교과서라고 교정ミス 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검정에 합격한 후에도 교과서의 기술을 정정하기 위한 조치가 검정규칙에 마련되어 있다.

## V. 맺는 말

일본은 보다 바람직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검정제도의 조직을 우리와 비교하면, 점정대상 책 수도 훨씬 많고, 검정 전담 인력도 많아 철저한 검정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오랫동안 검정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검정제의 장점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과감히 수용하여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본에는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하는 사단법인 교과서협회가 있다. 회원은 각 출판사 소속의 직원들로 구성된다. 이 협회는 실제로 교과서의 질 향상과 교과서 발행 사업의 합리화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 출판윤리 실천을 촉진하고, 학교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 내용은 검정전문위원회, 저작권위원회, 제도전문위원회, 홍보전문위원회, 정보화전문위원회, 가격전문위원회, 공급전문위원회, 확대교과서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각 분야의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일본에도 재단법인 교과서연구센터(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유사한 기관)가 있다. 1976년에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문부과학성의 초·중·고


교육국 소관으로 설립 허가 되었다. 이 센터의 목적은 교과서 조사연구, 교과서의 질적 향상·충실과 교과서 등에 관한 연구 진흥을 도모하고 학교교육 및 학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업으로는 교과서 등에 관한 내외의 자료·정보의 수집 제공, 교과서도서관 설치 운영(장서 129,299권) 등 교과서 관련 연구 등으로 문부과학성의 교과서과에 자료 및 정보제공을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도 향후 전자교과서의 개발 노력을 위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2015년에 전면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2020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람들은 교과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한 교육행정가는 이렇게 썼다.<sup>7)</sup>

“나는 교과서를 ‘관광 가이드 책과 여행자’ 같은 감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관광여행을 할 때에 관광할 여러 곳들에 대한 정보나 내용을 지식으로 수집하지만, 실제로 방문해 보면 자신이 모

은 지식과는 차이가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는 참고서이고, 이 참고서를 바탕으로 그 속에 있는 진실, 진의를 배우고 새로운 ‘눈’을 갖고, 새로운 ‘씩’을 기르고, 인간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 평화적 공영공존을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교사들로부터 “교과서는 신이 아니다!”<sup>8)</sup>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아직도 여전히 교과서를 성전으로 간주하므로 이와 같은 교과서에 대한 인식하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과서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완벽한 검정제도로 가능할 것이다. 우리도 철저한 검정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정적인 교과서 제도가 정립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는다. 이러한 생각은 향후 스마트교육과 디지털교과서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더욱 엄격한 검정제도의 체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보아도 절실한 것이다. 

## 참고 문헌

- 홍후조의 3인(2007.5). 검정도서 발행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연구보고서 2007-2.
- 이화성(2010). 2010교과서 선진화 방안 개요.
- 김재춘(2012). 「우리나라 교과서연구의 현황과 과제」 『교육과정 교과서연구 제9권1호』.
- 君島和彦(2010.6). 「일본의 교과서 편찬과정」, 『교과서연구 제60호』, 62-65.
- 이모토가즈아키(2011.9). 「교과서와 나」 『교과서연구 제65호』, 92.
- 일본 문부과학성초등중등교육국. 『교과서제도의 개요』 平成24년(2012) 5월.
- 일본 교과서협회.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平成23년(2011) 7월.
- 재단법인 일본 교과서연구센터개요.
- 일본 교과서 연표 1871-1992(1993년2월).
- 일본 國定 教科書 編纂 趣意書, 12권 Japan. 文部省.
- 일본 昭和天皇の教科書教育勅語.
- 일본 永教科書裁判 : 第三次訴訟, 高裁編, 2권.
- 永三郎, 教科書検定訴訟を支援する全國連絡會 (Japan), 1997.
- 櫻プロジェクト 「「つくる會」教科書・市販本發賣と採擇の行方 - 藤岡信勝氏に聞く」.

## 1부 주제발표 ④

# 교과서 심사, 선정, 개발에서 교사의 자율성 :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의 교과서 정책 연구



강 선 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1. 머리말

2010년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을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인성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교과서 선진화 정책은 교과서 제도와 교과서의 존재 형태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인정도서 확대라는 교과서 편찬 주체와 심의 과정에 대한 자율화 정책이고 서책형에 디지털형(e-교과서)을 더 하는 교과서의 존재 형태 확장, 즉 SMART 교육 정책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교과서 인정 정책이나 SMART 교육에 대한 정책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교과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외국의 교과서 정책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정책연구와 심포지움도 진행되었다. 외국의 교과서 정책 비교 연구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실행하고 있는 교과서 개발, 선택 정책 및 제도, 교과서 정책 형성의 배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국, 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 유럽 4개국의 최근 교과서 정책 현황 및 최근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지식정보사회 담론의 측면에서 이 국가들이 어떤 교육적 방향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교육적 방향이 디지털 교재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교재의 디지털화에 대해 각 나라의 교육 담당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럽 4개국의 교과서 정책과 쟁점을 분석하여 우리 교과서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와 심층면접법이다. 국내외 문헌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각국의 교과서 정책과 쟁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 각국의 교과서 관련 전문가, 혹은 각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이메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2. 유럽 4개국의 교과서 정책과 쟁점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본 연구의 대상인 4개국 가운데, 독일은 제외한 영국, 프랑스, 핀란드는 일찍부터 교과서 자유 발행제가 실시되었다. 독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3개국에는 교과서를 검정 또는 인정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전혀 없으며 3개국 정부는 교과서 제작, 발행, 배포 등에 개입하지 않는다.

### 가. 영국의 교과서 정책과 쟁점

영국(UK)에서 교과서는 상업적으로 생산되며, 정부가 승인하지 않고,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사용하고, 학교를 통하여 공급하는데 공급학교의 경우 대개 무상으로 학생에게 제공된다.

영국에서 교과서 발행 제도에 대한 쟁점은 거의 없다. 자유발행제 하에서 교과서의 선택이 교사의 자율권에 맡겨져 있어, 교수 학습의 결과에 대한 책무는 강조되지만 교수 학습의 과정에서 교과서의 사용 여부는 직접적으로 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Haydn(2011)에 따르면, 중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정도를 비율로 나타냈을 때, 조사 대상인 37명의 교사 중 사용 빈도가 50% 미만이라고 답한 교사가 18명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사용 빈도가 50~70%인 교사가 16명, 71% 초과가 3명이었다.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교사 중에서 10% 이하라고 응답한 교사도 10명이나 되어서, 실제로 수업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교과서의 기능에 대한 반응에서도 대체로 숙제를 내 주거나, 교과서 자료의 일부를 잠깐 살펴보는 정도로 사용할 뿐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마저 최근에는 디지털 자료의 활용 비율이 높아

지면서 서책 형태의 교과서 기능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4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 성취도 평가(TIMMS)에서 영국이 수학에서 7위에 그친 것을 두고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영국 수학 교과서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Garner, 2010). 이 기사에서는 지난 20년 간 영국의 교육체제가 갖은 개혁과 평가를 거치면서 교과서를 신속하게 발행하여 경쟁해야 하는 출판사들이 교과서의 개발과 시험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의 학생들이 교과서를 학교에서는 물론 집에서까지도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데 비해 영국에서는 교과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교과서 제도나 정책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업 성취도와 관련한 아시아 지역과 영국의 문화적 차이, 즉 시험이나 학업 성취를 사회적 지위나 인생에서의 성공과 결부 짓는 아시아 문화와 학습에서 학습자의 흥미나 적성을 더 중시하는 영국 문화의 차이를 드러내 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과 쟁점

프랑스의 경우 교과서와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교과서 정의가 언급된 법령은 존재한다. 2004년 8월 31일에 발표된 법령 n° 2004-922(decret n° 2004-922)에 보면 교과서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1981년 8월 10일에 발표된 법의 조항 3의 4번째 문단에 나오는 교과서의 의미에 따르면, 교과서로 여겨지는 것들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훈련프로그램 등에서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교육부 장관이 정의한 교육과정에서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manuals),

1) <http://www.savoirlivre.com/manuels-scolaires.php>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445213&dateTexte=&categorieLien=id>

2) <http://www.cndp.fr/accueil.html>

3) 전효선 · 임찬빈 · 박주현 · 박승호, 「외국의 교수학습 혁신 정책 및 우수 사례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해설서(instruction leaflet), 워크북, 수행활동노트(labwork notebook) 등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일컫고 책의 표지에는 학년이나 레벨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교과서의 정의가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를 하나의 수업자료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발표된 후, 교과서 출판사들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그 어떤 공식적인 절차나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과서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교과서를 검정하고 인정하는 기준도 없다.

프랑스의 경우, 교육부가 교과서를 개발하여 배포하지는 않지만, 학교 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교육자료센터(CNDP)<sup>29)</sup>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에 있는 CNDP는 프랑스 각 지역의 단위 학교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프랑스 전역에 180개의 센터, 125개의 직영서점, 170개의 미디어자료실이 운영되고 있다. 국가수준의 질적 인증이 이루어진 우수한 자료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sup>30)</sup>

교과서 관련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교과서와 관련된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이슈이다. 이는 질을 단순히 높이는 문제가 아닌 개별화(individualization) 문제인데 역설적이게도 서책은 각 독자에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제시될 수 없다. 따라서 개별화가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는 이런 점에서 디지털 교과서에 접근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프랑스의 경우 자유발행제로서 교과서 시장의 개입이 개방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교과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들에 의하면 교과서마다 거의 비슷하거나 때로는 같고, 학생 활동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교수-학습적 모델이 혁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정에 대한 통제성이 강하여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를 분석해보면 출판사들에게 있어 혁신이 위험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는 수익률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혁신을 했다가 잘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갑작스런 혁신으로 교사들을 당황케 하여 교사들의 선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또한 학부모 단체 등의 사회에서 오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 저자들이 내용 면에서 거의 비슷한 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다(이인제 외, 2010). 프랑스에서는 의례적으로 장학관들에게 출판사들이 교과서의 예시 챕터를 미리 보여주고 의견을 듣는데, Bruillard(2011)는 이 부분에서 장학관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쟁점은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교과서와 비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즉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교과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지에 관한 부분이다. 교사들이 그들의 학생들에 맞는 상업적, 비상업적 교과서를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이는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사역량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교사를 신뢰하는 문화 속에서 교과서와 관련된 통제적 규정을 만들기보다 교사의 역량을 키워나감으로써 질 높은 교과서가 교실 속에서 사용되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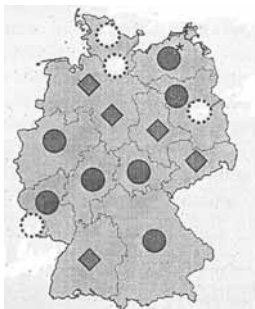
#### 다. 핀란드의 교과서 정책과 쟁점




핀란드에서 교과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과서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고 교사는 교과서를 자유롭게 채택하여 사용한다. 1990년 초반 핀란드 정부는 교과서의 검정과 승인 제도를 폐지하였고 핀란드 교과서는 정부 또는 특정 단체에 의해 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핀란드

학교에서 교과서는 학업의 중심적인 길잡이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교사들이 국가 핵심 교과과정의 지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고안한 수업 방식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정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sup>4)</sup> 즉, 핀란드에서는 교과서 자체에 중요성이 부여되기보다는 교과서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주체, 즉 교사의 권한이 보다 중요시된다. 핀란드 교사들은 다른 OECD 국가의 교사들에 비해 수업 내용의 결정, 학생평가, 학교단위 교육과정의 결정, 학교예산의 편성 등에서 많은 발언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핀란드에서는 교과서 관련 쟁점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 라. 독일의 교과서 정책과 쟁점

독일에서는 각 연방주의 학교법에 따라 교과서가 발행되고 있다. 주 별로 교과서 발행 허가에 관한 세부적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하지만, 상설화된 '주교육부장관회의(kultursministerkonferenz)'에서 교과서 발행 허가에 대한 결의와 권고를 도출하여, 독일 전역의 학교교육이 통일된 면모를 가지도록 시도하고 있다.<sup>5)</sup> 교과서는 주 별로 독자적 허가 방식과 절차를 거쳐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몇몇 교과과 경우 실질적으로 교과서 사용에 강제성이 없어 자유발행제 형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책임 기관		주 이름
	주정부	라인란트-팔츠, 노트트라인-베스트팔렌, 헤센, 튀링엔, 바이에른,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먼(7)
	연구소	바덴-뷔르템베르크, 브레멘, 니더작센, 작센-안할트, 작센(5)
	승인제도 없음	자를란트, 쉘레스비히-홀스타인, 함부르크, 베를린(4)

〈그림 1〉 독일 연방주별 교과서발행 허가 책임 기관

※ 지도는 Georg Stober, Schubuchzulassung in Deutschland: Grundlagen, Verfahrensweisen und Diskussionen, Eckert, Beritrag 2010/3(독일의 교과서 검인정 제도: 토대와 과정, 그리고 쟁점, 스위스에서 열린 2010년 제4회 교재 심포지움 발표문), p.6.

독일의 오랜 교육자치의 전통은 다양성 속에 공통되고 통일된 교육정책을 지향하는 기제를 함께 발전시켜 왔다. 교과서 검정 기준은 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베를린 주의 교과서 인가 규정과 유사한 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sup>6)</sup>

- 법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 교육과정 기준과 교육목표 및 내용에 상응해야 하며,
- 교육방법 및 교수법적 측면에서 충분히 교육적이어야 하며,
- 학문의 수준에 부합해야 하며 서술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

4) 김정영, 2012, 핀란드의 교과서, 교과서연구, 67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p.54.

5) 그 외에도 의무교육 규정, 개학과 방학 시기,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학제의 통일 등 기본 원칙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이루고 있다(이용재, '유럽의 교과서 발행 제도- 영국·프랑스·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를 여는 역사』, 35, 2009, p.89).

6) Georg Stober, Schubuchzulassung in Deutschland: Grundlagen, Verfahrensweisen und Diskussionen, Eckert, Beritrag 2010/3(독일의 교과서 검인정 제도: 토대와 과정, 그리고 쟁점, 스위스에서 열린 2010년 제4회 교재 심포지움 발표문).



- 성, 종교, 인종차별적 내용이 없어야 한다.

각 주에서 허가된 교과서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교재 규정’이라고 불리는 원칙, 즉 경제성, 절약, 합목적성, 학습에 의미 있는 교재 도입의 원칙, 교육부가 정한 교재 최소 표준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교과서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 경우 제1일 염가의 제품이 선택된다는 사실과 교육과정의 바뀌더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구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사용되는 경우가 확인된다.<sup>7)</sup>

독일의 교과서 관련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교과서 발행 허가제가 교과서 다양화를 막는다는 것이다. 독일의 교과서 발행 허가제에 대해 비판적 의견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조작의 가능성, 교과서 심사 및 허가의 주관성, 심사 과정의 비민주성 및 투명성의 부재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천편일률적이고 지루한 교과서들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판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교과서의 다양화를 도모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찬성론자들은 교과서 발행 허가제를 통해 교과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고, 품질 개선에 도움을 주며, 교과서 선택을 위한 법적 안정성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sup>8)</sup> 특히 교과서 발행 허가제는 ‘지역 특성을 살린 내용을 담은 질적으로 최적의 교재 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sup>9)</sup>

교과서 심사 과정에서 외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서의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 제3의 평가자에게 각각의 평가서를 보내고

재평가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의 교사들이 공동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정부의 간섭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교과서 발행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독일 교과서에서는 국가권력의 강도 높은 개입이 발견되지는 않는다.<sup>10)</sup>

독일이 교과서 승인을 고집하는 이유를 독일 역사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독일이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과거 때문에 교과서 허가제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와 성찰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11)</sup> 교과서 발행 허가제가 우익 교과서의 출현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교과서 발행 허가제를 고수하고 있는 주는 바이에른,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및 작센 주에 불과하다. 이외 지역에서는 교과서 발행 허가 절차가 간소해지는 추세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교과서 발행 허가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접국가인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처럼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도록 주장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에서 교과서 발행 허가제의 권위가 약화되고, 교과서 발행의 자율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학교 자율성의 강화, 결과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비용 요인을 들 수 있다.<sup>12)</sup>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과 표준에 대한 논쟁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sup>13)</sup>

7) 윤현진, 주형미, 문영주, 추병완, 『국가 교육과정 개정 체제 변화에 따른 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0-16.  
8) 한스 보이트, 독일의 교과서 발행 허가제, FES information Series, 2011-07(downloaded in 2012, 7. 5 from <http://www.fes.or.kr>) pp.3-5; 서지영 외, 『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O 2011-1, pp.50-54.  
9) Georg Stober, ibid.  
10) 이용재, ‘유럽의 교과서 발행 제도- 영국·프랑스·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를 여는 역사』, 35, 2009, p.90.  
11) 김유경, 『과거의 부담과 역사교육: 홀로코스트와 독일의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서양사론』, 77호, 2003; 강정수, 『독일교과서의 역사관: 아우슈비츠를 반박해선 안된다』 (신동아 2002년 1월 31일자, 2012년 7월 3일 다운로드).  
12) 한스 보이트, 위의 글, p.15.  
13) Georg Stober, ibid.

두 번째 쟁점은 교과서 집필과 승인의 전문성에 대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교과서 집필과 승인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참여와 책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 심의는 장학관이나 학무 위원과 같은 교육관료 대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교사와 교수, 연구원들이 담당한다. 바이에른 주에서는 현직경력교사 2~3명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자에게 심사본 교과서를 평가하도록 한다. 외부 평가 심사자들은 그 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경력 교사와 젊은 교사 중에서 고루 선정되어 구성된다.

논쟁은 교과서 집필 및 승인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가 교과서와 교수법의 현장적합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입장과 이에 비판적인 입장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바이에른 주 등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교과서 발행 기준이 세세하고 엄격한 것은 교과서 집필과 심의 주체인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판단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자가 교사이자 교수·학습 전문가로 보고, 교과서에 대한 소극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피력된다. 다른 한편 닫힌 심의 공간에서 교과서 심사 기준에 따라 외부심사자(교사)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해석할 가능성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검정 절차를 거쳐 나온 교과서의 질이 저조한 경우 심사자의 전문성은 의심받게 되기 때문이다. 교과서 저자나 심사자가 모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류없는 교과서를 희망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결 방안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집필과 심사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교과서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거나, 교과서 발행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다수의 전공 교사들에 의해 선정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sup>14)</sup>

교과서 발행 허가 절차에서 빚어지는 외부심사자

의 전문성 논란은 최근 외부심사의 절차가 차츰 완화되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의 심사와 함께 주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원칙이 점차 단순화되고, 아예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 늘어나거나 승인 절차를 폐지한 州도 늘어나고 있다. 상당수의 주에서 ‘역사’, ‘사회’, ‘윤리’를 제외한 교과에 대해 출판사가 교과서에 대한 법적 규정과 기준을 충족한다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외부 심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교과서 선정시 발휘되는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짝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조망되어야 한다. 즉 “어떤 학습교재가 단지 좋을 뿐 아니라 해당 수업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지는 담당 교사만큼 잘 알아서 판단할 사람이 없다.”<sup>15)</sup>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 발행 허가제의 완화와 같은 국가의 교과서 통제가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교과서를 표방한다. 하지만 교과서 내용을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또한 교과서 사용을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학습의 내용에 대한 재구성은 철저히 교사의 몫이다. 교사의 교과 교육 과정 이해와 교재 재구성 능력이 중시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하향식으로 진행되어 오던 교육과정 준수 여부의 교과서 승인 기준은 완화되고, 대신 교사의 수업 실행에 대한 관리 감독,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교과서’가 다양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교과서 승인을 위한 일정한 기준들이 실제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책임은 독일의 학교와 교과서를 결정하는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교재 선택권과 교수·학습 구성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의 책무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독일의 교과서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14) Georg Stober, ibid: 서지영 외, 위의 글, pp.52-54.

15) Michael Sauer, Zwischen Negativkontrolle und staatlichem Monopol, Beiträge, 1998(소극적 통제와 국가 독점의 사이에서: 교과서 검인정 및 채택의 역사), p.156.

따라 변화되고, (주)정부의 교육 정책과 민간의 교육적 요구 사이에서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

#### 마. 유럽 4개국의 교과서 관련 쟁점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를 교육과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고, 수업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문화가 지배적이지만, 유럽 4개국에서는 교과서는 교재들 가운데 하나로서 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사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식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문화는 교과서 제작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체제가 있는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즉 교사는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교수 학습을 계획 및 실행하며, 이에 따라 교사가 교재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출판사들은 주정부 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교과서를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출판사들은 교과서를 채택하는 주체가 교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과서 개발에 교사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물론 나라에 따라 특이한 경우 정부가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상업적 출판사들이 이윤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과목의 교과서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개발에 참여한 다.

유럽 4개국이 교과서 개발에서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교사들이 참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교과서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영국이나 핀란드의 경우 교과서의 내용과 형식은 상당히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성이 담보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교육과정이 '내용 지식'을 매우 대강화하여 몇 개의 주제들만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이 '방법적 지식'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내용을 요구한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즉 교육과정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사고방법과 기능을 가르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다루는 구체

적인 내용과 방법이 교과서마다 다를 수 있다.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과 질문들, 주제를 다루는 시각들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볼 때 다양할 수는 있지만 통시적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둔감하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하지만 근간을 흔드는 방식의 개혁은 아니기 때문에 종래 교과서를 약간 수정하는 정도에서 교육과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체제는 사실 안정적이라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회, 학계, 교육계 변화를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교육과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문제도 있다.

교육과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표적인 문제가 교과서의 '오류' 수정이나 최신의 학문적 성과를 담는 문제이다. 프랑스, 영국, 핀란드처럼 자유발행제에서는 오류 수정과 최신 학문적 성과를 담는 문제가 출판사와 교사들의 몫이라고 본다. 물론 과목에 따라 '오류'의 개념을 달리 규정할 수 있지만, 오류가 있을 경우 교사들이 수업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출판사들이 나서서 학교 현장에 수정 요구를 하거나 개정판에서 반영하기도 한다.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검정 체제이지만, 검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볼 때 교과서 내용이 익숙한 경우에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교과서 검정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바이에른 주에서는 현직 경력교사 2~3명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자가 심사본 교과서를 평가한다. 외부 평가 심사자들은 그 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경력 교사와 젊은 교사 중에서 고루 선정되어 구성된다. 이러한 심사자 구성에 대해 한편에서는 교사가 교과서와 교수법의 현장적합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면서

찬성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사들만이 심사자이고, 닫힌 심의 공간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또 교과서 저자나 심사자가 모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류없는 교과서를 희망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독일 옥스부르크 대학의 수만 박사(Dr. Shuman)는 인터뷰(2012, 7월 11일과 15일)에서 이와 같은 교과서 검정 체제 때문에 교과서 내용과 형식이 쉽게 바뀌지 않으며 진부한 틀과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집필과 심사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교과서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거나 교과서 발행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다수의 전공 교사들에 의해 선정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sup>16)</sup>

프랑스의 경우는 자유발행제이지만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연구들에 의하면 교과서마다 거의 비슷하거나 때로는 같고, 학생 활동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교수-학습적 모델이 혁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 과정에 대한 통제성이 강하여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를 분석해보면 출판사들에게 있어 혁신이 위험하게 다가오기 때문인데, 이는 수익률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혁신을 했다가 잘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갑작스런 혁신으로 교사들을 당황케 하여 교사들의 선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또한 학부모 단체 등의 사회에서 오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 저자들이 내용 면에서 거의 비슷한 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다.<sup>17)</sup> 프랑스에서는 의례적으로 장학관들에게 출판사들이 교과서의 예시 챕터를 미리 보여주고 의견을 듣는데,

Bruillard(2011)는 이 부분에서 장학관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독일의 경우 검정체제에서 교사들이 주된 심사자 역할을 하면서, 프랑스와 같이 자유발행제에서도 출판사들이 교사들의 요구에 맞추어 개발하면서 오류 문제와 최신 연구 성과 반영 문제, 또 다양성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교과서가 사회와 학계 및 교육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새로운 교과서를 제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교과서 검정체제에서나 자유발행제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교과서 개발 및 채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 정책에서 교사의 '보수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 3. 유럽 4개국의 지식정보사회에 대처하는 교육 정책 및 디지털 교재

유럽 4개국에서 지식 정보 사회 담론에 대한 교육적 대처 방안은 나라마다 체감 온도를 달리한다. 영국은 1990년대부터 교육과정에서 ICT활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핀란드도 1990년대부터 교육기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IT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를 네트워크화하였다. 프랑스나 독일은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을 최근에 교육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에 따른 교육 개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반면 독일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IT 기술을 강조하는 영국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16) 서지영 외, 『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O 2011, pp.52-54.

17) 이인제 · 최홍원 · 송인발,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집행 시스템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에서 영국이 기획하고 있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육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대학기능부(Department of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에서 2008년에 발간한 백서 ‘Innovation Nation’을 통하여 영국 정부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가 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교육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역량 즉 혁신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과목)과 같은 핵심 영역에서 아동의 기능 발달을 향상시키고, 14-19세 학생들에게 새로운 자격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교육 지도자에게는 교육과정 설계 과정의 혁신을, 교사에게는 교실 수업에서의 혁신을, 학생에게는 배워야 할 사고방식(mindset)과 기능(skill)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8)</sup>

영국은 세계 변화에 교육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국가와 개별 학교 차원에서 제시한다. 국가 차원의 방안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교수학습 지원의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영국의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이라는 용어 대신 핵심 기능(key skil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핵심 기능으로는 의사소통, 수의 응용, IT 기술, 타인과의 협력, 자신의 학습과 수행 향상시키기, 문제 해결하기 등 여섯 개가 설정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IT 기술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교수학습 차원에서는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한 기술의 활용,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개별화(personalisation) 학습을 강조한다. DfE(2012a)에서는 Becta(British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Agency, 영국교육통신기술청)에서 2010년 발간한 ‘기술 활용 실태 조사(Harnessing Technology Survey)’ 보

고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 지난 수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기에 접근하는 정도가 실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았다. 중등학교에서 학생 대 컴퓨터의 비율이 약 3대 1이다.
- 교사들은 전자 칠판(interactive whiteboard),탁상용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교실 기기에 접근하지만, 포켓용 기기(handheld technology)에 접근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 중등학교 ICT 관리자의 77%는 자기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모든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전달하기 위한 ICT 사용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편이지만, 아직은 기능에 격차가 있다.
- 학습용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이용되지 않고 정보처리, 운용의 질, 접근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즉 정보 통신 기술과 기기의 사용이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에서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양상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개별화 학습(personalised learning)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지원이 필수적이다(Green, 2005). 개별화 학습은 학습자와 교사 간에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개인 학습(individual learning)과 달리 집단 속에서 소규모 집단 또는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진 학습 형태를 말한다.

영국에서는 ICT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할 일련의 ICT 도구를 가지고 있다. 모든 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할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며 교사는 텔레비전, 비디오, 슬라이드, 라디오, 음성 녹음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컴퓨터, 태블릿 피시,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기기 및 로봇 등이 포함된다. 전자 칠판을 갖추고 있는 상호작용적 교수가 널리

18) Williamson, B. and Payton, S. (2009). Futurelab handbook: Curriculum and teaching innovation: Transforming classroom practice and personalisation. <http://www.futurelab.org.uk/handbooks>.

활용되고 있어 가상 학습 환경 및 다른 디지털 자료에 접근할 수도 있게 해 준다. 정부 기관인 Becta(영국교육통신기술청)는 교육에서 ICT를 선도하였다. Becta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교육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아동 업무를 지원하는 정부의 전략을 조정, 개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Becta는 2011년에 폐쇄되고 교육부(DfE)와 경영혁신기능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에서 이전의 기능을 승계해 왔다. Becta 웹사이트는 기록 자료(archived material)로 이용 가능하다. 영국은 이렇게 상당히 앞서있는 infrastructure를 기반으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주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수학습 자료의 디지털화도 진행하면서 수학과 같은 특정 과목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구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과정 웹사이트(<http://www.education.gov.uk>)에서는 학교급별로 국가 교육과정 학습 프로그램 및 교수 자료 관련 링크를 제공한다. 비디오, 실용적 자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교사 티브이(Teachers' TV)는 계약이 2011년 4월에 종료되었으나 많은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우리와 다른 독특한 점은 교육과정에서 '기능'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지식 자체에 대한 학습'보다는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교육 문화가 강하다. 따라서 수업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것'보다는 교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기능 개발을 위해 추구하는 학습의 개별화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교재의 개념이 우리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교재를 디지털화한다는 개념도 우리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교사의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가 스스로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또한 상업적 교과서에 의존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도 교과서를 통해 통제와 개혁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는 교사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교사들도 이렇게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교육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또 교과서 활용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나. 높은 ICT 인프라 수준과 낮은 ICT 사용율의 핀란드

핀란드의 경우는 일찍부터 IT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는 IT를 활용한 교육, 디지털화된 교육 자료의 활용 빈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핀란드의 경우도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고, 또 기초교육에서 서책형 교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1990년대부터 제조업, 서비스업과 함께 국가성장 동력으로 ICT를 채택함에 따라 정보사회 정책의 선도 국가로 부상하였고 핀란드 정부는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를 설정하고 ICT 산업을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게 된다. 핀란드 정부는 제1차(1995-2000년), 제2차(2003-2007년), 제3차(2007-2015년)에 이르는 국가정보화전략과 제4차 미래국가정보화전략(2011-2020년)을 추진하여 스마트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제4차 미래국가정보화전략(2011-2020년)에서 특히 유아·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 분야의 ICT 활용 및 촉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sup>19)</sup>

1990년 중반 핀란드가 정보사회전략을 구상할 때 교육에서의 IT 사용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핀란드 교육부는 공공지출 부분의 예산 삭감을 감행하며 교육기금을 만들어 IT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를 네트워크화하여 교사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금을 투자했다.<sup>20)</sup> 그 결과 핀란드 학교의 90% 이상에서 광대역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 교실에서 컴퓨터가 설치된 비율은 77%에 이르게 되었다.<sup>21)</sup>

그러나 높은 ICT 인프라 수준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ICT를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핀란드는 유럽국가들 중에서 수업 시간에 ICT를 사용하는 순위에서 24위에 이르고 있으며 단지 7%의 교사만이 수업 시간의 절반 이상을 ICT 사용에 할애하고 있다. 핀란드 전체 교사의 24%는 수업 시간에 ICT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4%의 교사들은 그들의 수업 시간에 ICT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체 교사의 14%는 수업 시간에 ICT를 사용하는 것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ICT 기반이 구축되고 활용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같은 환경이 핀란드 교사들로 하여금 일상 수업에서 ICT를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거나 흥미를 끌진 못했다.<sup>22)</sup>

수준 높은 ICT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에서 ICT 사용이 적극적이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ICT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23)</sup> 첫째, ICT 또는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학습 또는 교육은 기존의 서책형 또는 교사와 학생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토대로 한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넘어서는

우월한 개념의 교수법 또는 학습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최근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ICT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ICT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게다가 ICT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자료들은 아직까지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다. 둘째, ICT는 연필, 책, 박물관, 현장조사 등과 동일한 수준의 학습 자료이자 도구로 인식된다. 교실에서 수업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교사의 권한이며 수업에 가장 적절한 학습자료를 교사는 선정한다. 교사는 ICT 자료없이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전문직으로 인식된다.

헬싱키에 위치한 라토크르파노 종합학교(Latokartano comprehensive school)의 사투 혼칼라(Satu Hokala) 교장선생님은 ICT를 활용한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었다. 핀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CT 교육 진흥에 대해서 핀란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기기를 구입하도록 추가 기금을 제공하지만, 그 기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와 교사에게 달려있다. 또한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ICT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ICT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ICT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자료들은 매우 형편없으며 교사는 ICT 자료 없이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ICT는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더 나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면 된다.

터어쿠(Turku) 대학교의 버타(Virta) 교수는 오늘날 핀란드의 모든 학교에서는 ICT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만 각각의 모든 수업에

20) Matti Sinko and Erno Lehtinen, 1999, The challenges of ICT, WSOY, p.7.

21) Werner B. Korte and Tobias Husing, 2007, Benchmarking Access and Use of ICT in European Schools 2006: Results from Head Teacher and A Classroom Teacher Surveys in 27 European Countries, eLearning Papers(www.elearningpapers.eu), Vol 2, No 1, pp.2-3.

22) Katri Grenman, 2010, The future of printed school books, VTT Working Papers 144, VTT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p. 13.

23) 이 내용은 핀란드 헬싱키시에 위치한 라토크르파노 종합학교의 사투 혼칼라(Satu Hokala) 교장 선생님과 면담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 신체적인 활용을 통하여 수업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ICT만을 사용하여 수업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읽기 수업의 경우에는 어떤 읽을거리를 읽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베타 교수는 물론 오늘날 거의 모든 선생님들은 그들의 수업시간에 ICT를 활용한 수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학습하느냐에 따라 ICT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가 결정되기도 하겠지만 ICT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사들이 얼마나 ICT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느냐에 따라서 ICT사용이 달라지기도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차원의 격차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이 티칭 로봇(teaching robots)과 공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되며 인간적인 교육 지원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오늘날 ICT에 대한 이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WSOY과 같은 출판사, 미디어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여러 기관들에서 학습 자료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화된 학습방법을 고안하고 만들어 내고 있다.

#### 다. 디지털 교재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프랑스 정부 그러나 낮은 사용률

프랑스는 '공화국의 학교 개혁(2012년 7월 4일, <http://www.refondonslecole.gouv.fr/>)' 이라고 하여 프랑스 교육에 대한 개혁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학교에 대한 대담한 야망(A GREAT AMBITION FOR DIGITAL A SCHOOL)도 포함되어 있다.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는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학습과 여가시간을 위하여 그들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모든 교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도 천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리의 경우 GPS 서비스, 디지털 맵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공간 관련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직업 또는 기술 관련 교과의 경우는 인터넷과 같은 도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바로 적용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제들은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프랑스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교과서의 학교 적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eduscol' 이라 불리는 교육전문가를 위한 국립포탈에는 프랑스의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종이 없이 컴퓨터로 사용되는 교과서다. 이것은 프로젝터에 의해 교실에서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다. 종이가 된 교과서에 있는 글이나 사진 외에도 소리나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도 제공될 수 있다.'<sup>24)</sup>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디지털 교과서의 학교 보급과 관련하여 국가적 노력이 활발하다. 프랑스 교육부의 위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교과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변화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프레임을 재정비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Sere&Bassy, 2010, Bruillard, 2011 재인용). 즉 프랑스 정부에서는 서책형 교과서에서 디지털 교과서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많은 시도들이 프랑스에서 관찰되고 정부는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많은 프로젝트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출판사들 간의 경쟁과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 많아 디지털 교과서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란 힘들다. 다만 정부의 노력을 몇 가지 예로

24) <http://eduscol.education.fr/numerique/dossier/lectures/manuel/notions>



써 제시할 수 있겠다.

2009년 9월 프랑스 교육부는 프랑스의 12개 지역(region)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교과서(Digital Textbooks through the digital working platform) 프로젝트<sup>24)</sup>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를 줄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안하며, 학교에서의 ICT 활용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부, 교과서 출판업체, 플랫폼 제작자 및 제공자들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2009-2010학년도에 65개 중학교의 약 800명의 학생과 890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는데, 그 실험 결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교사의 활용 빈도는 높았으나 학생의 활용 빈도는 낮았다는 점이다<sup>25)</sup>. 또한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자료를 개발했다기보다는 서책형 교과서를 단순히 전자형태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010-2011학년도의 결과를 살펴보면<sup>26)</sup>, 실험에 참여한 교사들이 디지털 교과서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해 활용에 제한을 보인 부분이 있었다. 학생들 역시도 그 활용에 있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가 다양하고 보완적인 자료,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활동, 교사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러한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프랑스 정부는 밝히고 있다.

또한 프랑스 교육부는 'catalogue cheque ressources du plan de developpement des usages du numerique a l'Ecole'라 불리는 새로

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sup>28)</sup>. 이는 학교에서의 디지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인데, 정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상업적, 비상업적, 무료, 유료로 모두 포함하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 디지털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eduscol' 홈페이지에서는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를 학교급별, 교과목별로 검색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출판업체도 매출 진작을 위하여 'www.wizwiz.fr'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전자교과서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교과서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Alain Choppin은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는데 하나는 1789년 이후 생산된 프랑스의 모든 교과서를 집대성한 에마누엘(Emmanuelle)이고, 다른 하나는 에마누엘5(Emmanuelle5)이다(Bruillard, 2011). 현재까지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영어, 역사, 지리 등 8개 과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상황이고 약 7만 권의 교과서에 대한 2만 7천 건 이상의 발췌문에 접근할 수 있다<sup>29)</sup>.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TNS-Sofres의 조사에 의하면 약 20%의 교사만이 전자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12명의 교사 중 1명의 교사만이 사용하는 것이다. 여전히 전자교과서의 매출은 종이교과서 매출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Weka Education, 2011.11.28). 학교 현장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구형되는 기기의 보급 문제와 더불어 학생들이 사용에 있어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교사도 이를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

24) <http://eduscol.education.fr/numerique/dossier/lectures/manuel/notions>

25) <http://eduscol.education.fr/cid57126/l-experimentation-manuels-numeriques-via-ent.html>

26) <http://eduscol.education.fr/cid57127/evaluation-premiere-annee-experimentation.html>

27) <http://eduscol.education.fr/pid25676-cid58598/evaluation-de-la-seconde-annee-d-experimentation.html>

28) <http://eduscol.education.fr/cid57906/le-catalogue-cheque-ressources.html>

<http://eduscol.education.fr/plan-numerique/catalogue-cheque-ressources/index.action>

29) [http://www.inrp.fr/she/wchoppin\\_emma\\_banque.htm](http://www.inrp.fr/she/wchoppin_emma_banque.htm)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거나 디지털 교과서를 보완적으로만 활용하게 된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프랑스 정부도 가지고 있다. ‘디지털 학교에 대한 대단한 야망’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학교를 구축하기 위한 기자재나 네트워크 구축이 아직 요원한 상태이며, 지역별로 디지털 학교 구축을 위한 준비가 불균등하다. 더 큰 문제는 교사들의 훈련 및 연수 부분이다. 디지털 도구와 콘텐츠를 학생들의 학습을 위하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교사 대상 연수가 시급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교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디지털 학교 구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프랑스 정부가 고수해왔던 교사들의 ‘교수적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 받을 수 있는 것을 프랑스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기술과 교육방법, 교육내용이 어떻게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가정-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연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sup>30)</sup>

## 라. 약한 지식정보사회 담론의 독일

2012년 7월 독일의 바이에른 주의 학교 2곳(레알슐레, 김나지움 등)과 한 초등학교 학급의 현장학습을 참관하였다. 교사들과 대학의 교수들, 그리고 교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우리의 사대생과 교대생)과 대화를 할 기회도 가졌다. 옥스브르크 대학의 학부생들 앞에서 필자가 독일의 교과서 정책, 특히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왔다고 소개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였다. 한국은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교과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가라고

질문했더니 신문 기사를 통해 봤다고 했다. 독일의 학교를 돌아보고, 그곳 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이 디지털 교재 개발면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실제 독일 교육 현장에 가보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수 기기는 OHP이다. 교육은 주로 주 정부가 담당하는데, 주에 따라 교육 예산이 다르기도 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후원자의 후원 정도도 다르다. 옥스브르크 대학의 보브링 교수(Wobring)(2012 7월 13일 인터뷰 및 학교 방문)에 의하면 가장 부유한 주인 바이에른 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교는 서책형 교과서나 교사가 준비한 종이 교재, 그리고 OHP 자료가 일반적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한다. 컴퓨터가 있는 교실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독일은 몇몇 대도시나 매우 소외된 지역과 같이 교육적 지원을 상대적으로 충분히 받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IT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독일의 독특한 교육 문화 때문에 교사들이나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의 디지털 교재에 대한 인식도 매우 보수적이다. 서책형 교재를 통해 학생들이 글을 읽고 사고하는 방식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교재가 학습을 매우 가볍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읽고 쓰고 깊이 사고하는 학습이 중요한데, 디지털 교과서는 그러한 학습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보브링 교수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컴퓨터 앞에 장시간 머물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에른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내가 만난 독일의 교수들, 학부생들, 교사들은 디지털 교재 개발에 대해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학습은 서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이 뿌리 깊어 보였다. 옥스브르크 대학의 보브링 교수에게 독일의 디지털

30)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2012.

교과서 정책에 대해 정보를 달라고 했을 때, 보브링 박사는 중앙정부든 주정부든 정부차원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다만 개인이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최근에 책을 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과학지식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2년 3월 베를린의 'e교육 마스터플랜'이 IT-기반 교육의 중심개념으로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고 한다.<sup>31)</sup>

2005년 마스터플랜이 시작된 이래 지난 6년 동안 2만8천명 이상의 교사들이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학생당 컴퓨터 보유 비율도 6:1 이하로 개선되었다. 마스터플랜 평가 결과 컴퓨터는 독일어,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외국어 등 5가지 영역의 수업에서 활용률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성공은 마스터플랜의 주요 프로젝트(eTwinning, Roberta, 인터넷 해마)와 베를린 교육사이트(학습공간 베를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디지털 교재의 측면에서 베를린은 독일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곳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독일이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사회변화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교육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더 조사를 해보고자 한다.

#### 4. 우리 교과서 정책에 주는 시사점

우리 정부는 인정제의 방향을 통해서 교과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서책형을 보완하여 SMART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사실 독일을 제외하고는 '교과서 정책' 자체를 논하기 어렵다. 오히려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오래된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고, 핀란드도 1992년에 교과서 검정제도를 철폐하여

교과서와 관련 어떤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자유발행제가 매우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논란도 거의 없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교과서를 시장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교과서 선정에서 활용까지 교사가 주된 주체가 교사의 요구에 맞추다보니 교과서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검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검정 심사를 교사가 하면서 교사들의 기호와 편이가 기준이 되어 교과서가 개발되고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자유발행제를 통해 시장에 맡기든 검정체제를 통해 교과서를 심사하여 승인하든 결국 교과서 채택 및 활용에서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결국 교과서의 질보다는 교사의 질이 교육에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심사, 채택 등에서 교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익숙한' 교재를 선호하는 교사의 보수성이 작용하여 오히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유럽 4개국은 교사의 질이 교과서의 질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우리의 검정제와 인정제에서도 교과서 채택에서 교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교사의 기호나 요구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을 다양화하고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이라면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교과서 이외에서도 찾아져야 할 것이다.

영국, 프랑스, 핀란드, 독일은 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교사가 되기까지의 여러 단계의 교육과 훈련을 거치도록 요구한다. 교육과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도 교사들의 수업 관찰과 평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31) 베를린시 교육과학지식부 보도자료(2012. 3. 23) '학교 매체교육-베를린 e교육 마스터플랜과 함께 성공가도로' (한국교육개발원, 2012년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사업, 2012년 6월 교육동향 정리 참조).

일단 교사가 된 후에는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수업에서 자율성을 준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의 경우 교사는 매우 안정적인 직업으로 간주된다. 영국은 최근 여러 평가 체제를 도입하여 교사들의 수업을 평가하고 있다. 실제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사는 퇴출시키기도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말이다.

유럽과 우리나라는 교사 교육 제도가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구현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교사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또한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교과서의 개념은 우리와 매우 다르다. 여러 교재 가운데 하나로서 수업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일제교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교사 개인이 교재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교사의 교재 개발 능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

이렇게 다른 제도와 문화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유럽 4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유럽 4개국에서 확인한 것처럼 교사가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교육이 지향할 만한 정책 방향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학교나 교사 평가 체계, 교사의 교수·학습 전문성 신장, 교과서 출판의 전문성 제고 등 선결 과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과서 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인정제는 여러 규제를 풀어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교과서들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다만 오류와 학계의 새로운 성과들을 반영할 수 있게 인정제 심사위원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정제하에서는 물론 자유발행제로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교육에서는 물론 재교

육에서도 학계의 새로운 연구 성과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 관련 기관과 학계에서는 교과서의 오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지식정보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창의인성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보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창의인성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는 사실 우선 교육과정이 다양한 수준에서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고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열린 구조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동일 학년 내에서 목표 성취 수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어서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습의 개별화를 추구하는데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서책형을 본격적으로 대체하는 방향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의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노출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과도할 정도가 되고 있다. 학생들은 종이책에 있는 글을 읽기보다는 웹에 떠있는 만화를 보려고 한다. 진중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차근 차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급하게 '정답'을 얻고자 하는 문화가 확장되고 있다. 지하철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마치 인터넷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인터넷 자료가 학생들이 사고와 지식을 통제하여 학교가 아닌 인터넷이 지식을 가르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증을 고려하고 해결하는 방향에서 교과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제 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교사들은 디지털 자료에 대해 일정한 저항감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학생들이 교사

나 동료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지적으로 자극받고 때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디지털 교재는 '혼자서' 기계와 상호작용하게 하고, 그리하여 학생을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으로 '창의적 인간' 과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소집단 협동학습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상을 고려하면서 서책형과 디지털형 교과서가 상호보완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개발되어야 하며, 또 교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한 담론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에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얼마나 홍보가 되어있는지, 교사들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국이나 핀란드, 독일 등의 경우에 수업은 주로 지식을 탐구하고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학습의 개별화도 개별적이거나 소집단의 프로젝트 식으로 운영되어 서책형이든, 디지털화된 자료든 탐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즉 수업에서 지식을 아는 것보다는 '사고' 와 '문제해결' 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정보를 아는 것보다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디지털 교과서의 확장성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사고를 따라가면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의 성격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디지털 교과서가 종래 우리의 서책형 교과서에서처럼 정보를 주고 학생들

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디지털 교과서를 구성할 때만이 디지털 교과서가 서책형을 제대로 보완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0년 작성한 VTT 보고서 'The future of printed school books'<sup>32)</sup> 은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의 교사, 출판관계자, e-book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e-book에 대한 핀란드 교사 및 출판관계자, e-book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핀란드의 교사들은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고 손으로 하는 학습을 유지하는 것은 두뇌에 긍정적이고 중요한 통로가 되며 특히 초등교육에서 손을 이용한 학습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터넷과 비교해서 책이 지니는 강점은(학습과) 무관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아이들이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생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혼자서 판단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아이들이 장시간 TV, 컴퓨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컴퓨터 앞에 학생들을 묶어둔다면 이는 단점이 될 것이다. 인터넷 및 ICT 자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료는 무가치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는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서책형 교과서의 단점도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최신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구글맵을 통해서 원하는 장소를 어디든 찾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서책형 교과서가 가르치는 여러 기능이 때로 실생활에서 필요 없는 것이기도 하고 제시된 정보는 책이 출판됨과 동시에 과거의 것이 되기도 한다. 교과서 내용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만든다. 서책형 교과서의 경우 즉

32) Katri Grenman, 2010, The future of printed school books, VTT Working Papers 144, VTT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기술연구센터인 VTT는 핀란드의 교육&학습 분야에서 정책개발과 실행을 맡고 있는 주요 기관 중 하나이다.

각적인 피드백이 없으며 확인도 바로 되지 않는다(ICT를 활용하면 즉각적인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책은 상당히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반면 인터넷을 통하면 추가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가르치는 것의 핵심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이다. 컴퓨터 앞에서 모든 학생이 혼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좋은 학습 환경이 있다면 거기엔 교사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교사라면 어떤 도구도 필요치 않다. 단지 배우려는 누군가와 교사만 필요하다. 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책이 사라진다면 책과 함께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냄새, 소리, 촉감, 아카예빙, 서류, 책에 의해 만들어지는 평등이다.

VTT보고 내용은 우리에게 전혀 낯선 지식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핀란드 교사들도 서책형과 디지털 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요컨대 서책형과 디지털형의 장단점과 상호보완성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하면서 우리 교과서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종래 우리 교과서는 ‘알아야 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담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과 인터넷의 발달은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디지털 교과서뿐 아니라 서책형 교과서도 학생들이 지식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기능하도록 그 개념과 기능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추진하는 크게는 교육 정책, 작게는 교과서 정책의 필요와 당위에 공감할 수 있게 한층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부 지정토론 ①



윤 광 원

(주)미래엔 교과서사업본부장

# 교과서 정책의 안정성, 다양성, 진취성 -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플사 방문 보고 -

## I. 시작하며

광복 이후 교육과정기별 교과서 정책의 변화는 교수 요목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기)까지 포함하면 무려 10여 차례입니다. 한 나라의 인재 양성에 가장 기초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가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의 변화는 그간 내·외부 환경에 따른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변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설령, 이런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연구자나 정책 수립하는 기관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입체적으로 교육 수요자 입장을 잘 고려했으면 하는 우문을 던져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은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토론자는 이번 심포지엄의 발제자인 김재춘 교수님과 지난 7월 초 미국을 동행하면서 교과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 자문도 받고 전문가 면담도 하였습니다. 이에 토론자는 김재춘 교수님의 발제 내용에 대하여 제 나름의 해석을 덧붙이고 미국 방문 시 질의한 내용들을 소견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되, 교과서 발행사의 입장도 조금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 II. 미국 교과서 관련 정책 자료 수집 일정

일자	방문 기관	시간	주요 내용
7/9(월)	워싱턴대학교	09:00	외국어 교육 관련 워크숍 참관
	주 교육부(워싱턴)	11:00	디지털 교과서 담당자 면담(Karl Nelson)
		14:00	외국어 교육 담당자 면담(Michele Aoki)
7/11(수)	주 교육부(캘리포니아)	14:00	교과서 담당관 면담
7/12(목)	CK2	12:00 이후	디지털 교과서 전문가 면담(Ted Kahn)
7/13(금)	애플	14:00 전후	국제 교육 담당자 면담(Gilles Deltel)

### III. 미국 교과서 관련 자료 수집 점검 사항

교육과정 분야, 교과서 분야 등으로 질의 사항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특히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13문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교과서 가격 결정과 교과서 출판사의 역할,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질의응답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현지에서의 즉문 즉답 형태의 자료인 만큼 통역에 의한 약간의 오인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 분야]

1. 교육과정의 개편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교과별, 주 정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주요 교과는 6년(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 외의 교과는 8년을 주기로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과서 출판사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과서 개편 사업에 참여한다.
2.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기관(단체)은 주 정부이다.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에 해당한다.
3.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활용하고 있다.
4. 대부분의 주 정부는 학기 초, 학기 말 점검으로 학교를 점검하는 형태로 통제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 - CCSS라는 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 운영

#### [교과서 분야]

1. 교과서 발행 제도에 대해서  
주 정부에서 주관을 하며 전 교과서를 인정제로 하고 있다(주 정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나 모두 인정 교과서 제도로 보면 된다.). 또, 발행사가 주 정부에 인정 승인을 요청하면 대부분 승인을 해 주지만 평가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만약 승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행사가 수정하여 재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 심사는 사회 교과서의 경우 16종 출원에 60명, 과학 교과서의 경우 12종 출원에 40여 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고, 심사 관련 모든 사항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지침서(편찬 상 유의점)가 있는가?

앞에서 주 정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했지만, 매우 엄격한 지침서와 그에 따른 설명 내용이 있다. 지침서는 문서화하여 교과서 출판사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출판사가 교과서를 개발할 때는 이 지침서를 엄격하게 준용한다. 그리고 주 정부는 교과서 개발 기한을 최소 2년 주며, 적어도 30개월 전까지는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3. 교과서 생산 및 공급(구입)을 어떻게 하는가?  
지역 교육청에서 교과서 출판사에 직접 주문하는 형태이지만, 대부분 교과서 출판사에서 생산, 주문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공급은 주로 서점을 활용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 서점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4. 수업 시간에 교과서 활용도는 어떠한가? (사실, 우리나라 교과서가 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활용도는 지극히 저조하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하였다.)

주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약간의 보완 자료가 있다. 교과서만 가르치는 주 교육청이 대다수이다. 즉, 교과서만으로 수업을 해도 충분하며 부교재는 불필요하다.



## 5. 교과서 채택 절차는 어떠한가?

대부분 지역 교육청별로 3종 정도를 선별하고, 학교에서는 그 3종 안에서 1종을 선택한다. 물론 주 정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교과서 선택을 결정할 수도 있다. 교과서 채택 때는 출판사 홍보(로비)가 있으며, 이런 홍보는 출판사별로 비밀로 한다.

- 큰 틀의 채택 윤리 기준만 있음.

## 6. 교과서 내용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누가 관리하는가?

교과 내용, 삽화, 사진 등에 대한 보상 및 관리에 대한 권한, 책임, 보상 등은 교과서 출판사가 처리하며, 주 정부나 중앙 정부는 무관하다.

## 7. 교과서 물려주기 실태는 어떠한가?

학교에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물려주기를 하며,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 [교과서 가격 결정 분야]

### 1. 교과서 가격 결정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가?

민간 기관인 교과서 출판사에서 하며, 주 정부의 가격 통제 및 제한 사항은 없다. 즉, 인정 심사 출원 시 출판사가 가격 견적서를 제출하되, 출판사가 제시한 가격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일은 없다.

- 당연한 질문을 왜 하느냐 하는 반문이 있었음. 이에 대해서 판매 부수, 책 내용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주 정부에서 통제를 하지 않느냐고 재질문하니 채산성(경영단위)이 낮으면 만들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채산성이 낮은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은 교과서 없이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고 하였다.

## [교과서 출판사 분야]

### 1. 교과서 출판사의 역할

교육과정 개발 시점부터 교과용 도서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편집, 디자인, 삽화는 물론 저자 섭외 등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은 전적으로 교과서 출판사가 담당을 하고 주 정부는 일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결정한다. 주에 따라서는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와 같은 곳에서는 출판사가 매우 활발하고 워싱턴 주 같은 곳은 그렇지 못하다.

### 2. 교과서 수정, 보완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결하였다.) 수정, 보완은 교과서 개편 시까지 없다. 만약 시사성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교사가 알아서 가르친다.

## [디지털 교과서 분야]

### 1. 디지털 교과서 정책과 교과서 발행사의 역할은 어떠한가?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안이 아직 잡혀 있지 않다.

(교과서 출판사도 우리나라의 디지털 교과서 정책 정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2. 일선 학교에서의 디지털 교과서의 효용성은 어떠한가?

전체 학생의 2% 미만, 즉 특수 학생(스포츠 선수, 일탈 학생(학습 부진), 장애인 등)에게 e-book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 평가하기는 힘들다.

### 3. 디지털 교과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는 서책과 병행하는 보조 자료의 형태이지만, 궁극적으로 서책 없는 디지털 교과서가 될 것이다.

**[애플 사 국제 교육 담당자 면담 결과 :  
Mr. Gilles Deltel]**

- 애플 사는 현행 서책 교과서의 대체 수준이 아니라, 이를 한 단계 넘어서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한 테크놀로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 한국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디지털 모바일 교육일지 모르지만 교수 및 학습을 합친 그런 것이다.
- 교실 안과 밖이 따로 없는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다시 말하면 내용을 뛰어넘은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 e-book의 대치가 아니라 더 큰 의미의 수단이 되겠다.
- 이미 스탠포드대학과 협업 시행 중이고, 교수·학습 자료 개발도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스마트 교육 시스템은 교과별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모든 등록 학생이나 교육 수요자에게 무료로 공급이 된다. 뛰어난 강의 교사를 교과별로 투입하여 수준별 학생에 맞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다. - 이미 피어슨 출판사, 맥그로리 출판사 등이 참여함.
- 내용(콘텐츠)만 있다면 출판사든 개인이든 디지털 교육 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아이패드가 곧 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디바이스가 아니라 플랫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애플사에는 재능 발견 프로그래밍이 따로 있다고 보면 된다. 한국에도 (애플 사) 팀이 구성되어 있다.
- 같은 내용도 그냥 보는 학생, 깊이 보는 학생 등을 구분하여 교육이 가능하다. 그림 및 미디어 등이 동시에 검색이 가능하여 입체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검색). 따라서, 출판사의 선택은 두 가지이다. 이런 스마트 교육을 따라 하든지, 무시하든지 양자택일이다.
-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는 5년 정도 예상이 되며, 이 프로그램은 누구에게나 무료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애플사에는 500명의 박사가 있다.

**IV. 결론 및 제안**

근래에 교육과정 개편 및 교과서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공포되었고, 이러한 혼란 상황 속에서 2011년에 새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논의 중에 “스마트 추진 교육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자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 교과서 출판사입니다. 특히, 교과서 출판사의 경우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폐업 지경에 다다른 교과서 출판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토론자는 미국을 방문하여 보고, 듣고,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에 대하여]**

1. 정기적인 개편이 정착되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엄격히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3. 학교 현장에 자율성을 주며, 국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통제권은 이양한다.  
(미국의 CCSS 같은 교육 협의체 구성으로 학교가 운영되도록 함.)

**[교과서에 대하여]**

1. 정기적인 교과서 개편으로 교육 수요자의 안정성 확보하고, 교과서 출판사의 단위 경영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
2. 인정 도서는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양질의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개발만하면 모두 합격한다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음.)

3. 교과서 개발, 주문, 생산, 공급 업무를 출판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함을 점진적으로 유도한다.
4. 수업 시간에 교과서가 잘 활용되도록 교과서 개발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
5. 교과서 채택은 큰 틀의 채택 규제(원리)만 두고 시장에 맡긴다.

#### [교과서 가격 결정에 대하여]

1. 일반 서적과 같이 교과서 출판사 자율로 교과서 가격을 책정하여 인정 심사 때 가격 견적서를 제출, 민간 전문가에게 가격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증을 받되, 정부 차원의 통제는 없어져야 한다(현재 우리나라는 약간의 조정이 있음.).
2. 채산성이 없는 교과서는 교사가 알아서 시중 서적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한다(예체능, 컴퓨터, 외국어 등).

#### [교과서 출판 분야]

1. 교과서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교과서 발행에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시·도 교육청별 분산 심사하고 있는 인정도서가 엄격하게 심사되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함.).

2. 교과서 저작권 및 수정·보완은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3. 일부 발행사가 교과서를 독식하는 발행 구조는 소규모 발행사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 [디지털 교과서 분야]

1.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적용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2. 선진국의 사례를 더 연구하고, 교육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디지털 교과서 사업의 주체가 단말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콘텐츠와 교수·학습 방법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끝으로, 정책이 계획되고 성공적으로 실현되려면 충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선진국 사례를 직접 보고 탐구하여 우리 실태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과서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띕니다. 차제에 차분하고 탄실한 준비 과정을 거친 정책이 계획되고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1부 지정토론 ②



**오 병 목**  
(주)천재교육 사장

## ‘국가 관리로부터 민간자율로의 전환 (중국·몽골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 I.

2010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국어, 사회, 역사, 도덕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목이 인정도서로 전환되어, 2013 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서 쓰이게 되었다. 국·검정 도서의 인정도서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획일적 관리나 통제에서 벗어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과서 개발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고, 2013년은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를 벗어난 환경에서 탄생한 교과서가 학교라는 시장에서 처음 평가를 받는 중요한 시기가 된 셈이다.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의 시기에 발표자가 연구하여 제시한 내용은 향후 새로운 교과서 제도가 실시되면서 생길지 모를 몇몇 문제점을 미리 살피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II.

토론자의 입장에서, 발표자가 연구 조사한 내용을 나름대로 검토하였으며 그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과 논의의 의견을 제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의문점은 발표 내용 중 문구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가벼운 질문이고, 논의 의견은 발표자의 정책 제안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이다.

먼저 의문점을 이야기하자면, 사소한 부분이지만, 발표자는 중국의 교과서 제도가 건국 초기의 ‘일강일본(一綱一本)’ 체제에서 1990년대 이후의 ‘다강다본(多綱多本)’ 체제로 전환되었다 하였는데, 중국의 검정제도인 심정제(審定制)는 하나의 국가 표준에 기반을 둔 다양한 교과서 편찬을 추구하는 ‘일강다본(一綱多本)’ 정책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일강다본에서 더 발전하여 다강다본 체제가 된 것인지 궁금하다. 다강다본이라 하면 중국의 ‘교육과정(綱)’이 ‘여럿(多)’ 존재하는 것처럼 해석되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 각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학교별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에 따른 학교별 교재를 개발하는 형태를 ‘다강다본’이라 한다면 중국에는 수많은 교육과정

이 존재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학교별 교재가 너무 많이 개발되어 “학교별 교재 개발의 홍수 속에 일련의 단순한 양적 추구와 화려한 포장에 치우치는 경향 등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다(“One Standard, Multiple Versions of Textbook” Pursuit of Education Democracy: A Review of Textbook Policy in China, Zhong Qiquan, 2009).

또 중국의 교과서 제도가 우리나라의 검정제와 인정제를 통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였는데, 현실적으로는 검인정의 통합이라기보다는 국·검정의 통합 형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교과서의 개발과 심사과정에서 국가의 지침이 거의 절대적이고 개발된 교과서를 공급하는 체계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독점적 형태가 두 드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발행 및 공급 체계에서는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의 개입이 거의 절대적이다. 중국은 꾸준한 교과서 정책 개혁에도 불구하고 발행 계통(특히 각 성[省] 단위 출판 기업)은 여전히 계획 경제 시기의 관행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지역 독점권과 행정 권력을 이용하여 교과서의 발행 대행\*을 강제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성(省)급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다음의 두 가지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첫째, 본 성(省)의 교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성(省)의 출판 총사에 발행을 대행할 것.

둘째, 본 성(省)의 주류 교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재의 종수는 3종으로 제한하며, 기타 판본은 추가로 목록에 등재될 수 없다. 그 중 본 성(省)에서 편찬한 교재가 반드시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기타 본 성(省)에 진입한 교재는 모두 본 성(省) 정부의 행정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발행 대행 : 교재 ‘원 창작 기관’은 완성된 교재를 필름 형태로 제작하여 대행 기관에 제출하고, 대행 기관에서 인쇄, 발행, 배부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 교재 정가의 일부(보통 3~4%)만 ‘원 창작 기관’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중간이득 형태로 대행 기관에서 취하는 것을 말함.**

이와 같은 강제적인 발행 대행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신속하게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One Standard, Multiple Versions of Textbook” Pursuit of Education Democracy: A Review of Textbook Policy in China, Zhong Qiquan, 2009).

### III.

발표자는 중국과 몽골의 교과서 관리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의미 있는 지적과 제안을 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과 몽골, 두 사회주의 국가의 교과서 제도는 ‘자율과 경쟁’ 그리고 ‘통제와 관리’라는 상반된 두 개의 축을 통해 운영된다. 또한 통제에서 자율로의 전환 과정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데 있다. 우리는 두 나라, 특히 중국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몇 가지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는데, 다음의 세 가지에서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1)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발자 사전 역량 평가
- 2) 심의 중에 개발자와 심의당국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치
- 3) 장기간의 실험적응을 통한 실질적 평가기간 확보

토론자는 위의 세 가지 모두 교과서 개발 및 심의 과정에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며, 심의기관은 물론, 각 발행사에서도 유념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1)과 3)의 과정은 제도화되지 않더라도 발행사가 교과서 개발 설계를 전후하여 실시한다면 교과서의 질적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단, 그 주체가 발행사냐 심의당국이나 또는 제3의 권력이나 하는 문제는 발표자의 의견대로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발표자가 결론으로 제언한 사전 관리 강화를 위한 공적 권위 장치 마련에 관해서도 아직 인정교과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시점에서 뭐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여겨지며, 향후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IV.

교과서 제도의 국가관리에서 민간자율로의 전환, 즉 국·검정에서 인정제로의 전환은 특히 ‘교과서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교육 당국과 관련 연구기관이 주관하고 각 발행사가 참여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김재춘 영

남대 교수는 ‘2011년 교과서 질 관리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과서의 ‘질 관리’ 보다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이 더 중요하다. (中略) 관리라는 말은 국가나 심사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암시한다. (中略)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장의 원리가 작동함으로써 교과서의 질이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김재춘, 영남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2011).”

교과서 관리의 주체가 민간으로 거의 이양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관리의 영향력이 강력한 중국과 몽골의 교과서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따라서 그 장점의 응용에 있다 하겠다. 그것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응용에 한해야 할 것이다. 향후 교과서 제도 및 정책의 논의 역시 사전, 사후라는 관리의 차원을 떠나서 원래 의도했던 민간자율의 취지를 살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토론의 기회를 주신 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정보를 조사하고 제안을 해주신 구난희 교수님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1부 지정토론 ③



**황 홍 규**  
지학사 상무이사

## 교과서 발행사 입장에서 살펴본 일본의 교과서 제도

우리나라의 검인정 교과서 발행사는 교과서의 실수요자인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수렴하면서, 정부의 교과서 관련 정책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해내는 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토론자는 교과서 발행사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사가 당면한 사업 환경을 살펴보고, 주제 발표자가 소개한 일본의 안정된 검정 교과서 제도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 (환경 1) 교과서 편찬개발비의 증대

검인정 교과서 발행사 간의 내재된 상호 경쟁적 편찬개발 활동에, 2011년 9월 ‘교과서 외형체제의 자율화’라는 정부 정책이 더해지면서, 많은 교과서들이 다음 ①~⑥과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었고, 발행사의 교과서 편찬개발비는 순식간에 폭증하였다.

- ① 교과서 판형(크기)의 확대 및 변형화
- ② 교과서 쪽수(페이지)의 증가
- ③ 교과서의 전면 컬러화
- ④ 사진·삽화 자료의 대형화 및 고급화
- ⑤ 교과서 편집디자인의 세련화 및 고급화
- ⑥ 교과서 편찬개발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증대

▶ 쟁점 : 외형 체제의 자율화 정책은 보기에만 화려하고 실속은 없게 만들며, 심지어 발행사가 교과서 정가를 올리는 빌미만 제공할 뿐이므로, 과거처럼 외형체제를 규정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토론자는 반대 의견을 밝힌다. 판형과 쪽수 등의 요소에서 많은 발행사들이 교과서의 실수요자인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결정하고 있다. 또한 편집디자인 영역에서 발행사의 과감한 투자는 교사와 학생을 현혹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습의 흥미를 돋우고 가독성과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과 지침보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점은 우

리 정부의 교과서 정책이 일본의 교과서 제도보다 앞서 있다고 토론자는 판단한다.

## (환경 2) 교과서 주문부수의 감소

검인정 교과서의 합격본 중수 제한이 사라지고 합격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따라 교과서 합격본 중수도 증대되었다.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보급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였지만,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문부수로 수익은커녕 투자된 교과서 사업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교과서가 대거 나타났다. 일정 수준의 주문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과서 발행사는 사생결단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다음 ①~⑤의 항목들도 교과서 주문부수를 줄이고 있다.

- ① 학생 수의 감소
- ② 교과서 대여제
- ③ 집중이수제 및 학년군별 교과서
- ④ 필수 교과목이 아닌 선택 교과목의 증가
- ⑤ 고등학생의 교과서 구입 회피 현상

▶ 쟁점 A : 고등학생의 교과서 구입 회피 현상은 해당 교과서의 활용도가 낮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기에 해당 교과서를 자기 부담으로 구입해야 하는 고등학생으로서는 당연한 선택권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실의 심각한 문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개발한 양질의 교과서가 학교 교실에서 사라지고, EBS 입시 문제집이 교과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현재의 교과서에 이러한 입시 문제형 학습 자료를 대폭 추가하거나, 워크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활동지 중심의 교과서를 추가로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 쟁점 B : 일본의 학교는 교과서 발행사가 편찬한 상당한 고가의 교사용 자료집을 구매하여 교과서 발행사의 경영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학교 교사들이 교과서 발행사에 요구하는 수업 지원 자료는 엄청나다. 수업 진도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문항이나 학습 활동지에서부터 ppt·플래시·동영상·애니메이션·사진삽화·mp3파일에 이르는 각종 시청각 자료까지 실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맞춤형 자료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사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교과서 주문 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교과서 편찬개발비에 버금가는 비용을 또다시 투자하여 자료를 개발하고 인쇄물·멀티미디어CD·웹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 심한 경우에는 판매되어야 할 서책형 교사용지도서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가치 있고 다양한 교사용 수업 지원 자료를 학교에서 구매하여 활발하게 활용하는 정책이 나오기를 제안하고 기대해본다.

▶ 쟁점 C : 일본은 문부과학성 산하에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와 교과서조사관이라는 전담 기관과 전담 직제를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행사가 신청한 교과서에서 불합격 요소를 제거하여 합격본을 만들어나간다. 현재 일본의 검정 합격률은 99%를 넘고 있다. 옥석을 가리겠다는 우리의 검정제와는 철학과 방향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사는 큰 부담이 되는 검정수수료를 자기 부담으로 하면서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불합격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우리나라도 검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 내에 과거의 편수관 제도를 새롭게 개설하여 일본과 같은 안정적 질관리 교과서 제도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교과서 발행사가 불합격의 공포감에서 벗어나야만 외형 체제의 자율화를 뛰어넘는 '다양한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 쟁점 D : 우리나라는 학생수나 국토의 면적이 모두 일본보다 작지만, 검인정 교과서 합격본 중수는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합격본의 중수를 제한하고 불합격본을 만들어내는 제도로 회귀할 수도 없다. 사회적 비용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에서의 합격본 중수가 화두가 된다. 정부 당국과 발행사가 함께 참여하고 조사연구를 거듭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 (환경 3)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과 교과서의 수시 개편 등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초·중·고 학교급별로 계단식으로 교과서를 검정함으로써, 발행사가 4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교과서를 편찬개발하게 해주고 있으며, 또한 교과서의 수명도 4년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우리나라는 잇따른 구분고시, 구분고시의 수정, 검정공고, 검정공고의 수정에 따라 막대한 편찬개발비가 투자된 교과서가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폐기되거나 2년이라는 초단기 수명으로 그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편찬개발이 완료된 중학교 교과서와 편찬개발이 진행 중인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서조차 그 수명을 아무도 예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교과서 발행사의 안정적 경영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받는 교과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받는 교과서가 84%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준비된 정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너무 급히 인정 업무가 시도 교육청으로 분산됨으로써 교과서의 인정 제도가 정교하고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노출되기도 하였다.

정부와 발행사는 교과서의 실수요자인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이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수렴하면서 맡겨진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서책형 교과서뿐만 아니라 2014년에 처음으로 적용될 영어·과학·사회 교과목의 디지털교과서에 이르기까지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주도면밀하게 수렴하고 선도하여 정부는 교과서 정책을 입안하고, 발행사는 입안된 정책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해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부가 교과서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고, 상시 체제의 교과서 전담 조직과 인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교과서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가길 간절히 희망한다. 뜻 깊은 자리에서 토론하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린다. 



1부 지정토론 ④



서 지 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교과서 자율화 정책과 디지털 교재 정책에 대한 소견

### 1. 토론에 앞서

토론에 앞서 발표자가 원고를 작성하기까지 매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어 그 노고를 먼저 치하하고 싶다. 유사한 연구를 선행해 본 경험자로서 이 작업이 그리 쉬운 절차를 갖거나 결과 도출이 용이한 연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교과서 또는 교과서 정책은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 비교 연구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체제나 체계를 가진 여러 나라의 상황에서, 어떤 쟁점이나 주제 단위에 초점을 두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설정된 준거에 따라 비교하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과서의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교과서'를 보는 관점이 달라 교과서의 범위나 위상, 역할 등이 상이한데 이것이 정책의 배경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각 나라의 교과서나 교과서 정책을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국제 비교 연구가 다른 주제에 비해 어렵고 논리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과서의 국제 비교 연구들 중에 주로 발행제도(심사제도)에 초점을 두어 비교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우리 상황이나 정책에 도움을 주거나 유의미한 시사점을 갖기 어려웠던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학습이나 수업의 기본적 조건이 되고 반드시 활용하도록 법령 등으로 명시된 '교과서'와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구성의 '학습 교재'는 정책적으로 거론될 때 차이점이 크다. 이것은 교과서라는 유형물 자체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교재) 사용 전반에 걸친 인식의 차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정책 차원으로 접근하면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주제가 될 수 있다.

덧붙여 이 연구가 어려운 이유를 들자면 정책 자료를 수집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해당국의 관련 정부 부처나 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자료나 담당자 또는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와 관련된 정책 자료의 경우 대부분 나라에서 교과서를 엄격하게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접근하기 어렵고, 관련 전문가 역시 소수이며, 정부 관계자들은 쉽게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

있는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형성에 대한 상황적, 배경적 요인들이 포함된 실증적 자료를 구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자의 원고는 본 토론자에게 기대를 갖게 하는 보고(寶庫)였다. 발표자는 문헌 연구와 심층 면접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를 좀 정리하여 명확히 제시해 주면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나라의 어떤 배경의 자료와 면담 대상이 포함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정책 연구의 경우 특히 자료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발표자는 교과서 정책의 쟁점 도출을 위해 각국의 교육적 방향을 알아보고 이것을 디지털 교재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분석해 우리 교과서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본 토론자의 선행 연구 및 관련 경험<sup>1)</sup>들이 이번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서 토론에 앞서 더욱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 점을 먼저 밝히고 싶다. 이 후 제시하는 토론 내용은 토론자 본인의 견해일 수 있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경험들이 이 견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한 번쯤 숙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제안한다.

## 2. 교과서 자율화 정책의 기준은

### 심사 제도(발행 제도)가 아닌 사용 제도

발표자가 연구한 유럽의 4개국은 교과서 심사 제도에 관계없이 교과서 사용이 교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출판사와 교사 및 학생, 즉 시장 경제 상황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에 밀접한 교

과서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 입장으로 개입하는 정도가 교육과정의 반영에 대해 얼마나 깊이있게 확인을 하는가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영국의 경우는 정확한 자료를 알 수 없으나 프랑스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는 교육과정이 개정, 수정되면 출판사에 직접 이 사항을 안내하여 교과서를 다시 출판하도록 하며, 출판 후 교과서 내 교육과정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만 간단히 검토할 따름이다. 결국 출판사가 많은 학생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여 교과서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교사나 현장과 직접적 거래를 해야 한다. 실제로 다른 출판사들보다 발 빠르게 교육과정을 반영, 개발해 홍보할 수 있는 전통적으로 명망있고 규모있는 출판사들이 교과서 시장과 정책을 이끌고 있다.

독일도 역시 주에 따라 정부나 기관 차원에서 검인정 심사를 실시하지만 교육과정 반영 여부 위주의 심사로 자격 부여 수준의 절차이며, 실제 사용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교과서 선정 작업 및 학부모 동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과서 판매를 위해 교사에게 필요성을 홍보하고 교사의 수업을 도울 수 있는 연수, 교수 도구, 학습 부교재 등의 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출판사 차원에서 시행된다.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비중과 자율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교과서 정책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교사의 실제 수업을 규제하는 수준으로까지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시 수업에서의 교과서 필요성에 대해 교사가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중재 없이 출판사와 교사 및 학교 수준에서 직접적인 거래가 성사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나라들과 같은 입장이다.

이러한 유럽 4개국의 교과서 사용 상황을 고려해

1) 본 토론자가 지난 해 소속된 기관의 기본 연구 과제로 '교과서 정책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면서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교과서 정책에 대하여 비교적 심층적 자료 수집과 분석을 경험하였고, 지난 9월 6일에, 작년 연구의 인연으로 알게 된 호주의 교과서 및 디지털 교수·학습 전문가인 Mike Horsley 박사의 초청으로 디지털교과서 관련 호주의 출판 학회에서 발표를 하였다. 여기에서 세계교과서연구학회(IARTEM)의 이사로 재임 중인 핀란드와 체코의 학자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이들 나라의 교과서 및 디지털교과서 관련하여 논의를 할 기회를 가졌다.

교과서 정책을 볼 때 교과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교과서 심사 제도가 어떤 것이냐의 차원보다 실제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결국 이들 나라에서는 교과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수준의 위상과 역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도움이 될 때 즉 필요로 할 때 사용 또는 참고하는 여러 수업 도구 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깊이 관여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독일의 경우는 요즘들어 PISA와 같은 국제 학업 성취도 비교 체제가 생긴 후 평가 결과 때문에 모든 학교에 동일한 교육 내용과 수준을 제공하고 교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결과를 내도록 요구하게 되어 교과서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서지영 외, 2011).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발행 제도 위주의 교과서 정책 연구나 개선이 있어 왔다. 즉, 교과서 발행의 자율화를 도모하여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다시 인정제가 확대된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은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등의 교육선진국과 같이 자유발행제의 교과서 발행 제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 기대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들에서 제시한 자유발행제 국가들의 특성을 정리해 보아도 이들은 우리와 달리 교과서 사용에 자유롭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다. 교과서 심사 및 발행제가 느슨하고 자율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 측면도 느슨하고 자율화되어야 한다..

인정제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개발 주체가 등장하고, 출원 종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교과서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 확대된 인정제는 심사 주관 기관이 달라지고, 보다 비체계적이고 덜 엄격한 심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 외엔 검정제와 크게 달라진 면이 없다. 사용 환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정제 등 교과서 자율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행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용에 대해 먼저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 유럽의 디지털 교재 정책에 대한 쟁점화는 시기상조

발표자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유럽 4개국의 디지털 교재 쟁점을 정리, 분석하였다. 발표 내용에서 보면 디지털 교재보다는 ICT 교육, 매체 교육 등 디지털 기기들이 활용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에 비중이 더 실린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디지털교육, 나아가 스마트교육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님은 차치하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디지털 교재를 논하기는 부적절하며,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비해 다소 시기상조의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발표자가 제시한 내용들은 주로 디지털 교육을 하기 전 단계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대한 소양 교육이나 활용 교육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디지털 소양 교육을 지나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점이 형성되고 최종 단계의 관심사로 이것을 위한 교육 재료인 디지털 교재가 언급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유럽에서 디지털 교재 문제가 주요 쟁점화 되기는 매우 이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일부 나라에서는 디지털교육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토론자와 연구 협력을 한 프랑스의 Bruillard Eric 박사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프랑스 연구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함과 동시에 프랑스 교과서는 시장 경제 즉 대형, 전통 있는 출판사를 통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출판사의 주요 사업인 종이 인쇄가 아닌 다른 형태의 교과서에 대해 관심이나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프랑스에서 디지털교과서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학교의 환경도 구비되지 않았고, 교사들 역시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가 형성되지 못하여 결국 시장에서 공급도 수요도 디지털교과서에 대하여

긍정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교과서 또는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미래에 관심과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점에 표를 던질 수 없는 것이다.

독일이나 핀란드의 경우에도 교사 중심으로 교과서를 운영하기 때문에 디지털 교재 역시 아직 특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교재 정책은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으며 쟁점화되기엔 이른다.

반면에 외국 학자들이나 교과서 정책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정책의 시행 결과나 효과를 알고 싶어 한다. 지난 9월 호주에서 개최된 출판학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하여 관심과 질문이 팽창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시사점을 찾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접근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현재 여러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화된 교재의 경우 대규모 글로벌 출판사에서 각 나라 고유의 교과서가 아니라 나라별로 필요한 부분(교육과정 내용 등을 반영)을 약간 수정한, 공통적인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개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와 교재 차원의 차이 이상의 변수나 고려 사항이 걸려 있다.

이런 여러 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사례나 국제 비교 연구가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우리가 앞서 나가고,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디지털 관련 교육 정보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과서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교과서 정책에서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필요성과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단지 서책이 아닌 교과서로, 서책을 보완하려고가 아니라 디지털교과서가 필요한 이유나 효과가 명확히 이해, 공유된 후에 계획, 시행되어야 한다. 즉, 디지털화된 교수 또는 학습 자료들이 교육이나 수업의 어떤 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지 면밀히 연구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교과서의 필요성이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해 정책을 구상,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토론을 맺으며

교과서 발행제가 자율화로 갈수록 교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된다. 예전의 엄격한 발행제에서는 정부가 주로 심사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점차 느슨한 심사가 요구되는 교과서 자율화 방향에 따라 이제는 교과서를 활용하는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교과서를 선정하고 활용하는 교사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인 교과서를 통한 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나 정책 방향을 보더라도 교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자료에서 디지털 교재의 경우도 교사의 사용 능력과 관심이 매우 중요한 열쇠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면들을 고려하여 볼 때도 이제는 ‘어떤 교과서를 제공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교과서를 사용하는가’를 고민하고 지원할 때인 것 같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자이며 관심있는 관계자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의 생각을 나열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발표자의 의견을 곡해하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점들은 널리 양해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이것이 주어진 토론자의 역할이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면서 기회를 주신 교과서 연구재단 및 세미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드리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서지영, 김정호, 김덕근, 권유진, 김정호, 장근주(2011). 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O 2011-1.

1부 지정토론 ⑤



박 종 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 「교과서 정책의 동향과 전망」 발표문에 대한 토론

발표자분들께서 발표해 주신 미국, 유럽과 중국, 일본, 몽골 등 여러 나라의 교과서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각 나라의 실정과 사회 환경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에 관련된 시사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교과서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제시하여 주신 내용들은 그 각국의 교육적 맥락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문적인 접근에 대하여는 한계가 있음을 먼저 밝힌다. 아울러 토론의 내용은 발표자분들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정책담당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한다.

### 1. 미국의 교과서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교과서 심사과정은 첫째, 출판사 대상 인정 출원 설명회 단계, 둘째,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단계, 셋째, 공청회, 전시 및 승인 단계, 넷째, 승인 후 단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검정심사과정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설명회 단계에서 출판사에 제시되는 정보의 양을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밀하게 준비되는 것이 참고가 될 만하다. 심사과정에 교사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참여하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교과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교과서 대여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교육 당국의 교과서 구입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과서의 질에 대한 담보 정책이 병행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아울러 교과서의 가격 역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부럽기도 하다. 발표자의 제언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분명하고 무의미한 검정과 인정의 구분을 넘어 합리적인 심사/승인제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 심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 심사를 좀 더 과감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심사 대상

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별로 심사의 엄격성을 달리하는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II. 일본의 교과서 제도와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의 목적을 양질의 많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학교에서의 선택권이 넓어지도록 함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나라의 검정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검정 대상 책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검정 전담인력의 확보를 통한 철저한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오랜 기간 동안 검정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왔음을 시사한다.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일본에 비하여 느슨한 검정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공립학교에도 관할 교육위원회 대신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시장 원리에 의한 교과서 선택의 폭이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에서는 검정과정을 결과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볼 때 검정 제도의 취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일본의 검정 제도의 목적으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교육의 중립성 확보”가 제시되어 있는데, 국가 주도의 검정을 통하여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갖추어져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발표자가 제시한 “교과서는 신이 아니며 일선 학교 교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보다 정확하고 질적으

로 우수한 교과서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아직도 교과서에 대한 맹신과 지나친 의존은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수업에 많은 제한을 두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교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III. 중국·몽골의 교과서 제도와 관련하여

중국의 교과서 제도는 우리나라의 검·인정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중심의 국정도서가 없는 것으로 보여 다소 의외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가 주도하여 교과서 편찬의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으나,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현행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발행 예정 교과서의 특징 제시, 교과서 개발 관련 실적이나 연구물의 요구 등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의 검·인정 업무에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심사에 합격한 도서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현장 적용 기간을 두는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도서에 한하여 일정기간의 현장 실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검·인정 도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현장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방법의 도입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몽골의 경우 국정도서의 형태를 가지고는 있으나 국가기관과 출판사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우리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발표자께서 제언한 내용 중 “중국의 초심제, 몽골의 교과서 제작팀 선정 운영 등의 과정은 집필자와 제도 운영 당국과의 수시 의견 교환 및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만하다”는 점에 주목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검인정 제도의 주안점은 검·인정의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중국과 몽골의 교과서 정책의 주안점으로 “자율과 관리의 양 기제를 어떻게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 IV.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교과서 제도와 관련하여


유럽 여러 나라의 검정 체제나 자유발행제의 문제점으로 출판사들이 교사의 요구에 맞추어 개발하면서 오류 문제와 최신 연구 성과 반영 문제, 또 다양성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검정 심사 과정에서 상대적 평가가 아닌 절대적 평가의 기준이 도입되면서, 출판사들이 보수적 관점에서 심사 통과에 목적을 둔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학습자료의 제공이나 창의성의 개발과 적용보다는 검정 심사에 불합격을 면하기 위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는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또한 교과서 정책에서 교사의 ‘보수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교과서의 개념은 우리와 매우 다르며, 여러 교재 가운데 하나로써 수업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은 지나친 교과서 맹신주의에 안주하려는 행태에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발표자께

서는 서책형과 디지털 자료가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보완성과 의존성을 고려하면서 우리 교과서 정책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역시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제안이라 생각된다. 교과서의 기능과 개념의 변화와 관련하여 “디지털 교과서뿐 아니라 서책형 교과서도 학생들이 지식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기능하도록 그 개념과 기능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발표자의 제안은 그 의미가 깊고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 V. 주요국의 교과서 제도와 관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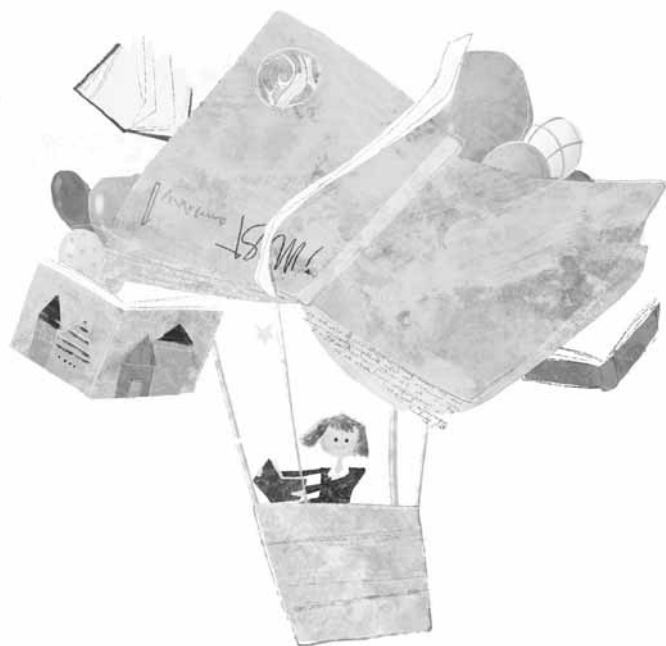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각 국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 정책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나라별로 문화와 역사, 환경, 교육정책 등 많은 부분이 상이함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을 찾는다면 질 좋은 교과서를 통하여 학교 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중국이나 몽골, 일본의 교과서 정책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 각 나라의 특징에서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하여 교과서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교과서 발행도 국정도서 중심에서 검·인정 중심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교과서 내용 하나 하나에 걸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내용의 수록과 학교 현장의 선택이라는 검정 제도에서 조차 획일적인 내용의 서술을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역설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교과서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지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에 의거 검·인정 도서의 증대, 교과서 외형체재와 가격의 자율화로 종전보다 교과서 내용의 다양성에 대한 확보 가능성은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외형체제의 다양화가 단순하게 교과서의 내용량의 증가와 가격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과서, 교과서의 전문성과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질 높고 알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업무 편람.
- 교육과학기술부(2010).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
- 한국교과서 연구재단(2012). 인정도서 정책의 쟁점과 발전 전략.
- 한국교과서 연구재단(2004). 초·중등학교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 한국교과서 연구재단(2011). 주요국의 교과서 제도 요람 (국제교과서 심포지엄 201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교과서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2부 주제발표 ①

##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학교의 일상적 교육활동 방안에 대한 연구:

### 학교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과 협동학습, 인성교육과 사회성교육의 균형



**홍 후 조**  
고려대학교 교수

#### [요약]

학교폭력의 결과 학생들의 잇단 자살이 한국에서 학교폭력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강 경책을 낳았다.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장난조차 학교폭력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보아 교육과학기술부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주로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부에 5년간 기록남기기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학교폭력 대책은 지극히 대중요법에 불과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해체가정 환경에서 학교교육의 기능을 재고할 시점이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즉 학교교육은 그간의 개인간 학력경쟁의 패러다임에서 집단내 사회협동으로 그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는 학력경쟁에서 사회협동으로의 패러다임 변경은 최근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출발한다고 보았다. 현재 학교교육의 심각한 문제인 '학력과 입시 강조로 인한 과잉경쟁과 사교육', '언어, 태도, 신체, 사 이버 학교폭력'과 그로 인한 '청소년의 왕따와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보다 나은 학교교육의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강조되는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의 시대적 정당성 여부와 그 교육적 처방이 적절하였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 제시에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적 지식습득 강조와 입시경쟁의 서열화에 의해 인간을 가치매김하는 학교교육은 자아정체감 형성 시기를 거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실패감, 좌절감,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학습스트레스의 전가와 함께 소외감과 열등의식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자존심 회복 수단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과잉경쟁을 유발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자기주도학습, 개인간 학력경쟁을 시켜서 산출되는 평가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와 같은 세계화, 다문화, 다원화, 정보화, 저출산, 가족 해체의 시기에는 가정과 사회의 교육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학교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협동·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의 경험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회성 기술을 알려주고 교과와 교과외 활동 전반에 걸친 연습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교

육은 학력경쟁보다 사회협동을 기조로, 자기주도학습과 함께 협동학습을, 인성교육과 함께 사회성교육을 균형있게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 협동수업(collaborative instruction), 사회성(social skills), 사회성 교육(social character education)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인 곳이다. 집단 속의 학생들은 개인으로 있을 때와는 다른 언행 양상을 드러낸다. 집단 속에서는 개개인으로 행동할 때와는 다른 양상이 생겨난다. 학교폭력이나 왕따는 집단에서 생겨나는(emerging) 대표적인 행동양상이다. 학교의 교과나 생활 교육은 학생들의 집단 속의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여 단체 혹은 소집단 나아가 개별화교육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다인수학급인 곳에서는 개인에 앞서 집단 내 관계를 선용, 관리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가 된다.

본 세미나의 주제인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인성교육정책의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본 연구의 맥락을 제시하기로 한다. 지난 해 지속적인 따돌림, 폭행에 시달리던 대전 여고생(11.12.2), 대구 중학생(11.12.20)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사회적 문제각성과 대응이 필요하였다. 교과부는 2012년 1-2월 사이에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11,363개교 559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25%인 139만명이 응답하여 12.3%인 17만여명이 최근 1년간 폭력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고 하였다. 다니는 학교에 청소년 폭력조직인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6%였다. 학교폭력을 당한 형태는 협박과 욕설, 욕설과 모욕이 가장 많은 37.9%, 인터넷에 의한 폭력 13.3%, 따돌림 12.7%, 금품갈취 9.9%, 신체폭행 9.2%, 강제심부름 4.3%, 기타 6.8%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점점 자연명화되고 인간적인 모멸감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폭언, 사이버 공간으로,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다수의 가해자가 1인의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왕따형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주의의 발달로 강화자나 방관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그럴 수도 있다거나, 학생들은 방관자가 되기 쉽고, 교사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용적이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고(12.2.6), 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12.4). 여기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생(이상성격, 분노 충동, 공격성, 심신불균형 등), 가정(가족해체, 일과 생계 중심인 부모, 가정교육 부실 등), 학교(학력위주, 권위적 풍토, 학생인권, 체벌금지, 교권추락 등), 사회(경쟁, 서열화, 공동체의식 미약, 유해환경 등)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보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인성교육 실천방안 마련 및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복수담임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록,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가해학생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 교사 학부모 면담 정례화, 국어 사회 도덕 교과목의 인성교육 내용 강화, 토요스포츠데이 운영, 또래상담 프로그램 확대, 전문 상담인력 확충, 범사회적 캠페인 등이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나 학

교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불법행위이며, 범죄라는 인식이 학생, 학부모, 교원들 사이에 강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이나 경과 그 결과 및 대책 등에 관한 것이기보다, 근원적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삶의 생태계를 어떻게 꾸려주어야 할 것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즉 학생들을 학력경쟁에 내몰고 성적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성적 학력 입시 당락 성패 등은 모두 학생 개인에게 주어지는 책무이다. 이를 조성하는 학교, 가정 등은 면책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의 교육적 기초가 어떠한 때 학교폭력예방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가를 논한 것이다.

1995년에 단행된 5·31 교육개혁 이래 학교교육은 학습 측면에서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정보화·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의 강조는 현재 학교교육에서도 이어져 2010년 말부터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신문기사들이 대폭 증가했으며, '자기주도학습지도서' 양성 및 자격증 취득 과정까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전현옥, 2012). 생활지도 측면에서는 오랜 기간 인성교육이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은 매우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육의 방식으로 학자에 따라 그 기원을 삼국시대 이전부터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장성모, 1996; 이원희, 1999). 우리나라의 공교육에서는 오랜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인성교육을 현대적 의미로 구현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장성모, 1996). 이러한 노력은 7차에 걸쳐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편에서 인성교육 이외에 여러 가지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다(박춘성 외 9인, 2009).

그러나 오늘날 학교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을 강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시로 인한 과잉 경쟁과 사교육'이 팽배해 있고, 오랜 기간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폭력'과 그로 인한 '청소년의 왕따와 자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서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으로 인한 교사의 획일적·일방적 강의 수업, 값싼 학교교육과 과중한 사교육비 등에 대한 처방전으로 제시된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처방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의 왕따와 자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태에서 오랜 기간 강조되어 온 인성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판적인 고찰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들은 더욱 강조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육에서 강조한 것들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가를 먼저 진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학교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가 되는 점은 수정·보완하여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학교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학교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의 개념은 무엇이며 그 성격은 어떠한지, 왜 강조하였는지, 강조한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강조해온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발전시켜 강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셋째, 이를 통해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학교교육의 방향을 협동학습과 사회성교육 측면에서 탐색해 볼 것이다.

## II. 학교교육의 강조점

### 1. 학습에서 자기주도학습

서양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개별화교육은 우리나라의 신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주로 미국에서 공부한 교육학자들에 의해 의심 없이 가장 이상적인 수업의 형태로 추천되어져 왔다. 현재까지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1995년에 단행된 5·31 교육개혁일 것이다. 1995년 5월 31일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그 동안 한국 교육은 양적인 면에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팽창하여 왔으나, 지금까지의 산업화에 기여했던 양적 성장 중심의 교육을 가지고는 미래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세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게 할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국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으로 인한 교사의 획일적·일방적 강의 수업, 값싼 학교교육과 과중한 사교육비 등을 지적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정보화·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 시키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자기주도학습’은 무엇인가? 자기주도 학습이란 성인의 평생학습 성과의 중심개념이다. 학습자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한다는 개념으로서, 성인학습성과의 개념으로 정의된다(한상훈, 2010). 자기주도란 학습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1920년대 이래 자기교육이란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평생학습 연구에서 논의 되어왔다(송준미, 2012). 학습의 대상과 지속성이 핵심어인 평생학습 개념도 학습자의 자율성, 책임성, 학습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도 개념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자기주도 평생학습은 개념수준에서 지속성, 자

율성, 책임성, 일-학습 연계성을 강조한 개념이다(이정택, 2005).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관점으로는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보는 관점, 교수법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과 교수법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송준미, 2012).

첫째, 자기주도학습을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노울즈(1975)는 자기주도학습을 개별 학습자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든 없든 간에 자신의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 전략을 선택, 실행하며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주도권을 가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둘째, 자기주도학습을 교수법으로 보는 견해이다. 노울즈(1975)는 자기주도적학습을 교수-학습 전략으로 정의하였고, 교육개혁위원회는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들이 교사가 전달해 주는 교과 내용을 무조건 이해·암기하는 수동적 학습태도에서 벗어나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해도 각자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창의적 생산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학습체제를 가리킨다고 하였다(권대봉, 2006에서 재인용). 셋째, 자기주도학습을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과 교수법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유귀옥(1997)은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의 내재된 자기주도성에 학습의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교육개혁위원회(1995)의 관점을 통해 성인의 평생학습 성과의 중심개념인 자기주도성을 초·중·고등학교의 교수-학습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학교교육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으로 인한 교사의 획일적·일방적 강의 수업, 값싼 학교교육과 과중한 사교육비 등을 해결하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주도학습이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노울즈(1975)는 자기주도

학습이 형식 교육 내에서 필요한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학습자가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잘 배우기 위해서, 둘째, 인간의 자연적·심리적 발달 과정이라는 점에서, 셋째, 새로운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넷째,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경북사대부중 연구보고서(1998)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를 확대된 교육 개념의 필연적 요청,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습자 중심 교육, 자기 학습력의 신장,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학습 실현, 엘리트 중심에서 대중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홍후조(2012a)는 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및 학생들의 학습 환경의 변화를 다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수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국 학교의 주입식, 설명식, 교사주도 수업의 습관에서 교사는 말하고 학생은 듣는 습성이 오래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동적 학습태도 역시 습성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평가와 보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각종 평가가 수행평가보다는 지필고사여서 조용히 혼자 공부하고 조용히 혼자 시험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였고, 학업성취는 개인의 업적이거나 실패로 상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셋째, 사교육 선행학습으로 발달단계나 준비도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을 짧은 시간에 압축하여 실시하므로, 당연히 의존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였다. 학생들은 만성적인 의존학습을 하게 된 것이다. 넷째,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노트북, 태블릿 PC, 핸드폰, MP3, 인터넷강좌, 방송통신강좌 등 개별자가 사용하는 개전(個電)제품의 사용 보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나홀로' 공부가 가능해지고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주입식, 설명식, 교사주도 수업과 학생들의 수동적 학습이라는 고질적인 학교 수업에서의 문제점, 의존을 만성(慢性)화시키는 사교육,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나홀로' 공부의

확산, 서양의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개별화 교육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강조와 성인학습의 평생학습 성과의 특성인 자기주도학습이 잘 맞아 떨어져서, 성장기 학생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도 '자기주도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생활지도에서 인성교육

최근 학교 생활지도에서 가장 큰 문제이자 화두가 되는 것은 '학교 폭력'과 그로 인한 '청소년의 왕따와 자살'이다. 현대 사회의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대중문화, 이혼 급증으로 인한 가정 파괴, 건전하지 못한 사회 문화적 풍토가 학교의 학생들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최영, 2006). 우리나라의 공교육에서는 오랜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인성교육을 현대적 의미로 구현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장성모, 1996). 이러한 노력은 7차에 걸쳐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편에서 인성교육 이외에 여러 가지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다(박춘성 외, 2009). 그러나 본격적인 인성교육의 도입은 7차 교육과정 이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유한구, 2007). 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의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들은 주지주의 인성교육으로 표현할 수 있고, 7차 교육과정부터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으로 표현할 수 있다(박춘성 외, 2009).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개정의 중점사항은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전인적 성장의 바탕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또한 그러한 인간상의 구현을 위하여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성교육'의 방향이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보다 구체화되어 있다. 즉 추구하는 인간상으로는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

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가'항에서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라고, '사'항에서는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0)는 교육의 최대 핵심 과제로서 2009년 창의·인성교육 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창의인성교육과'가 설치되었으며, 서울시에 있는 11개 지역 교육지원청에도 중등교육지원과에 '창의인성체육과'가 설치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2)에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성적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핵심가치인 '인성' 교육이 소홀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첫째, 현 정부 출범이후 창의·인성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창의성 향상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성교육의 성과는 낮다. 둘째,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정책이 미흡하여,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후순위로 미루는 실정이다. 셋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새로운 입시제도를 도입했으나, 성적중심의 학생 선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회적·국가적 공감대의 확산된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에서 교과별 교육과정에 준하는 수준의 '창의·인성교육방법(과정)'을 마련하여 교과별로 담당할 창의·인성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학교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이란 무엇인가? 인성의 개념에 대하여 한파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학자들의

정의가 다양하고, 심리학, 철학, 교육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성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의 사전적 개념은 사람의 품성이다. 품성이란 타고난 성품이며, 성품이란 타고난 성격과 품격을 의미한다. 사람의 성격은 마음의 바탕을 이루며 인간의 마음은 흔히 지적인 요소, 정서적 요소, 행위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품격은 사람됨 모습을 뜻하며 그 의미에는 인간됨의 가치척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 경우 인성은 인격의 의미로서 사람됨의 자격 즉, 사람다움의 가치를 표명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 때 인성은 모름지기 추구해야 할 품성이나 덕목, 마음씨 등을 의미한다(김영옥 외, 2009).

문용린(2000)에 의하면 "인성은 개인의 심리적 이거나 행위적인 성향"이라고 한다. 남궁달화(1999)는 "인성이란 곧 한 사람의 마음의 바탕과 사람됨의 바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표현한다. 이윤옥(1998)은 "인성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으로서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 가치 개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이성호(1996)는 인성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좁은 의미의 인성은 인간으로서 도덕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인간성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의 인성은 인간됨 또는 인간다움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인성' 개념은 기존 인성교육의 착한 도덕군자 양성이나 이타성 강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창의성을 촉진하고 창의성을 발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능력으로서의 인성'을 의미하고 있다. 즉, 창의·인성교육에서 인성은 기존의 가치교육이나 가치전수가 아닌 창의성과 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 또는 통합하는 것으로 주로 인간관계와 관련된 덕목과 도덕적인 판단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창의성과 인성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성격

적인 특징이 창의성의 발휘를 억압하기도 하고, 활성화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문용린, 2010). 그러므로 오늘날의 창의성은 독불장군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속에서의 협동과 경쟁과정을 거치면서 발휘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문용린과 최인수(2010)는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인성적 내용을 덕목과 인성 판단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한 인간관계 중심의 덕목은 정직, 약속, 용서, 배려, 책임, 소유이며,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인성의 판단능력으로 도덕적 예민성, 도덕적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행동실천력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현재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의 미비'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차원의 인성교육'을 '교과 활동 속에서', '혹은 교과와 관련된 입시와 관련하여', '실천중심으로' 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 III. 학교교육의 강조점에 대한 결과

#### 1. 학생간 학력경쟁의 미해결

학교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은 기존의 교사 주도 학습에 비해서 몇 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첫째, 교사가 학습자를 성숙한 인간으로 보고, 학습자의 경험을 존중하며, 학습자마다 다른 학습 준비도 유형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둘째, 학습자에 대한 자율성과 주도성을 전제로 학습자의 책임성 등을 강조한다. 셋째, 자기주도학습의 학습 목

표 달성이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 그리고 학습 환경 등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주도학습은 교육개혁위원회(1995)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삼았던, 교사의 획일적·일방적 강의 수업과 사교육과 입시로 인한 학교교육의 붕괴를 해결하고, 미래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세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게 할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좋은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학교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은 두 가지 점에서 두드러지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첫째, 자기주도학습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정보·통신의 발달은 홈스쿨링, 사이버 교육을 발달시켰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부족한 과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과거에 비해 학교에서 학생들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높아지고 학습에서의 주도권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함으로써 사교육 의존과 교실 수업 붕괴 현상은 완화되거나 치유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교육은 여전히 높아서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격차는 여전히 좁혀지고 있지 않다<sup>1)</sup>.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첫째, 홈스쿨링, 사이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부족한 과목을 진단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점이나, 이로 인해 학교 수업과 학교 교사가 불필요한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더욱 많아졌다는 점이다<sup>2)</sup>. 또한 홈스쿨링, 사이버 교육을 통해 누구

1)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학생의 73.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높고, 사교육 참여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 순위 10%이내는 85.3%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나, 하위 20%는 48.8%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사교육 참여율 차이가 5% 이내이지만,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부모와 비교했을 때는 사교육 참여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소득수준으로 보았을 때도 600~700만원미만의 가구가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은 100만원 미만(36%)인 가구와 비교하면, 53.6%의 차이가 나고 있다.

2) 지난 2000년만 해도 3734억원에 불과했던 온라인교육 시장은 지난 2004년 1조 2926억원으로 조단위에 들어선 뒤 2008년까지 연평균 25.7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문화일보, 2008. 1. 16. - 『사교육시장 '23조' 넘어』)

3)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3%는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면 사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 2012. 7. 3. - 『학부모 10명 중 6명 "내 아이 잘하려면 사교육 필수"』)



나,싼 가격으로 손쉽게 선수학습과 보충학습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은 나, 내 자녀는 더욱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더욱 조장시켰다<sup>3)</sup>. 둘째, 자기주도학습의 주된 특징인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도성, 책임성은 강조되었으나,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인 ‘교사·동료와 상호 협력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은 교사가 학습자를 성숙한 인간으로 보고, 학습자에 대한 자율성과 주도성을 전제로 학습자의 책임성 등을 강조하며, 상호 협력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노울즈(1975)는 자기주도학습에서는 교사 주도 학습에서 요청되는 능력과 다른 능력<sup>4)</sup>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중, 눈여겨 보아야 할 능력이 있다. 바로 ‘협력적으로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욕구를 진단하고,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학습하기 위한 자원으로 동료를 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능력’과 ‘교사와 동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학습 욕구를 사실적으로 진단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할 때, 협동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성장기 학생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성인학습의 평생학습 성과의 특성인 주도성과 책임성을 갖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본 결과, 5·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학교교육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의 ‘인지적인 면’을 주로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실현하여 현대 교육의 추세에 부응하여야 했고, 이렇게 학습자의 개인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면 미래의 다양화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

간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기존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자기주도학습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시 위주의 교육, 학교 수업의 붕괴, 사교육의 심화라는 문제점은 여전히 학교교육에서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학생들은 홈스쿨링, 사이버 교육의 발달로 인해, 학교 밖에서도 특별한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많아짐으로써, 선행학습이 언제 어느 때나 가능해지고, 선행학습이라는 설익은 학습으로 정규 수업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학점은행제,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과 같은 대안적인 학력인정제시스템의 도입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정규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력 인정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학생들은 더 이상 교사의 수업을 잘 들어야 할 필요도 줄어들었고, 심지어 어떤 학생에게는 학교교육이 필요하지도 않다. 다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경쟁에서 이겨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할 뿐이다.

둘째,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와의 상호 협력’이라는 측면이 간과됨으로써, 동료들은 협력적 동반자의 관계가 아닌 경쟁의 대상이며,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되고만 것이다. 광형식(1999)은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 시기로서 그들은 그들과 관계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자존심이 상하고 충격을 받기가 쉽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동료와의 상호 협력’보다는 개인의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광형식(1999)은 입시경쟁 위주의 서열화, 등급화에 의해 인간의 가치매김을 하는 우리의 학교교육은 대부분의 학생들을 실패감, 좌절감을 경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4) ①학습자에 대한 가정과 학습을 위해 요청되는 기술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차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능력, ②비종속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③협력적으로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욕구를 진단하고,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학습하기 위한 자원으로 동료를 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능력, ④교사와 동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학습 욕구를 사실적으로 진단하는 능력, ⑤학습 욕구를 그 성취가 평가될 수 있는 형태의 학습 목표로 전환하는 능력, ⑥촉진자, 조력자, 자문가인 교사와 관계를 맺고, 그들의 자원을 활용하는데 주도권을 쥐는 능력, ⑦상이한 종류의 학습 목표에 적절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확인하는 능력, ⑧학습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하고, 이러한 전략들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실행하는 능력, ⑨다양한 종류의 학습 목표를 성취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당화하는 능력 등

으로, 소외되고 열등의식에 빠진 청소년들은 자존심 회복의 수단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쉽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대화와 인격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학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낙오자로 낙인찍어 소외감과 열등의식에 빠뜨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폭력의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자기주도학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은 고통 받고 있다. 이는 PISA와 TIMSS 결과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2009년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국가 중 읽기·수학 1~2위, 과학 2~4위를 기록했다. 또한 2007년 수학·과학 성취도 비교 연구(TIMSS)에서는 수학 2위, 과학 4위였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는 모두 낮은 수준이다. 2007년 TIMSS 조사에서 한국 학생 중 수학 과목에 자신감이 높다는 학생의 비율은 29%로 국제 평균(43%)보다 훨씬 낮았다. 과학에 대한 자신감은 29개국 중 27위(24%)이며 이는 국제 평균(48%)에 절반 밖에 안 되는 수치이다. 수학에 흥미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 역시 한국이 43위(33%)로, 국제평균(54%)보다 낮았다.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국제평균(65%)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29개국 중 29위(38%)로 '꼴찌'였다. 재미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적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의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학력과 성적 경쟁에 내몰려 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잘 해라' 내지는 '공부만 잘 하면 만사가 다 용서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모는 평소엔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미안함에 용돈을 많이 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며 주말에는 외식을 시켜주고 있으며, 자녀들은 이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공부를 잘하기만 하

면 다른 건 상관없다'라는 가치관이 형성된 학생들에게는 학교 수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학력과 성적 경쟁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너무나 쉽게 다른 학생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들과 상담한 결과 나타나는 공통점(이필우, 2012)은 학부모의 관심사인 학업성취에서 자신감의 결여가 외로움, 소외감, 갈등, 분노, 적대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성적과 진학이라는 과도한 입시 경쟁 문화로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고 열등생이라는 좌절감이 심화되고 은둔형 외톨이, 우울증, 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에서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제시하였는데, 자기주도학습조차도 기존 학교교육에서 강조해 왔던 인지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오히려 교실 수업의 붕괴,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결국, 학교교육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인지적으로 뛰어난 학생의 양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미래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세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게 할 인재,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간을 길러낼 수 없었던 것이다.

## 2.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 미비

유한구(2007)는 지금까지의 인성교육은 주지주의적 관점에서 실천적인 관점으로 변화를 가져왔지만, 아직은 실천이라는 구호만 존재할 뿐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실천이라는 구호만 존재하고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성이라는 개념이 대체로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성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동안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였으나, 인

성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인성교육을 하였다면, 그 교육은 분명 교육하는 사람의 가치와 판단에 따라 달라졌을 것이다. 실제로 박춘성 외(2009)의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의 문제점으로 인성교육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행 인성교육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최소 규범'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준법, 예절 등 기초 인성 덕목을 강조함으로 학생들의 흥미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기초 인성교육마저 교장 선생님 훈시, 두발·복장 등 습관적 생활지도 수준으로 인식·취급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연구(박춘성 외, 2009)에서 학생들은 인성교육을 '고리타분하고', '나와 상관없고', '현실과 괴리된' 교육이란 인식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인성교육이 착한 도덕군자 양성이나 이타성을 강조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교육을 하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은 인성이 좋다'라는 말을 '그 사람은 이황이나, 이이와 같은 도덕군자다'로, 혹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또 다른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의무를 다 하는 사람이다'와 같이 모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세 번째와 같은 관점으로 인성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바른 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실천 역시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은 관점으로 학교에

서 인성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그건 이황이나 이이와 같은 성인군자니까 혹은 특별한 저 사람이니까 가능한 것이겠지. 난 이황이나 이이, 특별한 저 사람은 될 수 없어. 내가 더 중요하니까'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만약, 학생들이 이와 같이 받아들였다면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 교사들도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학교장의 훈시가 무력해지고, 윤리교사의 도덕수업 조차 점수 따기 과목이 된 이상, 일반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생들을 향해 인성교육, 인격교육을 할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박하식, 2012). 인성교육은 성직자, 상담자, 부모, 친한 친구 등의 조언이나 학생 자신의 반성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식적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특히 윤리 도덕적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인성교육 모범적 사례를 학생들이 본받는 것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넓은 의미를 가진 '인성', '인성교육'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의도, 구체화된 방향도 설정하지 않은 채, 현재의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차원의 인성교육 강화'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은 모호해지게 되었다. 그 사례로,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거나 동료 학생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학생의 인성교육을 시키려고 한 교사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서, 내

5) '매일 경제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담배를 피운 고교생과 실랑이를 벌이던 교사가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해 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2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7시 50분경 경주시 감포읍 한 식당에서 고교 교사 A씨(26)가 학부모 B씨(46)에게 폭행을 당해 턱뼈가 부러졌다. B씨는 자신의 아들이 누군가에게 맞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매일경제 2012. 4. 2. - 「흡연 학생과 실랑이 교사, 학부모 폭행에 턱뼈 골절」)

'한국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대구 수성구 한 고교에서 지난달 23일 이 학교 2학년(16)의 아버지 A(45·회사원)씨가 술에 취한 채 일행 2명과 함께 아들 담임교사(41)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당시 학교측이 자신의 아들에게 '전학권고처분'을 내리자 학교를 찾아 항의하다 언쟁이 벌어졌고 폭력사건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측은 A씨 아들이 물의를 일으킨다며 7월 등교정지와 전학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학교측은 내부적으로 협의한다며 쉬쉬하다가 사건발생 1주일만인 지난 달 30일야야 시교육청에 구두 보고했고, 이에 참다못한 교직원 80여명이 A씨를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물의를 일으켰으나 학교장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자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일보 2010.9.6 -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자식 징계에 항의 교사 폭행 물의」)

자녀의 인성교육은 전적으로 가정에서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식의 논리를 펴면서 교사에게 모욕을 주어도 학교에서는 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들 수 있다<sup>5)</sup>. 박춘성 외(2009)는 인성교육의 문제점으로 학력 중심 입시위주 교육 팽배에 따라, 학력교육과 관련 적은 인성교육 실시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다수 학부모·교사·학생 모두 ‘공부 잘하는 학생’을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홍후조(2012b)는 인성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든 이것은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개인의 ‘인성’에 대해 학교를 탓할 수도, 학교가 적절한 감당기관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가정의 몫이거나 교회와 같은 종교, 신앙의 몫, 상담기관의 역할 또는 개인의 자기반성과 성찰 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인성’을 강조하면 본래 그 책임이 부모, 상담사, 종교인, 심지어는 학생 본인의 ‘도(道) 닦기’에 지워져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그 책임이 학교에 전가될 수 있다고 한다.

혹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성교육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그 실현 방법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점은 더 이상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II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과 인성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성격적인 특징이 창의성의 발휘를 억압하기도 하고, 활성화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또한 창의성은 집단 속에서의 협동과 경쟁과정을 거치면서 발휘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문용린, 2010). 그런데 이 말은 듣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개인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구적인 역할로써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2009 개정 교육에서 말하고 있는 인성과 창의성의 관계를 인성과 창의성이 동등하게 교육되어야 할 병렬의 관계로 볼 수도 있으나, 사람에 따라서는 전

건-후건, 우열, 상하, 목적-수단, 상호 강화 등과 같은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곽병선(2012)은 언제부터인가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을 함께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의 구호가 창의·인성교육으로 둔갑하였으며, 그만큼 우리는 인성교육을 뒤로 밀어 버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이 자기주도학습에서와 같이 개인의 창의성 증진만을 위한 도구적 역할로써 인성, 인성교육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공교육에서 이러한 방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관점으로 현대 사회의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대중문화와 이혼 급증으로 인한 가정 파괴, 건전하지 못한 사회 문화적 풍토에 물들어 학교 폭력 행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넓은 의미를 가진 ‘인성’, ‘인성교육’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의도, 구체화된 방향도 설정하지 않은 채, 현재의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차원의 인성교육 강화’로 설정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면, 과연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학교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은 과연 길러질 수 있는 것일지 의문이다.

#### IV. 학교교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

듀이(1899: 17)는 “학교는 한 사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곳으로서, 학교는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라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제, 우리는 바람직한 인간의 형성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교육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듀이가 말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자라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무엇' 일 것이다.

## 1. 협동학습

학교는 근본적으로 개인이 아닌 집단을 형성하여 교육하는 곳이다. 가정의 인성교육이 바탕이 된다면 학교는 집단내에서 협동교육을 하기에 적절한 곳이다. 학교교육에서는 자기주도학습에서 '학습자에 대한 존중'과 '학생의 자기 주도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학생들의 '교사·동료 학생들과의 상호 협력'이라는 측면이 간과되었다. 이로 인해, 오늘날 학생들에게 교사와 동료들은 협력적 동반자의 관계가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혹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더욱 심화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학교 학습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해야 할 것인가? 학습에 있어서 개인이 스스로 해 나가는 자기주도학습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작은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협력과 협동의 과정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개인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맞출 수 있는 기쁨은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주도학습은 학교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OECD에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핵심역량으로 '사회적으로 이질적인(heterogeneous) 집단과 상호 작용'을 제시하고 있으며(Rychen & Salganik, 2003),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인', '세계인'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들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사회 문화적 인지 발달 이론'을 강조하는 비고츠키(Vygotsky)는 학습에 있어 사회적 상호 작용의 중요성을 주장했다(Schuck, 2004).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는 '협동'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협동이란 무엇인가? 협동의 사전적 정의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 또는 둘 이상의 단체가 서로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협동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언제나 필요로 해왔던 것으로서 협동이 없이는 가정, 조직, 사회 등이 존재할 수 없다. "협동이란 사회의 공기로서 우리가 늘 호흡을 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태도"인 것이다(Johnson & Johnson, 1975). Ausubel(1978)은 "협동이란 개개인이 어떤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동 활동을 하는 집단 지향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정동인(1991)은 "협동은 협력이라는 개념과 구별되는데, 협동이란 공유된 목표에 대한 개인 간에 생기는 행동이라면, 협력은 타인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만 원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Johnson과 그 동료들(1998)은 교수-학습장면에서 협동학습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면대면 상호작용, 개인적 책무감, 사회적 기술, 집단평가과정의 5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긍정적 상호의존성이란 한 개인의 성취가 다른 사람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수업이 구조화되는 것이다. 면대면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마주 앉아 눈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의 조성을 포함한다. 개인적 책무감은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집단에서 개개인들이 책임지고 습득해야 할 과제나 기술 등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습득된다. 사회적 기술은 다른 학생과 협동하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언어적, 행동적 표현 기술 등을 포함한다. 집단평가 과정은 학습활동에 대해 장단점을 평가하고,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지영(2006)은 경쟁학습에서도 상호의존성을 보이지만, 협동학습에서의 상호의존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말한다. 경쟁학습에서는 각 개인의 성

취가 다른 사람의 성취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다른 사람의 낮은 성취가 나의 높은 성취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의 높은 성취는 곧 나의 낮은 성취와 관련이 된다. 따라서 경쟁학습에서는 각 개인이 제시된 수업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 보다는 같은 교실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일렬로 늘어 세우게 되고, 상대적인 순위를 매기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뇌발달 연구자(Berk, 2001)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sup>6)</sup>에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면 뇌의 발달이 촉진된다고 주장한다. 최지영(2006)은 한 개인의 발달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사고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협동학습 상황에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의존성은 학생들의 뇌 발달에 필요하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극이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말한다.

홍후조(2012a)는 “학교는 집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며 잘 자라는 아이들을 강제(의무교육은 법으로 규제함)로 불러 모은 곳”이라고 한다. 학교는 동급생, 상급생, 학급생만 아니라 교직원이라는 남녀노소가 있는 곳이어서 자연스럽게 작은 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도 있고, 협동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에서는 개인간 경쟁, 학력의 우열과 서열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즉, 학교는 인지적 측면에서 학생간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학교에서는 동료 학생간 교우관계형성보다 부정적인 관계형성을 만들기 쉬워지게 되었고,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키고 왕따와 학교폭력을 부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홍후조(2012b)는 개인이 잘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만 강조해서는 공동체가 번영하고 발전하기 어렵다고 한

다. 셀리그만(2011)은 꿀벌, 말벌, 늑대, 돌고래 등과 같이 인간도 집단에서 협동함으로써 소속감, 보람, 가치, 존재의의를 갖는다고 하였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sup>7)</sup> 중 하나는 의미있는 생활이고 좋은 대인관계라고 한다. 이는 일찍이 A. Maslow가 제안한 인간의 자아실현에서 소속감, 사회적 인정과 존경과 연관된다. 결국 협동하는 능력, 협력하는 자세,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며, 나아가 헌신하는 자세를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제대로 하는 공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학교교육에서 학습은 개인의 자율성, 주도성, 책임성이 강조되는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를 넘어, 협동과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교실 수업 속에서 교수-학습 방법 차원을 넘어서 각종 생활지도 등 교육 전반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홍후조(2012b)는 최근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심동적으로는 학교체육을 강화하고, 정의적으로는 예술을 강화하며, 사회성 측면에서는 국어 도덕 사회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면서,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시작했지만 아직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이 협동학습으로 온전히 이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다음의 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협동과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교육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수업에서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협동학습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협동학습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활동을 할 때, ‘무임승차’나 ‘사회적

6) 결정적 시기는 특정한 뇌의 능력이 발달하는 것과 관련된 최적의 시기를 말한다.

7) 셀리그만(2011)은 인간의 행복의 척도인 만개한 행복으로서 플로리시의 결정요소를 PERMA라고 하였다. 이것은 좋은 기분(Pleasant emotion), 자기 일의 몰입(Engagement),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Relationship), 삶에서 의미·보람·가치 있는 일의 종사(Meaning), 일 자체로서 내재적 흥미를 가짐으로써 달성하는 성취(Accomplishment)이다.

〈표 1〉 학교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처방

	현행 교육의 문제점: 수동(의존)학습	처 방 1: 자기주도학습	처 방 2: 협동학습
철 학	• 개인주의	• 개인주의, 구성주의	• 공동체적 자유주의
목 적	• 학력 향상	• 학력 향상	• 사회성 향상
정 의	• 학교 교사, 학원 강사로부터 설명, 주입식 피동적으로 수용하는 수업방법	• 주체적인 (주로 성인)학습자가 학습의 요구진단, 목표설정, 자원 확보, 전략을 선택, 실행, 결과 평가에 주도권을 가지는 수업방법	• 학습능력이 다른 학생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동일한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수업방법
내 용	•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과 기술	• 무엇을, 왜 학습할 것인가를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	• 협동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고, 그 결과와 가치가 배가되는 학습 내용
방 법	• 교사 주도	• 주로 성인 학습자 주도	• 교사-학생, 학생-학생 상호작용
평 가	• 상대평가	• 상대평가, 절대평가(향상도 평가)	• 공동체의 학습증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집단적·개인적 보상과 인정
강 조 점	• 지식의 효과적인 전달	•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도성 존중, 개인차 고려	•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어진 학습과제나 학습목표에 도달, 사회성 및 인간관계 개선
기대효과	• 기초학력 미달자 없애기, 학력향상·지식과 기술 습득에 의한 성공적인 대입과 입사	• 교사의 획일적·일방적 강의 수업 감축 및 과중한 사교육비 해결 • 정보화·다원화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지식 습득·구성할 수 있는 인간 양성	• 책임감, 조화, 협동심을 배우고, 사회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익힘 • 해체된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감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 수동적 학습, 경쟁 과열	• 주도성을 배우는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부족, 입시 등으로 인한 경쟁 과열	• 개인의 인간형성과 집단내 인간관계 형성의 조화 • 사회성 강화에서 겪을 내향적인 학생들의 부적응 고려, 무임승차/사회적 태만

태만'과 같이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상을 경계하여야 한다. 또한 목소리 큰 외향적인 사람이 의견을 주도하여 내향적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내향적인 사람들이 겪게 될 부적응을 고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케인(2012)은 협력하는 방식을 세심하게 다듬어서 내향성-외향성이 공생하는 관계, 즉 리더의 역할과 기타 역할이 사람들의 타고난 장점과 기질에 따라 배분되도록 능동적으로 모색할 필

요가 있다고 말한다. 학교 수업에서 이러한 역할은 교사가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과나 외국어 과목에서는 음악, 미술과 연계하여 한국어로 혹은 외국어로 된 작품을 가지고 뮤지컬이나 연극 활동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과학, 수학, 기술 과목에서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교사는 학생 혼자서 생각하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

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고, 또한 학생들의 타고난 장점과 기질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과 조율을 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음악이나 체육 과목에서 개인의 독창, 독주, 개별 운동을 기초로 이를 더욱 확장하여, 합창, 합주, 단체 경기를 통해, 경쟁이 아닌 협력과 협동을 강조하고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협동의 경험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적 기술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함께 이루었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정된 단위수업시간을 지금보다 길게 하여(block scheduling) 교사주도보다 학생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종 교과와 활동이나 생활지도 등에서도 학생간 협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협동과 협력을 강조하고 합창, 합주, 단체 경기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 역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다. 엘 시스템<sup>8)</sup>은 음악이 가진 하모니 강조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안에서 자신이 맡은 악기에 대한 책임감과 조화를 위한 협동심을 배우고, 사회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익힌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젊은 이들이지만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도전의식과 협동심, 선의의 경쟁, 화합과 연대의식 등의 가치를 실천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삶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 전체에 파급된다. 옛 교육에서도 예악에서 예는 특정 신분에서 지녀야 할 도리나 다른 신분과의 구분(차이, 차별)을 강조하지만, 악은 조화와 화합(협력과 협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예비 예체능 교사들이 합창, 합주, 단체 경기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을 교직 이수 필수 코스로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음악이나 체육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 밖의 교육 기관을 통해 독창, 독주와 같은 개인의 특출한 능력과 기능을 잘 연

마하여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이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학교에서 특별한 재주를 가지지 않은 보통 학생들의 합창, 합주, 단체 경기의 중요성보다는 개인의 특출한 능력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지도하기 어려운 합창, 합주, 단체 경기를 수업에서 소홀히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 양성 단계에서부터 합창, 합주, 단체 경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각종 평가에서 학생간 협동, 공동체への 기여분은 지금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과잉경쟁을 유발해서는 안 되고, 개인의 자기주도학습, 개인 간 경쟁만을 시켜서 산출되는 평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학교는 협동,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가진 훌륭한 결과물이 산출되도록 독려하며 이것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곳이어야 한다. 협동·협력학습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 초·중등학교교육에서만 가치 있게 평가해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대학 입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회사 등에서도 개인간, 팀간의 협동에 대해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사회성 교육

위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넓은 의미를 가진 그래서 자칫하면 모호해질 수 있는 ‘인성’, ‘인성교육’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도 없이 교육하는 사람의 임의적인 가치와 판단에 따라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춘성 외(2009)는 실천주의적 인성교육에 대한 고민은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창의적인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는 인성교육의 범위를 좀 더 좁히고, 구체화 된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8) '엘 시스템'은 베네수엘라 청소년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일컫는 용어로, 공식명칭은 '베네수엘라 국립 및 청년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스템 육성재단'이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중심으로 한 '엘 시스템'의 교육은 인성형성과 인격형성을 돕는데 이것이 엘 시스템 교육의 핵심이다(체피보르사치니, 김희경 역, 2010).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인성교육의 흐름을 살펴보면 각 시대별로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박춘성 외, 2009). 미국의 인성교육은 대학의 인성교육 연구소와 일반연구소가 종합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인성 6대 덕목(신용, 존중, 책임감, 공정, 배려, 시민정신) 내지는 10대 덕목(신용, 타인존중, 책임감, 공정/정의, 배려, 시민정신, 정직, 용기, 성실, 통합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Law, 2007; Lim, 2008). 미국에서는 사회성과 함께 감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성-감성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기관인 CASEL(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2011)은 사회성-감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성-감성교육이란 아동의 학업능력, 개인적, 사회적, 시민적 자질 개발의 핵심이 되는 지식, 습관, 기술, 이상 등을 일컫는다. 이런 자질은 학교 및 학교 밖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학습은 개인이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하며, 남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도전적인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사회성-감성 교육을 하는 또다른 대표 기관인 Morning Side Center는 사회성-감성교육을 통해 감성의 이해와 관리, 대인관계 능력, 갈등과 문제해결 능력, 주의 집중, 목표수립과 달성, 좋은 의사결정을 내림, 사회(학급, 학교, 지역사회, 세계)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경우 사회성 및 감성 학습 기준(Social Emotional Learning Standards)이 교과과정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목적은 개인적,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의 맥락에서의 의사결정 기술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

치와 행동, 사회적인 규범 등을 이해하고 교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가면 다른 사회에 다른 규범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학교에서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지역 사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구성원으로 살아가야하는가에 대한 것 역시 학교에서 배워야할 것으로 강조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일본 문부과학성의 인성교육 방향은 Cultivation Richness in Mind로, 이는 학업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초·중·고 학생들이 휴머니티와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Kokoro (心) no Note”(notebooks for moral education)을 보급하고 성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가정교육이 인성교육의 밑바탕을 이루고, 가정에서는 주로 질서, 청결, 책임, 개인주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립심이 주가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은 공동체의식을 심는 사회교육이 주가 되며 자립심, 자율성, 책임감을 고취하게 된다. 중국의 상하이 인성교육은 글로벌 시민 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다층화된 시민교육과정<sup>9)</sup>(Multileveled Citizenship Curriculum)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상하이 교육청, 2009).

우리나라에서도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지원자에게서 확인할 핵심 “인성” 요소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를 들고 있다(2012.5.3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그러나 이것들은 ‘인성’ 요소라기보다 사회집단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형성의 ‘사회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인성교육의 흐름이 사회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회성이란 무엇인가? 사회성이란 사회의 기준에 맞게 행동하고, 성격이 원만해 남과 충돌

9) 개인·사회적 차원, 지역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 국제적 차원

없이 지내고, 다른 사람과 쉽게 사귀고, 친구가 많으며, 집단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즐기면서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이영애, 2012). 이 정의에 따르면, 사회성이란 한 가지 영역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의 조화로운 발달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의 기준에 자신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절 능력과 도덕성이 발달되어야 하고, 성격이 원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가 이뤄져야 하고,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는 정서 능력이 발달되어야 하며 자존감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성은 인간 발달의 기초이며, 인간의 삶에서 생활 적응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는 것으로 많은 교육학자와 심리학자의 관심이 되어왔으며 사회성이 부족한 특수아동을 교육할 때도 특별히 사회적 기술을 반복 훈련하여 이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속에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인성교육의 흐름과 함께 현대 사회 가족의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도 사회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현대 사회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거나 해체된 가정<sup>10)</sup>이며,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sup>11)</sup>이다. 이로 인해 형제·자매와 상호작용의 경험을 갖지 못한 외동 자녀들도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sup>12)</sup>. 더구나 이혼의 급증은 학생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경험해야 할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가정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사회성이 결여된 채 학교에 온 학생들은 당연히 대인관계가 서투를 수밖에 없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의 ‘한국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국제시민의식교육연구(ICCS) 등 국제 비교 자료를 기초로 ‘청소년 핵심역량지수’를 개발해 비교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지적 역량’은 비교대상 36개국 중 2위였다. 반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협력하는지를 묻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선 36개국 중 35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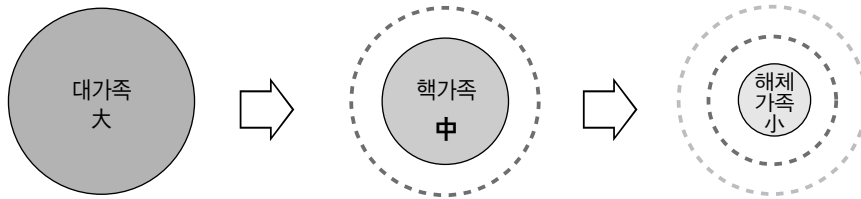
100여년 전 농업정주사회에서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로 변화하면서 J. Dewey(1916)는 학교가 지역 사회와 가정의 감소된 교육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은 사회가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또한 H. Spencer(1861)는 새로운 사회와 학습자 집단의 변화에 맞는 공부할 거리를 정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세계화, 다문화, 다원화, 정보화, 저출산, 가족해체의 시기를 맞아 가정과 사회의 교육력은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따라서 학교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 세대당 가족수는 2.69명으로, 1990년(3.7명)보다 30% 감소했고, 4인 이상이 동거 가족도 2010년 22%로, 1990년 32%에서 감소하였다. 남녀노소를 통한 인간관계를 연습해 볼 기회가 거의 없는 셈이다. 가정은 교육력을 거의 상실했다.

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2010) 발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주된 가구 유형은 4인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주된 가구 유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66.6%로 2005년 70.0%에 비해 3.4%p 감소하였으나, 미혼, 사별, 이혼은 증가하였다고 말한다.

11) 통계청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 (2011)에 따르면, 2011년 6월 기준으로 유배우가구는 1,162만가구로 추정되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507만가구로 유배우가구의 43.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8.6%(44만 가구)는 주말부부 등 ‘비동거 맞벌이 가구’이다.

12) 통계청 주요지표에 따르면(2011), 2011년 우리나라의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13) 홍후조(2012b)에 따르면, 농업 정주사회에서 가정교육력은 ‘온 동네가 한 아이를 키운다.’는 말에 가깝게, 그 힘은 큰 것(大)이었으나, 동시화, 산업화 하면서 핵가족화 됨에 따라 가정의 교육력은 중(中)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 시기 John Dewey는 학교의 가정교육의 보완기능을 사회화 기능으로 역설하였다. 오늘날 지식정보화, 세계화로 인해 세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이주하는 노마드의 유목이동사회에서 가족 성원들은 기러기 아빠, 낙하산 학생, 주말부부, 이혼 별거 등으로 통칭되듯이 가정은 해체되어 그 교육력은 왜소(矮小)하기 그지없다. 가정에서는 부모-자녀의 관계만 있을 뿐 여타 다른 사회적 관계를 연습해볼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이 학교에 모여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서 빚어지는 모습이 오늘의 학교 풍경이다. 이러한 가정교육의 기능이 축소된 만큼, 가정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능을 학교교육이 담당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1) 가정의 인간 형성 및 인간관계 형성 능력의 변화<sup>14)</sup>

홍후조(2011)는 학교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알맞은 사회, 집단, 공동체 환경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써, 학교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겹<sup>14)</sup> 중에서 가장 겉의 행동 기능, 기술, 정보, 지식을 강조하고 단련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서 겹겹이 쌓여 있는 저 아래의 못된 본성이나 기질이 제멋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누르고, 선한 본성과 기질은 더욱 잘 가꾸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홍후

조(2012b)는 ‘학생의 인성이 그릇되었다’는 진단보다는 ‘학생의 대인관계 기술이 서툴다’라는 진단과 처방이 더욱 교육적이며, 학생의 사회적 인성을 바꾸어 놓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 박춘성 외(2009)의 연구에서도 인성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사들은 학교 인성교육을 주로 문제아와 관련되고, 학생 문제유발 방지를 위한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 패러다임에 따른 학교교육에서의 강조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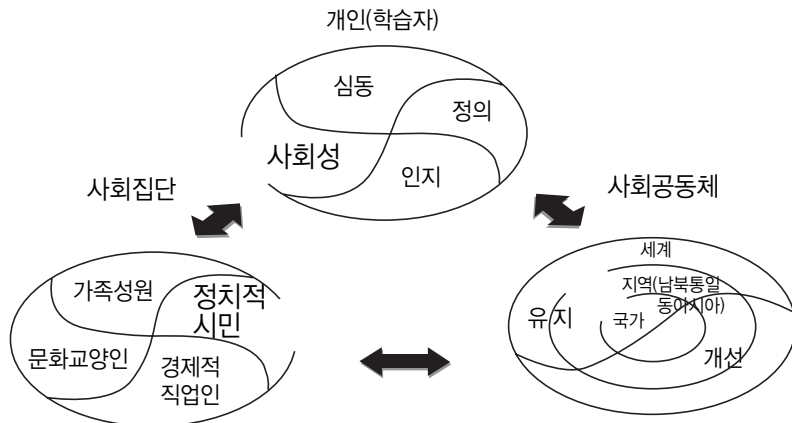
패러다임	학 력	인 성	사 회 성
목 적	• 학력신장	• 착한 인성	• 인간관계능력 향상
목 적	• 학력 향상	• 학력 향상	• 사회성 향상
이 념	• 신자유주의, 개인주의	• 개인주의	• 공동체적 자유주의
배 경	• 학력저하, 생산성 향상	• 공부/성적/학력스트레스, 학교폭력, 자살	• 공부/성적/학력스트레스, 학교폭력, 자살, 가정과 사회의 교육력 약화
원 인 단	• 낮은 능력, 잘못된 수업	• 비뚤어진 인성, 학력 우선의 폐단	• 대인관계 형성 능력 부족, 현실적인 문제/갈등해결능력 부족 • 약화된 가정의 교육력의 학교를 통한 보완
내 용 및 방 법	• 학생간 비교, 경쟁, 목표(성취기준)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 • 수준별수업, 자기주도학습, 학원이용 선행학습,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국어, 영어, 수학 교육 강조, 학력신장에 효율적인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	• 인성교육, 자기통제, 소통과 공감, 협력, 다문화, 인권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정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의식 • 실천중심 인성교육, 프로젝트 인성교육, 체육, 예술, 국어, 사회, 도덕 교육 강조	• 대인관계, 자기통제, 소통과 공감, 협력, 공영, 시민성, 참여권리와 책임(의무) • 교사의 일상적 개입 강조, 수업을 통한 학교교육력 강조, 협동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성의 학습과 연습, 진로에 맞는 학습 종류 수준 범위 분량 적정화, 합창 합주 단체운동 강조

14) 신언서판(身言書判)처럼 교육대상으로서 사람을 키우고 판단하는 차원은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홍후조(2012b)는 그 가장 겉에서 안으로 나열해 가면 행동, 기능 > 정보, 지식 > 태도, 가치, 정서 > 창의성, 지혜 > 기질, 본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은 가장 겉의 기능, 지식 등을 강화시켜 안쪽의 기질 본성 등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향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패러다임	학 력	인 성	사 회 성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차, 석차등급, 석차, 석차등급, 서열화, 외적 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대평가(평어 병기로 인해 성적 인플레이 유발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 기여분에 대한 존중</li> <li>주요교과목의 절대평가 (원점수/평균/표준편차/수강자수)</li> </ul>
주체 · 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모, 학생, 학원강사, 교사</li> <li>입시 프로젝트 공동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당사, 성직자, 부모, 자기자신의 수양과 반성</li> <li>말 잘 듣고 착하며 공부 잘 하는 엄친아(알파걸)</li> <li>교사의 개입 및 영향력에서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의 협력수업 속 학생들의 상호작용 조성 및 개입 극대화, 학생, 교사, 친구, 부모</li> <li>학생지도 하는 사이 교사도 협력법 · 갈등해소법 체득, 교양있는 민주시민</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력신장, 개인의 경쟁력 강화, 학생-학부모-교사의 학력 신장 프로젝트 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성, 감성과 체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단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런 인성교육, 부적응, 폭력 감소, 대인관계 능력 향상</li> </ul>
부 작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트레스, 과도한 경쟁심, 학교폭력, 왕따, 폭력과 왕따의 희생으로 자살, 성적비관 자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성 발달 저해, 사회성 약화 지속, 현실의 대인관계 능력, 인간관계 능력 부족, 현실 갈등문제 해결 능력 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의 경쟁력 약화, 학력 저하</li> <li>협동수업에서 내향적 학생의 희생</li> </ul>

학교는 학생들 개인의 인지, 정의, 심동적 영역을 키워주는 곳이다. 홍후조(2011)는 여기에 더하여 학교에서 사회성 교육을 강조하게 되면, 학생들은 개인의 사회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집단<sup>15)</sup>에서, 그 집단의 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집단 내에서 길러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와 동아시아, 국제 사회의 성원을 키울 수도 있다고 한

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중국의 상하이 인성교육이 글로벌 시민 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다층화된 시민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것과 독일의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이 공동체의식을 심는 사회교육이 추가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학교의 개인, 사회집단, 공동체에서 기능할 사회화 기능의 개념도

15) 가정, 직장, 동호회, 지역사회

16) 상대방의 존중, 반칙에 대한 엄벌 및 규칙 준수, 공동체 기여에 대한 포상 등

OECD(2007)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은 ‘학습의 사회적 결과(Social Outcomes of Learning)’를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는 소득, 수입, 부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해 왔으며,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발전시켜 사회 응집력, 민주주의, 공동체의 번영 등이 학습의 결과로 나올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는 집단의 상호작용<sup>16)</sup>을 통해 사회적 존재를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 개인이 집단과 국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학교교육의 생활 지도 측면에서 강조하여 교육해야 할 것은 ‘개인차원의 인성교육’이 아니라 ‘사회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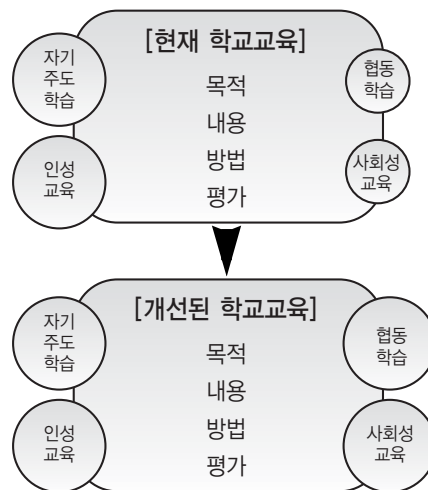
〈표 3〉 OECD에서 제시하는 학습의 사회적 결과

	사적인 것	공적인 것
금전적인 것	• 소득, 수입, 부 • 생산성	• 의료비용
금전적이지 않은 것	• 건강상태 • 생활만족도	• 사회 응집력 •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 • 공동체의 번영

그렇지만 현재의 학교는 미국식 개인주의적 교육 목표에 따라 지덕체, 지정의, 인지 심동 정의 등 개인적 측면만 강조하고, 개인이 지닌 사회적 측면이나 개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집단 속에서 제 구실 하도록 키우는 문제에 소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관계 형성 능력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는 가정에서 온 학생들은 집단으로 모인 학교에서 개인간 학력경쟁에 내몰림에 따라 집단내 사회성, 인간관계를 학교폭력과 같이 병리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나아가 군사독재 이후 학교에서 시민의 정치교육이 소홀한 결과 작금의 중북 좌파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제나 헌법을 부정하거나 남북통일에 대한 전망이나 동아시아 속에서 상대적 약소국의 안전과 발전 혹은 지구촌 시민으로서 역할 등에 대한 전망을 결여한 개인과 단체가 속출하고 있기도 하다. 그

러므로 학교교육은 개인의 인지적 교육목표를 넘어 집단에서 제 구실, 공동체의 유지 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현재 학교교육은 자기주도학습이 강조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협동학습의 중요성은 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인성교육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여 여러 방면에서 인성교육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작 집중하여 강조하여야 할 집단·단체·공동체 내의 사회성 교육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그림 3)의 왼쪽 그림과 같이 자기주도학습, 협동학습, 인성교육, 사회성 교육이라는 네 개의 바퀴가 불균형한 상태이다. 앞으로의 학교교육은(그림 3)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기주도학습과 함께 협동학습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인성교육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사회성 교육 쪽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다. 즉, (그림 3)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기주도학습과 협동학습, 인성교육과 사회성 교육이라는 네 바퀴가 균형을 이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현재의 편향된 학교교육의 강조점과 개선된 균형잡힌 학교교육의 모습 개념도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학교교육에서 강조하고 현재 학교교육의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서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의 강조가 과연 적절하였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가 되는 점은 수정·보완하여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학교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하였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당시 학교에서는 주입식, 설명식, 교사주도 수업과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의 수동적 학습 문제가 심각하였다. 당시 교육자들은 서양의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개별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나홀로 공부’를 가능하게 해 준 정보·통신의 발달, 성인학습에서 차용한 자기주도학습의 특징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해주었다. 학교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은 홈스쿨링, 사이버 교육을 발달시켜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높아지고 학습에서의 주도권이 더욱 강조된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비교 경쟁, 석차, 서열화, 입시 등이 엄존한 현실에서 학교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 강조는 인지적 지식 습득의 측면을 더 강화하였다. 자기주도학습에서 인지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입시 위주의 교육, 학교 수업의 붕괴, 사교육의 심화라는 문제점은 여전히 학교교육에서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결국 입시경쟁 위주의 서열화, 등급화에 의해 인간의 가치 매김을 하는 우리의 학교교육은 자아 정체감 형성 시기를 거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실패감, 좌절감을 경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소외되고 열등의식에 빠진 청소년들은 자존심 회복의 수단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성교

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그것이 강조하는 틀(frame)이 상대적으로 개인의 성격, 심성 등 내면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인간형성을 강조할 뿐, 인간관계 형성 능력, 사회성 교육, 집단에서 개인간 상호작용, 갈등의 평화적 해소법 등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책임이 가정의 몫이거나 교회와 같은 종교, 신앙의 몫, 상담기관의 역할 또는 개인의 자기반성과 성찰의 몫이 될 수 있는 모호한 인성교육의 강조로 인해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구호에 그쳤고 학교폭력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기성세대가 공교육에서 추구해 온 목표와 가치는 경쟁을 통해서 동료들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학습하고 시험 칠 때 회상하여,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해서 ‘개인의 행복하고 가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학교에 석차와 서열이 존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인식은 이러한 가치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성세대의 가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도 쉽게 변하지 않아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할 때도 여전히 ‘개인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개인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학교에서는 학습자 개인이 꿈을 가지고 잠재력을 키우고, 행복한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공교육에서 더욱 중요하게 추구하여야 할 바람직한 가치는 더 이상 개인의 출세와 부를 위한 가치의 전달과 경쟁이 아닌 ‘공공 선’의 추구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인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가 경쟁과 대립, 혼란과 무질서로 얼룩져 있는 사회라면 개인의 미래 역시 결코 ‘행복하고 가치 있는 미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학교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100여년 전 농업정주사회에서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로 변화하면서 J. Dewey(1916)는 학교가 지역 사회와 가정의 감소된 교육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은 사회가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또한 H. Spencer(1861)는 새로운 사회와 학습자 집단의 변화에 맞는 공부할 거리를 정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계화, 다문화, 다원화, 정보화, 저출산, 가족 해체의 시기를 맞아 가정과 사회의 교육력은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학교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교육에서 강조하고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학습적인 측면에서 ‘협동학습’, 생활지도 측면에서 ‘사회성 교육’이다. 그 실현을 위해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교육의 강조점을 기존의 학력경쟁에서 사회협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자가 중요하지 않다가보다 해체된 가정을 중심으로 한 현대사회에서 학교의 사회화교육의 기능이 더 절실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는 성인의 자기주도학습을 성장 도상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수업과 활동에서는 협동학습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활동을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심리적으로 내향적인(introvert) 학생들이 집단학습에서 소외될 부분에 대한 예방적 배려가 요구된다(케인, 2012). 넷째, 학교는 불필요한 과잉경쟁을 유발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자기주도학습, 개인 간 경쟁만을 시켜서 산출되는 평가 방식은 지양하고 도리어 공동체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협력과 협동을 강조하고 합창, 합주, 단체 경기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여야 한다. 교사들은 협동·협력 수업을 통해 친구 사귀, 협력과 협동, 갈등과 화해를 익힐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진정 도덕적으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마음에서 우리나라에서 실천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나눔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논자에 따라서 자기주도학습과 협동학습, 개인의 인성교육과 집단내 사회성 교육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먼저 강조되면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할 수도 있다. 즉 자기주도학습에 앞서 먼저 사회적 협동학습과 협동하는 행동과 습관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집단생활이 시작되면 학생간 상호존중과 배려, 협동하는 법, 규칙 준수와 갈등해소방법 등의 사회성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개인간 학력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상호간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 협동성은 앞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교육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 학생생활 생태계 문화를 그간의 개인간 학력경쟁에서 공동체의 협동학습으로 기초(基調)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교과교육에서 개인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함께 집단내 협동학습능력을, 생활교육에서 개인의 내면적인 인성교육과 함께 집단에서 사회성교육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 및 학교의 기능,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의 방향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높다고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승규(2012). 학교폭력,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장단기 대책. 안암교육학회 여름 학술대회 발표논문, 8월 25일. 고려대학교.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1998).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열린 수업 모형의 개발과 적용』. 교육부지정 연구보고서. 대구: 도서출판 정각사.
- 광병선(2012). 인성교육, 답은 무엇인가?. 인성교육 심포지엄자료집.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 5-10.



- 광형식(1999).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원인과 예방대책. 경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간, 『학생생활연구』, 4(1), 1-4.
-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I, 11-14.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 개정 초등학교교육과정 해설 (I).
- \_\_\_\_\_ (2010).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내용, 방법, 평가체제 혁신 방안.
- \_\_\_\_\_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교육과정 총론.
- \_\_\_\_\_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권대봉(2006). 『성인교육 방법론』. 서울 : 학지사.
- 김영옥·장명림·유희정(2009).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97-324.
- 남궁달화(1999). 『인성교육론』. 문음사.
- 마틴 셀리그만(2011). 『플로리시』. 물푸레.
- 문용린(2010). 이제는 창의인성교육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칼럼.
- 문용린·최인수(2010). 창의·인성교육의 총론.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2010년 인천교육심포지움.
- 박춘성 외(2009). 인성교육의 문제점 및 창의·인성교육의 이론적 고찰. 『창의력교육연구』, 9(2), 89-112.
- 박하식(2012). 학교의 인성교육 실태에 관한 토론.
- 송준미(2012). “창의성과 책임지향성이 성인의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 수전 케인 저. 김우열(역)(2012). 『콰이어트』. 알에이치코리아.
- 유귀옥(1997).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 유한구(2007).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초등교육학회 2007학년도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성호(1996). 인성교육 이대로 좋은가. 한국정신문화원.
- 이영애(2012). 『아이의 사회성』. 지식채널 : 시공사.
- 이원희(1999). “실천주의 인성교육의 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및 실태분석”.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윤옥(1998). 『유아를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창지사.
- 이정택(2005). 자기주도 평생학습관리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필우(2012).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 평가 강화 방안-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노력 연계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2년 고교-대학연계세미나(1차),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방안, 7월30일~31일. 부산 부경대학교.
- 장성모(1996). 인성의 개념과 인성교육. 한국초등교육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
- 전현욱(2012). 자기주도학습의 의미에 관한 한 해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1), 373-392.
- 정동인(1991). 수업체제와 수업형태조합. 『교육연구』, 313, 39-63.
- 체피 보르사치니 저. 김희경(역)(2010). 『엘 시스템아-꿈을 연주하다』. 푸른 숲.
- 최지영(2006). 뇌과학이론에 기반한 협동학습의 교육적 의의. 『뇌교육연구』, 1(1), 129-145.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 \_\_\_\_\_ (2011). 2011년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 보도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2011). 한국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2011). 통계로 본 초·중등 교육재정과 사교육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 TIMSS 2007 결과 보고서-
- \_\_\_\_\_ (2011).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 한상훈(2010).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수준에 따른 평생학습성과 관련 변인의 조절효과 검증, 『교육종합연구』, 8(3), 45-64.
- 홍후조(2011). 『알기 쉬운 교육과정』. 학지사.
- \_\_\_\_\_(2012a).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미래지향적 설계. 한국교육과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5월 19일 경북대학교.



- \_\_\_\_\_(2012b), 한국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과정의 미래상. 미간행원고(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과정 전공 하계 세미나 발표 원고), 7월27일~28일. 강원 설악.
- 홍후조·백혜조(2012).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에 관한 비판적 고찰. 안암교육학회 여름 학술대회 발표논문, 8월 25일. 고려대학교.
- Ausubel, D. P.(1978). Education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462~475.
- Berk, L.(2001).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Boston: Allyn & Bacon.
-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2011), Definition of SEL. Retrieved March 27, 2011, <http://casel.org/why-it-matters/what-is-sel/>
- Dewey, J.(1899). School and society,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이인기 역(1981). 학교와 사회. 박영사.
- \_\_\_\_\_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이홍우 역(1996).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 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2011).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for illinois students : policy, practice and progress. The Illinois Report.
- Johnson, D. W. & Johnson, R. T.(1975). Learning together and alone : cooperation, competition, and individualiza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Johnson, D. W. & Johnson, R. T., & Holbec, E.J.(1998). Cooperation in the classroom. MN : Interaction Book Company.
- Knowles, M. S.(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 Follet Publishing Co.
- Law, W. W.(2007). Globalisation, city development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China's Shanghai,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27. 18~38.
- Lim, C. P.(2008).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chool curriculum and games : Learning Mathematics, English and Science as a global citizen, Computers & Education. 51. 1073~1093.
- OECD(2007). Understanding the social outcomes of learning: executive summary.
- Rycken D. S. & Salganik, L. H.(Eds.)(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Göttingen, Germany: Hogrefe & Huber.
- Schuck, D.(2004). Learning Theories: An Educational Perspective.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 Spencer, H.(1861). Education : intellectual, moral and physical. New York.: D. Appleton.
- Schuller, Tom(2008). Social Outcomes of Learning(SOL).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 성진아 칼럼 '미국의 학교 폭력 예방과 사회성 - 감성 교육'
- \_\_\_\_\_ <http://21erick.org/180> 2012.08.02 열람.
- 매일경제. 2012. 04. 02. - 흡연 학생과 실랑이 교사, 학부모 폭행에 턱뼈 골절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04420> 2012.07.22 열람.
- 문화일보. 2008. 1. 16. - 사교육시장 '23조' 넘어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11601031524032002> 2012.07.22 열람.
- 통계청(2011). 한국의 주요지표.
- [http://kosis.kr/feature/feature\\_0103List.jsp?mode=getList&menuId=01&NUM=490](http://kosis.kr/feature/feature_0103List.jsp?mode=getList&menuId=01&NUM=490) 2012.07.23 열람.
- 파이낸셜 뉴스. 2012.7.3. - 학부모 10명 중 6명 "내 아이 잘하려면 사교육 필수"
- [http://www.fnnews.com/view?ra=Sent1501m\\_View&corp=fnnews&arcid=201207030100020850001286&cDateYear=2012&cDateMonth=07&cDateDay=03](http://www.fnnews.com/view?ra=Sent1501m_View&corp=fnnews&arcid=201207030100020850001286&cDateYear=2012&cDateMonth=07&cDateDay=03) 2012.07.03 열람.
- 한국일보. 2010.9.6 -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자식 징계에 항의 교사 폭행 물의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9/h2010090616482574990.htm> 2012.07.22 열람.
- MORNINGSIDE CENTER for Teaching Social Responsibility.
- <http://www.morningsidecenter.org/> 2012.07.29 열람.

2부 주제발표 ②

# 일본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이이자와 타카오**

전 문부과학성 교과서 심의관,  
국립도쿄해양대학 사무국장

## I.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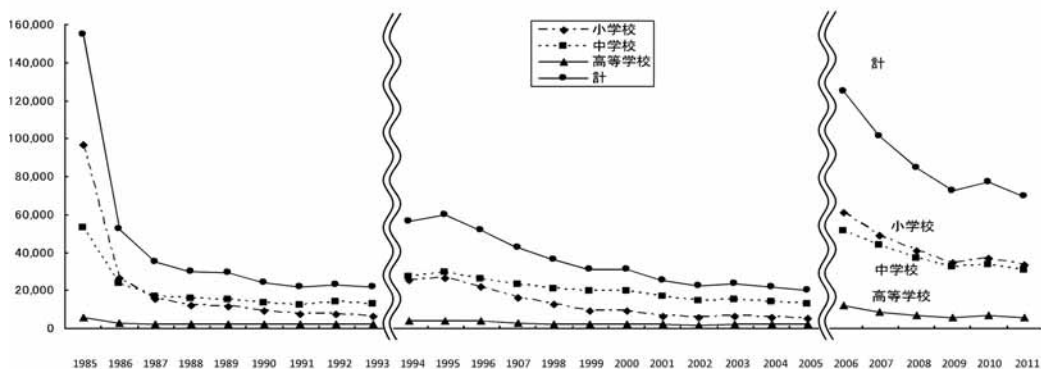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의하면 왕따의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1년 도에는 70,231건으로 5년 전인 124,898건의 약 43.8%, 그리고 전년도인 77,630건 보다 약 9.5%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작년 10월 시가현(滋賀県) 오오츠시(大津市)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살한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자살은 집단따돌림이 원인이었다며, 오오츠시와 동급생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금년에도 고등학생 자살의 원인이 왕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오늘날 왕따는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 II. 왕따의 정의

폭력행위, 왕따 등의 아동 학생의 문제 행동은 교육 관계자뿐 만 아니라 광범위하게는 국민 전체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해결을 가늠하는 것은 교육에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의 문제행동 등에 있어 사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지도를 한층 더 충실히 파악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은 매년 “초·중·고등학교 아동 학생의 문제행동 등 학생 지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왕따란 아동학생이 일정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 물리적인 공격을 받아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일어난 장소는 학교 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1980년대 중반, 학생에 의한 다른 학생과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이 표면화되었다. 문부과학성은 1982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해 왔다. 그러던 중, 학교폭력이 음습화(陰濕化)된 것이 왕따를 지칭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1985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왕따 상황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왕따와 일반적인 폭력과는 구분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양자 모두 범죄로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폭력이나 왕따의 문제에 관해서는 경찰의 힘을 빌려 해결하고 억제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폭력이나 왕따의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표 1).

〈표 1〉 일본의 왕따 발생(파악) 건수 추이



(문부과학성 조사)

왕따는 폭력적인 것과 폭력 이외의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폭력적인 왕따는 물건 숨기기, 물건 파손, 금전강탈, 협박하여 어떠한 행동을 강요하기, 때리고 걷어차기 등의 폭력을 휘두르는 등 물리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편, 폭력 이외의 왕따는 외톨이, 무시, 무언 등의 불쾌감이나 정신적 타격을 주는 심리적인 것이 있다. 또한 왕따의 형태로는 피해자를 외톨이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룹에서 배제시키는 것과 자신들의 그룹 안에 둔 채로 왕따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왕따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위법은 아니며, “놀림”, “조롱”, “야유”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사소한 행동의 반복에 의해 상대방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왕따에 관한 대응은 쉽지 않다.

특히 최근 왕따의 경향으로는 어른이 발견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왕따가 은밀화되고 있는데다가 왕따의 대상이 매일 바뀌기도 하고 왕따 당하는 아이와 따돌림을 시키는 아이가 교체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 현대 어린이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왕따의 가해자, 피해자 모두 교사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문부과학성의 대처

문부과학성은 왕따 문제에 대해 학교나 교육위원과 연계하여 그 대책을 강구해 왔다.

#### (1) 1996년 7월 “왕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관하여”(학생 문제행동 등에 관한 조사연구회 보고)

왕따 방지 등은 모든 학교 및 교직원 자신의 문제로 절실하게 받아들여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왕따를 없애기 위한 대처와 아동 학생의 왕따를 포함한 문제행동 등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왕따 문제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왕따는 모든 아이와 모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특히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인간으로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강한 인식을 가지게 한다.
- ②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도해야 한다.
- ③ 왕따는 올바른 가정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④ 왕따 문제는 교사의 학생관이나 지도 자세가 거론되는 문제이다.

⑤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모든 관계자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 하나가 되어 진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 하에 왕따 문제 대처에 대해 왕따의 조기발견, 조기대응에 노력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심적인 치료와 왕따를 단절시키기 위한 대응,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학교에서의 충실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대처 지원과 대처상황의 점검, 효과적인 교원연수의 실시, 조직체제·상담체제의 충실화 등 교육위원회의 충실한 대처도 요구되고 있다.

## (2) 2006년 10월 “왕따 문제의 철저한 대처에 대하여”(문부과학성 초등, 중등교육국장통지)

왕따에 의한 아동 학생의 자살 발생을 보고받고 학교, 교육위원회에 왕따 문제에 대해 ‘왕따 문제의 대처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참고하여 총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다 강화된 철저한 대처를 요청하였다.

주된 요청내용으로는 ① 왕따의 조기발견, 조기대응, ②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③ 교육위원회에 의한 학교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 (3) 2010년 11월 “왕따의 실태 파악 및 문제의 철저한 대처에 대하여”(문부과학 대신정무관통지)

문부과학성은 학교가 왕따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는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 학교는 정기적으로 아동 학생으로부터 직접 그 상황을 듣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수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필요한 대처를 추진함과 동시에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청에서는 왕따의 실태파악과 대처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아동 학생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그 아동 학생이 왕따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6년 10월 철저한 보고를 하도록 했다.

## (4) 2012년 9월 5일

“왕따, 학교안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처 방침”  
-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문부과학성에서는 지금까지 학교나 교육청 등에 왕따 문제의 철저한 대처를 요청해 왔으나 최근에도 왕따를 배경으로 학생이 자살한 사안 등으로 아이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손상되는 안타까운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사안 중에서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왕따의 징후 파악이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도 왕따에 대해 사실 파악이나 대응에 대해 학교나 교육청의 주체적인 대처에 수동적인 대응을 한 점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왕따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안전이나 체육활동에서 안전 확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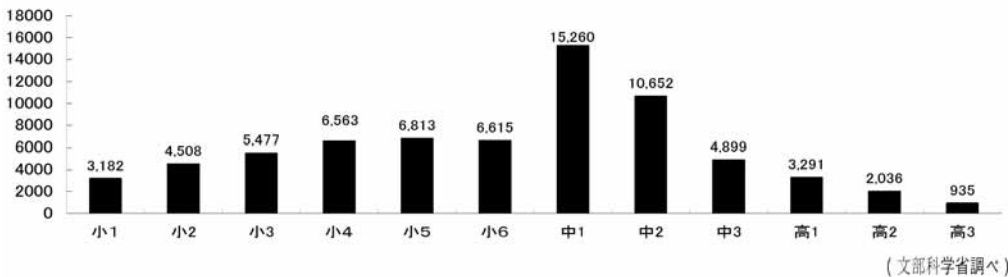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대처법을 되돌아보고 문부과학성은 문제점을 직시하여 “왕따, 학교안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처 방침”을 올해 9월에 책정하였다(〈표 3〉).

문부과학성은 향후 이에 대한 대처 지침에 따라 시책의 재검토 등을 실시함으로써 왕따 등에 관한 문제 대처방안 개선을 충실히 하고자 학교나 교육청 등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왕따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기본적으로 ① 학교·가정·지역이 하나가 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며 ② 국가·학교·교육청의

〈표 2〉 학년별 왕따 발생(파악) 건수 (2011년 국·공·사립학교)



〈표 3〉 왕따, 학교 안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처 방침

## 왕따, 학교 안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처 방침【2012년9월】 － 왕따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

### 기본 개념

1. 학교·가정·지역이 하나가 되어 아이들의 생명 지키기
2. 국가·학교·교육위원회의 연대 강화
3. 왕따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의 촉진
4. 학교와 관계 기관의 연대 촉진

### 액션 플랜

#### 1. 학교·가정·지역이 하나가 되어 아이들의 생명 지키기

- 왕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대처 추진
- 학교·가정·지역의 연대를 통한 왕따 문제의 대처 추진

#### 2. 국가·학교·교육위원회의 협력 강화

- 국가의 왕따 문제 대응 체제 강화
- "왕따 문제 어드바이저" 배치
- 전화 상담 체제의 재검토
- 긴급 조사를 통해 보고된 중대 사안의 신속한 대응
- 생명, 신체에 관한 중대 사안에 대한 신속한 보고 등의 규칙화
- 자살 사안에 관한 배경 조사의 개선

#### 3. 왕따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의 촉진

- 교직원의 체제 강화
- 교직원에 대한 연수 등의 충실화
- 폭넓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지역의 대응 지원·상담 체제 충실화
- 왕따 문제의 대응에 관한 학교와 교원 평가 실시
- 사이버왕따 대책의 충실화

#### 4. 학교와 관계 기관과의 연대 촉진

- 학교와 경찰의 협력 강화
- 관계 기관이 연대한 지원팀의 활용

협력강화 ③ 왕따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대응의 촉진 ④ 학교와 관계기관과의 연대촉진을 들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국가의 대처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① 학교·가정·지역이 하나가 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대처
  - － 왕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대처 추진(도덕교육이나 커뮤니케이션활동을 중시한 교육활동 등)

－ 학교·가정·지역의 연대를 통한 왕따 문제의 대처 추진  
(가정에서의 상담 대응법 등의 지원, 워크숍 개최 등)

- ② 학교·교육청 등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대처
  - － 국가차원의 왕따 문제에 대응하는 체제강화(어린이 안전대책 지원실의 강화 등)

- “왕따 문제 어드바이저”의 배치(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 전화상담 체제(24시간 왕따 상담 콜센터)의 재검토
- 긴급 조사(2012년 8월 실시 중)에 의해 보고된 중대 사안의 신속한 대응
- 생명·신체에 관련된 중대 사안의 신속한 보고 등의 규율화
- 자살 사안에 관한 배경 조사의 개선

### ③ 왕따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대응의 촉진을 위한 국가의 대처 방안

- 학교에서 왕따 문제에 대응하는 교직원 체제의 강화(소수 학급의 추진 등)
- 왕따 인지 및 대응에 관한 주지 철저 등(국가로부터의 통지나 지도지원 자료의 철저)
- 교직원 연수 등의 실시
- 광범위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왕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각 지역에서의 대처지원이나 교육상담 체제의 충실 등
- 왕따 문제의 대응에 관한 학교나 교원의 평가 실시
- 사이버 왕따 대책 충실
- 출석정지제도 활용의 문제점이나 출석정지기간 중의 아동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방법에 관한 조사 및 검증

### ④ 학교와 관계기관의 연대 촉진을 위한 국가의 대처

- 학교와 경찰의 협력 강화(경찰 조기상담 및 통보의 철저, 경찰관 경험자 등의 학생지도 추진 협력원으로 배치 등)
- 관련기관과 연계된 지원팀의 활용(아동상담소, 민생아동위원 등)

문부과학성은 이와 같은 대처 방안을 기반으로

하여 내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약 27억 엔이 늘어난 약 73억 엔을 책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하고 있다.

- ① 국가 및 지자체의 외부 인재 활용에 의한 왕따 문제의 지원체제 구축(약 4억 엔)
- ② 도덕교육의 추진이나 체험활동의 추진 등 왕따 미연방지 대책(약 9억 엔)
- ③ 교육 상담이나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약 47억 엔)
- ④ 교원연수의 충실 등(약 9억 엔)
- ⑤ 왕따 대책 등 학생지도에 관한 조사연구(약 4억 엔)

## IV. 맺음말

일본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사회문제가 된 왕따 문제에 관해 문부과학성이 그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학교나 교육청과 협력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왕따가 원인이 아닌지 생각되는 학생의 자살에 직면할 때마다 그 대응책에 재확인을 철저히 실시했다. 현재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금년 9월에도 대응방침의 결정과 지도철저, 또한 이 방침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 예산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이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시간이 요구되나 이러한 대처가 학교,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아이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 그 성과가 드러날 것을 기대한다.

왕따 문제의 대응은 문부과학성의 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조사 보고가 있어 소개해 본다.

왕따의 발생건수는 <표 1>과 같이 감소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앞서 말했으나, 초등·중등교육 단계의 학년별 왕따 발생건수는 <표 2>와 같다. 동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왕따의 절정기는 1학년 봄이나 가을, 또는 2학년 봄이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3학년 봄, 가을로 접어들면서 그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띤다.

2개의 초등학교를 진학 학군으로 하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입학 때부터 몇 개월 간 1학년 학생끼리의 트러블이 이어지고 있다. 그 원인을 2개의 초등학교 학교문화나 지역성의 차이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 중학교에서는, 2개의 초등학교에 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의뢰했다. 그 결과 양쪽 초등학교가 합동으로 아이들의 숙박행사나 교류 학예회, 부모 체육 교류회 등의 행사를 열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6학년이 다른 학년과의 교류나 공동 작업을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대처의 결과 중학교 입학 직후부터 있었던 트러블이 감소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편, 중학교에서는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 뒤에도 다양한 문제행동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중학교의 독자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학교에는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관한 것, 타인과의 교류, 집단이나 사회와의 교류 등을 갖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다.

왕따 등의 문제개선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대안을 소개하였으나,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강한 의식이나 자각을 가진 대안을 마련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학교나 교원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쌓여서 이들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면 왕따 문제는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2부 주제발표 ③

# 중국 중소학교 학교교정폭력행위 특징 및 그 규훈(規訓)



소 상 봉

수도사범대학

수도기초교육발전연구원, 교수

□필자소개 : 소상봉(1972-), 남, 한족, 고향은 절강성, 교육학박사, 수도사범대학 부교수, 주로 교육사회학 연구에 종사

□중국 기초교육 12년 : 소학교 6년, 중학교6년(초급중학교 3년(초중), 고급중학교 3년(고중))

## [요약]

청소년들의 자아의식 발전 과정 중에서 내재적 모순, 잔류(殘留, 殘留)되어 있는 감정, 행위상의 원시적 충동 등이 얼기설기 뒤얽혀서(交織, 交織, 교직), 서로의 대화중에서 각종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 정도가 다양하며 서로의 뜻이 어긋난 결과로 지체(肢體, 肢體) 부딪침(limb collision) 행위가 쉽게 형성된다. 이런 현상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타 폭력과 비교하여 볼 때 그 형식과 실체가 완전히 다르다. 현재 중국의 중소학교교정(校園, 校園)내 학생들 사이의 부딪침 형식 폭력행위가 비교적 많다. 이런 폭력행위는 주요하게 지인(熟人, 熟識,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일정한 신중성을 유지한 채로 당사자의 반응 정도에 주목하며 교사와 학생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우의단체(友誼團體, 友誼團體, friendship groups)는 폭력행위 과정에 대하여 촉매 작용과 확대 효과를 일으키기 쉽다. 학생들 사이의 지체 부딪침 행위가 일종의 충돌사건으로 발전, 변화되어야만 적대적 성질(敵對性, 敵對性, hostile)을 지닌 폭력행위가 나타난다. 학교폭력사건 또는 사건은 학교교정 밖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학교교정내의 폭력사건은 주요하게 일종의 피자극성적인 지체 저항에 지나지 않는다.

□주제어] 학교교정폭력(“학교폭력”으로 간략함, 校園暴力, 校園暴力, on-campus violence), 우의단체(友誼團體, 友誼團體, friendship groups), 피자극성(應激, 應激, 자극 감수성 :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하여 흥분이 일어나는 성질), 규훈(規訓, 規訓, discipline)

수도사범대학은 1998년부터 몇 십 개의 중소학교들과 동반자-협동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전문직 교사를 파견하여 중소학교 교육실천 환경 속에 깊이 파고들어



감으로써, 매주 하루 이상의 시간 동안 학교 사무에 참여하게 하여 학교 일상생활 중의 모든 현상과 문제에 공동으로 대면하게 하였다. 학교폭력행위가 바로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연구과제이다. 학교 교정 내에서의 관찰, 조별/그룹별 토론, 행위자의 자아반성 등에 기초하여 연구한 결과, 학교폭력 문제는 현재 이론계와 매체에서 호소하는 것처럼 엄중하고 절박한 특징과는 달리, 이와는 일정한 정도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학교폭력의 특수성과 복잡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현재 중소학교 규훈 체계와 학교폭력 사이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一. 학교폭력의 특수성과 복잡성

사람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논할 때, 폭력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바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으로 전이하기 쉽다.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또는 학교 내의 주체들과 상호 관계되는 폭력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는 학교폭력의 주체, 형식, 형성 과정상에서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간과하기 쉬우며 결국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단순해 질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학교폭력 연구의 일부에서는 대량의 조사연구하에 학교폭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한 태세를 경고하고 있다. 반면 다른 연구들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사회의 주목에 따른 압력을 감지하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학교교정내부에서 피하기 어려운 학생들 사이의 지체 부딪침에 대하여 관용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사람들은 학교에서 자아안전형상(이미지)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략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상 이런 학교폭력에 대하여 간과하는 현상은 일반 교사들에게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비록

교사들도 학교형상(이미지)을 보전하려는 의식을 일정하게 가지고는 있지만 교사들이 보는 학교폭력은 늘 그 정도가 경(輕)하고 비교적 보편적이며 마치 일부 저연령 아이들 사이의 교제와 인간관계를 넓히는 과정에서 보이는 적절하지 못한 수단 정도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가정폭력, 사회폭력과 비교 분석을 해보면 학교폭력의 주체와 형식은 모두 뚜렷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가하는 주체 또는 피해자는 반드시 청소년이라는 데에 차이점이 있다. 사람들이 학교폭력의 상태와 변화에 주목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학교교정 내에서 나타나는 지체 폭력형식에 주목하는데, 이는 가정폭력, 사회폭력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언어폭력, 냉(冷) 폭력 및 한층 더 깊은 은폐적인 문화폭력 및 상징폭력과는 전혀 다르다.

학교교정 내 주체 중의 대부분이 모두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고 그들은 자아보호능력이 비교적 약하기에 일단 폭력을 당하면 심신에 큰 상처를 입기 쉽다. 동시에 학교폭력의 대상이 인류사회가 변형, 연속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세대인 만큼, 직접적으로 인류윤리의 최저한도(底限)에 도전하는 것은 사회의 당황(恐慌, 公慌) 정서를 쉽게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은 아동시기와 성년시기를 이어주는 과도기이고 인생의 특수 시기이며, 생리적인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성숙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청춘기의 성적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개체의 심리발전도 과도기와 비약적인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아의식의 발전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모순, 잔류되어 있는 감정, 행위상의 원시적 충동 등이 열기설기 뒤엎혀서 서로의 대화 중에서 각종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 정도가 다양하며 서로의 뜻이 어긋난 결과로 지체 부딪침 행위가 쉽게 형성된다. 청소년들은 짧은 시기 내에 사회체험과 내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많음에도 그들의 사유와 언어의 발전이 의사 표현이 필요한 경우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때 지체 행위예의

참여를 표현과 대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체 부딪침이 청소년이라는 집단 사이에서 단계적인 성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타 폭력의 형식 및 실체와는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 학교폭력의 양면성(이중성)을 볼 수 있다. 즉 심각한 위해를 쉽게 유발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소거할 수 없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의 입각점(근거로 하는 처지)이 왜 지체 폭력행위에 있는 것인지를 해석할 수도 있다.

사회학의 전형적인 이론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은 Willis, p.가 주장하는 일종의 반문화 현상[1]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Parsons, T의 AGIL 패러다임으로 해석하면 학교폭력 현상은 학교사회체계 내부에서의 조절(adaptation)과 유지(latency)의 수단적 기능의 표현이며 학교교정 내 사회지위의 차별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型塑)이다. **越軌社會學**(越軌社會學, Sociology of Deviance)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학교폭력은 일종의 전형적인 질서 궤도를 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질서를 잃으니 이에 대한 예방과 엄격한 제제가 필요하다. 안전한도(安全限度)에 대한 정도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학과의 체계 하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과 그 방안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공공위생학 관점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사람의 심신건강을 위해(危害)하는 직접적인 근원으로 간주하고 일정 부분 유행병학(流行病學, 流行病學)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학 관점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폭력적 특징을 강조하고 이를 타인의 권익에 대한 강박(억압)적인 침범으로 간주하여 학교교정 내 주체로 하여금 법률/법규와 사회준칙규범상에서 폭력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세울 것을 희망한다. 인류학 연구의 관점에서는 폭력의 근원이 인류자아보존의 본능이고 이는 종족이 대를 이을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일정한 정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은 일종의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문명현상으로 볼 수 있다. 매체와 미디어계에 대한 비판 중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효과를 더 크게 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 현상이 사회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하는가 하면 학교폭력을 오락 자극적인 서술이나 게임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학교폭력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을 느끼기에 우리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연구를 중국중소학교행정 관리의 정책적인 실천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단어 사용에 대한 곤란에 부딪치게 되었다. 비록 내놓고 있는 수많은 정책문건들이 모두 엄중한 교정내의 폭력사건과 관련되지만 문건에서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폭력 등을 제기하면 정책상에서 단어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들이 쉽게 생산되거나 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정치위원회와 교육부 그리고 공안부 등 부문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안전문명학교창건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기 위한 의견>> (2004년), <<공안기관에서의 학교 및 주변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덟 가지 조치>> (2005년), <<중소학유아원 안전관리 방법>> (2006) 등의 문건이나 2006년에 새로 수정한 <<의무교육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의 문건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제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수정조안)>> 제 22조의 맨 처음 항목의 규정 중에 “학교는 응당 교정 내 안전제도를 건립하여 교정내 폭력과 기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서술이 있었는데, 후에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조치를 취하여 미성년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만 서술하였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교정 내에서 존재하는 일부의 흡사 폭력 과도 같은 단순한 현상이 실제로는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지만 학교는 안전교육과 안전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 二.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특징

(一) 비록 현재 중국 중소학교교정 내 학생들 사이에서 지체 부딪침 폭력행위가 늘 발생하지만 그 행위를 함에 있어 일정한 신중성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반응 정도에 주목하며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한도) 내에서 조절한다. 필자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다. 한명의 소학교 고학년 학생이 휴식시간에 다른 한명의 저학년 학생의 무릎 위에 앉았다. 처음에는 완전히 앉은 것이 아니고 두 다리로 자신의 몸의 대부분의 무게를 지탱하였는데 그 저학년 학생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자 완전히 그 저학년 학생의 무릎에 앉았다. 두 학생은 서로 몸을 스치면서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그들이 아주 잘 아는 사이임을 알 수 있었다. 언젠가는 필자가 두 명의 초중 남학생이 서로 얹혀 있는 상황을 보았다. A남학생이 힘을 주어 B남학생을 땅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B남학생이 열세(劣勢)에 처한 것이 명확하게 보였고 안경도 땅에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완강하게 버티고 굴복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힘을 겨루는 지탱 상태는 관찰자로 하여금 바로 달려가서 간섭하고 제지시키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한다. 그런데 수업벨소리가 울리자 두 남학생은 모두 손을 떼면서, B남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안경을 줍고 A남학생은 “이 안경이 왜 깨지지 않았지? 웅당 깨져야 좋은데.”라고 중얼거리고 웃으면서 B학생을 밀고 당기면서 교실을 향해 걸어갔다.

(二) 학생들 사이의 폭력행위는 주요하게 지인(熟人,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극히 적게 발생하는데 이는 서로 잘 아는 사이라야 힘을 매개로 삼는 게임적인 교제가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잘 알고 지내는 학생들 사이에서 교류 장애와 이익 쟁탈에 의하여 진정한 폭력행위가 아주 쉽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폭력행위는 잘 알고 지내

는 학생들 사이의 우의양래를 잠시 중단시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억이 희미해짐에 따라 또는 제3자의 조절로 인해 그들은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회복한다. 일부 부모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근심에서 출발하여 자녀들에게 폭력행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 학생들과는 적게 교제하라고 타이르는데, 이런 당부의 목적은 교왕빈도를 낮추는 방식을 통하여 잘 알고 지내는 정도를 낮추어서 이런 부류의 학생들과 폭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추자는 데에 있다.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이 자신에게 지체 폭력을 가했을 때 늘 이런 말을 한다. “난 널 모르는데(또는 난 너랑 교제하기 싫어), 나를 다치게 해서 뭘 하려는데?” 그러면 상대방도 재미가 없다는 듯 비키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이 보는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발생이 절대로 근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 원인은 같이 장난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돌에 있다는 것이며, 충돌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상대방이 말을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꼬리표 작용으로 인하여 폭력이 과도한 학생은 아주 큰 속박을 받거나, 학부모와 교사의 관속을 받거나 또는 기타 학생들의 배척을 쉽게 당한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 사용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습득하게 한다.

(三) 잘 알고 지내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 중에는, 우의단체가 원래는 잘 알고 지내지 않은 학생들을 많이 끌어들이어 언어의 중복 전달을 통한 원한과 혐오적 정서를 집결하고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에 대하여 촉매 작용과 확대 효과를 일으킨다. 교정 내 우의단체는 늘 내부 폭력 사용으로 자아강화를 진행하고 폭력을 거부하는 일부 학생들은 자각적 또는 비자각적으로 이런 우의단체들을 피하거나 또는 우의단체 내부의 개별 학생과만 비교적 두터운 우의(우정)관계를 형성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우의단체의 행위에 대한 영향력은

비교적 약하다. 이런 유형의 우의단체의 성원들은 늘 학급과 학년 심지어 학교의 범위를 초월하고 그리하여 학교 관리자들과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다. 폭력을 주고받는 쌍방의 질적인 성질이 서로 다르고 알고 지내는 정도가 강한 것도 아니기에 일종의 집단적 흥분(亢奮) 하에 비교적 강한 폭력행위가 아주 쉽게 조성될 수 있고 심지어 폭력 범죄에까지 발전될 수 있다. 모 완전중학교(초중과 고중이 함께 있는 6년제 중학교)의 체조시간에 초중2학년 모 학급 두 명의 학생이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조성된 갈등이 고중2학년 학생들까지도 싸움에 참여하게 하였다. 교사가 그 고중2학년 학생에게 “너는 형님으로서 어찌 동생한테 손찌검을 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그 고중2학년 학생은 머리를 돌리면서 낮은 소리로 “개가 먼저 내 친구를 때렸으니까요.”라고 대답하였다. 학생들 사이의 지체 교왕의 빈도가 높기에 학교폭력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상 도대체 누가 먼저 손찌검 했는지를 판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우의단체까지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런 충돌사건의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

(四) 학생들 사이의 지체 부딪침 행위가 일종의 충돌사건으로 발전, 변화되어야만 적대적 성질을 가진 폭력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게임으로서 또는 특별한 목적 없이 시작된 교제적인 지체 부딪침이 학생들을 진정한 폭력에 휩쓸리게 한다. 웅당 이런 학교폭력 사건이 나타날 빈도는 너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이고 이는 학교관리자들이 노력하여 피하고 저지해야 할 대상이다. 중국 대륙의 중소학교에는 전문적인 부서를 설립하여 이런 유형의 사건을 해결하게 하며 이런 부서들을 “덕육처(德育處)” 또는 “정교처(政教處)”라 부르는데, 이 부서에 속한 직원들에 따르면 그들은 매주 이런 유형의 사건을 1~2개 정도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교의 교사들은 매일같이 이런 치고 박는 싸움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학생들 사이의 신체충돌을 일반적으로

직접 학교 덕육처에 맡겨서 처리하지 않고, 간단한 마찰사건의 경우 담임교사가 직접 해결하고 처리하며, 조금 심각한 것은 학년 팀장이 같이 해결해주고, 그 영향이 비교적 광범위하고 여러 개의 학년들과 연루되며 형성된 분쟁이 처리하기 어려울 때에야 덕육처에 맡겨서 처리한다고 알려주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 사이의 대항적인 폭력행위가 비록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대량으로 존재하므로 이는 학교에서 교육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었다.

(五)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학교폭력 중에서 일종의 직접적인 이익침범과 학대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형적인 학교폭력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학교들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행위는 이미 위법의 폭력에까지 닿았으며 그 위해정도가 높으므로 사회가 학교교정 내 안전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주목을 갖도록 하였다. 중국에서 영향력이 비교적 높은 <<남방주말>>에서는 여러 차례나 학교교정 내 폭력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전문적으로 보도하였는데 그것들은 모두 이런 유형의 폭력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현재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교정 내 폭력은 대다수 사이버나 매체를 통하여 접촉한 보기만 해도 몸서리 치지는 학교폭력 안전이다. 이런 극소수의 폭력사건은 사회공공안전문제의 일부분이며 그 정도에 있어 학교폭력의 범주를 초월하고 있고 비록 그것들이 교정 내에서 발생하고 또 그 주체도 교정 내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 심각성과 침해 정도가 이미 학교교정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하였기에, 사회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일종의 파괴와 주체 사이의 선량한 본성을 짓밟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유형의 폭력행위는 이전에는 비교적 적게 보도되었으나 80, 90년대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매체에 의하여 폭로되고 있다. 이는 중국 매체의 영향력 발전과도 연결되고 또는 근래의 사회의 전형(轉型)과 긴밀히 관계되는데, 사

회구조의 변천이 유발한 사회 내재적 모순과 충돌을 은폐하고 있는 점, 대중문화에서 폭력영상의 생산과 모방행위가 그것이다. 만약 범죄심리학과 교육심리학으로 그 학술분야에 선을 그어서 구분한다면 이런 폭력행위는 마땅히 전자에 귀속되어야 하고 후자의 전문기술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 이런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처리하는 책임을 전부 학교에만 귀속시키기 어렵다. 학교폭력 안전, 폭력행위 그리고 폭력사건을 서로 혼동하면 사회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을 쉽게 가질 수 있으며 심지어 불필요한 당황함(공황)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일이 큰 범죄행위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각각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을 절실하게 강화하며 개별 학생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교정내 안전방침’을 제정하는 것은 교육행정부문과 사회 공공안전부문의 공동 책무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교육행정부문에서 독립적으로 매체에서 보도하는 이런 유형의 안전을 대면할 때 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六)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 또는 안전은 교정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지만 교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은 주요하게 일종의 피자극적인 지체 대항 현상이다. 피자극적인 폭력 반응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중에 나타나는 정서 관련 충돌이므로 사전 준비나 그 징조가 없다. 학교폭력 사건의 주인공은 사후에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유감스러움을 표현하고 비록 그들이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지만 그들은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자아비평을 한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반드시 옳지 않은 행위이다.” 이는 중국중소학교에 전달되는 인간관계 윤리에 대한 제일 낮은 기본적인 요구이다. 학교의 처리 방식 상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고무, 격려하고 상처를 입은 학생의 심신건강에 대하여 즉시 구제하거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학생이 자아반성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교육자는 비교적 강력한 교정 수단을 취하여 비평과 징계를 가한다. 이런 부강화적 비평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더불어 폭력행위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원인을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건이 늘 학교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원인도 해석할 수 있다. 교사의 비평과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A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우의단체와 B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우의단체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때 때로는 상대방한테 선전 포고를 하고 학교밖의 전쟁터에서 힘으로 옳고 그름과 승패를 결정하기 위한 약속을 잡는다. 이도 준비형 폭력행위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피자극성적인 폭력행위와의 구별하는 기준이다.

(七) 말다툼 형식이 학교 내 폭력 중에서 아주 보편적인 형식이다. 청소년들의 심신이 발전하고 날로 성숙되어감에 따라 저학년으로부터 고학년으로 감에 따라 쉽게 발생하는 학교폭력 현상이 행위적인 폭력현상으로부터 언어적인 폭력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심지어 구두언어로부터 서면언어폭력으로 발전하는 현상도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아제어능력이 제고된 표현이고 언어기호를 사용하는 능력, 개인감정의 표현능력, 언어를 매개로 하는 기호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부단히 증강한 결과이며 개별적인 언어폭력이 원래의 행위폭력충동을 대체하는 작용을 한 것이다. 동시에 언어폭력이 주는 상처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에 제지를 비교적 약하게 받는 학교 내 국부적인 공간에서 쉽게 용납될 수 있고 부강화적 비평을 받을 때 그 징계를 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것들은 모두 학교폭력의 기본형식의 전환을 공동으로 촉진하고 있다. 현대의 언어폭력은 또 네트워크 기반의 사회환경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가상환경 하에서 인간관계 충돌은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무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며, 사람들이 충돌을 해결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방식이 디지털화와 기호

화로 대체되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사이버에서 문자로 욕하는 것이 언어폭력을 표현하는 형식의 일부분이다. 언어폭력이 가져오는 상처는 겉으로 명확한 특징이 없기에 일부 학생들은 사람을 욕한 후 그에 대해 부인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어난 적이 없다는 서술을 견지하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관리에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다. 평소에 언어폭력이 야만적인 행위로 여겨져 단속을 하나, 단속하는 체제상에서도 종종 주체에 대한 자율과 소양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정신상의 상처와 심령의 상처는 그 정도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게 되어 징계하는 정도가 부족하기 쉽다. 일부 교풍이 문명한 학교에서는 언어폭력이 문화의 배척을 받으므로 폭력을 실행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아제어를 강화하게 하고 사리(이치)적 논박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단순한 폭력을 대체하는 작용을 하며 나아가 이런 폭력이 점차적으로 소실되게 한다.

### 三. 학교폭력의 규훈과 전통

본문의 윗부분에서 알 수 있는 바 현재 중국중소학교의 학교폭력 현상은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정도가 아니며 대부분의 현상은 학생들의 인간관계 교제 중에 나타나는 일종의 적절하지 못한 수단에 대한 학습으로 이해되거나 일종의 게임적 성질의 장난폭력[2]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장난폭력”은 장난형식의 폭력 실행이 아니고 폭력의 형식으로 장난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난은 아동들의 감지세계의 기본방식이며 비자각적이고 비적대적인 폭력형식은 그들의 교류하는 수단이 결핍되어 있고 기호에 대한 조작능력이 높지 못한 이유로 나타나는 일종의 표현이다. 이는 학생들의 사회성정지구조(社會性情智結構, 社会性情智结构)의 완성과 자아제어능력과 인간교제능력이 성숙함에 따라 자연

적으로 소실되고 해결된다. 어떤 폭력형식은 성인 사회폭력에 대한 모방학습인데,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자아행동제어능력이 모두 비교적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학교폭력의 위험성이 대폭 증가한다. 그러므로 중국중소학교는 학교폭력을 예방/방지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강한 규훈 전통과 습관을 유지해왔다.

#### (一) 폭력을 반대하는 문화 전통

유가윤리관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문화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仁, 義, 禮, 智, 信, 忠, 孝, 悌, 節, 恕, 勇, 讓”의 도리 관념을 강조해왔다. 인간관계 교제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는 박애한 마음가짐(仁心), 대의(大義), 예의(厚禮), 성신(誠信, 誠信, 성실과 믿음)을 기본적인 도덕으로 지니고 이는 사람으로서의 지혜이자 또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의 근본이다. “人即愛人(仁即愛人)”, “大義當前(大義當前)”, 자연히 그 어떤 모순도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이익 분배가 필요할 때면 기본적인 선후순서규칙에 따라, 즉 忠, 孝, 悌의 인륜순서를 준수하여 예의 법도에 따라 인간관계의 모순을 조정한다. 가령 무지막지하고 난폭하며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과 부딪치게 될 때에는 자아절제(自我節制, 自我节制), 타인에 대한 너그러운 용서(寬恕他人, 寬恕他人), 용감하게 담당(勇敢擔當, 勇于担当),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사양(謙虛禮讓, 謙虛礼让)하는 미덕기품(美的風範, 美德风范)에 따라 병기를 옥과 비단으로 바꾸는(化干戈為玉帛, 化干戈为玉帛), 즉 나타날 수 있는 그 어떤 폭력 징조는 모두 소거해야 함을 일컫는다. 중국학교는 예로부터 문화교육과 교화로 양성된 傳禮明倫(傳禮明倫)의 직책을 짊어지고 왔으며 이런 기본 도리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여론을 통하여 줄곧 전해져 왔으므로 폭력의 생산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 (二) 안정적인 정책 개입에 대한 강조

폭력은 정해진 질서에 대한 파괴를 의미하므로 물질적인 신체와 재부(財富)에만 손상을 주는 것만 아니라 더 관건적인 것은 정신적인 관계준칙과 분배체계 그리고 도덕신앙에도 상처를 준다는 것이다. 비록 학교폭력 행위가 일정하게 제한된 구역 내에서 발생하지만 그 영향력은 사회폭력행위의 영향력 못지않다. 아동들은 가정의 근본 이익과 희망을 담고 있기에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멀리 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학교의 기본 책임이다. 2005년에公安부와 교육부에서 학교와 주변의 치안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8가지 조치”와 “6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2007년에 국무원반공청에서 국가통계국에 설문조사 임무를 전달하였는데 그중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이 바로 각 성에서의 중소학교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려는 것이었다. 각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모두 엄격히 관리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격려하며 질서 안정을 확보하여 안전문제는 학교관리상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대사(大事)로 되었기에, 감독/관리와 개입/방비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교육자들의 자각 또는 비자각적으로 형성된 작업습관이 되었다.

## (三) 섬세한 관리품격에 대한 숭상

중국의 교육전통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사람으로 육성하는 것에 대한 통일을 강조하며 사람으로 육성하는 데 그 근본을 두는 교육이념을 주장한다.

## 참고 문헌

- [1] Walker, J.C. Romanticising Resistance, Romanticising Culture: Problems in Willis's Theory of Cultural Production [J].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7 No. 1 (1986), pp 59-80.
- [2] 罗志华 从犯罪心理学角度剖析“玩暴力”何以这么吸引 [J] 香港青年协会, 青年研究学报, 第十卷第一期 (总第19号), 2007: (1) 29.
- [3] 保罗·史密斯, 等. 文化研究精粹读本[M].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6:336.

근래에는 “전원덕육(全員德育, 全員德育)”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는데 전체 교사들로 하여금 모두가 학생행위규범의 양성과 품덕배양의 교육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수업 중 개개 교사들의 관리 임무의 중요성은 교수 임무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업 외에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을 모듬화하여 작은 게임을 전개하거나 직접 학급을 보살핀다. 교실에서 학생 리더들은 주동적으로 응당 발생하지 않아야 할 위험행위를 제지시키고 또 교사한테 제때에 돌발 사건을 보고한다. 교실 외에서는 매주 당직과 매일 당직 교사가 순회 점검하여 학교 내 질서를 보장한다. 엄밀한 학교교정에 대한 시공간적 관리가 엄연히 전경(全景)적인 규훈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만일 학교 교육관리상의 세부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앉음 자세의 유지함을 요구하는데, 팔을 굽혀서 두 손을 책상위에 올려놓거나 두 손을 뒤로 가져가게 하는 것들인데 이런 신체에 대한 규훈은 학생들의 신체에 대한 제어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일정한 선에서 지체침범의 폭력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Butler, J.가 제시한 바와 같이 “이는 신체에 대한 간단한 사실과 정지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규훈적인 규범이 규범적이고 강제적으로 반복 표명됨으로써(폭력행위 감소가) 실현되는 것이다.”[3] 학교관리에 대한 세밀한 추구는 객관적으로 각종 현실적인 학교폭력을 감독 및 제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학교로 하여금 각종 가능한 폭력으로 부터 멀어지게 하였다.

2부 지정토론 ①



정 제 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일본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토론

### 1. 토론에 들어가며

지난 연말 이후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이 계속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 이슈들이 오랜 기간 주목을 받지 못하고 다른 이슈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세션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개 국가의 학교폭력 사례와 정책적 대응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크게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로 나눌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적으로 유교문화권이라는 유사성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현상, 대응에 있어서도 유사성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비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토론에서는 우선 발표하신 일본의 학교폭력 문제와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문제와 대응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매년 “초·중·고등학교 아동 학생의 문제행동 등 학생 지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학교폭력이란 아동학생이 일정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 물리적인 공격을 받아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일어난 장소는 학교 내 외를 가리지 않는다. 발표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폭력적인 것과 정신적인 문제로 나누고 있다. 폭력적인 학교폭력은 물건 숨기기, 물건 파손, 금전강탈, 협박하여 어떠한 행동을 강요하기, 때리고 걷어차기 등의 폭력을 휘두르는 등 물리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다. 반면에 정신적인 학교폭력은 외톨이, 무시, 무언 등의 불쾌감이나 정신적 타격을 주는 심리적인 것이 있다.



특히 최근 일본 학교폭력의 경향으로는 어른이 발견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왕따가 음습화(陰濕化)되고 있는데다가 왕따의 대상이 매일 바뀌기도 하고 왕따 당하는 아이와 따돌림을 시키는 아이가 교체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 현대 어린이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왕따의 가해자, 피해자 모두 교사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학교나 교육위원과 연계하여 그 대책을 강구해 왔다. 1996년 7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관하여”(학생 문제행동 등에 관한 조사연구회 보고)라는 보고서에서 학교폭력은 모든 아이와 모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특히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 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인간으로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강한 인식을 가질 것.
- ②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도할 것.
- ③ 왕따는 올바른 가정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④ 왕따 문제는 교사의 학생관이나 지도 자세가 거론되는 문제이다.
- ⑤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모든 관계자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 하나가 되어 진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지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2년 9월 5일에 “이지메, 학교안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처 방침 -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를 발표하였다. 이 방침은 본적으로 ① 학교·가정·지역이 하나가 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며, ② 국가·학교·교육청의 협력강화, ③ 이지메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대응의 촉진, ④ 학교와 관계기관과의 연대촉진을 들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는 다음 4가지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학교·가정·지역이 하나가 되

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대처 ② 학교·교육청 등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대처 ③ 이지메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대응의 촉진을 위한 국가의 대처 ④ 학교와 관계기관의 연대 촉진을 위한 국가의 대처

문부과학성은 이와 같은 대처 방안을 기반으로 하여 2013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약 27억 엔이 늘어난 약 73억 엔을 책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하고 있다.

- ① 국가 및 지자체에 외부 인재의 활용으로 이지메 문제의 지원체제 구축(약 4억 엔)
- ② 도덕교육의 추진이나 체험활동의 추진 등, 이지메 미연방지 대책(약 9억 엔)
- ③ 교육 상담이나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약 47억 엔)
- ④ 교원연수의 충실 등(약 9억 엔)
- ⑤ 이지메 대책 등 학생지도에 관한 조사연구(약 4억 엔)

### 3.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문제와 대응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전국 139만명의 학생이 응답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 학생의 12.3%인 17만명이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에서 지난 4월 발표한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비율은 18.3%, 가해학생 비율은 15.7%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최근의 학교폭력 상황은 여섯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의 저연령화(低年齡化)의 문제이다. 청예단의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초 학교폭력 피해 시기가 초등학교

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010년에는 53.4%였는데, 2011년에는 72.7%로 높아졌다. 다시 말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85.2%가 중학교 1학년 이하에 처음으로 피해를 당한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사회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초등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두 번째, 학교폭력의 집단화(集團化) 문제이다. 청예단의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7.9%가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의 66.2%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가해학생의 수가 '6명 이상'인 경우가 15.9%로 나타났다. 집단에 의한 폭력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인 동시에 집단으로부터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일진' 등 조직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화(多樣化)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의 유형이 단순 신체적 폭력이 아닌 강제적 심부름(금품갈취 포함), 사이버 폭력, 성적 모독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언어적·정신적 폭력의 경우 휴대폰 문자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유형 가운데 협박이나 욕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과 비방 등 언어폭력(51.2%)과 집단 따돌림(13.3%)이 전체 응답유형 가운데 64.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적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급별 피해유형을 살펴 보면, 중학교 단계에서는 '돈 또는 물건을 빼앗김'과 같은 물리적 폭력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과 행동 또는 강제로 몸을 만지

는 행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교폭력의 심각한 특징은 학교폭력이 일어난 후에 재발(再發)과 보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처음 피해를 준 가해학생이 보복 폭행을 하거나(44.0%), 처음 피해를 준 학생이 친한 학생과 함께 다시 폭력을 행사(33.4%)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가해경험이 2회 이상인 비율이 61.1%에 이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 학교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또 다른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섯째, 한 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피해와 가해가 악순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 내 소위 '일진' 학생을 정점으로 학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서열구조가 존재하며, 이러한 서열구조의 중간에 위치한 학생은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청예단의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학생 9,174명에서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은 785명(8.6%)으로 분석되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셀 수 없이(6회 이상)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48.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에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를 줘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예방과 개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피해와 가해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 또 다른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여섯째, 학교폭력의 실상보다는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예단의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은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해율도 오르고 내리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살펴보면 2008년 28.6%, 2009년 32.8%, 2010년 38.1%, 2011년 41.7%로 나타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매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응답의 현상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실상과 달리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심각성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약해서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조기개입의 중요성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 학교폭력은 다른 학생들이 아닌 본인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예방교육, 그리고 사소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철저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2012년 2월 6일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4개의 직접 대책과 3개의 근본 대책으로 구성하였다. 4개의 직접 대책은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첫째,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둘째,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셋째,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넷째,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이다. 3개의 근본 대책은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첫째,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둘째,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셋째,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등이다.

#### 4. 토론을 마치며

학교폭력을 해결해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야 가능하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 거는 사회적인 기대는 매우 크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아이들의 학교폭력 관련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소수의 선생님이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폭력 문제를 완전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생님 개인에게 무한한 책임을 부과하기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가정 몇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폭력 관련 위기의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전 생애에 유아교육과 학교교육에 재학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이며, 이 시기가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 아이들이 하루 중에서 많은 시간을 교육기관에서 보낸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문제 발견(screening)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래 상담, 역할극, 멘토링 제도 등 학교에서의 따뜻한 관심과 대화를 통한 학교 안 프로그램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들도 많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수준에서 관리나 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적 상담과 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연계하는 역할이다. Wee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기관, 치료기관 등이 연계된 학교폭력 대응 체제가 구축되고 유기적인 연계 아래 협력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와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한 처벌과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과 현상에 대한 분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학교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조치의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는 소수 학생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학교 구성원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 참고 문헌

- 관계부처합동(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중간 발표(2012년 3월 14일자 보도자료)
- 김병찬(2012). 학교폭력에서의 교원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 제61차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1-73.
-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서울: 위즈덤하우스.
- 문용린(2011). 학교폭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2007).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외(200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활용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외(200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연구.
- 박효정 외(2005). 학교폭력 실태의 이해와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 성태제(2011). 알기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오인수(2010).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초등교육연구, 23(1), 45-63.
- 정미경 외(2008).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수정(2012). 독일의 학교폭력 대처 방안. 교육정책네트워크 제190호 해외교육동향. 한국교육개발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 외(2007).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Shepherd, J.(2009). Evaluation of the ESCAPE parenting programme., Young People in Focus Ltd.
- Kingdon, J. W.(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New York: Addison Wesley Educational Publishers.
- Sanders, M. R., Dadds, C. M., & Turner, M. T.(2003). Theoretical, Scientific and Clinical Foundations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 Population Approach to the Promotion of Parenting Competence. Parenting and Family Support Centre,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 Phipps, A. S., Barnoski, P., & Lieb, R. (1999). The comparative costs and benefits of programs to reduce crime: a review of national research findings with implications for Washington state. Olympia: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 2부 지정토론 ②



이 강 속

강원체육중학교 부장교사

# 중국중소학교 교정 내 폭력행위 특징 및 규훈

## [요 약]

발표자의 요점 : 「학교 내 폭력에 대해 그룹별로 연구한 결과, 언론매체에서 거론되는 내용과 현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특수성과 복잡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즉, 현재 중국의 중소학교 규칙과 학교 내 폭력 사이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로서 발표내용을 요약해보고, 학교 폭력에 대한 요인 및 대안을 간략히 짚어 본 후, 토론문제 3가지를 제시해본다.

## 1. 내용 요약

### 1. 학교 폭력의 특수성과 복잡성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학생들 사이에 늘상 있는 일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정폭력, 사회폭력과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학교폭력의 대상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면 심신이 깊은 상처를 입는다. 그들은 아동기와 성인기를 이어주는 과도기적인 단계이므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학교 폭력은 매우 좋지 않지만 완전히 소거할 수는 없다. 학교폭력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들은 타인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또는 재미로 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중적이다. 어찌되었던 학교는 안전교육과 안전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 학교 폭력의 일반적인 특징

가.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폭력

두 남학생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학생이 밑에 깔려서 일어나지도 못할 상황이다. 그런데 수업시작종이 울리자 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툭 툭 털고 교실로 들어가면서 한 학생이 “안경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네?” 하는 말조차 한다.

#### 나. 위험한 수준의 폭력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폭력이 더 자주 발생하는 데 이는 힘의 강약을 겨루는 경우로 중재인을 통해 사이가 좋아지기도 한다. 장난을 치다가 싸움이 커지기도 하고 꼬리표가 붙은 학생은 학부모, 교사의 지도를 받거나 학생들 사이에서 배척을 당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 다. 시비를 가리기 힘든 폭력

서로 몰려다니는 틈뜨끼리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켜 대규모 폭력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개입해보면 누가 먼저 손찌검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판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교사들은 매일 이러한 분쟁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 라. 책임전가의 어려움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사회 변천에 따른 내재적 모순과 충돌, 대중문화의 폭력 영상에 따른 모방 행위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일이 큰 범죄행위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행정과 사회공공 안전 분야의 공동 책임이 요구된다.

#### 마. 폭력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학생이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도록 고무격려하고, 상처를 입은 학생의 심신 건강을 위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 3. 학교 폭력의 규훈과 전통

#### 가. 폭력을 반대하는 문화전통

중국은 유가윤리관을 핵심으로 하는 도리관념을 중요시해 왔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부모는 ‘병기를 옥과 비단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 나. 정책적 개입

폭력은 사회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므로 물질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준다. 이를 인식한 중국은 2005년公安부와 교육부에서 학교 주변의 치안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여덟가지 조치’와 ‘여섯가지 조치’를 내 놓았다. 이를 토대로 각급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모두 엄격히 관리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다. 품격 배양

전체 교사들로 하여금 모두가 학생 행위규범의 양성과 품격 배양의 교육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교훈적인 규범은 강제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 II.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 1. 학교 폭력의 요인 및 대안

학교폭력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하여 촉발되기보다는 매우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비록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된 이면에는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하나의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학교 폭력이 많은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확립, 신체적 균형상태 유지, 성적 성숙에 긍정적 감정가지기, 정서적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및 자아통제력 키우기, 또래로부터의 수용 및 지

지, 학업성취 및 진학 등의 발달과업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지식정보사회에서 타인이나 자연과의 접촉기회 감소, 각종 미디어에 의한 간접적 유사 체험의 증대 등 자립 및 사회성이 결여되고 각종 문제행동이나 비행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2012년에도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시행 등 짧은 시간에 매우 중요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도 있으나 학생 생활지도 강화와 학생인권조례의 충돌 문제, 가해학생 조치에 따른 문제, 복수담임제 등의 효과 여부에 대한 의문은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회복시켜 주고, 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어야만 한다.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제도화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악한 사회로부터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주변인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청소년들의 리더십함양, 문화예술이해, 공동체의식, 사회적 책임감, 자연 친화성, 자기이해, 직업의식 등이 향상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공감과 소통을 위한 긍정적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올바른 행동이 나타나도록 적극적인 상담 활동 등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 이성적 판단과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 III.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토론1】

우리학교에서는 경미하게 발생하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과제부여(선행일지, 독서일지), 학부모내교 상담,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과정을 거쳐 대처하고 있으며,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진술조사→사고보고서 작성→학생부 질의응답(가·피해자 학생 및 보호자 참석)→선도 조치 및 합의 조정→사안보고→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가해학생 선도 조치 결정→집행→교육청 보고→유관기관 연계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어서 교사들의 경우, 그 심각성도 크게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표자께서는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교사들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토론2】


모든 학생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알리고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전체 학생에게 가해학생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도와주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방관도 잘못된 행동이며, 올바른 행동이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방관하는 이유는 보복의 두려움, 전략의 부재, 무관심 및 괴롭힘의 인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인데, 먼저 보복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괴롭힘을 목격한 후 이를 안전하게 신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발표자께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의 안전교육과 안전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미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 【토론3】

중국은 예의 법도에 따라 미덕을 따르고 교육과 교화를 통해 폭력이 억제되는 좋은 풍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여 학교 인권조례를 위한 공청회를 마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생의 합의에 따른 학교의 생활규정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법도와 교육이 있다하여도 학교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표자의 주장대로 강한 규훈과 전통적 습관이 폭력을 억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은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회적 폭력, 신체적 폭력 등의 학교폭력을 억제시키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중 주로 어떤 교과에서 이러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2005년에 공안부와 교육부에서 내놓은 조치는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어 봅니다. 

### 참고 문헌

- 최성애 · 조벽, 교사를 위한 감정 코칭, 2012, 해냄출판사.
- 교육정책 포럼, 231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정책 포럼, 230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정책 포럼, 229호, 한국교육개발원.
- 2012 학교생활규정, 강원체육중학교..





## 2부 지정토론 ③



박 효 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학교의 일상적 교육활동 방안에 대한 토론

## I.

발표자께서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과잉경쟁과 사교육, 학교폭력, 자살과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보다 나은 학교교육의 방향을 탐색해 보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과 인성교육의 시대적 정당성 여부와 그 교육적 처방이 적절하였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협동·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의 경험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회성 기술을 알려주며 교과와 교과외 활동 전반에 걸친 연습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이 학력경쟁보다 사회협동을 기조로, 자기주도학습과 함께 협동학습을, 인성교육과 함께 사회성교육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 등 전반적인 학교교육의 방향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토론자는 이와 같은 발표자의 견해 중 학교교육 전반을 통해 자기주도학습과 함께 협동학습을, 인성교육과 함께 사회성 교육을 균형있게 길러주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 II.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며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날 학교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시로 인한 과잉 경쟁과 사교육'이 팽배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으로 인한 교사의 획일적·일방적 강의 수업, 값싼 학교교육과 과중한 사교육비 등에 대한 처방전으로 제시된 '자기주도학습'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관점, 학교교육에서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시고 자기주도학습이 주입식, 설명식, 교사주도 수업과 학생들의 수동적 학습이라는 고질적인 학교 수업에서의 문제점, 사교육 유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나홀로' 공부의 학

산, 서양의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개별화 교육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강조와 성인학습의 평생학습 성과의 특성과 잘 맞아 떨어져서, 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장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선적으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잘못된 개념 인식과 자기주도학습이 목표하는 바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하는 학습으로 자율 학습의 형태인 것으로 인식하고 계신가 하는 점이다. 최근 박효정 외(2011)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잘못된 인식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즉, 16개 시도교육청 소속초등학교 100개교와 중학교 100개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30% 정도의 교사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학습이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자기주도학습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하는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도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주도학습은 학생 스스로의 노력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유능한 친구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지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학교학습 상황에서 교사는 단순히 교과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별 특성에 맞는 학습전략과 공부 방법을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 자기효능감을 갖도록 하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교과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동기전략 방법,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언제든지 교사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것은 끝마치게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행동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기주도학습이 교사 중심으로

교과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학생을 자율적인 존재로 보고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며 과제나 문제해결 중심으로 학습자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학습자로 본다. 따라서 발표자께서 자기주도학습이 주입식, 설명식, 교사주도 수업과 학생들의 수동적 학습이라는 고질적인 학교 수업에서의 문제점, 사교육 유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나홀로' 공부의 확산, 서양의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개별화 교육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강조와 성인학습의 평생학습 성과의 특성과 잘 맞아 떨어져서, 학교에서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자기주도성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수-학습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학교교육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학습을 제안하고 있다는 논리는 비약적이라 할 수 있다. 발표자가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학교교육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의 '인지적인 면'을 주로 강조하고 동료와의 상호 협력이라는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동료들은 협력적 동반자의 관계가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지도해 온 결과라면 오히려 학교구성원에게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고취시키고(예컨대, 자기주도학습에서 강조하는 학생들의 동기유발 전략의 중요성)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한다면 협동학습의 취지도 함께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III.

발표자께서는 현재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현재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의 미비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차원의 인성교육을 교과 활동 속에서, 혹은 교과와 관련된 입시와 관련하여, 실천중심으로 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를 가진 ‘인성’, ‘인성교육’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의도, 구체화된 방향도 설정하지 않은 채, 현재의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차원의 인성교육 강화로 설정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고 보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한다.

먼저, 인성 교육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몇몇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고 그 연구들에서 인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예컨대, 『인성교육』은 이러한 인성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조난심(1997, 2004)은 ‘인성교육이란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기 위해 인간다운 품성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라고 개념화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함양시켜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성품을 인성교육이 추구해야 할 인성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미교육부(2007, 2008)는 ‘인성은 존중, 공정성, 보살핌 등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책임감, 신뢰, 시민성 등을 명확히 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가치들을 행동하고 추론하며, 정서 속에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인성교육은 사람들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의 습관화를 위한 일련의 교육이다. 인성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존중, 정의, 민주 시민적 자질,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 등의 핵심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는 학습과정이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기초로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보전하는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게 된다’고 개념화 하였다.


인성요소를 체계화한 연구로서 박효정 외(2000, 2001)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도덕성과 인성의 개념과 덕목을 구명하고 한국사회의 중·고등학생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인성 영역을 개념화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도덕성과 인성 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지표와 문항

을 개발하여 조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도덕성과 인성영역은 경료효친, 정직, 절제, 근면·성실, 생명존중, 타인배려, 평등 및 인권존중, 공정성, 신의, 용기, 책임·협동, 민주성, 애국·애족, 인류애, 공동체 의식, 성윤리, 정보윤리, 환경보호이다. 또한 조난심 외(2004)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의 실제적인 상황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인성교육 영역을 개념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추출한 학교교육에서 지향하는 인성의 하위 영역은 성실(책임), 정직, 자율성(자주/자기주도성), 절제,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준법, 배려(타인배려, 타인존중), 정의, 민족애, 인류애, 관용, 사고의 유연성, 타문화 이해이다. 이처럼 이 연구들에서는 이미 인성요소들을 추출하고 개념화 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성요소들은 오히려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요소이다. 다만 문제는 개념정의와 구체화된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 등 전반적인 학교상황에서 실천되고 있지 못하고 실천 방법 또한 학생들에게 체득되고 내면화될 수 있도록 지도되지 못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이미 창의적 체험활동인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통해 협동과 배려, 갈등관리, 공동체 의식 등 사회성 요소든 핵심인성요소든 간에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어떻게 지도하고 구현시켜 인성 또는 사회성을 제대로 기를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 모색이 더 중요하다.

다음으로 현재의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차원의 인성교육 강화’로 설정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려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올해 2월 수립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제시

된 인성대책들 중 밥상머리 교육과 같은 대책은 가정에서 개개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성교육이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 등)은 초·중고 현장에서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 갈등 조절, 협동, 대인관계 형성과 같은 인성 덕목을 길러주기 위해 활동과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인성교육 방법이 개인 차원보다도 학교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발표자께서 긍정적인 요소들은 더욱 강조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육에서 강조한 것들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가를 먼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듯이, 우려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인성교육 시행과 시행방법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은 개선해나가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교육 또는 인성교육은 인간의 의식, 가치, 행동을 변화시키

는 문제로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경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학교구성원과 정책 수립자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발표자가 최근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과 대학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인성요소인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가 인성요소라기보다 사회집단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형성의 사회성요소라고 제안하셨으나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요소들도 인성 요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성 교육이라는 새로운 이름보다는 인성교육에서 사회적 공동체적인 요소를 더 강화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관기

진지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길.....

김 훈 범

(주)미래엔 교과서개발실 실장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지난해에 이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두 번째로 기획한 행사의 이번 주제는 '주요국 교과서 정책 및 인성 교육 동향'이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행사는 매우 현실적인 주제였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세계 주요 나라의 교육 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으로서의 주제거리와 요즘 우리 교육계의 화두인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한 논의는 교육계, 나아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교과서 정책(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은 인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의 국정과 검정 교과서 정책에 버금가는 치밀함과 제도적인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사 절차와 채택에 대한 제도와 위계의 정확함, 불합격에 대한 사유의 명쾌한 처리 절차, 교육 기관과 출판사와의 상호 협조 관계 등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일본의 교과서 정책은 검정제의 제도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질 좋은 교과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에 따

른 교과서의 잦은 개편으로 여기저기서 불멘소리가 나오는 우리의 현실과는 사뭇 대조되기도 하였다.

또, 중국의 교과서 제도는 10여 년 간 실험본 교과서 발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발제자의 발표를 들으면서 다소 의문이 들었지만, 교과서에 대한 중요성을 국가가 충분히 인정하고 열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편, 유럽 여러 국가의 교육 및 교과서 제도에서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교육의 주체가 현장 교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교사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과서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수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제도적 장치 없이도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교육 현장을 중심에 놓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에 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도 열심이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아직'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근대 교육 제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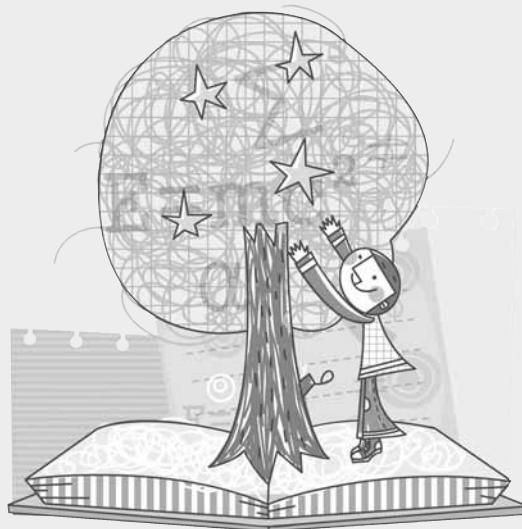
적인 교육 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까닭에 대하여 보다 심층 연구해 보고, 서양의 교육 전통에 갈음하는 우리의 전통 교육 방법에 대하여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가져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주요국의 인성 교육 동향에 대한 첫 번째 발제자인 홍후조 교수는 “학교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작은 사회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협동 교육 또는 사회성 교육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이번에 도입한 인성 교육에 대해서 학교 현장은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자인 일본의 이이자와 타카오 국장의 발제에서는 일본 정부의 학교 폭력의 예방에 대

한 지속적인 노력의 면면을 볼 수 있었고, 세 번째 발제자인 중국의 소상봉 교수의 발제에서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 교육관에 대하여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이러한 인식 전환을 통하여 학교 폭력과 인성 교육을 접근하는 것이 어찌면 더 올바른 교육의 접근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이번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주최한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은 가을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가을 하늘의 높음을 지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와 교육 현안 문제가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는 소통의 장(場)으로서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개최되기를 기대하면서 ‘2013년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을 기다려 본다. 



## 참관기

#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참관기



이 영 자

서울우장초등학교 교사

올 여름방학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인연을 맺고 난 후라서 그런지 수많은 공문 중에 유독 심포지엄 참가 관련 공문이 눈에 띄었다. ‘주요국교과서 정책 및 인성교육 동향’이란 주제가 마음을 끌었으나 여러 날 고민하였다. 우리 선생님들은 납죽납죽 여느 자리든 쉽게 나서지 않는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일은 더욱 그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요국의 교과서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한·중·일의 학교 폭력 대처 방안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인성교육 방향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알고 참석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교과서 개발 관련 업체들의 열정이 느껴졌지만 우려했던 바와 같이 심포지엄장에는 아는 얼굴이 없어서 낯설기만 했다. 한쪽 구석에 자릴 잡고 앉았다. (관심 있었던 부분이 교과서 정책이었기 때문에 ‘한·중·일의 학교 폭력 대처 방안 비교 및 분석’ 관련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임)

주제 발표자의 발표를 마치고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

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아쉬운 점은 언제나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었다.

## □ 미국의 경우

김재춘 교수의 ‘미국의 교과서 인정제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는 심포지엄장 안을 후끈하게 온도를 높이고도 남았다.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교과서 심사 제도와 자유발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워싱턴 주의 교과서 심사 제도를 살핀 후 미국의 교과서 심사제도가 우리 나라 교과서 발행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이야기하고, 주제 발표 후 5명의 토론자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교과서 검정제와 인정제의 경계에 대한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인위적인 검인정제도의 구분을 넘어서 국가/교육청이 심사/승인을 얼마나 엄격하게 할 것인가,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위해 심사/승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주기적인 심사/승인제를 도입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 출판사와 교육관계자 모두가 어떤 교과가 언제 교육과정과 교과서 심

사 기준이 바뀌고 교과서 승인 심사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 과정에서 출판사를 참여시켜 적절히 활용하며, 심사 후 각 교과별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를 공개하고, 심사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22개의 전시장에서 30일 동안 전시하여 지역사회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철저하게 공개적이며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는 점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교과서 심사의 과감한 공개 및 투명성을 높여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불합격이 없이 심의만 이루어지는 국정, 검정심사를 준용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검정과 인정과의 심사의 엄격성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어, 도덕, 역사 등 사회적 갈등 유발이 염려되는 일부 교과는 엄격히 승인 심사하고, 나머지 교과는 느슨한 승인 심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학교단위의 약식 심사를 거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별로 심사의 엄격성을 달리하는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도입되었으나 교과서 가격을 심의하여 조정하는 통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교과서 가격 심사 정책을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교과서 가격 설정 환경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교과서의 시장 가격이 적절하게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 □ 중국의 경우

‘국가관리로부터 민간자율로의 전환,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중국, 몽골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 구난희 교수의 주제발표에서는, 사전에 교과서 개발 참여자에 대한 전문 역량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교과서 개발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고 있는 중국의 교과서 제도를 통해 검정심사가 원래의 기능보다 기초적 사실 오류 발견 및 표현 표기 수정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제기 되는 우리의 교과서 현실을 감안해보면, 관리와 자율의 보완적 제도 보완의 접점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의 초심제, 몽골의 교과서 제작팀 선정 운영 등의 과정에서 집필자와 제도 운영 당국과의 수시 의견 교환 및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에서 교과서 개발 정책 관련하여 ‘문건의 개발과 해석상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에 기인했던 문제해결’을 위해 참고할 만한 것이라 하면서 교과서 개발로부터 검정, 채택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히 되돌아보고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의사소통의 구조를 정비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토론자는 ‘자율과 경쟁’, ‘통제와 관리’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 운영되는 중국과 몽골의 교과서 정책으로부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발자 사전 역량 평가’, ‘심의 중에 개발자와 심의 당국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치’, ‘장기간의 실험적용을 통한 실질적 평가기간 확보’는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 □ 일본의 경우

검정제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교과서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충호 과장은 일찍부터 교과서 검정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일본은 민간에서 제작·편집된 도서에 대하여 검정심사기준에 기초하여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위원30명, 임시위원105명, 전문위원 109명 등)의 전문적, 학술적인 심의를 거쳐 문부과학 대신이 교과서로서 적절한가를 심의하여 이에 합격한 도서를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교과서 조사관이 상근 전문직원으로 50명이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심의에서 유보된 도서는 문부성 조사관에 의해 수차례의 수정 절차를 거쳐 거의 모든 도서(99%)가 검정에 통과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용도서 검정의 목적은 신청도서 일부를 불합격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많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학교에서의 선택권이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과서를 ‘관광 가이드 책과 여행자’ 같은 감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일본의 한 교육행정가의 말은 귀담아들을 이야기라고 생각되었다. 교과서는 참고서이고 이를 바탕으로 그 속에 있는 진실, 진의를 배우고 새로운 ‘눈’ 새로운 ‘씩’을 기르도록 해야한다는 ... 일본의 독도 문제 등과 관련한 많은 교과서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것 같았다. 검정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조사관에 의해서 수차례 수정 절차를 거쳐 99%의 도서가 검정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교과서 조사관이 만든 교과서로 전락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 □ 유럽의 경우

‘교과서의 심사, 선정, 개발에서 교사의 자율성-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의 교과서 정책 연구’란 주제 발표에서 강선주 교수는 교과서 선진화 정책과 관련한 교과서 제도와 교과서의 존재 형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인정도서 확대라는 교과서 편찬 주체와 심의 과정에 대한 자율화 정책이고, 서책형 디지털형(e-교과서)을 더 하는 교과서의 존재 형태 확장, 즉 SMART 교육정책에 대한 발표였다.

독일만 검정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자유발행제를 실시한지 오래인 영국, 프랑스, 핀란드는 ‘교사의 질이 교과서의 질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교과서 이외에서도 찾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럽과 우리나라는 교사 교육제도 및 교과서에 대한 개념도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과서는 여러 교재 가운데 하나일 뿐 수업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일제교사가 없는 환경에서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교사 개인은 교재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환경의 유럽의 여러 나라의 교과서 정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첫째, 인정제는 규제를 풀어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교과서들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지만 학계의 새로운 성과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정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정제나 자유발행제를 지향한 체제 변화를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둘째, 창의인성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보완적 사용'을 권고하면서, 서책형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대체할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 이유로는 인터넷 중독증 문제, '창의적 인간'과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소집단 협동학습'을 강조하는 인간상 정립을 도울 수 있으면서 서책형과 디지털형 교과서가 상호보완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개발되어야 하며, 디지털 자료에 대해 저항감을 보이는 교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한 담론도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 불, 독, 핀란드 등의 지식을 탐구하고 구성하는 과정으로서의 수업 진행 방법이나 개별화 학습·소집단의 프로젝트식 수업에서는 서책형이든 디지털화된 자료든 탐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수업에서는 지식을 아는 것보다 '사고'와 '문제해결'의 과정을 중시하며, 많은 정보를 아는 것보다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래의 서책형 교과서처럼 정보를 주고 학생들이 이것을 기억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될 수 있는지 숙고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구성할 때만이 디지털 교과서가 서책형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서책형과 디지털형의 장단점과 상호보완성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하면서 우리 교과서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알아야 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담는 방식으로 개발된 서책형 교과서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과 인터넷의 발달은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하므로 서책형 교과서도 학생들이 지식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기능하도록 그 개념과 기능 자체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유럽의 교과서 정책 및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것은 미국과 달리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었기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 □ 교과서 출판사의 입장

이날 심포지엄은 평소에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교과서 개발의 또 하나의 주역인 출판사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욱 반가웠다.

자주 불규칙적으로 개편·적용되는 교육과정 및 학교현장의 자율성 통제와 불규칙적인 교과서의 개편으로 교육수요자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서 출판사의 단위 경영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교과서가 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인정도서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양질의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교과서 채택의 규제는 큰 틀의 채택 원리(규제)만 두고 시장원리에 맡겨달라고 주문했고, 가격의 결정도 출판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산성 없는 교과에 대해서는 교사가 알아서 시중 서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발행사가 교과서 발행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소규모 발행사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디지털 교과서 적용의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실시되어야 하는데 단말기 사업이 아닌 교육 콘텐츠

트와 교수·학습 방법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검인정 교과서 발행사 간의 내재된 상호 경쟁적 활동과 2011년의 '교과서 외형체제의 자율화' 정책으로 교과서 편찬개발비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발행사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교사와 학생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의 흥미를 돋우고 가독성과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니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장점이 되는 정책이라고 토론자는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교과서 주문부수의 감소로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과서가 많아 문제라며 비싼 교과서 값과 선택교과목의 증가로 인한 교과서 구입 회피,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개발한 양질의 교과서가 학교 교실에서 사라지고 EBS문제집이 교과서의 지위를 차지하는 현실에 대한 해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다양하고 가치 있는 교사용 수업지원 자료를 학교에서 구매하여 활발하게 활용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는 것, 검정합격률이 99%를 넘고 있는 일본의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와 교과서조사관이란 전담기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 질관리를 하고 불합격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과 교과서의 수시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과서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고, 상시 체제의 교과서 전담 조직과 인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교과서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출판사도 교과서 편찬에 있어 주체로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교과서 정책 방안 수립 및 적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입장

2012년 학교현장에서는 기 개발된 디지털교과서를 쓰지 않는다면서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해오고 있는 것이 현장의 실태이며, 2015년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현장의 교사나 학생들의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은 극히 미미하고,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현재는 디지털교과서는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과서 자율화 정책과 디지털 교재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서지영 연구위원의 '교과서 자율화 정책의 기준은 심사 제도(발행 제도)가 아닌 사용 제도여야 한다'는 토론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유럽의 경우 교과서라는 것이 갖는 위상과 역할이 다르다. 그런 나라에서는 수업에 도움이 될 때 즉 필요로 할 때 사용 또는 참고하는 여러 수업 도구 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깊이 관여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과서 심사 및 발행제가 느슨하고 자율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 측면도 느슨하고 자율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발표자의 토론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인정제 확대의 효과로 다양한 개발 주체가 등장하고, 출원종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교과서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으나 실제 달라진 것은 심사 주관 기관이 달라지고, 보다 비체계적이고 덜 엄격한 심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 외엔 검정제와 크게 달라진 면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사용 환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정제 등 교과서 자율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행제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사용에 대해 먼저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유럽의 디지털 교재 정책에 대한 쟁점화는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으며, 논거로는 디지털교재는 디지털 교육 전 단계인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소양 교육이나 활용 교육과는 다른 것이며 디지털 소양 교육을 지나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점이 형성되고 최종 단계의 관심사로 이것을 위한 교육 재료인 디지털 교재가 언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직은 유럽에서 디지털 교재 문제가 주요 쟁점화 되기는 매우 이른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교사 중심의 교과서 활용, 대형 출판사가 장악한 서책형 교과서 시장 환경 등도 그 이유가 된다고 하고 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의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독특한 사례이기에 외국의 사례나 국제 비교 연구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고유의 교과서가 아니라 나라별로 필요한 부분을 약간 수정한 공통적인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는 외국의 디지털 교육 사례는 우리나라의 디지털교과서와는 개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란단.

또한 발표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필요성과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단지

서책을 보완하려고가 아니라 디지털교과서가 필요한 이유나 효과가 명확히 이해, 공유된 후에 계획·시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 즉, 디지털화된 교수 또는 학습 자료들이 교육이나 수업의 어떤 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지 면밀히 연구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교과서의 필요성이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해 정책을 구상·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과서를 선정하고 활용하는 교사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인 교과서를 통한 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는 '어떤 교과서를 제공하는가'보다 '어떻게 교과서를 사용하는가'를 고민하고 지원할 때인 것 같다는 토론자의 말은 현장의 교사들이 깊이 있게 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 도대체 검인정제도와 디지털 교과서 등 교과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막연한 궁금함을 가지고 심포지엄장에 들어왔었지만 심포지엄을 지켜보고 비로소 오늘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에 온 이유를 안 것 같아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한국교과서재단과 인연을 맺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마움을 갖는다. 





## 금융교과서개발 및 금융 특화 프로그램의 성과

### 1. 금융교육의 필요성

IMF금융 위기 이후 금융교육의 부재와 금융 전문가의 부족이 IMF를 초래했다는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전 국민의 화두가 되기도 했다. 특히 청년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졸업 후 곧장 사회로 진출할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인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금융교육이라는 생각이 교사인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들게 되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금융교육은 학부모에게 기대하기보다는 학교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금융경제교육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크기에 금융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담당해야하며 학습도우미 역할은 교사가 먼저 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최 기 순

(전)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2. 특성화 사업으로서의 금융교육

90년대 이후 학력인플레이에 따른 취업난과 취업의 질적 저하로 모든 전문계 고교는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대대적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전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화사업 즉, 교육청 주관의 특성화 사업의 추진이었다.

첫 번째 신청에서는 서울여상도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금융정보와 국제통상을 명목으로 한 두 번째의 도전으로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금융 특성화 고등학교로 선정되는 기회가 열렸다.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금융'을 특성화 아이টে으로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고교 졸업 후 20년 이상 동일계 회사에서 근무한 졸업생의 대부분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 종사자라는 통계 자료였다. 굴지의 대기업으로도 많이 진출했지만 거의 단명했고 시중은행 지점장급만 해도 80여명 이상인 현황을 볼 때 실력과 성실함, 여성의 감성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금융 특성화 교육'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둘째는 거시적으로 보아 금융산업이야말로 성장 잠재력이 대단히 높은 유망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률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융 특성화는 교육과정에서 볼 때도 상업계 전문교과의 특성을 무리 없이 잘 살릴 수 있음은 물론 학생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밑거름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3. 금융교과서의 개발

#### 가. 최초의 금융 특성화의 문제

막상 금융정보 특성화고로 선정은 되었으나 수업에 이용할 수 있는 단 한 권의 교과서도 없고 기본적인 교육과정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모든 문제는 금융 특성화를 주관한 교과 주임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당장 2007년 특성화 첫해부터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부터 개발해야 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위한 표준교재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기존 모델이 없는 신규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다.

하지만 워낙 다급하다보니 교육청으로부터 교과과정 승인을 얻는 일, 금융교과서 개발 계획 등 모든 관련 업무를 서둘러 진행시켜 나갔다. 각 학교에서 소집된 관련 교사들을 주축으로 교육청 주관의 교과과정 편성과 교과서 채택을 위한 밤샘 회의까지 했으나 모두들 뚜렷한 의견이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금융은 특별한 관심이 없는 생소한 교과였고 무엇보다 사실은

교사 자신도 금융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상업정보 담당교사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으나 딱히 결정할 내용은 없고 결국 한 사람이 맡아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필자가 본격적으로 교과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필자 자신이 그동안 금융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의 금융 연수와 사이트, 서책을 통한 학습으로 다른 교사들보다 조금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 나. 금융교과서 개발 준비

##### (1) 사회의 필요를 반영한 교과서

교과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어야 할 뿐더러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필요한 교과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금융기관별 순위를 보니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순이었다. 1990년대말까지도 은행에 그렇게 취업을 많이 했으나 2000년대부터는 은행 취업은 고졸 자격으로는 넘볼 수 없는 벽이었다. 그렇더라도 저축은행 업무도 어차피 은행업무이니 증권, 보험, 은행의 세 가지 기관 업무를 주축으로 금융실무의 내용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2)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과서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육 수요자가 흥미가 없으면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 학생들이 가장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언인가 직접 조사해보니 어려운 금융 이론보다는 취업한 후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주식거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문의 주식란 보는 법, 각종 금융상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금융 관련 직업에는 무엇이 있나, 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 경제기사 바르게 읽기 등 실물경제에 관한 내용을 강의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따라서 고등학교 금융교과서에서 기초적으로 다루

어야할 내용은 고도의 금융이론이 아니라 소득, 저축과 투자의 이해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신용카드 거래나 보험에 대한 실물경제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 (3) 평생교육으로서의 지식을 담는 교과서

지금 당장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삶의 지침이 되는 지식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시대는 소비에 대한 끝없는 유흥이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생활태도를 위협받게 만드는 현실로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하고 건전한 소비 철학과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금융교과서에서 올바른 소비 문화와 신용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4) 긍정적 금융관을 심어주는 금융교과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금융에 대한 건전한 생각과 긍정적 가치관을 키워주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정적 금융관(金融觀, 한자확인 필요)은 금전에 대한 냉소적 태도와 나와는 상관없는 소외의식으로 자라게 되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른들의 이중적 금융관을 수없이 접하게 되고 자연스레 부정적 사고를 갖기 쉽다. 저축이나 투자 즉 근검, 절약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갖는 삶의 자세임을 터득하게 해주는 내용을 담아야하며 금전은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니라 값지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삶의 원천이 됨을 가르쳐야 한다.

### (5) 전문성을 살리는 교과서

금융생활에 대한 삶의 자세나 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특성화를 목표로 개발하는 교과서만큼 다른 전문계 고교와는 차별화된 내용과 수준의 향상된 교과서가 필요했다. 금융과목 수업이 졸업 후 진출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했다. 또한 금융기관 취업에 있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기초 교과와 달리 금융법규나 증권금융시장은 심화 과정으

로 은행텔러나 증권투자상담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많이 포함시켰다. 전문교과 수업을 받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에 쉽게 도전하고 있다.

### (6)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교과서

금융전문가는 많지만 전문서적이 아닌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교과서로 집필해 줄 수 있는 집필자를 구하기는 가장 힘든 일이었다. 졸업생과 각종 금융 관련 연수담당자를 찾아가 과목별 집필자를 선정하고 본인이 모든 교과서 집필에 함께하게 되었다. 교과서를 완성하기까지는 일요일도 휴일도 없이 보낸 바쁜 시간이었다.

## 다. 금융교과서 탄생

2007년도 말에는 교육과정 편성에 금융과목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교과목 신설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코드를 받았으며 교육청의 지원과 특성화 예산으로 교과서 개발을 끝내고 마침내 완성된 ‘금융일반’ ‘금융실무’ ‘금융법규’ ‘증권금융시장’ 교과서를 출판하여 정규수업 시간에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서울 시내 전문계 고교와 지방에서 채택하여 정규수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금융일반’은 초판이 모두 소비될 정도로 수요가 많았고 요즘은 금융기관 고졸 취업 확대로 모든 금융 관련 교과서의 소비가 계속 증가 추세이다. 현재는 금융 관련법의 개정과 금융 상황에 맞추어 이미 개발된 교과서의 수정,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교과서의 개발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밑천이 되는 지식과 정신을 길러주는 데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어야 함이 기본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 [금융교과서 구성 체계]

기초 과정에 속하는 교과가 ‘금융일반’으로 전교생이 모두 수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실무’와 ‘금융

법규' '증권금융시장'은 심화과목으로 금융정보과의 전문과목으로 배우고 있다. 전문과목은 은행텔러나 증권투자상담사 등 금융기관에서 실무진에게 자격증 취득을 요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009년도 개편 교육과정에서는 '금융일반'과 '금융실무'가 금융 관련 전문계고의 필수 이수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 본인이 집필한 각 금융 교과목의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상-14. 금융 일반

##### 1. 성격

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개인의 재무관리, 소비와 신용, 저축과 투자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기초 이론과목이다.

##### 2. 목표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원리를 이해하여 합리적 소비와 건전한 투자능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둔다.

##### 3. 내용

- 가. 경제활동과 금융
- 나. 소득과 소비
- 다. 저축과 보험
- 라. 투자
- 마. 재무설계

#### 상-20. 금융 실무

##### 1. 성격

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금융 실무 기본 교과이다.

##### 2. 목표

다양한 금융업무를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여 학습함으로써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키우고 금

융 전문가로서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3. 내용

- 가. 은행 실무
- 나. 증권 실무
- 다. 보험 실무
- 라. 기타 금융기관 실무

#### 상-22. 금융법규

##### 1. 성격

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금융일반」교과에서 익힌 기초 지식을 토대로 하여 금융거래 및 금융업무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다양한 사례를 통한 학습으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 심화 교과이다.

##### 2. 목표

금융거래 및 금융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아야 할 금융관련 제 법규 및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개인으로서 금융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고객을 상대로 금융 업무를 다루는 금융전문가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 3. 내용

- 가. 금융생활과 법
- 나. 회사법
- 다. 금융관련법과 제도
- 라. 금융 세제

그 외 증권 금융시장 교과서에는 금융과 금융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경기변동과 경기예측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 라.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

금융교과서는 그 내용 자체가 고등학생에게 수준이 너무 높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으로만 단편적으로 수업을 하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 특화를 통한 교육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양한 수업 방법의 연구는 교사에게 필수적이다.

#### (1) 각종 금융 유관기관 활용

금융 관련기관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시킨다. 우리 학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시범 학교, 금융투자협회의 금융교육, JAkorea의 경제교육, 산업인력공단의 'Job school'과정 등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2) 각종 무료 교육사이트 이용

각 기관마다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방문교육도 활용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인다.

#### (3) NIE 교육

NIE 수업은 현실적인 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다각적인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

#### (4) 실습 프로그램 운영

이론만으로 수업을 하기보다는 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더욱 흥미를 유발시킨다. 은행의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고, 증권회사의 무료 HTS시스템을 설치하여 모의 주식거래 실습에 활용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인다.

### 4. 금융특화 프로그램의 성과

#### 가. 다시 찾은 명성


금융 특화교육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시대회나 행사에 동참함으로써 좋은 성과로 각종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여 과거의 실업계 최고의 명문이라는 명성을 되찾았음은 물론 전문계 고교의 롤 모델로 언론이나 교육 관련기관에 수없이 언급되곤 했다. 우리 학교 시스템을 배우려는 전국의 많은 전문계 교사의 방문이 하루도 그칠 날이 없을 정도이다. 특성화교육과 관련한 상이란 상은 우리 학교가 모두 휩쓰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증권경시대회 참가하여 2008년 이후 연이어 최고의 성적우수학교상을 수상하였다. 금감원의 금융백일장 행사에 전교생이 참가하고 연속적으로 여러 명이 입상하여 금융교육 우수학교로 3회에 걸쳐 선정되어 교육부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필자는 지도교사로 2회에 걸쳐 금융교육 우수교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 나. 우수학생 확보

금융 특화교육으로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입학생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성적 향상은 교사도 수업에 신나게 참여할 수 있고 수업 분위기의 개선으로 교육의 효과가 배가되는 기쁨도 덩으로 얻게 되어 학교가 점점 발전해가는 기쁨이 되었다.

#### 다. 취업률 향상

금융 특화교육으로 가장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혜택은 취업률의 향상과 취업의 질적 향상이다. 실제로 2000년 들어 중지되었던 은행권 취업이 활발해졌으며 모든 금융기관 취업률이 향상되었다. 남보다 먼저 실시한 금융 특화교육은 정부의 고졸 취업 확대 정책의 준비된 수혜자로 곧바로 취업에 활용함으로써 유수의 금융기관에 대거 취업하게 되었고 보수 수준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다. 





※ 서울여성 홈트레이딩 시스템



이번 호에 실린 내용은 스웨덴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주요 자료를 요약한 것이며 대학 및 전문대학은 생략했다. 필자의 의견이 없는 객관적인 보고임을 참고 바란다. 다음호에는 교과서제도 및 교과서 특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 외국의 교육과 교과서제도

### 스웨덴의 교육제도(2)

-스웨덴의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소개



양혜원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 선임연구원

#### 1. 들어가는 말

스웨덴의 교육 제도는 195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변해 왔다. 인종과 사회적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성장기의 모든 어린이와 젊은이는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교육의 기본 방침이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답게 교육을 국가가 제공해야 할 가장 큰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에 필요한 자료뿐만 아니라 교통비, 하숙비, 대학원의 학비까지 모두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빠르면 1세 유아부터 제공되는 보육시스템은 아동들의 조기 교육(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직장생활 혹은 학업 수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한국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친 형태로 1~9학년이 1개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10~12학년으로 주로 계열(전공)별 학습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인문과 실업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고등학교의 상향 평준화에 노력하고 있다. 대학 진학은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 중 낙제만 없으면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2. 스웨덴 교육제도의 특징

부모는 아이의 학군과 관계없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편리에 따라 주소에 맞는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하곤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1회 연극을 관람해야 하며 호수의 나라답게 수영 및 해양안전 교육이 필수이다. 또한 Father System이 있어 한 학생이 가난한 나라의 한 아이를 돌보는 제도가 있으며 6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주일씩 사회에서 실습하는 과정이 있다. 초중학교를 마치면 대부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직업계와 인문계로 나뉘어진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지역과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교과서를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쓰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비교적 자율성과 흥미를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스웨덴정부가 교육부문의 경쟁성을 강조하고 평등 교육을 강조한 나머지, 학생들의 수학 능력이 떨어지고, 결석율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엘리트 교육의 중요성을 점차 깨닫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스웨덴은 학생들의 성적 평가보다는 개개인의 학업 수학능력 및 발전에 교사와 부모가 함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18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일찍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고등학교에서 이미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은 직업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갖게 되며,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지만, 여행 혹은 직장생활 등 경험을 쌓은 후 비로서관심이 있는 분야의 학업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스웨덴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전통적인 학업을 위한 교육과 전문적인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가 모두 대학 및 전문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스웨덴에서는 대학 및 전문대학 이외의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고등교육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학생들이 고등교육과정 중에 동일한 교육 시스템의 틀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특별한 분야로의 전환(전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고등교육의 다른 한 가지 특징은 프리무버(free mover) 학생층이 넓

다는 것인데 학생들이 어느 한 과정의 전공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정 학업프로그램에 따라 학업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자기 발전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즉, 모든 학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고 자율성을 갖추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관심 있는 분야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이 스웨덴 교육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학<sup>1)</sup>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진학할 수 있는데, 진학률은 현재 50% 내외가 되고 있다. 우살라(Uppsala)대학, 왕립공과대학(KTH), 카롤린스카의과대학, 스톡홀름대학 등이 유명하다. 학교 입학은 학생,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도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학교 자율적인 능력 개발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철저한 지방 분권화 정책으로 교육에서도 학교에 대한 장학, 감사를 통한 학교 통제를 하지 않고,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우선으로 하여 교과서 선택, 시간 배정 등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과정은 스웨덴 정부가 제시하는 교과과정(curriculum)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또한, 교장 공모제 시행으로 교사가 아니더라도 교장 공모에 지원하여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아 자율적인 학교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비영어권 국가이면서도 영어 능력이 우수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스웨덴어와 영어의 어순이 같다는 점에서 습득이 쉽고, 매스컴에서의 영어 방송의 경우 스웨덴어로 더빙하는 것 대신 자막으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친숙도가 높다는 점, 영어 교육은 주로 의사소통 중심이라는 점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3. 스웨덴 교육 과정

#### 1) 유치원(Pre-school)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은 크게 유치원(pre-school), 교육적 보육(pedagogical care), 열린 유치원(open pre-school)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초등학교 예비반 및 초중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동 교육활동은 기본적으로는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책임지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이며 동시에 부모들이 자신의 직업 혹은 학업을 수행하면서 아이들의 보육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스웨덴의 코문(Kommun, 자치구)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1세 유아부터 동 교육활동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첫째 부모가 직업 혹은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이고, 둘째 부모가 실업 혹은 부모휴가(parents leave)중에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아이는 하루에 최소 3시간 또는 일주일에 15시간

1) 스웨덴에는 현재 총 14개 국립대학(university), 21개 전문대학(university colleges), 15개 사립 기관(private institutions)이 있으며 사립 기관 중에서 박사 학위 수여가 허락된 기관은 3개 기관-찰머스 공대, 스톡홀름 경제대학, 엔쇠핑 대학 재단-이고 이외의 사립기관들은 학사 혹은 석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기관들이다. 본 호에서는 스웨덴 대학교와 전문대학 과정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함을 양해바란다.

에 해당하는 유치원 자리를 제공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치원 신청 후 최대 3~4개월 내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각 코문들은 적당한 수준의 유치원 비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만 3세(가을학기 기준)가 되는 아동들부터 연간 525시간의 유치원을(일반유치원)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밖에도 모든 코문들은 유치원 비를 받을 경우 각 가정마다 최대 지불금액을 한정하는 maxtax <막스 타사> 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모든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활동을 모두 책임지고 있으며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는 것을 중점으로 즐겁고, 안전하고, 교육적인 유치원이 되도록 한다. 유치원은 일 년 내내 개방되어 있으며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할 의무는 없으며 부모들은 자신의 직장 및 학교 스케줄 및 아이의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적 보육시설은 예를 들면 일반 가정 혹은 다가정 형태의 곳에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를 일컬으며 이전의 가정보육시설이라는 용어가 2009년 7월부터 교육적 보육시설로 변경된 것이다. 이 곳에는 1세 유아부터 12세 아동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활동내용 및 목표는 일반 유치원과 같다.

열린 유치원은 특별히 등록이 필요 없으며 언제든지 원할 때 참여가 가능한 유치원으로서 아동과 부모/보호자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적 그룹활동을 함께하는 형태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교육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며 어른과 아이의 필요에 맞추어 활동계획이 짜여 진다. 많은 코문들이 사회서비스와 열린 유치원의 협력을 실시함으로써 부모의 의료적/사회적 서비스 수요가 충족되도록 하고 있다. 열린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과 그의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적 보육시설 보조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코문의 규정에 따르면 코빈 담당자가 유치원 활동은 정기적으로 계획, 후속조치, 평가하도록 하며 각 코문들은 동 교육 활동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가진다. 아동 및 부모들은 유치원 코문의 평가활동 및 연간 보고서에 참여할 수 있다.

## 2) 초등학교 예비반(Pre-school class)

초등학교 예비반은 자율적인 학교 형태로서 모든 아동들의 학습능력 개발 및 초등학교 수학에 적응을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예비반은 초등학교의 교육계획에 맞추어 진행되며 예비반, 초중등학교 및 방과후 가정 세부분이 상호연계 되어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가을 학기를 기준으로 만 6세가 되는 모든 아동은 이 예비반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며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받게 된다. 특별 지도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특별지원이 실시되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동 혹은 그에 해당하는 아이들 또한 예비반에 상응하는 활동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예비반은 각 코문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대부분은 예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초중등

학교의 교장이 예비반의 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예비반은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연간 최소 525시간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예비반은 초등학교 교육의 일부로서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학생들의 학습능력 평가에는 제외된다.

### 3) 초중등학교 (Compulsory school)

스웨덴에서는 모든 만 7세 아동부터 16세 청소년까지 학교교육을 받는다. 입학시기는 아동마다 다르지만 보통 6, 7세 혹은 8세에 시작한다.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서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교육내용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같은 수준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 초중등학교는 일반 초중등학교, 사미학교<sup>3)</sup>, 특별학교 및 의무 특수학교의 4개로 구분된다.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수학하기 어려운 아동의 경우 특별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게 된다. 스웨덴의 학교는 대부분이 코문(자치구) 주체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코문 학교에 배정되지만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배정된 학교 이외의 다른 코문 학교 혹은 코문 자율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학교감독원의 통과를 얻어서 설립할 수 있다. 자율학교의 교육방식은 기본적으로 코문 학교의 목표를 따르도록 하지만 코문학교와 차별을 둔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데, 자율학교들은 일반적으로 특별 교육(몬테소리 또는 Waldorf교육(대안교육)), 민족과정(ethnic concentration) 또는 일부 종교적 특성을 가지는 과정 등과 같이 코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학교가 학교감독원의 규정을 어길 경우 감독원은 자율학교의 운영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학기별 성적은 8학년 가을 및 봄 학기, 9학년 가을학기 말에 평가하게 되며 최종성적표는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 혹은 과목 이수를 마쳤을 경우에 받게 된다.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은 아동이 16세가 되는 봄학기 말이다. 학기별성적 및 최종성적은 최우수(MVG: pass with special distinction), 우수(VG: pass with distinction), 양호(G: pass)의 3단계로 나뉜다. 만약에 학생이 정해진 학업수행능력에 못 미치는 경우 그 과목에 대한성적은 공란으로 남겨지며 대신 학생의 학업결과에 대한 교사평가를 기입하게된다. 이 경우 어떠한 지원조치를 행하게 될 것인지를 함께 적게 된다. 그밖에도 스웨덴에서는 최소 학기당 1회 학부모 면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면담의 목적은 학생의 학업 및 사회적 능력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최대한 뒷받침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방법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개인 발전계획을 문서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 발전계획에는 학생의 학습목표에 따른 학업수준 및 발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면담을 통해 현재까지의 발전내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기본적으로 개별 발전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3) 사미학교란 사미족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고, 스웨덴의 소수 민족으로 그 규모나 숫자는 적다. 스톡홀름에는 없으며 주로 스웨덴 북부 지방에 작은 규모로 존재한다.

#### 4) 학생보육시설 (Skolbarnsomsorg<스콜반스옴소리>)

학생보육시설은 fritidshem <프리트즈헴>이라고 불리는 방과 후 가정, 교육적 보육시설, 열린 방과 후 활동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초등학교 예비반을 포함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12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생보육시설은 앞의 유치원보육활동과 함께 아이들의 신체적·지적 성장을 돕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각 코문들은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업 중일 경우 아동이 12세가 될 때까지 동 지원을 할 의무가 있으며 10세~12세 아동의 경우 열린 유치원과 비슷한 형태의 열린방과 후 활동도 제공하고 있다. 방과 후 가정이란 12세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인 그룹 활동으로서 학교의 보조역할을 함과 동시에 아동들에게 가치 있는 여가시간 제공 및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방과 후 가정은 유치원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직업 및 학업을 수행중인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방과 후 가정은 크게 시간적, 내용적 측면에서 학교의 보조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로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 혹은 방학 기간 동안 제공된다는 점과 둘째, 학교에서 얻지 못하는 다른 방법의 경험 및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학교 교육과 방과 후 가정교육이 함께 어우러져 아동들의 전체적인 측면의 발달을 꾀할 수 있다고 여긴다. 방과 후 가정은 일년내내 제공되며 이용시간은 부모와 아이의 수요에 맞추어 조정이 가능하다. 방과 후 가정 활동은 보통 학교와 공동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인력, 장소, 교육적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코문들은 부모가 직업/학업에 종사하는 경우 모든 12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방과 후 가정, 교육적 보육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방과 후 과정 활동의 경우도 유치원 활동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선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며 maxtaxa <막스타사>시스템은 코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교육적 보육시설은 2009년 7월 1일부터 학교법에 가정보육시설에서 교육적 보육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적 보육시설은 미취학 아동 및 취학 아동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1세~12세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다. 활동은 아동의 호기심과 배움을 자극하고 재미를 위주로 계획되며, 동시에 교육적 보육시설은 부모들이 직장생활 혹은 학업이 가능하도록 짜여 진다. 코문들은 적절한 수준의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모든 코문들은 maxtaxa <막스타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동 시스템의 이용은 코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코문들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 도입으로 입는 부족분을 국가보조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열린 방과 후 활동은 방과 후 활동 혹은 교육적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1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 활동은 등록이 필요 없으며 각 가정에서 언제 아이가 참여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열린 방과후 활동의 임무는 학교를 시간적, 내용적으로 모두 보조하는 것으로 동시에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여




가시간(방과 후 시간)을 개별 아동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열린 방과 후 활동도 학교 및 코뮌등 방과 후 활동 담당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 5) 고등학교 (Upper secondary school)

스웨덴의 고등학교 과정은 16~20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역시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세 이상의 학생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는 성인교육 혹은 특수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다. 학교 형태는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 고등학교의 두 가지 구분되는데 특수고등학교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일반 고등학교에는 17개의 3년 교육과정인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상급학교 진학 혹은 취업, 혹은 두 가지 모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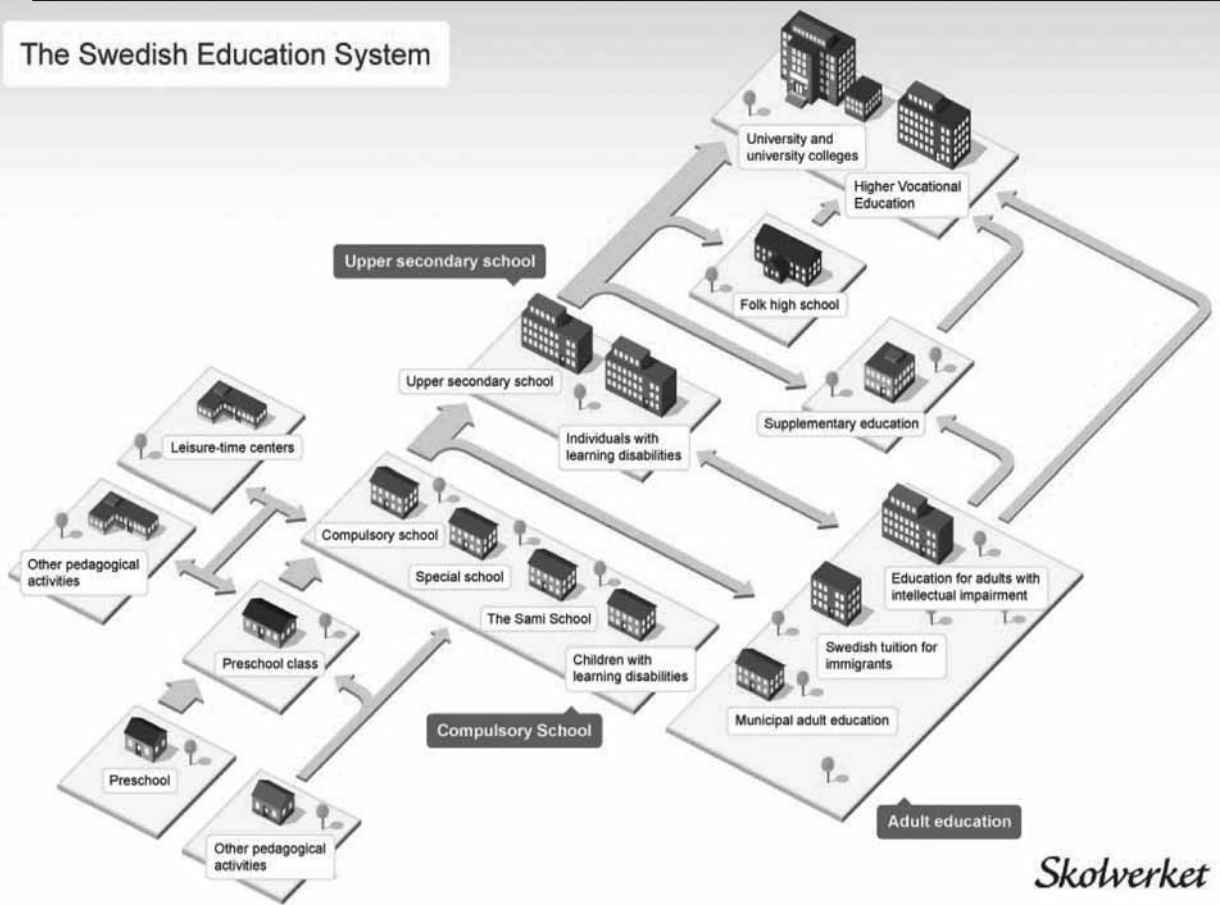
현재 운영 중인 17개 프로그램은 ① Child and Recreation, ② Construction, ③ Electrical engineering, ④ Energy, ⑤ Arts, ⑥ Vehicle engineering, ⑦ Business and Administration, ⑧ Handcrafts, ⑨ Hotel, Restaurant and Catering, ⑩ Industry, ⑪ Foods, ⑫ Media, ⑬ Use of Natural resources, ⑭ Natural Science, ⑮ Health Care, ⑯ Social Science, ⑰ Technology이며 필수과목은 영어, 미술(aesthetic), 체육, 수학, 일반과학, 종교, 사회, 스웨덴어의 8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2011년도 가을학기부터 스웨덴 정부의 새 학교법 개정에 따라 제공 프로그램 및 성적평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되었는데, 주요 변경 사항<sup>3)</sup>은 참고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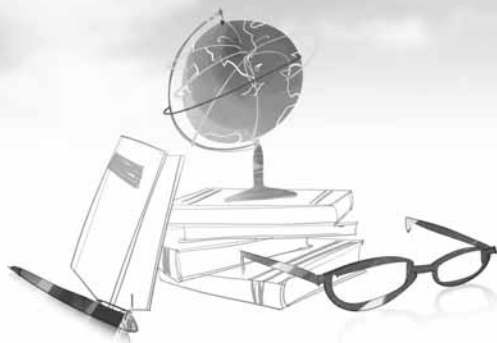
- 스웨덴 교육연구부 홈페이지 [www.regeringen.se](http://www.regeringen.se)
- 스웨덴 학교청 [www.skolverket.se](http://www.skolverket.se)
- 스웨덴 고등교육청 [www.vhs.se](http://www.vhs.se)
- 한국연구재단 스톡홀름사무소 정책보고서 [www.nrf.re.kr](http://www.nrf.re.kr) 



## The Swedish Education System



- ③ 1) 2011 가을부터는 기존에 운영하던 총 17개의 프로그램에서 1개 증설한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 ② 직업 프로그램과 대학진학준비 프로그램이 보다 분명하게 구분함으로써 직업프로그램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직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정도의 전문적인 직업인을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업 프로그램에 수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또한 고등학교 과정동안 대학진학에 필요한 필수 과목들을 이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진학준비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진학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현재의 주요 과목은 앞으로 고등학교 공통과목으로 대체되며 각 프로그램마다 차별을 둘 예정이다. 역사과목의 경우 새롭게 고등학교 공통과목에 포함되며 매 프로그램은 일정 공통 과목 및 프로그램 별 심화학습, 개별 선택과목이 포함된다. 직업프로그램의 개별 선택의 경우 학교마다 대학진학에 요구되는 과목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 및 체육과목은 모든 프로그램에 공통으로 포함된다.
- ④ 직업프로그램에는 도제교육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교과 과정 내에 실제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⑤ 고등학교 졸업 학위는 직업학위 및 대학진학 학위 두 가지로 구분되며 직업학위의 경우 총 2,500학점 중 2,250학점을 통과하여야 하며 스웨덴어 1, 영어 5, 수학1 과목의 통과가 필수이다. 대학진학 학위는 총 2,500학점 중 2,250학점을 통과하고 스웨덴어 1, 2 및 3, 영어 5 및 6, 수학1 과목을 통과해야한다.
- ⑥ 현재 성적은 매 학기말 A-F로 평가되고 있는데, 스웨덴 국립 학교청은 A, C, E의 3단계 평가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다.
- ⑦ 여러 가지 형태의 고등학교 전국 모집 과정이 개설될 예정으로 있으며 전국모집이 가능한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로는 충당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설되는 전국모집 형태의 교육으로는 스포츠, 예술분야 과정, 고등학교 엘리트 학급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인문 분야) 등이 있다.
- ⑧ 고등학교과정 성인교육은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유연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 국제 공통 교육과정 IBDP의 이해와 적용

### 1. IB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

“위장결혼에 원정출산까지... 자식사랑 어긋난 모정”

얼마 전 언론에 실린 기사의 타이틀이다. 이유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일에 연루되어 의심을 받는 부모들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대기업 회장의 자녀이거나 전직 국회의원의 자녀, 변호사의 부인과 같은 사회 지도층 및 부유층의 자녀라는 보도가 이어진다.

“제주도 국제학교에 몰리는 뜨거운 관심...”

이 또한 올해 한 일간지 기사의 타이틀이다. 제주 영어 교육 도시에 개교하고 있는 외국계 국제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에 개교 운영되고 있는 국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65%가 서울 경기 부산 등 빅3 광역 자치 단체 출신이라는 점도 함께 보도하고 있다. 위법을 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제주도의 국제 학교에 보낼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은 보내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상을 교육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범법을 해가면서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매우 비싼 수업료를 감수하고 제주도의 국제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너무 쉽게 단순화하지 않았으면 한다. 영어를 잘 배울 수 있고, 좋은 외국 대학의 진학을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만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 국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과 교육 활동이 우리의 초중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낫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 교육 담당자들은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점이다. 현명한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이제 교육과정과 다루게 되는 교재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데에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학교, 또는 국제 학교의 경우 그 학교 자체의 프로그램



박 하 식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교장

램으로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공인되는 즉, 질 관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아동과 학생들이 장차 글로벌화된 사회에 살게될 때 필요한 역량을 균형있게 채워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과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이다. 불법 입학 문제로 관심을 받게된 서울 상암동의 D 외국인 학교는 뉴욕에 본교를 두고 있는 학교로 IB를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며, 제주도에서 개교와 함께 강남 및 분당의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영국계 N국제학교, 그리고 1300억의 지원을 받아 올해 9월에 제주도에 개교를 하는 캐나다계의 B국제학교 모두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다. 단순히 외국인 학교이기 때문에, 국제 학교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학부모는 알고 있고 교육열이 높은 우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들 학교는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마음껏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국제 공통의 교육과정을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 나라의 초중등학교에서의 도입을 위해서 또, 우리 초중등학교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IB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야할 것이다. 세계 공통의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IB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국제 공통의 교육과정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학생들을 우리나라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외국 학생으로서 한국에 와서 국제 공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필요한 것이다. 이는 우리 초중등교육의 교육과정을 국제적 관점에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어떤 교육내용을 담아내야하는지의 교과서 정책에도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2. IB의 탄생과 전개 과정

IB에서 제공하는 네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IBDP이다. IBDP의 교육을 통하여 첫 디플로마 취득 학생을 배출한 것은 1970년이지만 IBDP의 탄생을 위한 기원을 찾자면 100년 전인 1차 세계 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제기구가 탄생하게 된다. 1919년에는 세계 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20년에는 국제 연합(UN)의 전신인 국제 연맹(The League of Nations)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국제 기구가 모두 제네바에 본부를 두게 되었고 여기에 근무를 하게 되는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1924년에 제네바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온 외교관과 국제 기구 직원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인 제네바국제학교가 개교를 하게 된다. 최초로 국제적 성격을 지닌 학교가 탄생하면서 그 학교에서는 세계 평화와 사회 정의 등 당시 국제 사회에 필요한 이슈를 다루게 되었다. 이 때 설립된 제네바 국제 학교는 1967년 IBO(IB Office)의 탄생때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학교의 공동 설립자였던 Adolphe Ferriere는 스위스의 졸업 시험인 Maturite의 국제판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sup>1)</sup> 국제 학교이기 때문에 세계 평화 등의 가치 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과정을 제안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유엔 연맹을 대체하는 국제 연합(UN)이 1945년에 창설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UN 국제 학교가 UN의 지원 하에 1947년에 뉴욕에서 개교를 하게 된다. 제네바의 국제학교 설립 이후 생겨난 국제 학교와 UN국제 학교

1) Ian Hill(2002).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Policy Process in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Vol.1(2) 183-211.

들은 국제적 성격을 가진 학교로 운영되었지만 국제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의 문제, 여러 국가로 이동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통된 교육과정의 부재, 본국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문제 등 국제학교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과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회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다.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국제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과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실제 겪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국제적인 문제 국제 공통의 교육문제로 확대되어 가면서 세계 규모의 교육 체제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이다. 국제 학교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 교육자들이 모여 논의한 주요 회의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IBDP 창설과 관련된 주요 회의<sup>3)</sup>

회의 명칭(시기)	장소	참가자	주요 협의 내용과 의의
유네스코 여름 세미나 (1947)	Sevres 프랑스	25개국의 100명의 교육지도자	사회과 교사들을 위한 국제 이해 교육 유네스코의 궁극적 목적인 평화와 안전의 증진
학교장 협의회 (1949)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15개 국제 학교의 교장	프랑스의 Cvenol 대학의 Boeke와 Theis가 국제 학위 제도와 학생간의 교류를 증진하며 같은 교육과정을 가르 치는 학교를 전세계에 설립하자는 의제를 제안. 이 회의는 국제 학교 협의회(CIS)로 발전
국제지향학교협의회 (CIS) 주최 '1950년 교사 강좌' (1950)	제네바	17개국 국제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 50명	국제 교육 논의를 위한 최초의 국제 학교 교사들의 모임 국제 교육에 대한 첫 성문화된 문서를 발표 <sup>2)</sup> 이 문서는 교육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갖춘 확고한 국제 교육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음
국제 학교 협의회 (ISA) (1951)	파리 유네스코 본부	UN과 관련된 국제 학교의 학부모들에 의해서 설립	첫 회의는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지만 대부분의 회의는 제네바 국제 학교에서 개최됨. 제네바 국제 학교 의 학부모 중 UN에서의 영향력있는 인사들이 많았음
*국제학교 사회과 교사 협의회(1962)	제네바	국제학교의 사회과 교사	이 협의회가 IBDP 탄생의 촉매 역할을 함, 안전설정 (Agenda Setting) 방식으로 운영. "기초적 성취 기준 '설정을 위한 사회과 기말 고사 공동 개발을 제안함. 이 기관의 주체인 유네스코는 상이문화간의 상호 이해라 는 유네스코의 장기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하게 됨.

위 표에서 보듯이 국제 학교 협의회(ISA)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제네바 국제 학교는 1962년의 국제 학교 사회교사 협의회(ISA)의 제안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 영국의 GCE,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미국의 대학 협의회(College Board)의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아

현대사(정치 경제) 심화 ISA 시험의 공식적 운영.

- 성적산출 및 채점에 관한 공통된 기준의 개발.
- 국제 학교의 회원교간에 통용되는 수료증 및 졸업증의 공식적 운영.

이 실행 연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세 교사 중 이 학교 역사과 대표 교사인 Bob의 연구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국제적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 같은 책 194

3) 이 표는 같은 책 pp.193-195 내용을 표로 재작성한 것임

International Baccalaureate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64년에는 국제 학교 교사 연합(ITES)이 설립되어 공통 시험을 개발 연구하게 되며 이 ITES가 1967년에 IBO(IB office)로 제네바에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IB는 유네스코로부터의 지원만이 아니라 이 국제적인 교육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20세기 재단은 1965년부터 15만불을, 포드 재단에서는 1966년부터 50만불을 1977년까지 지원하게 된다. 1967년부터 1969년까지 실험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1968년에 7개의 국제 학교 학생 349명<sup>4)</sup>이 참여하였다. 국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유네

스코와 위 재단의 재정적인 지원과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직접적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과 학교 행정가들의 노력들에 의해서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는 출발하게 되었고 1970년 11개 학교 학생들에게 첫 디플로마가 수여되었다. 이렇게 IBDP가 여러 국가에 퍼져있는 국제 학교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통 교육과정과 평가를 위해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각 나라의 국내 학교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 공통 교육과정으로 가장 권위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기에 이르렀다.

〈표2〉 IBDP 채택 지역별 학교 증가 추세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IBAEM (아프리카 유럽중동지역)	463 32.13%	515 32.43%	571 32.26%	656 33.32%	733 34.01%	769 33.68%
IBAP (아시아태평양 지역)	172 11.94%	206 12.97%	240 13.56%	270 13.71%	307 14.25%	341 14.94%
IBA (남북아메리카 지역)	806 55.93%	867 54.59%	959 54.18%	1,043 52.97%	1115 51.28%	1173 51.38%
합계	1,441	1,588	1,770	1,969	2,155	2283

IBDP의 성공적인 출발과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4년에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을 할 수 있는 MYP(Middle Years Program), 1997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을 할 수 있는 PYP(Primary Years Program)이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는 고등학생으로서 취업을 위한 학생들의 프로그램인 IBCC(International Baccalaureate Career Related Certificate)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2. IB의 교육 이념과 추구하는 학생상

IB의 역사에서 보듯이 IB의 출발은 UN 그리고 UNESCO의 국제 교육 문화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 목표에 있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기본적인 염원을 담고 있다. IB의 사명 선언에 보면 ‘보다 나은 세상,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젊은이를 육성한다고 되어 있다.

4) 이 실험 평가에 참여한 학교는 Atlantic College, International School of Geneva, UN International School, International College Beirut, 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 Iranzamin International School Tehran, North Manchester High School for Girls, 이다.

## IB의 사명 선언

IB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하여 보다 나은 세계,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데 기여할, 탐구적인 자세와 풍부한 지식, 배려심을 갖춘 젊은이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IB는 학교와 정부 그리고 국제 기구와 함께 국제 교육을 위한 선도적인 프로그램과 엄격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IB 프로그램들은 전세계의 학생들이 차이점을 지닌 다른 사람들도 또한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줄 아는 적극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나와 다른 사람들 또한 옳다는 것을 이해할 줄 아는 평생 학습자가 되도록 격려한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 어떤 자세와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를 밝혀 놓고 있다. 이것을 IB에서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특성과 태도로 다음의 열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추구하는 학생상(IB Learner Profile)

IB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탐구인
- 지식인
- 사고하는 사람
- 소통하는 사람
- 원칙에 충실한 사람
- 개방된 생각을 가진 사람
- 배려인
-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 균형감각이 있는 사람
-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보다 나은 세상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균형 잡힌 세계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철학,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사 연수 등의 학교 교육을 위한 온전한 체제를 갖추어 IB는 운영되고 있다.

## 3. IBDP 교육과정의 구성

IBDP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위와 같은 교육 목표와 학생상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디플로마를 취득하게 된다. IB 디플로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선택 과목 이수와 과목별 시험 통과, 통합 교육과정인 지식론(TOK)과 논술과제(Extended Essay) 및 과외활동(CAS)의 이수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BDP의 교과 과정은 구조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교과군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와 6개 교과군 중 어떤 교과군에서 심화과목(Higher Level)으로 택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진로준비가 된다. IBDP 졸업인증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교과목 이수로, 학생들은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두 축으로 된 전통적 자유교양 교육과정을 현대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6개 과목군에서 각 한 과목씩 총 6개 과목을 선택하되, 이 중에서 3-4개는 총 240시간(2년 코스)의 수업을 받아야 하는 고급수준(Higher Level)에서, 나머지는 150시간(1년 코스)의 수업을 받아야 하는 표준(보통)수준(Standard Level)에서 이수한다. 6개 과목군은 제1언어(모국어로 약 80개 언어가 쓰임), 제2언어(라틴어 그리스의 고전어를 포함한 외국어, 이중언어 구사, 외국어구사, 초급 수준의 세 수준으로 나뉨), 개인과 사회(경영학, 경제학, 지리, 역사, 이슬람역사, 지구촌사회의 정보기술, 철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등), 실험과학(Experimental Science: 생물, 화학, 물리, 환경 SL, 설계기술), 수학과 컴퓨터과학(수학, 수학 HL, 고급수학 SL, 대5)

학에 진학해 화학 지리 경제 경영 전공자를 위한 수학적 방법 SL, 수학공부를 일상에 연결하는 수학연구 SL, 컴퓨터과학은 선택, 예술(음악, 미술, 공연 등 창작 중시)이다.

둘째, 통합 교육과정인 지식론과 논술과제 및 과외활동을 해야 한다. ①학생들은 여러 문화의 다양한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적 숙고를 하는 지식이론(TOK:

Theory of Knowledge; IBO, 2001a)을 반드시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철학·종교 등 통합교과적인 비판적인 사고 훈련 과정으로, 이론 및 이론 상호간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후 IBO에서 제시하는 10개의 주제 중에서 골라 1200-1600자의 논술문을 작성하고, 주제 발표문을 작성해서 10분간 발표를 하고, 자기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50개의 다양한 어문 강좌를 통해 22개 주제 중에서 골라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 도서관을 찾거나, 해당 주제 담당 교사의 도움을 받아 40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자기 힘으로 4,000자 이하의 개인 장편 연구 논문(extended essay)을 작성해야 한다(BO, 1998). 이것은 연구 주제, 연구 방법, 논리 전개, 분석 수준 등을 통해 평가한다. ③ 특별활동과 봉사활동(CAS: Creativity, Action, Service)은 학교 공부 이외에서 전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 스포츠 등의 특별활동과 병원, 고아원 등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BO, 2001b). Creativity는 오케스트라 활동·작문 클럽 활동·신문 제작 활동 등의 창의적인 활동을, Action은 야구·농구·축구 같은 체육 활동을, Service는 학생회 활동·스카웃 활동·봉사 활동 등을 의미한다. 담당 교사가 도움을 주며 2년간 매주 3-4시간씩 최소 150시간의 활동을 해야 한다.

셋째, 내부시험(Internal Assessment)과 외부시험(External Assessment)을 중심으로 한 평가 과정이다. 학생들은 선택 이수한 과목 시험에서 7점 만점에 4점 이상, 연구논문과 지식이론 점수 3점을 포함하여 24점 이상 얻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자료들은 세계 공통으로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되어 있다. 개별적인 과목만을 이수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수강 이후 해당 시험을 치러, 4점 이상을 취득하면 해당 과목에 대한 수료증(Certificate)을 받을 수 있다(BO, 2004). 학과 시험은 북반구에서는 5월(2006년에는 1일-24일 사이), 남반구에서는 11월에 치르는데, 북반구의 5월 시험 결과는 7월에 발표된다. 절대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45,000명이 치르고 약 80%가 합격한다. 성취에 대한 모든 학문적인 판단의 책임은 공인된 각국의 4,400

여명의 심사관(external examiners)에게 있다. 학구적인 성취 내용과 과정을 평가하고, 다른 학문 형태와 문화 양식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이 사용된다. 전통적인 시험 기술인 구두 및 서술, 단답형, 자료 제시형, 논술, 선다형(multiple-choice) 문제 등 다양한 형태와 범위에 걸쳐 시행된다.

#### 4. IBDP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사 지원 및 평가 관리

IBDP를 도입하는 학교수가 현재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IB의 디플로마를 대학 입학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교과에서 지도하는 지도 내용과 방법 그리고 IB에서의 평가 방식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IBDP의 교과 지도는 개별 학교의 교실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 교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사 자격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세계의 수많은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학교와 다른 학문적 역량과 배경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서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IBDP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객관성과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IB 출판부(BO' Publication Department)에서는 IB의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이드 북을 시작으로 하여 지도에 필요한 수백 가지의 교사 지도 책자를 발간하여 IB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IB학교의 소속 교사라면 해당 학교의 고유 번호를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 센터(Online Curriculum Center)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이 OCC에는 담당 교과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출 문제, 문제 출제의 기본 방향등 지도와 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IB 교사들은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IB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한 번 이상은 IB 교사 연수(IB Workshop)에 참가해야 하고 교육과정 이 개편될 때는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IB 교사를 위한 연수는 연중으로 개설되어 있어서 교사들간의 지도



방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아주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된다. 평가는 학교에서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의한 내부평가(IA)와 IB 본부로부터 IBDP에 대한 최종 평가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점수는 TOK와 Extended Essay에서 부과되는 3점과 6개 영역 각 교과의 최고점만점이 7점을 합하여 총 45점이다. 그런데 이 점수는 IBO에서 시행하는 외부평가(EA)만이 아니라 내부평가(IA)가 일정부분 포함된다. 2년간 학교에서 직접 지도한 교사의 평가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내부평가(IA)와 외부평가(EA)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부 평가 역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 교사의 평가를 국제적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에서 보내온 점수는 보조 조정자와 선임조정자를 거쳐 최고 조정장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 주관식 위주로 되어 있는 외부 평가 역시 같은 방식의 세 단계를 거쳐 조정과 확인을 하여 신뢰성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 5. IBDP 운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IBDP는 세계 평화라는 큰 이념부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과 평가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교육체제이다. 하나의 큰 교육 체제로서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교육과정과 교과를 중심으로 IBDP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IBDP의 언어 관련 과목군에는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은 우리 국어가 국제 공통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국어 교육의 운영과 비교하여 상호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8개 군의 많은 과목들이 IB에서도 개설되어 있다. IBDP의 각 교과목은 과목별로 자세한 과목 해설 및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IBDP를 통해 국제적인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가능한 것은 각 과목의 수업 운영 및 평가 체제가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 증

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 연구는 우리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과 수업 운영 평가 방식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 국제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외국으로, 외국인 학교로, 제주도로 떠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교 체제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국내 학교에서의 IB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할 때가 된 것이다. 

## 참고 자료

- Marc van Loo and Kevin Morley(2004). Implementing the IB Diploma Program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1-46.
- Ian Hill(2002).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policy process in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vol.1(2) pp.183-211.
- George Walker(2011). The Changing Face of International Education Challenges for The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pp. 6-17.
- Jamnes Cambridge(2010).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and the construction of pedagogic identity :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9(3) pp.199-213.

IBO : <http://www.ibo.org/>  
<http://occ.ibo.org/>



## ● 감(感)을 잃지 않는 편집자 되기

### ● 출발의 다름과 초보 편집자

편집자로서 나의 이야기와 편집의 중요성을 얘기하려면 나의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좀 애길 해야 할 듯하다. 1992년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의 처음은 출판사 직원이 아니었다. 나의 전공은 전자계산 요즘으로 말하면 컴퓨터 공학 정도 될 것이다. 졸업할 당시에는 IBM PC의 서막이 오르는 때였고, 내 전공은 졸업하면 서부터 그야말로 어디든 취업이 가능했지만 내 꿈은 교사였다. 이런 이유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강사 생활을 했다. 한우물만 팼어야 했는데 두 가지 일을 병행하다보니 점차 임용고시 준비가 소홀하게 되었고, 실패를 맛보았다. 그러나 일을 해보니 강사라는 직업도 나에게 잘 맞았고 나름 매력도 인기도 있었기에 결국 전문 강사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고, 그게 처음 내 직업이 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관련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출판사와의 첫 인연이었던 것 같다.

그 이후 강의와 집필을 병행하다가 모 출판사의 제의로 출판사 안에 들어가 전문적으로 더 집필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때가 1995년이였다. 출판사 밖에서 책만 쓸 때와는 달리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 책을 만들어내기까지 집필자의 역할 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편집 과정을 눈으로 보고 겪게 되었다. 그 당시 출판사 안에서 내가 했던 일은 회사의 기획안에 맞게 집필자로서 원고를 만들어 편집부로 넘겨주고 조판이 되면 교정을 보는 약간의 기획과 집필, 교정과 출간되는 책들에 대한 외부인들의 내용 문의를 해결해 주는 일이었다. 지금



유 은 경

(주)삼양미디어 기획·편집 부장

●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내가 몸담았던 출판사는 나를 그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았고 독자들에게 대한 서비스 마인드도 상당히 높았던 것 같다. 그 당시 독자들의 문의를 그 정도로 해결해주고 서비스하는 출판사가 그리 흔치 않았다.

그 당시 독자들의 문의 과정에서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가 문득 기억난다. 수험서로 공부하시던 50대 정도의 독자로 기억하는데, 아마 책에 오타자가 난 것으로 기억된다. 전화를 돌려받고 어떤 문제 때문인지 말씀해 달라고 하니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며, 지금 몇 번째 인줄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화를 마구 쏟아내시는 것이었다. 지금의 나였다면 부드럽게 풀어냈겠지만 그 당시 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짜증을 받아줄 자세가 되어있지 못했던 것 같다. 또 내가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어쭙지 않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 그 때문에 그 전화한 사람이 대표님한테까지 전화 연결을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출판사 직원으로서 독자들에게 대한 책임 있는 서비스를 한다는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요즘 가끔 젊은 친구들이 전화문의에 대한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서로 언성이 높아지거나 하는 것을 보면 그때의 내가 생각나곤 한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고객의 칭찬이나 불만 등 의견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때에 회사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업무나 홍보가 아니라 그런 작은 서비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 특정 분야의 교과서 편집자로서의 노력

내가 교과서 편집자로서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998년경 교과서를 주로 만들어 내고, 대입 모의고사를 주관하는 출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부터다.

전공이 IT 관련이다보니 컴퓨터와 관련된 도서 및 교과서를 주로 기획하고 편집하게 되었다. 초중고 컴퓨터 관련 인정교과서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관련 교과서를 주로 기획하고 편집했다. 그런데 주요 교과목을 만들어내는 출판사에서 특정 분야 교과목의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편집자가 설 자리는 참 작았던 것 같다. 늘 투자대비 매출이익을 생각해야 했고, 최소한의 인력과 경비로 최선의 교과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늘 비용 절감과 편집자의 개인적인 노력이 더 들어가야 했다. 그럴 때면 국, 영, 수 등 주요 교과목을 진행하는 편집자들이 늘 부러웠다. 그들은 한 두 개 책을 책임지고 만들면 되었지만 나는 그들의 몇 배에 달하는 책을 만들어내야 했다.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같은데, 그 환경은 너무나도 차이가 났고 회사에서의 대우조차 차이가 났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로 옮기기 전까지는 나를 대우를 받고 일했는데 교과서 전문 출판사로 옮기니 경력이 10년 이상 되어 가는데도 회사나 주요 과목 편집자들이 바라보는 내 위치는 비인기 교과목 편집자, 또 이익 안 나는 부서의 편집자였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구조였을 것이다. 실제 비인기 교과목의 매출은 주요 교과목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고, 그랬기에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는 평가라는 것. 하지만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늘 작아져가는 나 스스로 많이 힘들었다. 그러던 중 원래 있던 IT팀이 결국 해체되고, 팀장인 나와 디자인하던 직원만 교과서팀으로 흡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내가 계속 근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을 했지만 나의 사수였던 마케팅 부장님의 조언으로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새로 배정된 팀도 다른 팀이 하지 않는 인정 교과서를 이것저것 모아서 관리하는 명목상의 팀이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과서는 국검정 위주였고, 인정교과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인정교과서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부족했고, 같은 회사의 주요 과목 팀장들도

인정교과서라는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뿐 인정교과서 업무 자체를 잘 몰랐고 대부분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제반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일에 대한 욕심과 자존심이 강했던 나는 꼭 제대로 해서 내 존재감을 남기고 싶었다. 그리고 조만간 교과서가 인정교과서가 점차 확대되리라는 소식에 그래서 인정 교과서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다시 정리해 나갔고, IT 관련 교과서 외에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 보건 교과서의 성공과 자리매김

2007년 봄 무렵 새로운 인정교과서 시장을 엿보던 중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중학교용 성교육 교과서를 개발하기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보건 교과목이 모 단체의 10여년 간의 노력으로 곧 교과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을 알게 되었고 회사에 보건 교과서 개발에 대한 건의를 했다. 그 당시 보건을 교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무던히 노력한 단체를 섭외하여 교과서 개발진을 꾸렸고, 2008년 드디어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개발된 최초의 보건 교과서가 탄생하였다. 이때 개발한 품목이 초등 2권, 중등, 고등까지 총 4권을 개발하였는데 그 과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개발에 주어진 시간은 짧았고, 먼저 말했듯이 주어진 여건도 녹록치 않았고 그 당시 회사가 여건이 좋지 않아 투자되는 비용을 줄이면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정말 부단히 애를 썼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였던 것은 보건 과목이 정식 교과목으로 될지의 여부도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내 사수인 부장님이 회사의 투자를 이끌어 내셨고, 주변의 많은 외주자들의 도움도 컸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싶지만, 나는 그 교과를 정식 교과목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애를 다 쓰는 그 단체의 노력과 눈물을 보았고 그러기에 더더욱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다.

또한 중학생과 초등학교의 자녀를 둔 엄마의 입장으로 보건 교과서는 꼭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신념도 작용했다.

그렇게 개발한 교과서가 전국의 초중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사용되면서 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회사에도 위기를 넘기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때 개발한 초등학교 교과서는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용 보건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로 다시 한 번 내 손을 거쳐 개발되어 합격했고,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 교과서의 제도적 정비와 개발 여건의 어려움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용 교과서(기술, 가정, 진로와 직업, 정보 등)를 개발하였고, 지금은 내년 5월에 출원할 고등학교 교과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업무를 함에 있어 불편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중·고등학교의 국어, 도덕, 사회(역사포함)를 제외한 전 교과가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주요 과목을 제외한 인정교과서의 경우 국검정 교과서에 비해 심의 절차가 약간은 쉬었지만, 이번 교육과정 개편으로 모든 교과서의 심의 절차가 검정에 준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직도 교과부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기존 인정교과서의 정리 문제부터 특성화고 교과서 개발의 어려움, 이에 따르는 교과서의 질 저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교과부의 교과서 관련 공청회를 쫓아다니다 보면 늘 느끼는 것이 일반계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위주로 흘러가다보니 수능과 관련된 것이 아닌 특성화고에 대한 이야기는 논제에서 늘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에서조차 뒤에 따르는 문제점을 빠르게 정

리하지 못하고 별도의 질문을 하거나 문제를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교육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학 진학률 80%를 넘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대학이 성인이 돼서 직업을 찾는 데 변별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나와서도 자기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할 수 있는 지조차 이해 못하는 학생이 많다면 대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시대의 변화와 현실의 감을 늘 알고 가자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변화와 요구는 교과서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과서라는 틀 안에서 자신의 교과목만을 두고 교정하고 교열보고 하는 게 편집자로서의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내가 그동안 교과서 편집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일부 깨어 있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교과서 편집을 오로지 편집으로 국한시키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물론, 편집자로서 내용의 질적인 면을 담보해야 하고, 교정, 교열도 충실히 보아 질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편집의 중요성 외에도 교과서를 만드는 데는 또다른 시장 환경의 변화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편집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부담에 대해 말하자면 디지털 교과서 개발일 것이다. 사실 나도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디지털 시대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겪고 알고 지내온 사람이지만 요즘의 디지털 환경은 따라가기가 참 힘들다. 더구나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대한 비용과 내용의 질적 담보에 대한 부담은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다.

## 감을 잃지 않는 편집자 되기

시대는 변하고, 또 그 변화의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나를 긴장시킨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서 편집자로서 제 몫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언제까지 내가 이러한 긴장감을 잘 극복하고 좋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러한 고민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 디자인에 있어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추어야 할 것이며, 자신의 고정관념도 과감히 탈피할 필요도 있다. 나는 요즘 교과서 회의를 하거나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직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나를 표현하는 교과서인지 대중이 원하는 교과서인지를 보라고. 교과서도 일정하게 다루어야 할 필수 내용이 있지만 그 안에서 대중이 원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내용을 살려야 할 것이며, 디자인도 개인의 취향이 아닌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디자인인과 색감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연히, 그리고 겁 없이 시작했던 편집자로서의 지난 십수 년의 시간 동안 소외 교과목 편집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공부했으며 많은 사람을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과 내 안의 도전 정신이 지금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던 것 같다.

지금 대부분의 교과서 출판사와 그 안의 편집자들은 중학교 교과서 개발에 이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채 내년 5월에 출원할 고등학교 교과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다들 힘들겠지만 지금 내가 개발한 교과서로 공부할 학생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 안의 감각과 열정,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다시 한 번 꺼내어 보면 어떨까 한다.

“자, 모두 힘내어 봅시다.” 

# 프랑스 시민교육의 내용과 교과서의 특징



김 원 태

산본고등학교 교사

## 1. “민주시민교육 실패한 한국의 사회과 · 도덕과”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5,384개교의 중·고등학교를 모집단으로 해서 이 중 중학교 75개교, 고등학교 75개교 등 총 150개교를 표집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9월에 발표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 내용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의 난맥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 사회과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의 어려움으로는 교과 내용과 생활세계의 불일치, 지식과 태도의 불일치, 체제유지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이 거론된다.

도덕과 또한 교과서를 통해 덕목들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민주시민과 는 거리가 먼 채, 자율성보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도덕생활의 강요, 타인의 불의에 대한 무관심, 국가주의와 국수주의 위험을 보이기도 한다.”(위 보고서 150쪽)

위와 같이 평가하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특정한 가치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가치의 다 양성과 실천과의 연계를 전제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총 분히 정보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도록 해야 한다.”(위 보고서 154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과·도덕과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성취 기준이나 수업 방법 몇 개를 바꾸어서는 이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도입된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과 지식과 연계되어 민주시민교육을 잘 담아 내고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 2. 유럽 선진국들의 학교 시민교육 등장 배경

선진국들은 1970년 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학교폭력 문제, 다문화 문제, 경제적 빈부 격차, 인종간의 차별과 갈등 등의 문제가 심화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나라마다 경제사회적 문제의 표출 시기와 양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동체적 관심사와 공익에 문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 주인의식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되는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정신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교육 전문가들과 교사들은 ‘시민의 권리를 학생들에게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학교를 개혁하고, 새로운 교과목(시민교육)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 책임을 실천하고 학교와 사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술과 사회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기술을 더욱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평의회에서 진행한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EDC)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까지 16개 국가에서 ‘시민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분리하였다고 했으니 10년이 지난 지금쯤은 유럽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어린 학교 시민들이 ‘시민교육’이라는 별도의 교과목을 통해 시민교육을 받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 학교 중심의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발달된

유럽의 나라들 중 프랑스 학교 시민교육의 내용과 교과서의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 3. 프랑스의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 교과목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실업자 증가와 맞물린 이민과 인종차별의 문제 등으로 사회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에 학교 폭력현상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시민교육 부활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고 한다.

1985년 11월 14일, 슈벤느망(Jean-Pierre Chevenement) 교육부장관에 의해 시민교육 교과목은 중학교까지 필수과목(주1시간)으로 매 학년(4년간) 매주 1시간씩 수업하도록 지정하였다. 시민교육이 중학교에서 끝나고 마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등학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적하였고, 또한 학생들의 학교 운영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까지 겹치게 되어 시민교육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매년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1999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도 ‘시민·법률·사회교육(Education Civique Juridique & Sociale)’이라는 교과목을 신설하여 졸업할 때까지 매 학년 수업하도록 정해졌다고 한다. 결국 프랑스 학생들은 의무교육 기간 내내 매 학년에 매 주 시민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프랑스 중등학교 ‘시민교육’ 교육과정의 내용

프랑스 초등학교 시민교육 과정의 내용체계는 학년의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학년 구분이 명확한 중·고등학교 ‘시민교육’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살펴본다. 이 교육과정은 1998년에 개정되어 2008년까지 적용되었던 시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	내용	학년	내용
1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과 규칙들 인간의 권리와 의무 생활기반과 환경에 대한 책임	1	시민권과 예의규범 시민권과 통합 시민권과 노동 시민권과 가족관계의 전환
2	평등 연대성 안전	2	시민권의 행사, 정치권력의 대표제과 정당성 시민권의 행사, 정치참여의 형태와 집단적 행위의 형태 시민권의 행사, 공화제와 특색의 교수 시민권의 행사와 시민의 의무
3	자유와 권리 프랑스 법원 인권과 유럽	3	시민권과 과학기술의 발전 시민권과 정의-평등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 시민권과 유럽연합의 건설 시민권과 세계화의 형태
4	시민, 공화국, 민주주의 공화국 권력의 조직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 민주주의 토론 국방과 평화		

## 5. 프랑스 학교 ‘시민교육’ 교과서의 목차

### 1) 초등학교(심화학습과정4-5학년) 목차

시민 교육 (초등학교 4,5학년과정) Education civique cycle3/ HACHETTE / 1997	
1. 우리는 자유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 예배의 장소)	
2. 우리는 정의가 필요하다. (세계의 가난)	
3. 우리는 진실이 필요하다. (이념을 강요하고 광고하다)	
4. 우리는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5. 토론하는 것을 배우다 (텔레비전에서 토론)	
6. 팀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다. ( 프랑스 일주 : 달리기 선수의 승리, 팀으로 일하기)	
7. 건강에 대한 우리의 의무 (예방)	
8.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의무 (공해)	
9.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10. 공화국 의원들 (프랑스의 투표권)	
11. 공화국의 자유 (언론 자유를 향한 행진)	
12. 프랑스에서 정의 (행동하는 정의)	
13. 공공 서비스 : 국가 교육 (세계의 교육과 교육권)	
14. 재산과 사람의 안전 (집에서 아이들의 안전)	
15. 사회 보장과 국가 연대 (배려에서 상환으로)	



## 2) 중학교(4학년) 목차

시민 교육 (중학교 4학년 과정) I Education civique 3e Demain, citoyens / Nathan / 2003	
<p><b>1부 시민 공화국 민주주의</b></p> <p><b>1장 시민, 공화국, 민주주의</b>        왔다! 프랑스의 투표권        1. 프랑스, 시민의 공동체        2. 시민이 되기, 권리와 의무        3. 유럽 연합에서 시민        4. 프랑스 공화국의 원리        5.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        6. 유럽의 민주주의        졸업 준비        연습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다.        흰 수료증        1. 시민의 권리와 의무        2. 프랑스 공화국의 원리</p> <p><b>2부 공화국의 권력 기구</b></p> <p><b>2장. 5공화국 체제</b>        왔다! 도로의 안전과 속도 초과 : 법의 역사        흐름도 : 국가 체제        1. 5공화국 헌법        2. 행정권        3. 입법권        흐름도 : 법의 발달        졸업 준비        연습        그림을 분석할 줄 알기        흰 수료증        1. 공화국 대통령의 권력        2. 국회의원 되기</p> <p><b>3장. 국토 관리, 시에서 유럽으로</b>        1. 국가의 행정        흐름도 : 영토의 행정        2. 지방자치 단체        3. 유럽 연합에서 프랑스        왔다, 유로, 유럽 연합 화폐        졸업 준비 : 연습        흰 수료증        1. 영토의 행정        2. 프랑스와 유럽의 강령</p> <p><b>4장. 선거</b>        왔다! 2002 대통령 선거        1. 선거 : 시민의 일        2. 여러 가지 정치 선거        졸업 준비 : 연습        흰 수료증        1. 시민의 선거 참여        2. 지방 선거</p>	<p><b>3부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b></p> <p><b>5장.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b>        왔다! 해양구조 국영회사        1 정치 참여와 정당        2 근로의 권리와 노동조합        3 단체에 참여        졸업 준비 : 연습        문서를 연결할 줄 알기        흰 수료증        1. 노동 조합의 역할        2. 단체 : 인권연맹</p> <p><b>4부. 민주주의의 토론</b></p> <p><b>6장. 민주주의의 토론</b>        왔다! 여론 조사        1. 미디어와 여론        2. 문제의 국가        3. 정치 사회생활에서 여성        졸업 준비 : 연습        논증을 분류할 줄 알기        흰 수료증        1. 미디어와 정보        2. 인터넷과 민주주의</p> <p><b>5부. 방위와 평화</b></p> <p><b>7장. 방위와 평화</b>        왔다! 2001년 1월 1일 : 모든 국경에 군대를        1. 국가 방위        흐름도 : 국가 방위의 조직        2. 국가와 유럽의 방위        3. 평화의 보존 : 유엔        흐름도 : 유엔 조직        4. 국제적 연대와 협력        졸업 준비 : 연습        논증되는 단락을 작성할 줄 알기        흰 수료증        1. 새로운 국가 서비스        2. 유엔과 평화유지</p>

### 3) 고등학교(1학년) 목차

시민-법률-사회 교육 (고교 1학년 인문계 실업계 공통)  
Education civique juridique & sociale / 2nd / Breal / 2000

#### 1장 시민권과 관련된 새로운 표현들

##### 주제 1 : 시민으로서의 고등학생과 학교사회

- A. 고등학생과 민주주의 실천
  - 토론 1. 고등학생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 토론 2. 오리엔테이션 : 민주적인 절차란?
- B. 사회 속에서의 학교의 위치
  - 토론 3. 학교와 돈 : 시장에 맡겨야 하는가, 맡겨서는 안 되는가?
  - 토론 4 : 학교 사회에 대하여

##### 주제 2 : 예의규범에 대하여

- A. 법의 용도에 대하여
  - 토론 1 : 법은 왜 만드는가?
  - 토론 2 : 예의와 무례함
  - 토론 3 : 시민 교육은 필요한가?
- B. 도시의 폭력과 안전
  - 토론 4 : 불안감
  - 토론 5 : 도시 주변부의 폭력

##### 주제 3 : 시민의 참여

- A. 시민성 : 자격, 지위
  - 토론 1 : 평등을 위한 조건
  - 토론 2 : 민주적인 시민권은 위기인가?
- B. 논쟁이 되고 있는 새로운 시민권
  - 토론 4 : 유럽 시민권의 의미
  - 토론 5 : 통합을 위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투표권

#### 2장 변화하는 평등권

##### 주제 4 : 가족 관계의 변화

- 다양한 가족 형태
- 토론 1 : 민족주의 정책이나, 아동 보호나
  - 토론 2 : 아동 간의 평등권을 보완하다
  - 토론 3 : 결혼과 혈족 - 선택의 승리?

##### 주제 5 : 통합과 배제, 그리고 시민성

- A. 통합의 길
  - 토론 1 : 국가와 통합
  - 토론 2 : 학교는 통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토론 3 : 스포츠는 통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B. 배제와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
  - 토론 4 : 배제된 사람을 돕는 것 : 원칙적인 질문
  - 토론 5 : 새로운 일자리 : 고용 창출
  - 토론 6 : 인종주의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 토론 7 : 긍정적인 차별은 필요한가?

#### 3장 일터에서의 투쟁과 협상

##### 주제 6: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의사 표시

- A. 노동자들의 의사 표시
  - 토론 1 :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은 항상 민주주의의 중요한 당사자인가?
  - 토론 2 : 연합은 시민권의 새로운 표현 방법인가?
- B. 단체 교섭과 쟁의
  - 토론 3 :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 공공 분야의 파업권에 대해

##### 주제 7 : 기업 속에서의 시민

- A. 일할 권리, 일터에서의 권리
  - 토론 1 : 일터에서의 권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 토론 2 :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 노동자의 권리에 타격을 주는가?
  - 토론 3 : 불법 취업을 막을 수 있는가?
- B. 노동조건
  - 토론 4 : 35시간 : 진보인가?
  - 토론 5 :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차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 4) 고등학교(3학년) 목차

시민-법률-사회 교육 (고교 3학년)  
Education civique juridique & sociale / Te / Magnard / 2002

**주제1 : 시민권과 과학기술의 발달**

1. 사회 생활
  - 더 나은 세계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행된 일들
  - 의학연구에서 대량 학살까지
  - 전체주의의 도구가 된 정신의학
  - 인간복제 문제
  - 유전자 범죄
2. 법-규범-규칙
  - 선서와 기도(히포크라테스 선서, 제네바 협정..)
  - 인간에 대한 의학 연구에 대한 윤리적 원칙
  - 프랑스 국내법과 국제적 원칙
  - 프랑스 생명윤리법
3. 사회에 대한 관점
  - 자연에 대한 인간의 힘
  - 의료윤리
  - 우생학의 어제와 오늘
  - 진보의 길에서 잠깐 벗어나기

**주제2 : 시민권, 법과 평등에 대한 새로운 요구**

1. 사회 생활
  - 법과 민주주의 : 환자도 법이 보호해야 할 시민인가?
  - 죄수에겐 어떤 권리가 있는가?
  - 법과 주관적인 권리: 아르키들의 제소
  - 사회 내에서의 판사, 정치계에서의 판사
  - 법과 윤리(장애인의 '태어나지 않을 권리')
2. 법-규범-규칙
  - 프랑스의 사법제도
  - 감옥과 법의 평등에 대한 프랑스 법 조문
  - 아르키들의 요구에 적용된 법
  - 장애아동의 권리와 윤리에 대한 법 조문
  - 감옥은 적법한 공간인가?
  - 재판이 남발되는 사회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3. 사회에 대한 관점
  - 법과 주권의 싸움?
  -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을 권리가 정당한가에 대한 윤리 논쟁

**주제3 : 시민권과 유럽연합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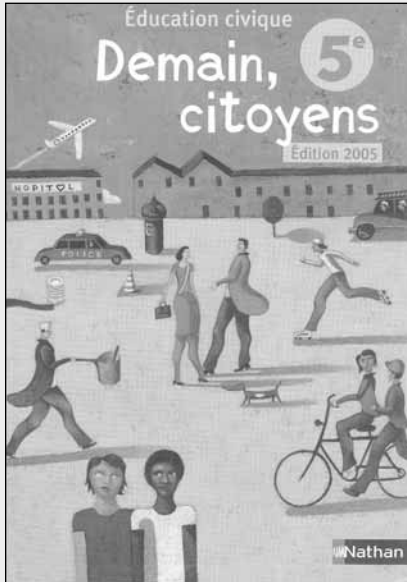
1. 사회 생활
  - 유럽인들의 역사
  - 유럽인들의 일상이 바뀐다
  - 열린 유럽연합?
  - 유럽 시민이 없는 유럽 통합
2. 법-규범-규칙
  - 각 나라의 국민에서 유럽 시민이 되기까지
  - 유럽연합 차원의 사회와 정치 법안
  - 원칙 없는 국경 개방
3. 사회에 대한 관점
  - 유럽 통합은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유럽 시민이라는 의식
  - 유럽연합은 국가의 종말인가?
  - 유럽연합의 민주화
  - 세계 속의 유럽인

**주제4 : 시민권과 세계화의 여러 가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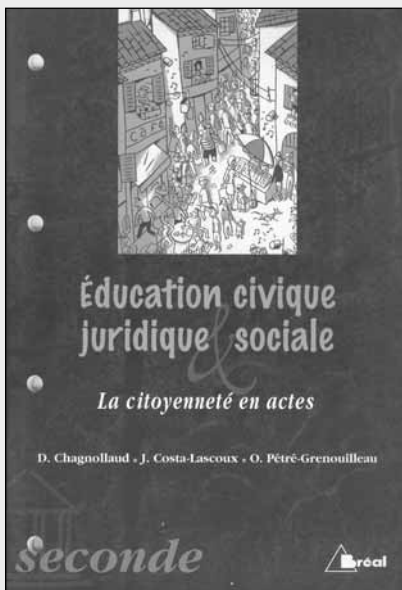
1. 사회 생활
  - 경제의 세계화
  - 이민과 세계화
  - 지구촌?
  - 국제법의 실현?
  - 세계화에 대한 우려
2. 법-규범-규칙
  - 세계화와 법(리우 선언, 교토협정)
  - 국제법의 틀 안에서 본 세계화
3. 사회에 대한 관점
  - 역사적 관점에서의 세계화
  - 세계화 : 지리적 단계
  -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세계화
  - 세계화가 국경을 없애는가?
  - 세계화의 문제점
  - 세계 시민?

## 6. 프랑스 중등학교 '시민교육' 교과서의 특징

### (1) 시민교육 교과서 외형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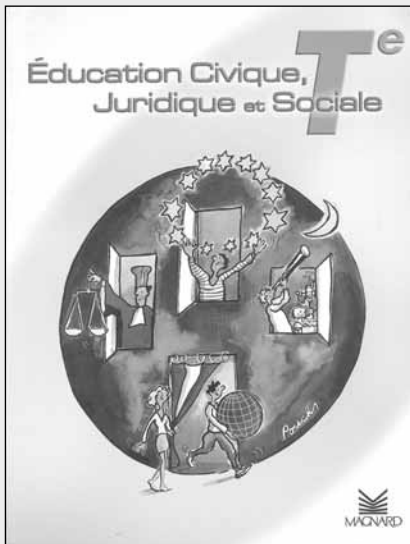


◀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기 다른 교과서가 매 학년 제공된다. 우리 나라 '사회' 나 '도덕'은 한 두 학년에 배정되는데 그것도 집중 이수제에 묶여 한 학기에 끝나버릴 수도 있다. 옛 교육과정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다. 프랑스 교과서는 제목이 참 재미 있다. '내일, 시민들(Demain, citoyens)', 의역하면 '내일의 시민들이 알아야 내용들'이라는 뜻이 아닐까? 나땃(Nathan)출판사에서 2005년에 출판된 중학교 2학년 시민교육 교과서 표지이다.



◀ 프랑스 고등학교 시민교육 교과서 '시민·법률·사회교육 (Education Civique Juridique & Sociale)'의 표지다. 고등학교 1학년용인데 2학년 3학년용이 각각 따로 있다.

지독한 나라다. 고3까지 시민교육을 시키다니! 아마 이래서 바깥로레아 시험이 가능한 것은 아닐까? 교과서 제목 아래 부제가 재미있다. '실행되고 있는 시민권(La citoyenneté en actes)'이라니!



- ◀ 고등학교 3학년 시민교육 교과서(마냐르출판사) 표지이다. 정확한 교과목명은 '시민법률사회교육'이다. Te(Terminal)는 최종 학년을 의미하여, 최종 학년이란 프랑스의 고등학교 3학년을 의미한다.

## (2) 시민교육 교과서 서술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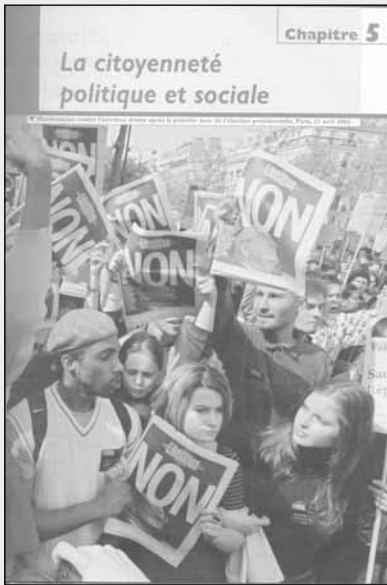


- ◀ 프랑스 중학교 4학년 시민교육 교과서(나탕출판사) 71쪽으로, 이 교과서 제5장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을 소개하는 대단원 첫째 페이지이다

제5장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대단원 제목 바로 아래에 '대통령 선거 1회전 후 극우파에 반대하는 시위, 파리, 2002. 4. 23'이라는 사진 설명을 붙여 놓았다.

위의 자료처럼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에서는 시사성이 매우 높은 학습 자료들을 교재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현실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실천으로 보다 쉽게 연결될 수 있

도록 한다. 다음의 프랑스 시민교육의 정신이 잘 드러나는 자료들이다. “학생은 시민이다. 시민들에게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판단은 그들의 몫이다.”



▲ 프랑스 중학교 4학년 시민교육 교과서 (나탕출판사) 71쪽으로, 이 교과서 제5장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을 소개하는 대단원 첫째 페이지이다

제5장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대단원 제목 바로 아래에 '대통령 선거 1회전 후 극우파에 반대하는 시위, 파리, 2002. 4. 23'이라는 사진 설명을 붙여 놓았다.



▲ 프랑스 중학교 4학년 시민교육 교과서(나탕출판사) 77쪽이다. 이 교과서 제5장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 단원 중에서 2과 '노동법과 노동조합'의 내용의 일부이다. 위쪽 자료 ㉔에서는 프랑스 노동조합 조직 다섯 개의 설립 연도와 그 단체 회원수를 소개하고 있다. ㉕의 사진은 프랑스 기독교 노동자 연맹(CFTC)의 일주일 35시간 노동 제도를 옹호하는 1999년 포스터의 모습이다. 이 자료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진 세 개의 노동조합은(자료 a)?
2. CFTC가 여기서 옹호하는 것은 노동법의 어떤 측면인가(자료 b)?

아래 쪽 자료 ㉔에서는 “노조 대표들은 임금노동자들의 요구를 고용주에게 제시한다. 그들은 노동조건에 대해 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읽기 자료이다.

자료 ㉕의 사진은 프랑스 대기업의 일자리 축소에 반대하는 노조 연합 시위(1996년) 모습이다. 이 자료들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방법으로 노조 대표들은 노동자들을 기업에서 보호하는가(자료 a)?
2. 그들은 노동자에게 어떤 개인적 도움을 줄 수 있는가(자료 a)?
3. 노조는 여기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자료 b)?

위의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시군구, 지구 등 여러 수준에서 경제, 사회 보장, 고용, 교육, 에너지, 주거, 환경 등에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가 수립되었는데, 그로 인해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이 단순히 가입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근로자 계층 전체의 여론을 대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동자들의 시위, 파업, 실업자 운동 등과

같이 시민들의 의사표현 행위와 그것을 둘러싼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관해서도 최근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업 문제가 언제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는가, 실업자들이 겪는 일상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고용정책은 무엇인가, 장기 실업자들을 위하여 새로 생겨난 사회보장제도,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을 도와주기 위한 교육 및 고용정책 등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C'est arrivé ! L'élection présidentielle de 2002**

**1 21 avril 2002 : un premier tour pas comme les autres**

- Tout citoyen français, âgé d'au moins 18 ans, a le droit de se présenter aux élections présidentielles. Il condition d'être soutenu par au moins 500 élus répartis dans au moins 30 départements.
- Le Conseil constitutionnel ouvre officiellement la campagne électorale.
- Les résultats du premier tour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2002 sont une première dans l'histoire de la 5<sup>e</sup> République : un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candidat à sa réélection, obtient son plus faible score : la gauche est arrivée au second tour ; pour la première fois, l'extrême-droite est présente au second tour.
- De même, un record d'abstentions. Sur les 45 millions d'électeurs inscrits, plus de 12 millions ne se sont pas présentés aux urnes.

**1. Les nombres records de candidats**

« Dès que candidats ont fait savoir qu'ils avaient décidé de se présenter au Conseil constitutionnel, les 400 parlementaires français pour se présenter au premier tour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Le record de 1974 (deux candidats) s'est effondré : le 21 avril 2002, 4 candidats plus,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ouvert ses grilles. Les candidats Yves Cochet, devenu sénateur jeudi 4 avril à 18 heures la liste officielle de candidats. En somme, les 17 400 parlementaires d'élus records – aucun en record – ont l'air d'une véritable manifestation de la part de certains parlementaires du Conseil constitutionnel (...). Une signature de parlementaire valant pour se voir sur les cartes communales les formations ».

Le Monde, 4 avril 2002

**2. Sans résultats du premier tour**

Candidats	Nombre de voix obtenues	Suffrages exprimés (%)
Jacques Chirac (RPR)	5 573 328	19,75
J. Marie Le Pen (FN)	4 790 720	19,05
Lionel Jospin (PS)	4 510 514	18,02
François Bayrou (UDF)	1 930 124	8,06
André Copé (LR)	1 601 089	6,25
J. P. Chevènement (MDC)	1 509 844	5,79
Nicolas Sarkozy (UMP)	1 474 128	5,75
Alain Madelin (UDF)	1 300 000	5,12
Jean Saint-Josse (FNPI)	1 200 574	4,79
Robert Hue (PCF)	1 103 840	4,47
Brigitte Migon (MDF)	800 100	3,18
Christiane Taubira (PS)	404 740	1,61
Corinne Lepage (EAP)	337 000	1,35
Christine Boutin (FPO)	300 720	1,20
Robert Lécuyer (PT)	134 170	0,54

(après le 21 avril 2002)

**1. Qui a le droit de se présenter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plus, 17)**

**2. En quoi, dans ce premier tour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l'arrivée des électeurs et les résultats sont-ils surprenants (plus, 17)**

**2 Pour le second tour, une mobilisation sans précédent**

- Dès le lendemain du premier tour, des manifestants réclament des personnes de toutes générations dans les rues de Paris et des villes de province. Elles exigent leur opposant à l'extrême-droite.
- Les syndicats et les grands partis politiques opposés au Président sortant invitent à voter pour lui au second tour. Sur Internet, les sites de mobilisation contre le candidat de l'extrême-droite se multiplient et invitent les citoyens à se rendre aux urnes.

◀ 중학교 4학년 시민교육 교과서(나태출판사, 2004년) 대단원 4장 '선거' 단원의 도입부이다. 각 대단원의 주제를 다루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한 역사를 꼭 점검한다. '셰타리베' (여기가 지 왔다)라는 도입부를 통해 대단원 주제의 역사를 점검한다. 2002년의 프랑스 대통령 선거 과정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누어 탐구한다.

1. 2002. 4. 21 : 어느 때와 다른 1회전 투표
2. 2회전 투표에서 전에 없는 동원
3. 2002년 5월 : 민주주의의 승리

자료 1에서는 17명의 후보자가 대통령 1회전 선거에 출마했다는 르몽드 신문 기사를 소개하고, 자료 2에서는 17명의 후보자들의 득표수와 득표율을 제시하고 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료1) 누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는가?
2. (자료2) 어떤 점에서 대통령 선거 1회전에서 투표권자들의 태도와 결과가 놀라운 것이었는가?

위의 자료들과 질문을 보면, 학교교육이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일반적인 관념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상생활과 관계가 먼 보편적인 것만을 가르쳐서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에서 교육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프랑스에서는 시사성이 높은 학습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교

육경험이 실천으로 보다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7. 결론

프랑스 교과서의 자료 제공 방식은 토론학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의 제공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학습 자료의 출처는 신문기

사, 학술저널, 전문서적, 법조문, 유명한 삽화, 통계자료, 사진 등 매우 다양하고, 자료의 출처도 병적일 정도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상반된 자료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교과서에 신문 기사가 실리더라도 내용이 각색되고 출처도 '00일보' 라고 처리된다. 상반된 자료 제시는 제약되기 일쑤이며, 힘 있는 단체들이 교과서 내용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 서술이나 사진 자료가 있으면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 맹송맹송하고 지극히 중립적이며 누구도 시비를 제기할 수 없는 껍데기 자료들만 남게 된다. 우리 나라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자료들로는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에는 얼핏 보기에 보편적 지식이나 일반적 관념과 거리가 있는 시사적 문제들, 가령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 실업자 운동, 실업으로 인한 문제, 전국 노조가 중심이 된 사회운동 등에 관한 사진이나 신문기사 등이 교과서의 자료로 제공된다. 이런 내용들을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해도 될지 걱정이 되는 자료들이 넘쳐나는데 이처럼 시사성이 매우 높은 학습 자료들을 교재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현실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한다. 나아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실천으로 보다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은 시민이다. 시민들에게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판단은 그들의 몫이다.”라는 시민교육의 정신이 잘 드러난다.

1985년 프랑스의 슈벤느 망(Jean-Pierre Chevenement) 교육부장관은 “우리 프랑스에는 학교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외쳤고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1985년 프랑스의 사회적 혼란과 청소년 학교폭력의 심각성보다 2012년 오늘 한국 사회의 혼란과 학교 폭력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연구를 한다고 하여도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다. 

## 참고문헌

- 김원태 외(2006), 주요 외국 학교시민교육 내용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강영혜 외(201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2011-09, 한국교육개발원
- 송용구(2010), 「프랑스 학교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 한국의 학교 시민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 42권 2호, pp.83-118.





# 나의 조부, 우리나라 초대 편수국장 외솔 최현배 선생의 교과서 사랑

최 흥 식

연세의대 교수, 재단법인 외솔회 이사장, 외솔의 손자



2011년 2월 한국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에서 연락이 왔다. 제1회 '자랑스런 편수인 상' 수상자로 (고)최현배 선생이 선정되었으니,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총회 장소에 나와서 대신 상을 받으라는 연락이었다.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신 저의 어머니(외솔의 둘째 며느리, 이해자 여사)를 모시고, 교과서연구회의 여러 선생님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면서, 할아버님을 대신하여 제1회 자랑스런 편수인 상을 대신 수상하였다. 오래 전에 돌아가신 이를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는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바른 나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집안을 대신하여, 외솔회를 대표하여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의 모든 선생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전한다.

1894년 10월 19일, 울산에서 태어나신 외솔은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말과 글이 위협받는 어려운 시기에, 참 스승이신 주시경 스승으로부터 우리말과 말본을 배웠으며, 세종성왕께서 창제하셨으나, 많이 구박받던 '훈민정음'에 '한글'이라는 새 이름을 붙이시고 우리 말과 글의 체계화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던 주시경 스승의 뜻을 이어 받아, 정말로 온 평생을 우리말, 글 연구와 보급과 기계화와 한글 전용을 위하여 헌신하신 큰 어른이시다. '조선민족 갱생의 도'를 통하여 민족혼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일깨움을 나라를 빼앗기고 시름에 잠겨 있던 온 겨레에게 제시하였으며, '우리말본'과 '한글갈'을 통하여, 우리 말과 글의 체계화를 가장 확실하게 가다듬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세종께서 창제하신 '구슬'

과도 같은 우리글 한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가다듬어, 정말 잘 켜으로써 아름다운 “보배”를 만들어 낸 것이었다.

얼마 전, 참 귀중한 외솔의 글이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종로의 옛 식당의 ‘방명록’에서 외솔의 친필이 발견된 것이었다. 거기에는 “한글이 목숨”이라는 처절한 글이 써 있었으며, 이는 당시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항거하고 있었던 학자의 처절하고도 고독한 투쟁과 절박함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올해가 바로 1942년 일제 말기에 있었던 ‘조선어학회 사건’ 발발 70돌이 되는 해이다. 옥 안에서 모진 고문으로 두 분이 돌아가셨고, 외솔과 몇몇 분의 학자들은 3년 간 옥고를 치루기도 하였다. 한글학회와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여 ‘조선어학회 수난 70돌’을 기리는 큰 모임을 가졌으며, 당시에 수난을 당하였던 33인의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수난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앞으로 광화문 옆 ‘한글 공원’에 ‘조선어학회 수난 33인 동상’이 세워진다니 참 잘된 일이다.

한글 연구와 함께, 외솔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바로 ‘교육’이었다. 철학과 교육학을 전공한 외솔은 우리 민족의 살 길은 ‘바른 교육’에 있다고 확신하였던 것이다. 이는 광복 후 미 군정에서 외솔에게 ‘문교부장관직’을 제시했었으나, 외솔이 고사하고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일하게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외솔은 문교부 행정을 총괄 지휘하는 장관의 역할 보다는 ‘참 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 훨씬 귀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었다. 외솔은 1945. 9. 21 ~ 1948. 9.

21 만 3년 간 미 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재임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현대적 의미의 교과서 편찬을 위한 ‘첫 편수인’을 맡았던 것이다.

그 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 말본 강사, 조선어학회 세종 중등 국어 교사 양성소 교수로 근무하였고, 1949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학회로 명칭을 바꾼 한글학회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다가, 6.25 전쟁 중이던 1951. 1. 20 다시 문교부 편수국장에 취임하여 1954. 1. 21까지 전쟁 중에도 교과서를 편찬해 내는 데 온 정성을 쏟았다.

외솔이 두 번에 걸쳐 6년간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재직할 동안 참으로 많은 일화가 전해 온다. 대쪽 같은 성품으로 ‘공’과 ‘사’를 정말 철저하게 지켰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편수국장 책상 위와 서랍 속에는 원고지나 종이가 꼭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한다. 공적으로 편수국 예산으로 사서 사용하는 ‘공적 원고지, 공적 종이’가 있었던가하면, 그 옆에는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자기 돈으로 사다 놓은 원고지와 종이가 있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서랍 속에는 ‘잉크’가 있었는데, 그것도 ‘공적 잉크’와 ‘사적 잉크’가 따로 있었다고 한다. 전화는 말할 것도 없었다. 공적으로 사용하는 전화 이외에 사적으로 편수국의 전화를 사용하는 일은 일체 없었다고 한다.


국산 물건 애용도 철저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외제 물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는 철저한 애국주의의 발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외솔이 오직 한 가지 외제 물건을 사용했던 것

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절모’였다. 키에 비하여 머리통이 좀 컸던 외솔은 당시 생산되었던 국산 모자는 머리에 맞지 않아 오직 모자만은 할 수 없이 미제 중절모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어나셨던 울산이나,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거주하셨던 대흥동 집 등을 생가로 보존하지 못하여 유족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0년 선생이 돌아가신 40돌을 맞으면서, 울산시와 울산 중구청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외솔 생가를 울산 중구 동동에 복원해 주고, 그 옆에 ‘외솔기념관’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어서, 유족과 외솔회에서는 정말 큰 고마움을 그 분들에게 전하는 바이다. 이 기념관에는 외솔 정신이 물들어 있는 각종 유품과 책들이 많이 기증되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울산 ‘외솔 생가’와 ‘외솔기념관’을 방문해 보시면,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되시리라 믿는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그동안 큰 숙제로 남아 있었던 ‘외솔 전집’ 출간을 ‘외솔회’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조선민족 갱생의 도’, ‘우리말본’ 등 외솔이 평생토록 지으셨던 책들의 중요 판본 모두를 ‘영인’ 하여 영인본으로 총 27책, 28권을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하게 되는 좋은 일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솔이 펴내었던 ‘교과서’와 많은 글들도 잘 정리하여 모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초대 교과서 편수인으로 든든한 초석을 다지신 외솔과 그 정신을 이어받은 많은 편수인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쉬임없이 공부하고 학문을 연마하여 왔기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세계의 열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한국인의 교육열을 아주 높이 평가하게 된 것도 한글의 우수성과 그 한글로 교과서의 기준을 삼아 정성껏 만들고, 잘 고치고 새롭게 다듬는 수고를 쉬지 않은, 교과서 편찬에 종사하여 온 모든 분들과, 앞으로도 행해 나갈 모든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의 모든 분들과, 학교 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 여러분께 그 근간이 있으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한글이 목숨’, ‘교과서 집필이 교육부장관이 되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라는 ‘외솔 정신’으로 무장된 많은 교과서 집필진과 교사들이 이 나라의 교육 현장을 잘 지켜 주시리라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주)다락원  
대표이사 정규도



Q

1. “다락원” 하면 “외국어 교재” 하고 떠오릅니다.

A

그렇습니다. 그 이미지 그대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그리고 한문 교재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다락원은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2,000여 종의 어학교재와 『일본어 저널』, 『Active English』, 『CNN Live』, 『Kiddy CAT』, 『China Today』 등의 월간지를 발행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1,000종 이상의 다락원 어학교재가 학교와 학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락원은 또한 35년간 쌓아 온 풍부한 콘텐츠와 개발 노하우를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접목시킨,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어린이 대상의 영어도서를

전문으로 출판하는 자회사 “Happy House”를 설립하여 어린이 ELT 교재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자회사 “황금시간”을 설립하여 현대인의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도서를 개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황금시간”에서는 1971년 창간한 우리나라 최장수 낚시잡지인 『낚시춘추』를 다락원으로부터 이어 받아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지금까지의 발자취가 그랬듯이, 앞으로도 저희 다락원은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어학학습 방식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학습 시스템과 서비스 개발로 변화하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Q

2. 다락원 경영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교과서 전문 편집인 양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A

1977년 창사이래 출판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책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2,000여 종 이상의 책을 출간하면서 다가올 시대에 조금 먼저 준비해 만든 교재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너무 앞서가도 개척하기 힘들고 늦어도 뒤 따라가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앞으로 열릴 시장을 보는 눈이 매우 중요하합니다. 편집, 영업, 디자인 부서의 모든 직원들에게 오감을 열어 놓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책상 앞에 있지만 말고 현장에 나가 어학 교육과 관련된 선생님, 교수님, 학원강사님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이리 저리 생각해 보는 궁리의 시간을 거쳐 구체화하는 과정을 꼭 거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외국어 습득에 적합한 새로운 학습요소를 반영할 수 있고, 선생님이 가르치기 쉽고 학생이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교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만들기 위한 예리한 관찰력과 수집한 정보의 창의적인 재구성 능력은 하루아침에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이러한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이드해 주는 것이 제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편집자의 경우도 앞서 말한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팀장의 지도 아래 현장에서 정보를 얻고 팀 토의를 거쳐 정보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찾아 교과서에 반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교과서 개발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교육과정의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이해를 위해 팀장과 팀원이 각자 스터디한 내용을 교환하고 수정하여 정확한 의미를 찾아 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편집자는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질을 체득하게 됩니다.

Q

3. 다락원의 교과서에 관련된 일들 교과서 발행사 대표로서 힘든 점, 보람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A

다락원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과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중·고등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교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경험이 축적되고

노하우가 쌓여 중·고등 한문 교과서와 고등 일본어 교과서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초기에는 정보의 부재, 익숙하지 않은 공동생산과 특이한 수익분배 방식, 그리고 해마다 바뀌는 과목별 수익분배율 등으로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교과서 개발 초보 사업가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업의 불확실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구조상 많은 인력과 비용이 선투자 되어야 하는데 그에 반해 투자회수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정심사를 통과 못하면 한 푼도 회수 못한다'라는 압박감이 문득 문득 무섭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육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면 검·인정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커졌지만, 당시에는 많은 것이 생소해 더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교과서 사용 기간이 교과서 개발이 다 끝난 후에 이전보다 짧아져 투자비용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과정 발표 시 교과서 사용 기간을 미리 정해 공지하여 예측 가능한 교과서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리스크가 커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특정 교과목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우리 교과서의 품질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서를 더 충실하게 개발해야겠다는 의욕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Q

4.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어떤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교과서의 문제점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A

가장 좋은 교과서는 개인별 수준에 맞고 관심도를 반영한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과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림, 사진, 영상자료가 풍부한 교과서가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교육과정을 어려움 없이 이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준별 교재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대비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수준별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힘듭니다. 태블릿 PC 등의 휴대용 단말기가 보급된다면 종이 교과서는 기본 교과서로만 만들고 수준별 맞춤 콘텐츠는 출판사 홈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학습하는 방식으로, 수준별 맞춤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Q

5. 최근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A

교과서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을 논할 만큼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합니다. 다만 교과서 사업을 시작할 때 들었던 의문점을 말씀드

린다면, ‘이미 출간된 도서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하여 교과서로 활용하면 되지, 왜 교과서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 였습니다. 이는 ‘왜 교과과정이라는 틀에 얽매어야만 할까?’ 라는 의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일부 교과서가 인정제로 전환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합격, 불합격이 있는 불완전한 인정제도로 보입니다. 인정 교과서의 과목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학교의 선생님이 선정한 책이 교과서가 되는 완전한 인정 교과서 제도가 제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교과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해 봅니다.

Q

6. 미래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와 많이 다를 것입니다. 향후 교과서의 모습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

미래의 교과서는 미래라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달리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뒤의 스마트한 교과서의 모습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휴대용 단말기가 보급되어야 한다는 큰 난제가 있지만 이는 시간의 문제로 보이며, 정부의 의지와 대형 전자회사의 이해관계가 접점을 찾아 이 문제가 해결되면 디지털 교과서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담아낼 것입니다. 종이에 인쇄된 교과서가 향후 최소 10-20년간은 유지되겠지만 판형을 자유자재로 변형시켜 휴대가 간편하고 원하는 사이즈로 키우고 줄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단말기가 보급된다면 서책형 교과서와는 헤어짐의 인사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휴대용 단말기의 문자입력의 불편함과 독서 시 눈부심으로 인한 눈의 피로감 발생 등의 문제는 신기술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다양한 기능과 사용자 편의성을 갖춘 가벼운 트랜스포머형 단말기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와 이와 연계된 사진, 영상자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선생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공동 프로젝트 발표와 체육활동 등의 사회성을 요구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교과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교과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수준별 입체교육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의 교과서는 내용적으로 큰 변화가 있기보다는 수준별로 검색, 분리된 다양한 자료와 콘텐츠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지는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Q

7. 다락원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A

다락원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인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유럽어와 동남아시아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재를 출간할 계획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종이 매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학습물을 활용하여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온오프라인 연계학습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 어느 뜨거웠던 여름의 추억

교과서 개발 전문가 양성 연수 (2012.7.30.~8.3)




**류 준 구**

서울 수도전기공업  
고등학교 교사

처음에 연수를 알게 된 것은 각기 다른 학교의 선생님 몇 명이 모여서 기존의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국어 교과서를 벗어나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만들어 보자는 의기투합에서부터였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맞는 화법 관련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 교과서를 만들기로 하였으나, 처음 시도하는 일이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였다. 그러던 차에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 연수’를 알게 되었다. ‘時宜適切(시의적절)’이란 이런 때에 쓰는 말이라는 감탄이 절로 들게 되었다. 물론 더운 날씨와 그동안 공부에 거리를 두고 있던 자신의 모습에 지치기도 하였지만 훌륭한 강사진과 수강생들을 위한 재단 측의 편의 제공 덕분에 좋은 연수를 들은 것 같아 뿌듯하다. 물론 실제 업무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얼마나 현실로 녹여낼 수 있을까에 의문이 들지만 처음의 막막함에 비할 바는 아니리라.

하지만 연수를 듣는 2012년 여름은 내내 폭염경보가 발령 중이었다. 사상 유래 없는 열대야가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실내 온도 조절 및 각종 에너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에너지 예비유이 떨어져 블랙 아웃을 염려하고 있던 터였다. 그 무더위와 싸우며 또 밤에 열리는 2012 런던 올림픽의 시청으로 많은 수강생들이 지쳐 있던 때였다. 하지만 과연 뜻 깊은 연수를 듣는 선생님들이라 수강 태도가 무척 좋았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염려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고, 또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라는 좋은 연수 기관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처음에 아무런 개념 없이 뛰어든 열정만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체계부터 시작해 많은 틀을 만들어준 연수였다. 선종근 이사장님과 김만곤 위원님을 비롯하여 뛰어난 강사진들의 강의는 너무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여주었고,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큰 틀의 교육을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일주일이라는 너무 부족한 시간에 방대한 양을 소화하기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 3기 교육을 마친 것을 볼 때 향후 심화과정이 개설될 것을 기대해 본다. 앞으로 내가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이 연수를 계기로 어떤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연수보다 알찬 연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연수 후기를 마친다. 



초등학교부 금상

# 자신감을 심어준 사회 교과서



안 세 은

울산 남산초등학교  
6학년 4반

사회시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 배웠다. 배운 뒤에 나는 좀 많이 놀랐다. 나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잘살던 나라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내가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뒤에, 즉 2000년도에 태어났던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여러 어려운 경제 위기를 만났었다니 좀 놀라웠다.


첫 번째 위기는 6.25 전쟁 이후에 찾아왔다. 나는 전쟁을 모른다. 가끔씩 다른 나라의 전쟁 이야기도 듣지만 전쟁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건 처음 알았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건 알지만 그것이 왜 경제위기를 불러오는지는 잘 몰랐다. 그런데 폭파로 인해 다리나 댐 같은 기초시설이 파괴되어 왕래가 불편해지고,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는 산업체가 사라지니,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런 걸 알고 나니 교과서가 나를 어른스럽게 만들어 준 것 같다. 그런 위기를 이기고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 전쟁의 폐허 위에 경제의 꽃을 피운 것도 놀라웠다. 아무리 발전이 많이 되어도 위기는 또 온다는 것도 알았다. 두 번째 위기가 온 것이다. 그것은 원유 가격의 상승 때문에 일어났다. 우리나라가 원유를 생산할 수 없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 짐작조차 못했다. 그것이 공장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연료 값까지 오르게 한다는 것은 더욱 몰랐다. 생산의 기초가 되는 원유 가격 인상이 경제 전체를 흔든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세 번째 위기는 외화 보유액의 부족 때문에 일어났다. 원래 정부는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도록 외화를 가진다.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라 사정이 달라진다. 한때 우리나라는 외화관리 잘못으로 국제기금으로부터 외화를 빌리게 되었다. 국민들이 합심을 해서 곧 갚게 되었지만, 한때 빚쟁이였다는 사실에는 놀랐다. 그걸 못 갚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니 아찔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위기를 우리나라는 모두 슬기롭게 이겨냈다. 정부, 기업, 국민들이 희생을 감수하여 노력했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공부만 하는 책이 아니었다. 내가 몰랐던 경제에 대한 상식을 깨우쳐 준 경제 알리미였다. 경제 위기는 나라나 개인의 잘못으로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축은 꼭 필요한 것도 알았다. 내가 사는 곳, 울산은 남동 임해 공업 지

역에 속한다. 이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은 우리나라의 최대 중화학 공업 단지이다. 나는 실제로 이 중화학 공업 중 현대중공업을 탐방해 보았다.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탐방을 했는데 유성룡함이 처음 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감격이었다. 나와는 관계도 없을 줄 알았던 유성룡함의 모습에 가슴이 벅찼다. 그 멋진 모습과 최첨단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느꼈던 뿌듯함은 아직도 생생하다. 주위의 모든 방해물과 사방을 탐지하는 레이더, 선함을 조종할 수 있는 장치는 배에 대해 모르는 나까지 감동시킨 것이다. 유성룡이란 학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전쟁과 원유 파동 외환위기를 성장해 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곱게 닳여진 길을 걷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울퉁불퉁 돌투성이인 길을 힘들게 뛰어왔다. 그런 고생 끝에 이룬 성장인 만큼 그것을 지켜내려는 위지도 강한 것 같다. 앞으로도 위기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다. 알뜰한 사회교과서 한 권이 웬지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한다. 



초등학교부 은상

## 교과서와 함께하는 여행



**신 민 영**

여수부영초등학교  
5학년 2반

5학년이 되면서 사회 시간에 처음으로 배운 우리나라 역사는 나에게 특별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해주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는 배울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했다. 그래서 더욱 사회 시간이 기다려졌다.

내가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것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였다. 불교문화가 발달했던 통일신라의 유물, 유적을 사진으로 보면서 실제로 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부모님께서서는 주말을 이용해 경주에 한 번 다녀오자고 하셨다. 드디어 경주로 가는 날, 나는 가방 속에 제일 먼저 사회 교과서를 챙겨 넣었다.

경주 시내에 들어서자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산처럼 우뚝 솟아있는 무덤이었다. '아, 저 무덤이 바로 돌무지덧널 무덤이구나. 바로 저 안에서 금관과 금목걸이, 토기들이 나왔구나.' 나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경주에 있는 많은 문화재 중에서 유독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문화재는 첨성대였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 앞에 이르자 아득한 신라의 밤하늘에 빛나던 별무리가 내 눈 앞에 스쳐가는 듯했다. 나는 첨성대에 올라가 별을 관찰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그리고 첨성대를 쌓아 올린 돌의 수가 1년의 날 수와 같다는 설명에 무거운 돌을 하나씩 쌓아올렸을 옛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돌마다 스며있을 조상들의 숨결에 나는 그 분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첨성대를 뒤로하고 찾아간 곳은 안압지였다. 문무왕이 궁궐 안에 못을 파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길렀다고 배웠던 안압지. 그 큰 규모에 나도 모르게 '아' 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 이렇게 큰 연못을 사람들의 손으로 땅을 파서 만들게 했다니, 나는 순간, 머리를 동여매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신라 시대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 수고의 손길로 만들어진 안압지의 아름다움이 가슴을 찡하게 했다.


불교문화가 융성했던 경주에는 절이 많았다는 교과서의 내용을 생각해서 불국사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다. 책에서 사진으로만 보았던 다보탑과 석가탑이 눈에 익어 반가웠다. 정교함이 돋보이는 다보탑에서 신리인의 돌 다듬는 기술을 엿볼 수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적으로 등록될 만하다는 생각을 하며 마지막 코스인 석굴암으로 향했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토암산 자락에 자리한 석굴암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본존불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 하지만 석굴암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보수 작업을 잘못하여 습기가 차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자 울컥 분노가 치밀었다. 우리 조상들이 자연 통풍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지혜를 망가뜨리고 본래의 모습을 잃게 했더니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문화재를 복원한다고 쉽게 손을 대면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저녁 무렵에야 여행을 마치고 차에 오르면서 나는 고개를 돌려 멀어지는 경주를 보았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신라시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내가 펼친 사회 교과서에는 내가 만났던 신라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 이 교과서 안에는 신라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 신라뿐만이 아니다. 교과서는 우리 삶의 길잡이란다. 그래서 교과서대로 살라고 하지 않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바르게 살라는 말씀이었다. 소중한 책, 나의 교과서, 가슴에 꼬옥 안았다. 



초등학교부 동상

## 교과서 속 행복 찾기 여행



서 주 연

제주 월랑초등학교  
6학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과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과서를 통해 아름다운 정서와 삶의 여유, 더 나아가 행복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교과서 속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푹푹한 역사박사로 거듭나기 위해 떠났던 2년 전 우리 가족 여행에서 사실 나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보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을 했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4학년 여름방학 때, 나의 제안으로 5학년 사회과 역사 공부를 준비하여 우리 가족은 신라의 옛 수도를 여행하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여름방학 2달 전부터 5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구해 교과서 속 유적지를 중심으로 코스를 짜고 서로의 스케줄을 조정하며 탐방지에 대해 미리 조사해 보면서 설레는 긴 시간을 지나 드디어 출발!


이제까지 방학 때마다 짧은 가족 여행을 많이 갔었지만 서울 놀이동산이나 여름 강원도 계곡 같이 즐겁게 놀고 편하게 쉬다오는 여행이 전부였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화재와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학습과 조사가 목적인 그야말로 배움을 위한 보람찬 여행이 될 거라며 우리 가족은 모두 들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화려했던 불교예술을 꽃피운 신라의 천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경주에 도착하였다.

아름다운 왕관이 특히 기억에 남는 천마총, 하늘을 관찰했었다는 엄청난 규모와 과학적 정교함이 빛나는 첨성대, 연회장소로 젊은 화랑들이 삶을 즐기며 씩씩함을 배우던 포석정, 신라 불교예술의 전성기에 만들어진 최고 걸작인 석굴암, 다보탑과 석가탑으로 불리는 3층 석탑, 청운, 백운교, 연화, 칠보교가 국보로 지정, 보존되어 있으며 석굴암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불국사, 정자와 기와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호수 표면에 또 다른 짙을 만들어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안압지의 야경 등 3일간 신라의 유적지를 돌아보며 내가 배운 것은 단순한 지식들만이 아니었다.

문화재 하나하나에 담겨진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와 수많은 장인들이 쏟아 부었을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을 너무나 크게 느낄 수 있었다. 기와의 작은 곡선 하나, 왕릉과 묘에 얹힌 작은 비밀 하나, 호수에 비치는 작은 그림자 하나에 이렇게 가슴 뭉클한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것은 나도 처음 경험해 보는 신기한 것이었다.

내가 느낀 것은 글로 전부 표현하긴 힘들지만 내가 마치 그 시절 신라인이 되어 같은 마음으로 같이 호흡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부모님은 이런 나를 보며 "이번 여행에서 교과서가 여행 안내자만 되어준 줄 알았더니 우리 주연이에게는 지식뿐만 아니라 감성까지 가르쳐 준 셈이 되었네. 교과서에게 아빠, 엄마가 고마워해야겠다. 이런 경험은 아마 돈 주고도 못 얻을 소중한 추억이 될 거야." 하며 기뻐하셨다. 교과서에 있는 유적지를 돌며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떠났던 그때의 가족여행은 평생 나에게 잊히지 않을 아름다운 정서와 삶의 여유, 그리고 그것을 통한 행복까지 가르쳐준 소중한 여행이 되었다.

'꿀찌를 위하여'라는 내가 좋아하는 플래시 동요가 있다. 이 노래에 보면 일등을 위해 달려가기 보다는 좋아하는 책도 실컷 보고 가끔은 밤하늘의 별님도 보자는 내용이 나온다. 역사공부를 위해 떠났던 여행에서 나는 조금은 여유 있게 주변을 살피며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법을 배웠고 보이는 결과물보다 그 속에 숨어있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지금 나는 6학년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의 가슴 뭉클했던 기분을 잊지 못한다. 우리 가족은 그 여행 이후 4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조선시대 궁' 탐방을 다녀왔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또 다른 교과서 속 여행지를 찾고 있는 중이다. 다음 주에 있을 '전국 국가 수준 학력평가' 준비로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이번 시험이 끝나고 다시 행복한 교과서 여행을 준비할 생각을 하면 힘든 시험 준비마저 기쁘게 생각이 된다. 정말 교과서는 나에게 고마운 존재인 셈이다. 



## 교과서 사랑 수필 <심사평>

박 두 순 심사위원장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응모자 수가 늘고 있다.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바람직하다. ‘교과서와 나’를 주제로 한 올해 공모에도 총 713 명이나 응모했다. 특히 초등부와 고등부의 응모가 단연 많았다.

수필은 삶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 얻은 느낌이나 체험을 진솔하게 쓴 글로서, 문학의 3대 장르(시, 소설, 수필) 중 하나로 꼽힌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수필도 당연히 예술성과 문학성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심사 기준을 창의성, 표현력에 중점을 두고, 공모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뜻에서 교과서 활용성에도 높은 배점을 주었다.

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살리기 위해 1, 2차로 나누어 진행했다. 1차에서 각 부별로 작품 편편이 점수를 매기면서 입상자의 3 배수를 뽑아, 2차에서 84 편을 심사위원 전원이 윤독하여 점수를 합산한 다음 최종적으로 입상작 26편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초등, 고등부는 응모가 많은 점을 배려해 입상자(장려상)를 3 명씩 늘였음을 밝혀 둔다.

작품의 수준이 대체로 높아 심사위원들은 흐뭇한 어려움을 맛보았다. 어려웠지만 힘이 났다.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감각을 일상 체험과 연결해 새롭게 형상화하거나, 자기만의 교과서 활용 경험을 문학적 표현으로 이끌면서 교과서의 중요성을 절실히 드러낸 작품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금상을 차지한 작품이 이런 글들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나 좀 더 진솔했더라면 하는 느낌도 있다. 글은 진솔함에서 감동이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쓴 사람의

체취라든가, 개성이 물씬 풍기는 글이 감동을 더한다. 수필은 더 그렇다.

아쉬운 점은, 교과서 속의 역사 유적지나 여행지를 실제 탐방한 것을 너무 그 쪽으로 치우쳐 쓴 나머지 기행문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 또 문학, 미술, 음악 등 교과서 속 작품에 대한 감상을 쓴 글이 단순한 감상문으로, 교과서 속 실험, 조사 등 활동에 대한 수기가 관찰, 조사 기록문으로 흘러버리기도 한 작품도 여러 편 있었다. 소설을 닮은 작품도 눈에 띄었다. 교과서와 연결 고리를 약하게 한 결과 수필의 영역에서 벗어나버린 것이다. 소재나 주제가 유사하고, 교과서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설명, 강조한 작품도 눈에 많이 띄었다. 내년엔 응모할 학생은 이런 개선할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초등부에서는 진솔하게 쓴 글이 많아 좋았으나, 대체로 구성이 튼튼하지 못하고 논리성이 약한 게 흠이었다. 금상을 차지한 ‘자신감을 심어준 사회 교과서’는 초등학교생답지 않게 수준 높은 글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6. 25로 파괴되고, 물가 파동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세계 10위의 무역국이 되기까지 과정을 매우 뚜렷하게 그려, 사회 교과서로서의 ‘경제 알리기’ 역할을 잘 드러내 주었다.

중등부 작품들은 교과서를 가까이하고 교과서와 대화(소통)하는 평범한 소재를 선택한 점은 좋았으나, 교과서 사랑이라는 목적에 너무 매달린 나머지 독창성이 모자란 경우가 허다했다. 그런 가운데 금상에 선정된 ‘부모도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기술가




정 교과서에서 가족 복지의 개념을 내면적으로 받아 들여 부모에게 무리하게 요구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이 예비 부모로서의 자각증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공감 폭이 넓게 서술한 작품이었다.

고등학생들은 다양한 소재 활용과 높은 사고력으로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해부하고 교과서의 바람직한 형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과서의 부정적인 면을 너무 강조하고, 논리의 비약이나 과다 등으로 설득력이 약한 면도 노출되었다. 허나 금상에 뽑힌 '상하이에서 본 교과서'는 그런 단점을 말끔히 씻어낸 작품이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동아리를 만들어 국어와 사회 교과서를 활용, 한국의 시를 읽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며, 친구 사귀기와 추억의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표현해 감동을 준다. 수

필다운 글이다.

일반부 응모자는 교사, 학원 강사, 학부모, 시인 소설가를 꿈꾸는 사람, 공무원 등 다양했다. 초, 중, 고생들과는 달리 교과서에 대한 추억과 애뜻한 사랑이 작품에 서려 있었다. 금상에 오른 '삶을 가르쳐 준 교과서'는 학창 시절 교과서의 소설과 시 외우기와 읽기로 문학과 가까워지고, 마침내 국어 교사가 되어 자신이 했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시 시와 소설을 맛보게 하며, 문학에서 얻은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좋은 문장력으로 그려내었다.

이제 입상자 모두에게 축하를 보낸다. 그리고 글쓰기를 계속하여 생활을 윤택하게 가꿔 가기 바란다. 그러면 삶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의 궁극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 [심사위원 소개]



심사위원장 박 두 순

- 시인, 동시작가
- <아동문학평론> <자유문학>에 시와 동시 신인상 당선
- 동시집 <나도 별이다> <들꽃> 등 11권과 시집 <행복 강의> 등 2권
- 대한민국문학상, 방정환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월간문학 동리상 등 수상
- 초, 중등 국어교과서에 시, 동시 6편 실림 현재, 계간지 <오늘의 동시문학> 주간



심사위원 박 정 규

- 1946년 서울 출생
- 소설가, 문학박사
- 창작집 <로암미들의 겨울>, <एको르체 혹은 보이지 않는 남자>, 장편소설<흔적> 등이 있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학장 역임
-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명예교수



심사위원 홍 영 숙

- 시인, 수필가, 동화작가
- 세계아동문학상 수상
- 서울교대 논술 글쓰기 강사 역임
- 서울시교육청 사이버독후감, 강동교육청 호국보훈 및 사이버독후감, 서울시 조선훈재현 글쓰기 및 안전 글쓰기, 수협중앙회 전국 글쓰기 심사위원 역임
- 서울 개롱초등학교 교사



심사위원 유 대 군

- 강원 정선 출생
- 교육학 박사
- 초등학교에서 '모래알', '징검다리', '4학년아이들' 등의 문집 발간
- '원술량', '오형제' 등의 동극을 연출하였으며 독서교실 강사, 논술심사 등으로 활동
-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기획팀에서 장학관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교과서팀장임



## [교과서연구]를 통해 소통하고 성장하는 교사가 되길 다짐하며...

김 나 영 화성 구봉초등학교 교사

나는 이제 막 4년차가 된 교사이다. 아직은 수업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정답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선배들을 결눈질 하며 흉내만 내고 있다. 그런 내게 어느 날 [교과서 연구]라는 책자가 눈에 들어왔다. 교사에게 있어 이정표와도 같은 교과서, 그리고 연구. 매일 교과서 연구를 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나였기에 [교과서연구]를 집어 든 것은 당연한 이끌림이 아니었을까?

전장에 나가는 군인에게 무기가 필수이고, 그 무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듯이 교사에게는 자신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서 연구]는 바로 그러한 점에서 나처럼 경력이 짧은 교사에게 교과서의 방향과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학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살핀 것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부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설계도면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둥부터 더듬거리고 있는 건축가 꼴이 아닌가 싶다. 솔직히 교과서가 왜 매번 개정되어 바뀌는지, 과목별로 단위 체계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것은 현장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였다. 발령받은 지 4년째인데 '올해는 3,4학년 교육과정이 바뀌었대.' '내년부터 6학년은 역사 내용이 빠져.' 등등 매해 학년별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바뀌었다는 소리만 들렸지 어떤 과목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목요연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교과서 연구]를 읽으며 좋았던 점은-특히69호에서는-국정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편찬방향과, 과목별로 집필하신 교수님들의 설명이 들어있어 내가 가르칠 교과서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의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읽으며 같이 공감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재미있었다.

나는 평소에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며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바가 많다. 선배들의 다양한 경험과 조언들이 곧 나의 교육관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 연구]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선,후배 선생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에 책을 읽는 내내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앞으로도 발간되는 책자를 챙겨 읽으며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교사가 되길 다짐해본다 📖

**편집자 주** 우리 '교과서 연구'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교과서 연구'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느낀 특집기사 또는 다른 원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담당자의 이메일(editor@ktrf.re.kr) 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연구지 제안에 접수된 의견 중에서 독자의 소리에 게재되면 교과서 연구지를 1년간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 - 17호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제2012-6호, '12.4.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제2012- 6호, '12. 4. 20)」  
일부 개정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 '14년 적용 대상 디지털 교과서(사회·과학·영어) 신설 추가

- 초등학교 : 국정(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 검정(영어 디지털교과서)
- 중·고등학교 : 검정(사회 디지털교과서), 인정(과학·영어 디지털교과서)

#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 1. 초등학교

### 【국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서책형 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바른 생활	주제별 교과서 16종 【16종】		학기별 지도서 4종(전자저작물 CD 포함) 【4종】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국어	국어 1~2 ①/②/③/④ 국어 3~4 ①/②/③/④ 국어 5~6 ①/②/③/④ 국어활동 1~2 ①/②/③/④ 국어활동 3~4 ①/②/③/④ 국어활동 5~6 ①/②/③/④ 【6종】		국어 1~2(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국어 3~4(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국어 5~6(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3종】
사회/도덕	사회 3~4 ①/②/③/④ 사회 5~6 ①/②/③/④ 사회과 부도 【3종】	사회 3~4 ①/②/③/④ 사회 5~6 ①/②/③/④ 【2종】	사회 3~4(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사회 5~6(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2종】
	도덕 3~4 ①/② 도덕 5~6 ①/② 【2종】		도덕 3~4 ①/② 도덕 5~6 ①/② 【2종】
수학	수학 1~2 ①/②/③/④ 수학 3~4 ①/②/③/④ 수학 5~6 ①/②/③/④ 수학익힘책 1~2 ①/②/③/④ 수학익힘책 3~4 ①/②/③/④ 수학익힘책 5~6 ①/②/③/④ 【6종】		수학 1~2 ①/②/③/④ 수학 3~4 ①/②/③/④ 수학 5~6 ①/②/③/④ 【3종】
과학	과학 3~4 ①/②/③/④ 과학 5~6 ①/②/③/④ 실험관찰 3~4 ①/②/③/④ 실험관찰 5~6 ①/②/③/④ 【4종】	과학 3~4 ①/②/③/④ 과학 5~6 ①/②/③/④ 【2종】	과학 3~4(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과학 5~6(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2종】
총계	37종	4종	16종

##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서책형교과서	디지털교과서	
실과	실과 5~6 ①/② 【1종】		실과 5~6 ①/② 【1종】
체육	체육 3~4 ①/② 체육 5~6 ①/② 【2종】		체육 3~4 ①/② 체육 5~6 ①/② 【2종】
예술 (음악/미술)	음악 3~4 음악 5~6 【2종】		음악(전자저작물 CD 포함) 3~4 음악(전자저작물 CD 포함) 5~6 【2종】
	미술 3~4 미술 5~6 【2종】		미술 3~4 미술 5~6 【2종】
영어	영어 3~4 ①/② 영어 5~6 ①/② 【2종】	영어 3~4 ①/② 영어 5~6 ①/② 【2종】	영어 3~4(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 영어 5~6(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 【2종】
총계	9종	2종	9종

※ 국정은 1종 1책이며, 검·인정은 1종 다책임. 1종(책)에 대한 분권은 원문자(①,②,③,④)로 표시

## 2. 중학교

###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서책형교과서	디지털교과서
국어	국어 ①/②/③/④/⑤/⑥ 【1종】	
사회(역사 포함)/ 도덕	사회 ①/②, 역사 ①/②, 사회과 부도, 역사 부도, 도덕 ①/② 【5종】	사회 ①/② 【1종】
총계	6종	1종

# 【인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서책형교과서	디지털교과서	
국어			국어 ①~②/③~④/⑤~⑥ 【1종】
사회(역사 포함)/ 도덕			사회 역사 도덕 【3종】
수학	수학 ①/②/③ 【1종】		수학 ①/②/③ 【1종】
과학/ 기술·가정	과학 ①/②/③ 【1종】	과학 ①/②/③ 【1종】	과학(전자저작물 CD 포함) ①/②/③ 【1종】
	기술·가정 ①/② 【1종】		기술·가정 ①/② 【1종】
체육	체육 【1종】		체육 【1종】
예술 (음악·미술)	음악 【1종】		음악 【1종】
	미술 【1종】		미술 【1종】
영어	영어(e-교과서 포함) ①/②/③ 【1종】	영어 ①/②/③ 【1종】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①/②/③ 【1종】
선택	한문 【1종】		한문 【1종】
	정보 【1종】		정보 【1종】
	환경과 녹색성장 【1종】		환경과 녹색성장 【1종】
	생활 독일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프랑스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스페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중국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일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러시아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아랍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베트남어(전자저작물 CD 포함) 【8종】		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 생활 베트남어 【8종】
	보건 【1종】		보건 【1종】
	진로와 직업 【1종】		진로와 직업 【1종】
총계	20종	2종	24종

### 3. 고등학교

####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서책형교과서	디지털교과서
국어	국어Ⅰ / 국어Ⅱ /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 문학 / 고전 【6종】	
사회 (역사/도덕 포함)	사회 / 한국 지리 / 세계 지리 / 한국사 / 동아시아사 / 세계사 / 경제 / 법과 정치 / 사회문화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 지리 부도 / 역사 부도 【13종】	사회 【1종】
총계	19종	1종

#### 【인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서책형교과서	디지털교과서
수학	기초 수학 / 수학Ⅰ / 수학Ⅱ / 확률과 통계 / 미적분Ⅰ / 미적분Ⅱ / 기하와 벡터 / 고급 수학Ⅰ / 고급 수학Ⅱ 【9종】	
영어	기초 영어 / 실용 영어Ⅰ / 실용 영어Ⅱ / 실용 영어 회화 / 실용 영어 독해와 작문 / 영어Ⅰ / 영어Ⅱ / 영어 회화 / 영어 독해와 작문 / 심화 영어 / 심화 영어 회화Ⅰ / 심화 영어 회화Ⅱ / 심화 영어 독해Ⅰ / 심화 영어 독해Ⅱ / 심화 영어 작문 (이상 e-교과서 포함) 【15종】	기초 영어 / 실용 영어Ⅰ / 실용 영어Ⅱ / 영어Ⅰ / 영어Ⅱ 【5종】
사회 (역사/도덕 포함)	국제 정치 / 국제 경제 /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 세계 문제 / 비교 문화 / 사회 과학 방법론 / 한국의 사회와 문화 / 국제법 / 지역 이해 / 인류의 미래 사회 【10종】	
과학	과학 / 물리Ⅰ / 물리Ⅱ / 화학Ⅰ / 화학Ⅱ / 생명 과학Ⅰ / 생명 과학Ⅱ / 지구 과학Ⅰ / 지구 과학Ⅱ / 고급 물리 / 물리 실험 / 고급 화학 / 화학 실험 / 고급 생명 과학 / 생명 과학 실험 / 고급 지구 과학 / 지구 과학 실험 / 환경 과학 / 과학사 및 과학 철학 / 정보 과학 【20종】	과학 【1종】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 스포츠 문화 / 스포츠 과학 / 스포츠 개론 / 체육과 진로 탐구 / 육상 운동 / 체조 운동 / 수상 운동 / 개인 및 대인 운동 / 단체 운동 / 체력 운동 / 투기 운동 / 빙상 및 설상 운동 / 표현 및 창작 운동 / 스포츠경기 체력 / 스포츠경기 기술 / 코칭론 / 스포츠경영·행정 【18종】	
예술 (음악/미술 등)	음악과 생활 / 음악과 진로 / 음악 이론 / 음악사 / 시창·청음 / 합창·합주 / 음악과 매체 【7종】	
	미술 창작 / 미술 문화 / 드로잉 / 미술 이론 / 미술사 / 평면 조형 / 입체 조형 / 디자인·공예 / 영상 미술 【9종】	
	무용의 이해 / 기초 한국 무용 / 기초 발레 / 기초 현대 무용 / 무용 음악 / 무용 감상과 비평 【6종】	

	문학 개론 / 문장론 / 고전 문학 감상 / 현대 문학 감상 / 시 창작 입문 / 소설 창작 입문 【6종】	
	연극의 이해 / 무대 기술 / 연극 감상과 비평 / 영화의 이해 / 영화기술 / 영화 창작과 표현 / 영화 감상과 비평 【7종】	
	사진의 이해 / 기초 촬영 / 중급 촬영 / 사진 편집 / 디지털 사진 촬영 /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 사진 감상과 비평 【7종】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기술·가정 / 농업 생명 과학 / 공학 기술 / 가정 과학 / 경영 일반 / 해양 과학 / 정보 【7종】	
	독일에 / 독일어 / 독일어 회화 I / 독일어 회화 II / 프랑스에 / 프랑스어 / 프랑스어 회화 I / 프랑스어 회화 II / 스페인에 / 스페인어 / 스페인어 회화 I / 스페인어 회화 II / 중국에 / 중국어 / 중국어 회화 I / 중국어 회화 II / 일본에 / 일본어 / 일본어 회화 I / 일본어 회화 II / 러시아에 / 러시아어 / 러시아어 회화 I / 러시아어 회화 II / 아랍에 / 아랍어 / 아랍어 회화 I / 아랍어 회화 II / 베트남에 / 베트남어 / 베트남어 회화 I / 베트남어 회화 II (이상 전자저작물 CD 포함) 독일에 독해 I / 독일에 독해 II / 독일어 작문 / 독일어권 문화 / 프랑스에 독해 I / 프랑스에 독해 II / 프랑스어 작문 / 프랑스어권 문화 / 스페인에 독해 I / 스페인에 독해 II / 스페인어 작문 / 스페인어권 문화 / 중국에 독해 I / 중국에 독해 II / 중국어 작문 / 중국 문화 / 일본에 독해 I / 일본에 독해 II / 일본어 작문 / 일본 문화 / 러시아에 독해 I / 러시아에 독해 II / 러시아어 작문 / 러시아 문화 / 아랍에 독해 I / 아랍에 독해 II / 아랍어 작문 / 아랍 문화 / 베트남에 독해 I / 베트남에 독해 II / 베트남어 작문 / 베트남 문화 【64종】	
	한문 I / 한문 II 【2종】	
	철학 / 논리학 / 심리학 / 교육학 / 종교학 / 진로와 직업 / 보건 / 환경과 녹색성장 / 실용 경제 【9종】	
전문교과	농업 이해 / 농업 기초 기술 / 농업 정보 관리 / 농업 경영 / 생명 공학 기술 / 농업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친환경 농업 / 재배 / 작물 생산 기술 / 원예 / 생활 원예 / 생산 자재 / 원예 기술 / 원예 전문 생산 / 동물 자원 / 중소 가축 관리 / 대 가축 관리 / 반려 동물 관리 / 숲과 인간 / 산림 자원 기술 / 조경 / 조경 설계 / 조경 시공 관리 / 농업과 물 / 농촌과 농지 개발 / 농업 토목 제도·설계 / 농업 토목 시공·측량 / 농업 기계 / 농업 기계 공작 / 농업 기계 운전·작업 / 농업 기계 정비 / 식품 과학 / 식품 위생 / 농산 식품 가공 / 축산·수산 식품 가공 / 농산물 유통 / 농산물 유통 관리 / 농산물 유통 실무 / 환경 보전 / 환경 관리 / 관광 농업 / 성공적인 직업생활 【42종】	
	공업 일반 / 기초 제도 / 정보기술과 활용 / 공업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기계 제도 / 토목 제도 / 건축 설계 제도 / 디자인 제도 / 선박 제도 / 기계 일반 / 전기와 생활 / 기계 구조와 기능 / 기계 공작법 / 유체 기계 / 공기 조화 설비 / 기계 기초 공작 / 공작 기계 / 산업 설비 / 금형 제작 / 전자 기계 이론 / 전자 기계 회로 / 전자 기계 공작 / 전자 기계 제어 / 로봇 기초 / 로봇 제작 / 재료 일반 / 금속 제조 / 재료 가공 / 주조 / 금속 처리 / 전기 회로 / 전기 기기 / 전력 설비 / 전기·전자 측정 / 전기 응용 / 자동화 설비 / 전자 회로 / 전자 기기 / 전자·전산 응용 / 통신 일반 / 정보 통신 / 통신 시스템 / 컴퓨터 구조 / 시스템 프로그래밍 / 프로그래밍 /	

	<p>디지털 논리 회로 / 측량 / 역학 / 토목 설계 / 토목 재료·시공 / 수리·토질 / 지적 전산 / 지적 실무 / 공간 정보 / 건축 구조 / 건축 계획 / 건축 목공 / 건축 구조체 시공 / 건축 마감 시공 / 디자인 일반 / 색채 관리 / 조형 / 제품 디자인 / 공예 / 시각 디자인 / 컴퓨터 그래픽 / 공업 화학 / 단위조작·공정제어 / 제조 화학 / 분석 화학 / 파인 세라믹 / 세라믹 재료 / 세라믹 원리·공정 / 스마트 세라믹 / 발효 공업 / 식품 분석 / 식품 공업 기술 / 섬유 재료 / 방직·방사 / 제포·봉제 / 염색·가공 / 인쇄의 이해 / 인쇄 재료 / 아날로그 인쇄 / 재판 실체 / 사진 / 디지털 인쇄 / 자동차 기관 / 자동차 새시 / 자동차 전가·전자 제어 / 건설기계 구조정비 / 자동차 차체 수리 / 선박 이론 / 선박 구조 / 선박 건조 / 항공기 일반 / 항공기 기체 / 항공기 기관 / 항공기 장비 / 항공기 전자 장치 / 인간과 환경 / 수질 관리 / 대기·소음 방지 / 폐기물 처리 / 컴퓨터 게임 기획 /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밍 / 컴퓨터 게임 그래픽 / 만화·애니메이션 기초 / 애니메이션 제작 / 만화 창작 / 영화·방송 제작 / 촬영·조영 / 방송 시스템</p> <p style="text-align: center;"><b>【113종】</b></p>	
	<p>상업 경제 / 회계 원리 / 마케팅 / 기업과 경영 / 기업 자원 통합 관리 / 재무 회계 / 원가 관리 회계 / 세무 회계 /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 글로벌 경영 / 비즈니스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국제 상무 / 자료 구조 / 모바일 콘텐츠 / 프로그래밍 실무 / 사무 관리 실무 / 상업 디자인 일반 / 상업 디자인 실무 / 유통 관리 / 물류 관리 / 전자 상거래 일반 / 전자 상거래 실무 / 미디어 콘텐츠 일반 / 미디어 콘텐츠 실무 / 웹 프로그래밍 / 금융 일반 / 금융 실무 / 커뮤니케이션 실무 / 창업 일반 / 컴퓨터 일반</p> <p style="text-align: center;"><b>【30종】</b></p>	
	<p>수산 일반 / 해사 일반 / 해양의 이해 / 수산·해운 산업 기초 / 수산 생물 / 수산 경영 일반 / 해양 생산 기술 / 수산 양식 / 양식 생물 질병 / 수산 가공 / 수산물 유통 / 해양 오염·방제 / 냉동 일반 / 냉동 공조 기기 / 냉동 공조 실무 / 열기관 / 선박 보조 기계 / 선박 전가·전자 / 기계 설계·공작 / 잠수 기술 / 항해 / 선박 운용 / 해사 법규 / 해사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선화 운송 / 전자 통신 기초 / 전자 통신 기기 / 전자 통신 운용 / 생선회 실무 / 해양 레저·관광 / 해양 물류 일반 / 해양 정보 관리 / 해양 플랜트 일반</p> <p style="text-align: center;"><b>【33종】</b></p>	
	<p>인간 발달 /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 식품과 영양 / 급식 관리 / 한국 조리 / 동양 조리 / 서양 조리 / 제과·제빵 / 의복 재료·관리 / 패션 디자인 / 한국 의복 구성 / 서양 의복 구성 / 자수와 편물 / 주거 / 실내 디자인 / 가구 디자인 / 디스플레이 /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 보육과정 / 놀이 지도 / 아동 생활 지도 / 관광 일반 / 관광 경영 실무 / 관광 서비스 실무 / 관광 외식·조리 / 관광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관광 일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관광 중국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간호의 기초 / 보건 간호 / 기초 간호 임상 실무 / 복지 서비스의 기초 / 노인 생활 지원 / 헤어 미용 / 피부 미용 / 메이크업 / 공중 보건</p> <p style="text-align: center;"><b>【37종】</b></p>	
총계	451종	6종

※ 중등 영어 교과목의 경우 '13년 적용된 e-교과서를 '14년부터 디지털교과서로 변환하여 보급



# [교과서 개발 연수 안내]

우리 재단에서는 전국 초·중등학교 및 교육전문직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수 분야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과정 소개

- 과정명 :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전문성 향상 과정)
  -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2년도 특수분야 연수 과정 지정(서울교육 2012-473)
- 연수종별 : 직무연수
- 연수 대상 :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연수 시간 : 30시간(인정 학점 : 2학점)
  - ※ 최저 이수 기준 시간 : 24시간, 80% 이상 출석(성적 산출 없음)
- 교과 편성 : 교과서 제도와 법령, 개발 방법, 편집 및 인쇄 등

## □ 기간 :

구 분	기 간	시 간	인 원	신청마감
제5기	2013. 1. 7 ~ 1. 11	10:00~17:00	40	연수시작 20일전까지
제6기	2013. 1. 14 ~ 1. 18	10:00~17:00	40	연수시작 20일전까지

## □ 신청 방법

- 교원직무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 주소 : (137-808)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06-9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특수분야 연수 담당자 앞  
(팩스 : 02-2651-1954)
- 연수비
  - 총 연수비 : 15만원(재단 부담액 8만원, 본인 부담액 7만원)
  - 납부 방법 : 해당 과정 신청 마감일까지 지정 계좌 입금  
(신한 140-009-109202, 예금주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선종근)
  - ※ 연수비 환불조건 : 연수 시작 3일전까지 연수취소(포기) 신청서 제출한 자에 한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Q** 교과서(국정,검정,인정) 개별 구입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예, 교과서 개별구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과서 개별 구입방법

1. 국정 교과서

- 온라인 구입
  - 각 과목의 발행사를 확인하여 해당 발행사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구입
  - (주)미래엔 직매장 : 지하철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 직진 도보 5분 소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주)미래엔빌딩 1층)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만 판매) ARS : 02-3475-4097
  - 두산동아(주) 상설판매장 : 2012년 폐쇄

2. 검정(전과목) · 인정(일부과목: 1,064책)

- 온라인 구입
  -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 “www.ktbook.com” 또는 “(사)한국검정교과서”로 검색하여 ‘교과서구입’ 메뉴에서 조회 및 판매되는 검정교과서(전과목) 및 인정교과서(일부과목:1,064책)는 온라인 주문하시고, 나머지 인정교과서는 발행 출판사로 구입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검정교과서 및 일부 인정교과서(1,064책) 판매)
- 방문 구입
  - (사)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지하철 2호선 당산역 1번 출구 30m 동양생명건물 2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2 다옥빌딩 별관 2층)  
(검정교과서 및 일부 국정 · 인정교과서 판매)  
ARS : 02-3663-5409~12
  - 교과서 판매서점 :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 “www.ktbook.com” 또는 “(사)한국검정교과서”로 검색 후 ‘교과서 구입’ 메뉴의 ‘교과서 판매서점’ 항목을 참고하여 인근 서점의 재고확인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 구입
  -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 “www.ktbook.com” 또는 “(사)한국검정교과서”로 검색 후 ‘교과서구입’ 메뉴의 ‘단체주문’ 항목을 참고하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3. 인정 교과서

- 위 인정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에 대해서는 발행사를 확인하여 해당 발행사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2012학년도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 교과서별 구입처

교 과 서			구 입 처	전 화 번 호
국정	초등	• 국어(말하기 · 듣기 · 쓰기)	(주)미래엔 textbook.mirae-n.com	080-730-3800
		• 수학(수학익힘책 포함), 사회(사회과탐구, 사회과부도), 1,2년(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생활의길잡이, 즐거운생활 포함)	두산동아(주) www.doosandong.com	1644-0600
		• 도덕(생활의길잡이 3~6학년 포함)	(주)지 학 사 www.jihak.co.kr	02- 330-5302
		• 과학(실험관찰 포함)	(주)금성출판 kseshop.co.kr	080- 969-1000
		• 예체능(음악3, 4, 미술3~4, 체육3, 4)	(주)교 학 사 www.kyohak.co.kr	02-707-5184
	고등	• 확률과통계, 이산수학, 공업계, 수산해운계, 상업계, 가사실업계	두산동아(주)	1644-0600
		• 윤리계열, 농업계	(주)지 학 사	02-330-5302
		• 외국어계(아랍어 I · II, 러시아어 포함)	(주)천재교육	1577-0902
		• 과학계(생활과 과학 포함)	(주)금성출판	080-969-1000
		• 체육계	(주)교 학 사	02-707-5184
검정	초등 중등 고등	• 위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 - 검정교과서 전체 - 인정교과서 일부(1,064책)	(사)한국검정교과서 www.ktbook.co.m	02-3663-5409~12

## □ 서울지역 직매장

### (사)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검정교과서 전문매장 (국 · 인정일부)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2 다옥빌딩 별관 2층 ☎ 02-3663-5409~12)
- 지하철 : 2호선 당산역 1번, 9호선 당산역 13번 출구에서 롯데리아, 스타벅스 사이 골목 30m 지점 (동양생명 2층)

### (주)미래엔 직매장 - 초등학교용 국정교과서만을 판매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주)미래엔빌딩 1층 ☎ 02-3475-4097)
- 지하철 :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 5분소요

## 각 지역별 교과서 지정 판매점

지 역 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 도서	지 역 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 도서				
서울	종로구	(주)교보문고	02- 397-3551~2	검정, 국정	경기	수원	(주)경기사적	031- 248-6300	검정, 국정				
	서초구	교보문고(강남점)	02- 530-0313	국정		의정부	송문당	031- 846-2666	검정, 국정				
	송파구	교보문고(잠실점)	02-2140-8821	국정		안산	대동서적(주)	031- 406-6666	검정, 국정				
	종로구	(주)영풍문고	02- 399-5625	검정, 국정		부천	(주)경인문고	032- 613-2197	검정, 국정				
	서초구	영풍문고(강남점)	02- 595-0928	국정		수원	동남서적	031- 251-3929	검정				
	성북구	영풍문고(미아점)	02-2117-2880	국정		부천	영글북스	032- 623-1600	국정				
	성동구	경일사	02-2296-7671	검정		성남	리브로분당점	031- 701-2800	국정				
	중구	(주)리브로(을지점)	070-4006-4317	검정, 국정		성남	종원문고	031- 736-2600	국정				
	동대문구	성현문고	02- 967-3838	검정		성남	베스트북	070-7570-5172	국정				
	영등포구	(주)지에스북	02-2671-5651	검정, 국정		구리	동원서적	031- 563-4621	검정, 국정				
	관악구	광장서적	02- 876-9081	검정, 국정		일산	정글북	031- 922-5000	검정, 국정				
	광진구	프라임문고	02-3424-1450	국정		광명	일지서적	02-2613-2744	국정				
	강남구	반디앤루니스	02-6002-6021	검정, 국정		시흥	한가람문고	031- 404-8664	국정				
	노원구	그랜드문고	02- 938-1065	국정		평택	평택문고	031- 651-9204	검정, 국정				
	강동구	예림문고	02- 477-8600	국정		안양	교보문고(안양점)	031- 466-3501	국정				
	동작구	골드북	02- 841-7100	국정		용인	수지문고	031- 265-4031	국정				
용산구	(주)대교문고	02-2012-3544	검정, 국정	김포	열린문고	031- 982-2007	국정						
노원구	(주)노원문고(중계점)	02-2091-0633	검정, 국정	화성	삼성문고	031-8003-3838	국정						
도봉구	예일문고	02- 995-5206	국정	성남	공손서점	031- 703-7279	국정						
강동구	대성문고	02- 427-8190	국정	강원	춘천	교학사	033- 244-0044	검정, 국정					
부산	부산진구	영광도서	051- 816-9500		검정, 국정	동해	제일서점	033- 521-3131	국정				
	중구	문우당서림	051- 241-5555	국정	충북	청주	유신상사	043- 252-5945	검정, 국정				
	사하구	문학서점	051- 204-0465	검정, 국정		충주	이학사	043- 844-3494	국정				
	사하구	예림서적	051- 203-3383	검정	충남	천안	열린문고	041- 573-0827	검정				
	중구	남포문고	051- 245-8911	검정		천안	국민도서	041- 556-0003	국정				
	사상구	태학도서	051- 313-1718	국정	전북	전주	홍지서림	063- 288-5311	검정, 국정				
	부산진구	교보문고(부산점)	051- 806-3501	국정		전남	순천	중앙서림	061- 723-9902	검정, 국정			
	해운대구	영재서적	051- 703-0708	국정	목포		책사랑문고	061- 279-2504	국정				
대구	수성구	(주)세원출판유통(범어점)	053- 423-0517	검정, 국정	경북	포항	학원사	054- 249-3396	검정, 국정				
	중구	영풍문고(대구점)	053- 428-6700	국정		경주	현대서점	054- 742-4885	국정				
인천	중구	(주)대한서림	032- 764-7337	검정, 국정		경산	경산서적	053- 813-2724	국정				
	부평구	부평문고	032- 529-0077	국정	구미	춘양당서점	054- 455-6669	국정					
광주	동구	종합도서	062- 222-4354	검정, 국정	경남	창원	그랜드문고	055- 283-2848	검정				
	대전	(주)계룡문고	042- 222-4600	검정, 국정		창원	창원서적	055- 282-1544	국정				
서구		세이북스	042- 483-4441	국정		진주	대양서적	055- 741-2835	국정				
울산	남구	민중서림	052- 275-0313	국정	김해	근비도서	055- 321-1387	국정	제주	제주시	탐라도서(주)	064- 755-3335	검정
										제주시	현대서점	064- 748-1177	국정



## 교과서 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❶ 참여 분야

<현장교육>, <논단>, <단상>,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독자의 소리>

### ❷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활동,

-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연구 활동, 사례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보내실 곳 : [editor@ktrf.re.kr](mailto:editor@ktrf.re.kr)

문의 전화

02-2651-1953 「교과서연구」 담당자 유순기





## ● 교과서 정보관 이용 안내

### | 운영 개요 |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 보유 자료 |

구분	국내	국외	계
교과용 도서	39,400	8,379	47,779
일반 자료	2,988	-	2,988
계	42,388	8,379	50,767

### | 열람 시간 |

평일 | 오전 9시~ 오후 5시

점심시간 | 12:00~13:00 \*토요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02-2651-1953  
www.ktrf.re.kr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6-9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빌딩 4F

- 지하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 버스 : 3412, 462, 4312, 642, 9408번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